

# 2009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오영희·김경래·유혜영 편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간사

1984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보인 후 2008년 1.19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향후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은 물론 세대간 갈등을 악화시켜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부정적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8월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펼쳐 왔으며, 내년이면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서두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맹목적이거나 대안 없는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인구, 가족, 사회, 경제, 문화, 사회복지, 여성 정책 등 제 분야의 다면적이고 다학제적인 노력과 학계와 정책입안자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현상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의 장으로 2008년 9월 창립된 저출산대책포럼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각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저명한 17개 학회와 저출산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저출

산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5명의 포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실공히 다학제적 접근의 산실이라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2008년 하반기에 2회(제1차~제2차) 개최된데 이어 2009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개최되어 저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정책 등에 대한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08년 저출산대책포럼이 창립된 이후 2009년도에 개최된 4차례(제3차~제6차)의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대책포럼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두섭 위원장과 운영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이상영 국장과 손주영 사무관, 사무국의 오영희 부연구위원, 김경래 선임연구원, 유혜영 연구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대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포럼위원,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정경희 연구위원과 이삼식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저출산대책포럼 회원 명단

### ■ 단체 회원

구분	학회·단체명		
학회(17)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대한신생아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인구교육연구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민간단체(3)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 ■ 포럼 위원

성명	소속 및 직명	성명	소속 및 직명
강순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유계숙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권태희	성균관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 국	연세대학교 의대 산부인과 교수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광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순미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동환	순천향대학교 의대 산부인과 교수
김외숙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원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김태련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이완정	인하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교수
김태현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과 교수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혜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민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 교수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	정영금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박문일	한양대학교 의과대 산부인과 교수	조남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박부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성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영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연계전공학부 교수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박윤옥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장	조희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교수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서 경	연세대학교 의대 산부인과 교수	최현미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표갑수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 교수	한재갑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인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남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제3차 저출산대책포럼 .....	3
발표1.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	5
I. 서론 .....	5
II. 다자녀 우대 정책 만족도 분석 .....	6
III. 다자녀 우대 정책의 활성화 방안 .....	39
발표2.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 .....	51
I. 서론 .....	51
II. 이론적 배경 .....	52
III. 연구 방법 .....	57
IV. 연구 결과 .....	58
발표3.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	85
I. 서론 .....	85
II. 선행연구 고찰 .....	87
III. 연구방법 .....	89
IV. 연구 결과 .....	91
V. 면접조사 결과 .....	102
VI.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08
발표4.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제고대책 .....	116
I. 들어가는 말 .....	116
II. 저출산 대책의 효과 분석 .....	117
III. 기업부문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 .....	121
IV. 시사점 .....	126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133

<b>제4차 저출산대책포럼</b> .....	145
<b>발표1. 부산광역시의 저출산과 한국 인구정책의 미래</b> .....	147
<b>발표2. 부산광역시의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 현황과 사회적 방안</b>	
<b>출산율 제고를 위하여</b> .....	181
I. 들어가면서 .....	181
II. 부산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	182
III. 부산의 최저출산율 요인 .....	184
IV. 저출산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	195
V. 나가면서 .....	200
<b>발표3.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추진현황</b> .....	207
I. 기본현황 .....	204
II. 추진 방침 및 과제 .....	205
III. 분야별 추진사항 .....	206
IV. 문제점 및 대책 .....	210
<b>발표4.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극복 관련 민간단체 사업 추진현황</b> .....	211
<b>지정토론 및 종합토론</b> .....	225
<b>제5차 저출산대책포럼</b> .....	235
<b>발표1. 저출산환경에서의 결혼전/임신전 상담/검진의 중요성</b> .....	241
I. 서론 .....	237
II. 본론 .....	238
III. 결론 .....	246

<b>발표2. 저출산시대의 임신 전 관리와 태아건강·영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b>	249
I. 서론 .....	249
II. 본론 .....	250
III. 결론 .....	257
<b>발표3.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2008~2009년 주요 추진 정책</b>	259
I. 서론 .....	259
II. 일본 저출산 정책의 추진 경과 .....	261
III. 최근 일본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2008~2009) .....	265
IV. 최근 일본 저출산 정책 동향의 시사점 .....	271
<b>발표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특성</b>	272
I. 머리말 .....	272
II.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이슈 .....	273
III.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현황 .....	279
IV. 정책적 대응 양상과 특성 .....	290
V. 맺음말 .....	300
<b>지정토론 및 종합토론</b>	303
<b>제6차 저출산대책포럼</b>	317
<b>발표1.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b>	319
I. 서론 .....	319
II. 연구방법 .....	321
III. 연구결과 .....	322
IV. 논의 .....	333

V. 결론 및 제언 .....	336
<b>발표2.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b>	<b>339</b>
I. 서론 .....	339
II. 출산력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341
III.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배우자의 차별 출산력 변화 .....	343
IV.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의 선택과 유배우율의 감소 .....	347
V.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 .....	352
VI. 결론 .....	357
<b>발표3.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b>	<b>360</b>
I. 서론 .....	360
II. 연구 방법 .....	363
III. 연구 결과 .....	364
IV. 논의 및 결론 .....	374
<b>발표4. 저출산과 아동보육 문제 .....</b>	<b>379</b>
I. 보육에 대한 정부개입의 중요성 .....	379
II. 저출산 위기와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 .....	382
III.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OECD) .....	383
IV.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 .....	385
V. 맺는 말 .....	393
<b>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b>	<b>397</b>

## 표목차

〈표 3-1- 1〉 거주지별 조사 대상자 수 .....	7
〈표 3-1- 2〉 조사 대상 어머니의 자녀수에 따른 분포 .....	7
〈표 3-1- 3〉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포 .....	8
〈표 3-1- 4〉 다자녀 우대 정책 설문 조사 주요 내용 .....	9
〈표 3-1- 5〉 이상적인 자녀수의 분포 .....	10
〈표 3-1- 6〉 자녀수에 따른 자녀 출산 계획 여부 .....	11
〈표 3-1- 7〉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차이 ..	21
〈표 3-1- 8〉 전업주부와 직장 여성의 다자녀 지원 사업 효과 평가의 차이 .....	22
〈표 3-1- 9〉 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자녀 지원 사업 효과 평가의 차이 .....	24
〈표 3-1-10〉 서울시 초점집단면접 대상 .....	29
〈표 3-1-11〉 오산시 초점집단면접 대상 .....	29
〈표 3-1-12〉 아버지 대상 초점집단면접 .....	29
〈표 3-2- 1〉 자녀출산 의향(전체 여성) .....	59
〈표 3-2- 2〉 현재 기대자녀 수(출산 의향 있는 여성) .....	60
〈표 3-2- 3〉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	61
〈표 3-2- 4〉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	62
〈표 3-2- 5〉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	63
〈표 3-2- 6〉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	64
〈표 3-2- 7〉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	65
〈표 3-2- 8〉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	65
〈표 3-2- 9〉 로짓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	68
〈표 3-2-10〉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	70
〈표 3-2-1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	71

〈표 3-2-1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73
〈표 3-2-1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74
〈표 3-2-14〉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77
〈표 3-2-15〉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79
〈표 3-3- 1〉 직군별 분석대상 표본 수 및 직군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92
〈표 3-3- 2〉 28~40세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	93
〈표 3-3- 3〉 28~40세 미혼 남녀의 결혼적령기, 결혼계획연령	94
〈표 3-3- 4〉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95
〈표 3-3- 5〉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97
〈표 3-3- 6〉 혼전동거 및 혼전성관계에 대한 태도	99
〈표 3-3- 7〉 28~40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01
〈표 3-4- 1〉 저출산 대책요인 및 사용자료(분석대상: OECD 20개 국가)	118
〈표 3-4- 2〉 모형 추정결과	119
〈표 3-4- 3〉 대책별 출산율의 영향 정도	121
〈표 3-4- 4〉 효과분석에 사용된 자료(분석대상: EU 20개 국가)	124
〈표 3-4- 5〉 모형 추정결과	126
〈표 4-2- 1〉 우리나라 주요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183
〈표 4-2- 2〉 시·도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184
〈표 4-2- 3〉 부산시 여성 합계출산율 추이(가임여성 1명당)	184
〈표 4-2- 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185
〈표 4-2- 5〉 평균초혼연령	185
〈표 4-2- 6〉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87
〈표 4-2- 7〉 동거기간별 이혼	187
〈표 4-2- 8〉 사유별 이혼구성	188
〈표 4-2- 9〉 재판종류별 이혼	189



〈표 4-2-10〉 처의 혼인종류별 혼인 구성 .....	189
〈표 4-2-11〉 부산광역시 혼인형태별 혼인구성(2003) .....	190
〈표 4-2-12〉 시·도 여성경제활동 비율 .....	191
〈표 4-2-13〉 평균 재혼 연령 .....	191
〈표 4-2-14〉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 .....	192
〈표 4-2-15〉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193
〈표 4-2-16〉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 .....	194
〈표 4-2-17〉 가족관계 만족도(전국) .....	195
〈표 4-3-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204
〈표 4-3- 2〉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	204
〈표 4-3- 3〉 7대 도시인구 및 출생현황 .....	205
〈표 4-4- 1〉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직능단체별 세부 사업실적 .....	219
〈표 5-2- 1〉 임신전의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	254
〈표 5-2- 2〉 엽산 함량이 높은 식품 .....	255
〈표 5-3- 1〉 “5가지 안심플랜”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 .....	266
〈표 5-3- 2〉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 .....	270
〈표 5-4- 1〉 외국인과의 혼인 .....	279
〈표 5-4- 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	280
〈표 5-4- 3〉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	281
〈표 5-4- 4〉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	282
〈표 5-4-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	283
〈표 5-4- 6〉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 .....	284
〈표 5-4- 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추이 .....	285
〈표 5-4- 8〉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수 추계 .....	286
〈표 5-4- 9〉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평균자녀수 .....	287
〈표 5-4-10〉 부모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	288
〈표 5-4-11〉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부모출신국가·지역별 현황 .....	288

〈표 5-4-12〉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 .....	289
〈표 5-4-13〉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가별·연령대별 자녀 현황 .....	290
〈표 5-4-14〉 결혼이주여성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관련 법령 .....	292
〈표 5-4-15〉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	294
〈표 5-4-16〉 결혼이주여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현황 .....	295
〈표 6-1-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323
〈표 6-1- 2〉 자녀에 대한 가치관 .....	325
〈표 6-2- 1〉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1980~2005년) .....	342
〈표 6-2- 2〉 모의 연령대별 출생아수와 비율 .....	343
〈표 6-2- 3〉 성 및 연령 및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	343
〈표 6-2- 4〉 성 및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0~2007년) .....	344
〈표 6-2- 5〉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	345
〈표 6-2- 6〉 성 및 연령 및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	345
〈표 6-2- 7〉 성 및 연령 및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	346
〈표 6-2- 8〉 성 및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0, 2003, 2005, 2007년) .....	346
〈표 6-2- 9〉 연령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교육수준(2005년) .....	347
〈표 6-2-10〉 연령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2005년) .....	348
〈표 6-2-11〉 연령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2005년) .....	350
〈표 6-2-12〉 기혼 여성 비율의 변화(1980~2005년) .....	351
〈표 6-2-13〉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 상·하위 30개 지역(2005년) .....	353
〈표 6-2-14〉 합계출산율 상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 2003, 2005, 2007년) .....	355
〈표 6-2-15〉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 2003, 2005, 2007년) .....	356
〈표 6-2-16〉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 .....	357
〈표 6-3- 1〉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N = 929) .....	366
〈표 6-3- 2〉 자녀 양육 시 힘들었던 점(N=919) .....	368
〈표 6-3- 3〉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교육(N=912) .....	369
〈표 6-3- 4〉 자녀들의 사교육 여부(N = 871) .....	371

〈표 6-3-5〉 현재 자녀 한명에게 시키는 사교육 가짓수 .....	371
〈표 6-3-6〉 자녀 한명에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가짓수 .....	372
〈표 6-3-7〉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의 종류 (N = 731) .....	373
〈표 6-3-8〉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평균(SD) ...	374
〈표 6-4-1〉 여성의 직장생활 보장을 위해 우선할 사항 .....	381
〈표 6-4-2〉 2003-2007년의 보육정책 주요 지표 .....	387
〈표 6-4-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개편 관련 내용 .....	389
〈표 6-4-4〉 2008년 12월 양육수당 및 바우처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	390

##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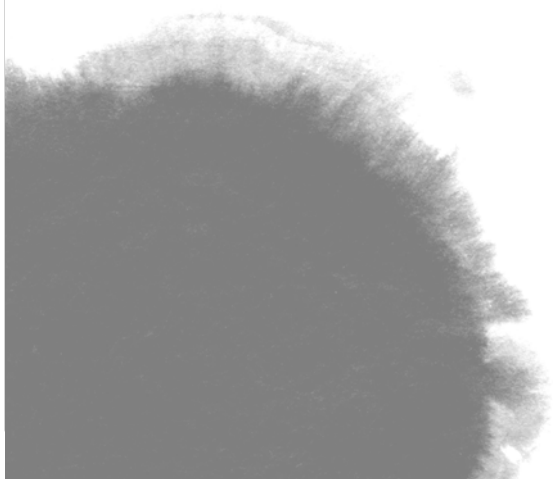
[그림 3-1- 1] 다자녀 출산 동기(N=154) .....	13
[그림 3-1- 2] 2자녀 이상 여성의 출산계획 이유(N=75) .....	13
[그림 3-1- 3] 2자녀 이상 어머니가 추후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N=222) ...	14
[그림 3-1- 4]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N=304) ·	15
[그림 3-1- 5]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인지하고 있는 비율(N=303) .....	16
[그림 3-1- 6]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혜택을 받은 비율(N=301) .....	17
[그림 3-1- 7]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N=297~305) .....	19
[그림 3-1- 8] 다자녀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N=34~35) 20	
[그림 3-1- 9] 확충을 원하는 보육시설 유형의 순위별 응답(N=248~257) ·	22
[그림 3-1-10]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	25
[그림 3-1-11] 세 자녀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사업 만족도 .....	27
[그림 4-3- 1] 부산시 저출산정책 목표 및 과제 .....	206
[그림 5-2- 1] 태아, 유아기 영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56
[그림 5-3- 1] 일본의 출생자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1947~2007) .....	261

[그림 5-3-2]	일본 저출산 정책의 추진 경과(1990~2009) .....	264
[그림 5-3-3]	소자화 대책의 향후 추진 방향 .....	267
[그림 5-4-1]	'한국남성+외국여성' 국제결혼의 배우자 출신국가 추이 .....	280
[그림 5-4-2]	한국남성의 배우자 출신국가별 결혼형태 .....	281
[그림 6-2-1]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6) .....	341
[그림 6-2-2]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각 세별 경제활동참가율 .....	349
[그림 6-4-1]	전 생애동안 투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현재 자본 투자대비 화수율 .....	380
[그림 6-4-2]	사회적 이전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영향 .....	381
[그림 6-4-3]	육아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	383
[그림 6-4-4]	보육예산을 포함한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	388

# 01

K  
I  
H  
A  
S  
A

## 제3차 저출산대책포럼





## 제3차 저출산대책포럼

### 프로그램

#### 주제발표

- 좌 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발표 1: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전혜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발표 2: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 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3: 결혼지연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 발표 4: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제고 대책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지정토론

-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옥선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전혜정(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06년과 2007년(1.26)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 다시 1.19로 떨어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1.32명, 독일의 1.33명, 영국의 1.84명, 프랑스의 1.98명, 미국의 2.10명 보다 낮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 출산 연령층은 최근 10년간 20대 후반과 20대 전반 여성들의 출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전반과 3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여, 출산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 출생한 아이들 중 첫째 자녀가 26만 4000명(53.5%)으로 가장 많고, 둘째 자녀는 18만 3000명(37.1%), 셋째 자녀 이상은 4만 6000명(9.3%)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첫째 자녀가 점점 많아지고, 셋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생 순위에서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 순위별 비율은 9.8~9.3%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들에 대한 수혜자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오산시에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현행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들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인센티브 요인인지, 이들이 원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다자녀 우대 정책 만족도 분석

### 1.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분석

#### 1) 설문 조사의 개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혜자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기혼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대학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는 면접원들이 응답자들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1) 설문 조사 대상 및 방법

설문 조사에 있어 응답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을 서울지역, 경기·충청권역, 전라도권역, 경상도권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서울 지역은 주로 중류층이 거주하는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신정동의 3개 동을 선정하였고, 경기·충청권역에서는 경기도 이천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선정하였다. 전라도 권역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경상도 권역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경상북도 영주시를 선정하였다. 응답자는 서울 지역에서 150명과 지방에서 156명을 임의 선정하여 총 설문 조사 인원은 30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조사대상자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거주지별 조사 대상자 수

(단위: 명, %)

지역		빈도(비율)
서울광역시	관악구 봉천동	51( 16.7)
	노원구 상계동	49( 16.0)
	양천구 신정동	50( 16.3)
경기충청권역	이천시	26( 8.5)
	천안아산시	25( 8.2)
전라도권역	전주시	50( 16.3)
경상도권역	김해시	25( 8.2)
	영주시	30( 9.8)
합 계		306(100.0)

조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0세였고, 기혼 가임 여성이 4.3%,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32.0%,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52.3%,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어머니가 11.4%였다(표 3-1-2 참조).

〈표 3-1-2〉 조사 대상 어머니의 자녀수에 따른 분포

(단위: 명, %)

자녀수	빈도(비율)
0명	13( 4.3)
1명	98( 32.0)
2명	160( 52.3)
3명 이상	35( 11.4)
합계	306(100.0)

조사대상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92명이었다. 조사 대상 어머니의 직업은 현재 전업주부가 192명으로 취업 상태인 어머니보다 많았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사무직 37명, 전문직 25명, 자영업 16명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 소득은 월 평균 200~300만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59명, 100~200만원이 50명, 400~500만원의 순이었다(표 3-1-3 참조).

〈표 3-1-3〉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학력	중졸이하	3	1.0
	고졸	92	30.1
	전문대졸	68	22.2
	4년제 대졸	128	41.8
	대학원이상	15	4.9
직업	전업주부	192	62.8
	전문직	25	8.2
	경영 관리직	1	0.3
	사무직	37	12.1
	판매 서비스직	5	1.6
	자영업	16	5.2
	기타	7	2.3
가계소득	무응답	23	7.5
	100만 원 이하	5	1.6
	100~200만 원 이하	50	16.3
	200~300만 원 이하	100	32.7
	300~400만 원 이하	59	19.3
	400~500만 원 이하	46	15.0
	500~600만 원 이하	23	7.5
	600만 원 이상	20	6.5
무응답		3	1.0
합 계		306명	100.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376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52.0%가 월 소득 200~400만원 이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학력, 직업 및 소득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설문 조사 내용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녀 출산 계획, 출산 동기, 바람직한 출산 및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 자녀를 출산·양육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그리고 현재 실시중인 다자녀 지원 정책의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질문은 현재 실시중인 정책과 예비조사에

서 설문 응답자들이 기업 또는 정부에서 실시해 주기를 원하는 정책들 중에서 자주 언급 되는 것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부분은 현재 실시 중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의 지원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수혜 절차, 담당자 태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3-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4> 다자녀 우대 정책 설문 조사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조사 내용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동기</li> <li>- 이상적 자녀 수</li> <li>- 바람직한 출산, 양육환경</li> <li>- 양육의 어려움</li> </ul>
다자녀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li> <li>- 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li> <li>-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li> </ul>
다자녀 지원 정책의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양육 지원 세부 정책 만족도 평가</li> <li>- 보육, 서비스 지원 세부 정책의 만족도 평가</li> <li>-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세부 정책의 만족도 평가</li> <li>- 세제 및 주택 마련 지원 세부 정책의 만족도 평가</li> </ul>

### (3) 조사 절차

#### ① 예비 조사

서울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3개구(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신정동)에서 기혼가임여성과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30명을 대상으로 2월 4~8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 ② 본 조사

예비조사 결과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등을 수정하여 2월 11~25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로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이 지역별(중소도시, 대도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sup>1)</sup>

### (1) 이상적인 자녀수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몇 명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가 넘는 어머니들이(156명, 53.4%) 2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고, 3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73명(25.0%), 4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36명(12.3%)이었고, 5명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도 20명(6.8%)에 달한 반면 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7명(2.4%)로 가장 적었다(표 3-1-5 참조).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2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3-1-5〉 이상적인 자녀수의 분포

(단위: 명, %)

이상적인 자녀 수	빈도(비율)
1명	7( 2.4)
2명	156( 53.4)
3명	73( 25.0)
4명	36( 12.3)
5명	20( 6.8)
합계	292(100.0)

### (2) 자녀 출산 계획

조사대상 어머니들에게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주요 변인들이 지역별(중소도시, 대도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은 실시하였으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후 결과 제시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74.8%에 달하는 223명의 어머니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반면, 더 낳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75명(25.2%)에 불과하였다.

추후의 출산 계획이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추후 출산 계획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자녀가 한 명인 어머니들 중 앞으로 자녀를 더 낳겠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56명(58.9%)으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고, 자녀가 2명인 어머니들의 거의 대부분이(96.8%) 앞으로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3명인 어머니들의 94.3%가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했다(표 3-1-6 참조).

〈표 3-1-6〉 자녀수에 따른 자녀 출산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1자녀 어머니의 출산계획	더 낳겠다	56( 58.9)
	더 낳지 않겠다	39( 41.2)
	계	95(100.0)
2자녀 어머니 출산계획	더 낳겠다	5( 3.2)
	더 낳지 않겠다	150( 96.8)
	계	155(100.0)
3자녀 이상 어머니 출산계획	더 낳겠다	2( 5.7)
	더 낳지 않겠다	33( 94.3)
	계	35(100.0)

따라서 현재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어머니는 추가 출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반면 자녀를 한 명 둔 어머니가 추가적 출산 가능성이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보고서(2007)의 내용과도 일치한다<sup>2)</sup>.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2.68명이었지만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약 40%정도가,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은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수에 있어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현재 어머니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양육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온라인패널 800명의 45.4%와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300명의 50.0%가 출산예정이거나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정부저출산정책평가, 2007).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다자녀 우대 정책에서는 다자녀 가족의 개념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이 아닌 두 명 이상의 가정으로 조정하여, 자녀가 2명 있는 가정부터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 출산을 위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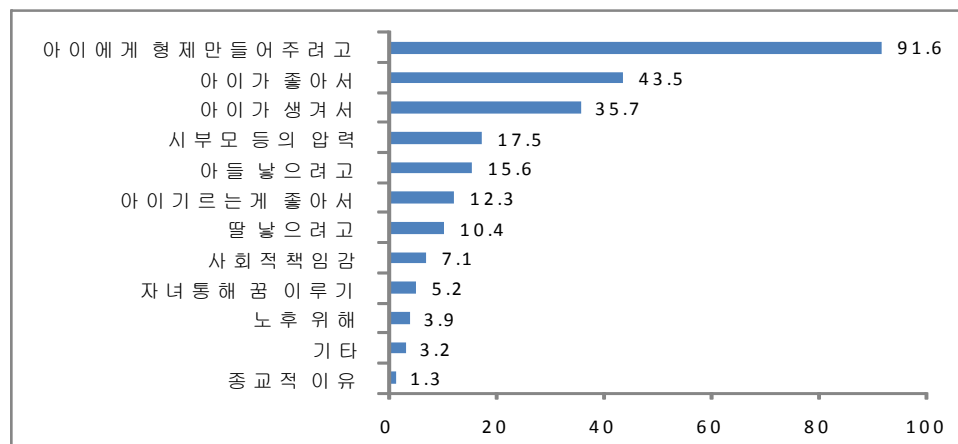
### (3) 다자녀 출산 동기

다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어떤 동기와 생각에서 다자녀를 출산하였는지 그 동기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어머니들에게 다자녀를 낳은 동기에 대해 제시한 응답 항목 중 3개의 응답을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91.6%)의 어머니들이 “아이에겐 형제를 만들어 주려고”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43.5%의 어머니는 “아이가 좋아서”, 그리고 35.7%의 어머니는 “아이가 생겨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종교적 이유”나 “노후를 위해”, “자녀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어머니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반면 “아들을 낳으려고”와 “딸을 낳기 위해”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는 큰 차이가 없어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은 다자녀 출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부모 등의 압력”으로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도 그리 많지 않아, 자녀 출산에 있어 양가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압력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부부의 결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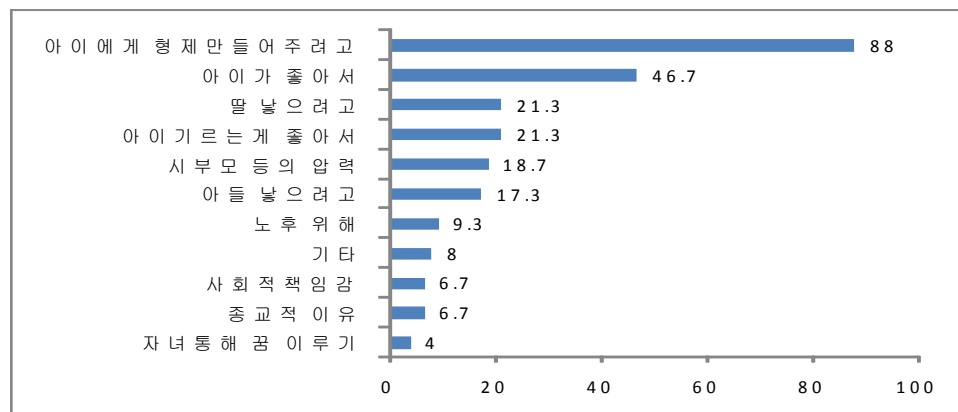
[그림 3-1-1] 다자녀 출산 동기(N=154)



#### (4) 출산 이유/출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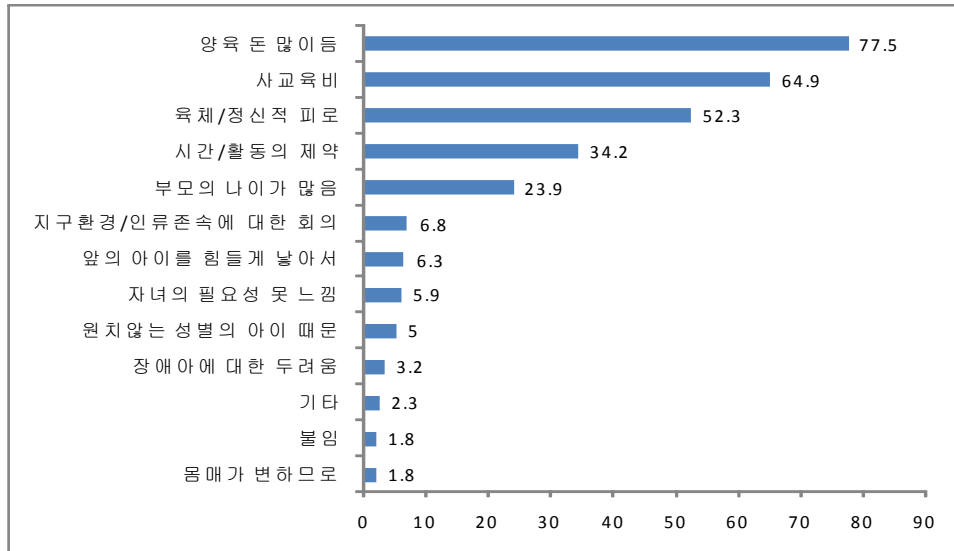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그 이유를 질문하고 주어진 응답 중 3개를 중복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어머니들은 추가 출산 계획의 이유로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려고”를 가장 많이 꼽았고(88.0%), “아이가 좋아서”(46.7%), 또는 “아이 기르는 게 좋아서”(21.3%)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딸(또는 아들)을 낳으려고”나 “시부모 등 외부의 압력”은 그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림 3-1-2] 2자녀 이상 여성의 출산계획 이유(N=75)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고, 앞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22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해 제시한 응답 항목 중 3가지를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어머니가(77.5%) “양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과중한 사교육비(64.9%), 육체/정신적 피로(52.3%)도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었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2자녀 이상 어머니가 추후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N=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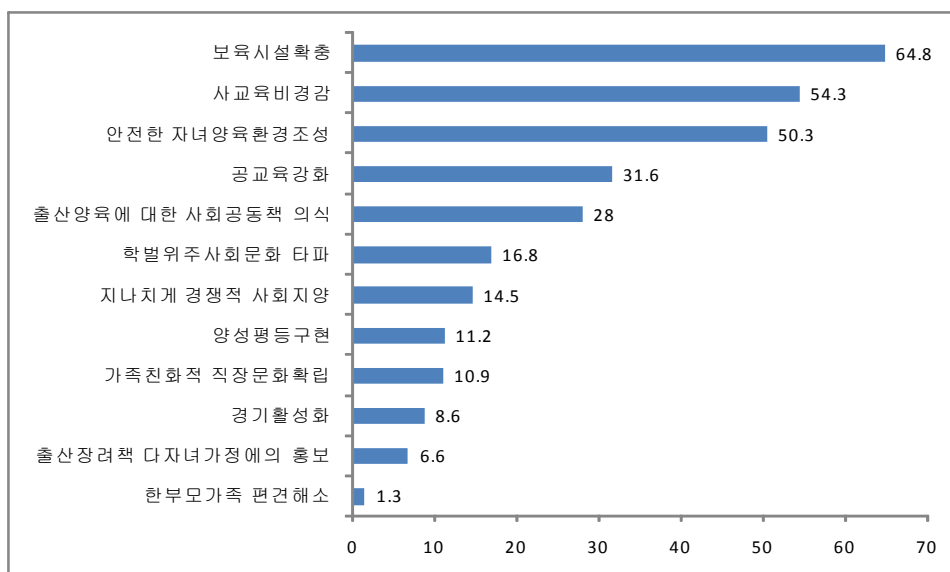


#### (5)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여건이 요구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들에게 제시한 응답 항목 중 3개를 중복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어머니(64.8%)가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사교육비 경감(54.3%), 안정한 자녀양육환경조성(50.3%)도 과반수이상의 어머니가 선택하였다. 공교육 강화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책임 의식도 비교적 많이 선택되었다.

[그림 3-1-4]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N=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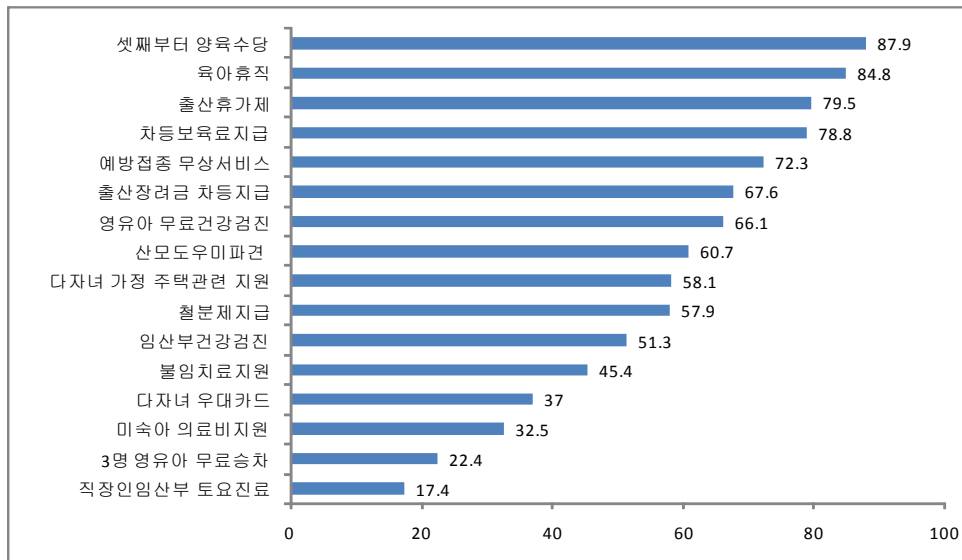


#### (6)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의 인지 정도

현재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체별로 다양한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 정책 수혜자들인 어머니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업은 “셋째 아이부터 양육수당 지급”<sup>3)</sup>으로 조사대상자 중 87.9%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고, 육아휴직(84.8%), 출산휴가제(79.5%), 차등보육료 지급(78.8%), 예방접종 무상 서비스(72.3%)와 같은 정책은 70%이상의 조사 대상자가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그림 3-1-5 참조). 이는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보고서(2007)』에서 온라인 패널 800명과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저출산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과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조사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자 149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그림 3-1-5]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인지하고 있는 비율(N=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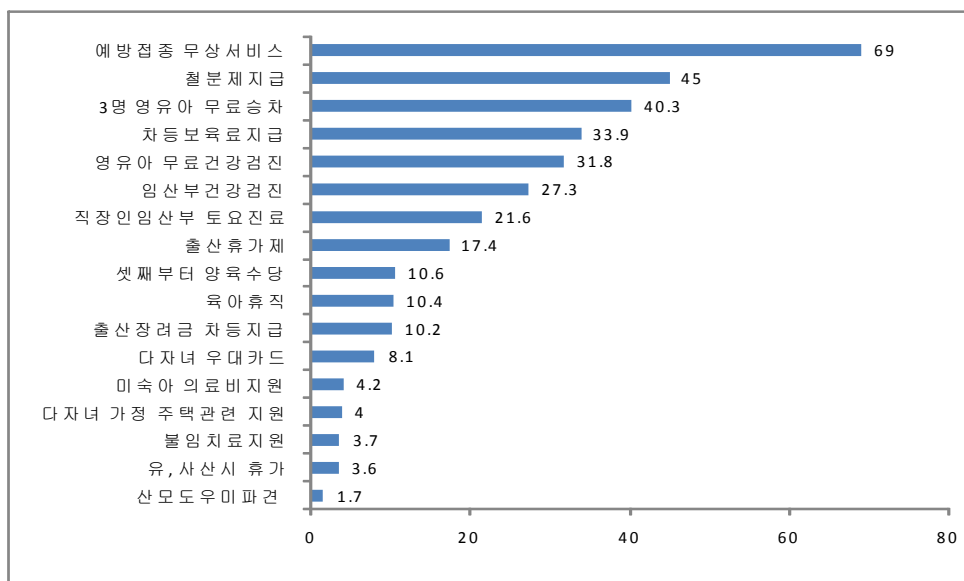
반면 다자녀 가족 지원책 중에서 직장인 임산부 토요일 진료,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 승차, 미숙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에 대해서는 40% 미만의 어머니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았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 중에서 다자녀 우대카드(37.0%)와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 승차(22.4%)의 경우 그 인지도가 다른 저출산, 자녀 양육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다자녀 우대 정책 중에 셋째부터 양육 수당 지급(87.9%)과 다자녀 가족 주택 관련 지원(58.1%)은 응답 대상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보의 문제점과 함께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자녀 우대카드, 영유아 무료 승차와 같은 사업보다는 양육 수당 지급과 주택 관련 지원과 같은 사업이 정책 수혜자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혜택이 크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앞으로의 다자녀 우대 정책은 적은 수의 사업이라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홍보의 문제 등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7)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의 혜택 여부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아 보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는 69.0%의 어머니가 받아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임신 기간 중에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받은 것(45.0%),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버스 무료 승차(40.3%), 차등 보육료 지급(33.9%),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31.8%)도 비교적 혜택을 받은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 중 혜택을 받은 비율(N=301)



예방접종 무료 서비스, 임신 기간 중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급, 차등 보육료 지급은 인지도 측면에서도 응답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사업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책들은 수혜 대상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다자녀 가족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의 경우 최근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안내책자를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비교적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자녀 가족 지원책 중 성인을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의 경우 인지도는

낮았지만 혜택을 받은 가족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자녀 가족 주택관련 지원의 경우는 알고 있는 가족은 많았지만 혜택을 받은 가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자녀 우대카드의 경우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정책은 다른 저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에 비해 그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정책의 내용 및 홍보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 (8)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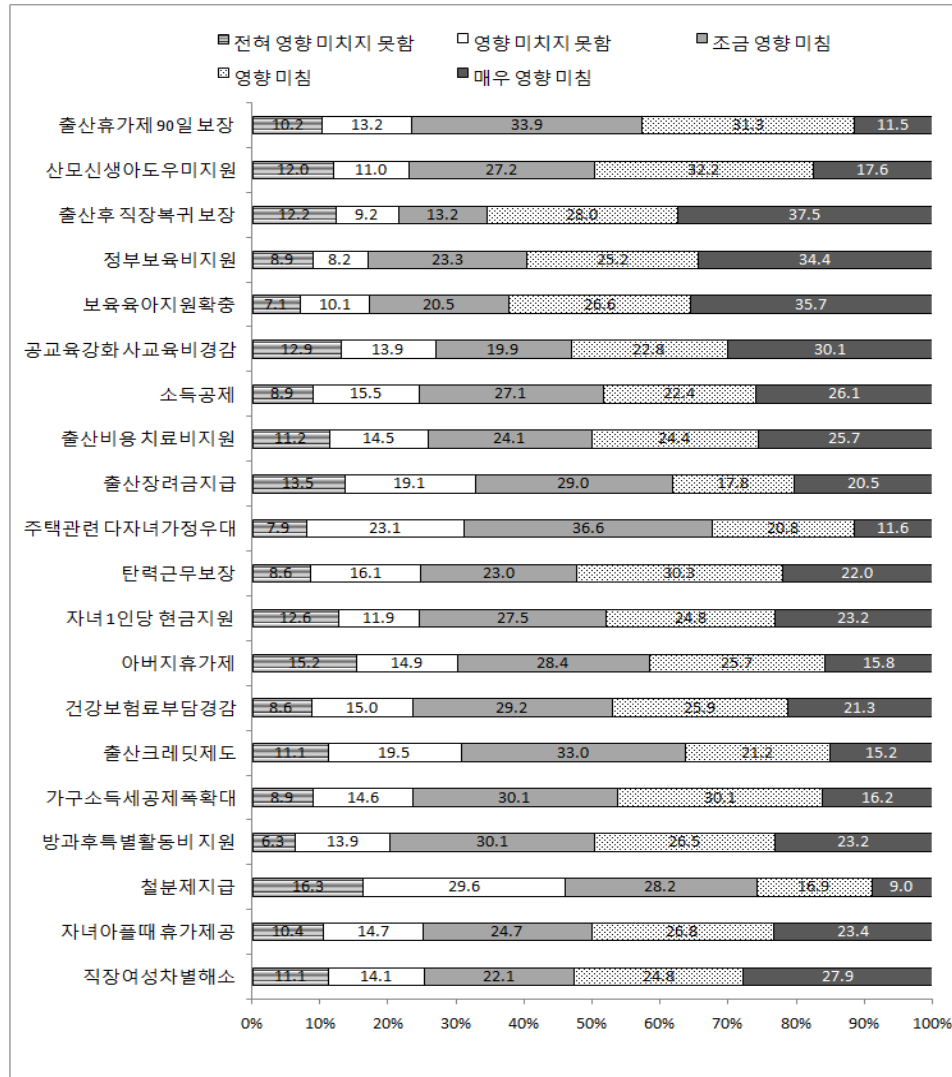
다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각 사업들이 앞으로 다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5점 척도에서 5점을 주어 ‘매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한 것은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37.5%)”, “보육·육아시설 확충(35.7%)”, “정부의 보육비 지원(34.4%)”,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30.1%)”등 이었다(그림 3-1-7 참조).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 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효과가 더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족 우대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보다는 보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보육과 육아 서비스 시설 확충 등 양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이 효과가 더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철분제 지급, 아버지 육아 휴가제,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주택 구입과 청약시 다자녀 가족 우대, 국민 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임신 기간 중 산모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사업은 인지도도 높고 혜택을 받은 가정도 많았지만 출산 및 다자녀 양육 부담의 경감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그림 3-1-8]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41.2%)”, “보육·육아시설 확충(42.9%)”, “정부의 보육비 지원(35.3%)”,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32.4%)”이 앞으로 출산을 결정하

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32.4%), 주택관련 다자녀가족 우대(32.4%), 건강보험료 부담경감(37.1%), 출산 크레딧제도(39.4%), 3인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36.4%), 방과 후 특별활동비 지원(37.5%), 자녀가 이플 때 휴가 제공(30.3%)과 같은 사업들은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7]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N=297~305)<sup>4)</sup>



4) 각 문항별로 응답 대상자의 수가 달랐음.

[그림 3-1-8] 다자녀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N=34~35)<sup>5)</sup>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자녀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평가 점수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택관련 다자녀 가족 우대와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이 그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감,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그리고 방과

5) 각 문항별로 응답 대상자의 수가 달랐음.



후 특별활동비 지원과 같은 다자녀 우대정책에 대해서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표 3-1-7 참조).

〈표 3-1-7〉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차이

구분	3자녀 이상 어머니 (N=34~35)	1, 2자녀 어머니 (N=263~270)	t-tes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주택관련 다자녀 가족 우대	3.41(1.37)	3.00(1.06)	-2.04*
출산크레딧 제도	3.52(1.50)	3.05(1.16)	-2.12*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공제폭확대	3.64(1.32)	3.26(1.15)	-1.57
방과후특별활동비지원	3.72(1.22)	3.43(1.16)	-1.25
건강보험료부담경감	3.60(1.46)	3.33(1.18)	-1.23

주: 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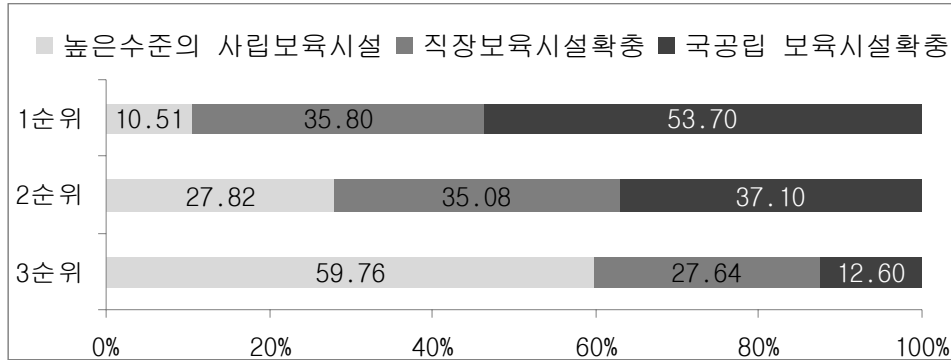
주택관련 다자녀가족 우대 정책과 출산크레딧 제도는 『새로마지플랜』에서 다자녀 우대 정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으로써 수혜자들이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보육과 육아시설의 확충을 원하는 어머니들이 상당수에 달하였는데, 보육시설 중에서 원하는 시설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립 보육시설 확충 중에서 선호하는 순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제1순위로 선호한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53.7%), 직장보육시설의 확충(35.8%), 질적으로 우수한 사립 보육시설의 확충(10.5%)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3-1-9 참조).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면서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자녀 지원 정책은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종류도 다르고 효과도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요구하는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업주부 보다는 취업모들이 다자녀 지원 정책이 앞으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특히 출산 휴가 90일 보장, 보육과 육아 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비 지원,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 직장 내 여성 차별 해소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산모를 위해 신

생아 도우미 지원, 아버지 휴가제, 출산크레딧 제도와 임신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효과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표 3-1-8 참조).

〔그림 3-1-9〕 확충을 원하는 보육시설 유형의 순위별 응답(N=248~257)<sup>6)</sup>



〈표 3-1-8〉 전업주부와 직장 여성의 다자녀 지원 사업 효과 평가의 차이

구분	직장여성(N=91) 평균(표준편차)	전업주부(N=192) 평균(표준편차)	t-test
출산휴가 90일 보장	3.42(1.08)	3.09(1.15)	- 2.3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48(1.13)	3.22(1.28)	- 1.76
출산 후 직장복귀 보장	3.96(1.22)	3.58(1.43)	- 2.20*
정부 보육비 지원	4.00(1.04)	3.51(1.34)	- 3.10**
보육육아시설 확충	4.22(0.95)	3.50(1.31)	- 4.70***
공교육강화 사교육비경감	3.82(1.21)	3.29(1.44)	- 3.04**
소득 공제	3.73(1.11)	3.26(1.34)	- 2.93**
출산비용, 치료비지원	3.70(1.08)	3.25(1.41)	- 2.70**
출산장려금 지급	3.51(1.19)	2.95(1.34)	- 3.57***
다자녀가족 우대	3.32(1.03)	2.91(1.11)	- 3.02**
탄력근무 보장	3.68(1.13)	3.30(1.24)	- 2.54*
현금 지원	3.65(1.14)	3.21(1.34)	- 2.87**
아버지 휴가제	3.23(1.24)	3.06(1.32)	- 1.05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3.60(1.09)	3.23(1.27)	- 2.56*
출산크레딧 제도	3.21(1.12)	3.02(1.24)	- 1.25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3.57(0.99)	3.21(1.24)	- 2.39*
방과 후 특별활동비 지원	3.72(1.01)	3.39(1.25)	- 2.17*
철분제 지급	2.68(1.16)	2.75(1.21)	0.48
자녀가 아플 때 휴가제공	3.67(1.12)	3.27(1.33)	- 2.46*
직장여성 차별	3.88(1.15)	3.26(1.36)	- 3.72***

주: \*\*\* p < .001, \*\* p < .01, \* p < .05.

6)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 응답 대상자 수가 달랐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출산크레딧 제도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모의 효과성 평가에 차이가 없는 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출산크레딧 제도는 앞으로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결과를 통해 취업모가 전업주부 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 육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취업모들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도 취업모들이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취업모의 가정의 평균 소득과 전업주부 가정의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모 가정의 소득이 전업 주부 가정 보다 높긴 하였으나 그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생계 유지형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성이 출산 장려금 지급과 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철분제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업주부와 취업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업주부가 그 효과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취업모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철분제를 타러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취업모에게는 그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전업주부에게는 다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혜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실시되어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 계획이 있는 어머니들과 없는 어머니들 간에 다자녀 지원 사업의 효과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출산 후 직장복귀’, ‘정부 보육비 지원’, ‘보육·육아 시설 확충’, ‘출산 비용 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 ‘3인 이상 가구소득세 공제폭 확대’, ‘직장여성 차별 해소’에 대해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들이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3-1-9 참조).

〈표 3-1-9〉 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자녀 지원 사업 효과 평가의 차이

구분	출산계획 있음 (N=75) 평균(표준편차)	출산계획 없음 (N=223) 평균(표준편차)	t-test
출산 후 직장복귀 보장	4.01(1.22)	3.62(1.40)	- 2.18*
정부보육비 지원	3.96(1.16)	3.60(1.29)	- 2.15*
보육·육아시설 확충	4.07(1.12)	3.65(1.25)	- 2.53*
출산비용, 치료비 지원	3.73(1.22)	3.29(1.33)	- 2.65**
출산장려금 지급	3.57(1.25)	2.99(1.30)	- 3.44**
3자녀 이상 가구 소득세 공제폭 확대	3.59(1.14)	3.22(1.17)	- 2.39*
직장 여성 차별 해소	3.79(1.21)	3.35(1.35)	- 2.60*

주: \*\*  $p < .01$ , \*  $p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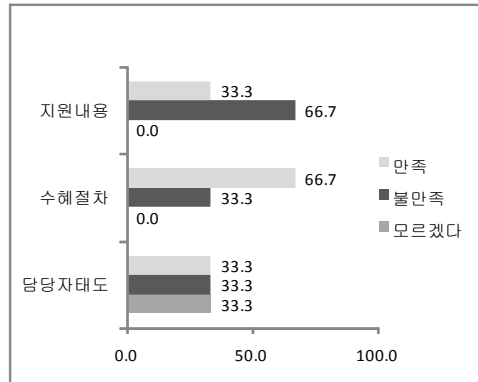
#### (9)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사업에 대해 각각 알고 있는지, 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지원 내용, 수혜 절차 및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만족도는 그 사업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체로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산모 도우미 파견”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어머니의 수는 적었지만 그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이후 출산 장려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는 수혜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시의 “셋째 자녀부터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은 만족하지만 수혜 절차와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무상 서비스”의 경우 담당자 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대답하는 어머니가 많았다(그림 3-1-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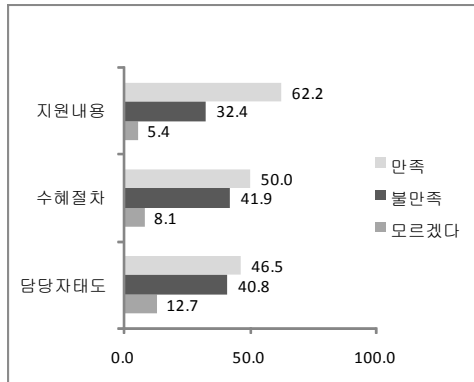
[그림 3-1-10]의 저출산 지원 정책 중에서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사업은 “셋째 자녀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대중교통 이용 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그리고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이다. 이러한 다자녀 우대 정책은 일반적인 저출산 및 자녀 양육 사업에 비해서 혜택을 받은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셋째 자녀 양육수당 지원 13명, 다자녀 우대카드 9명, 대중교통 이용 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27명,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관련 지원 7명), 그 만족도 역시 영유아 무료승차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3-1-10]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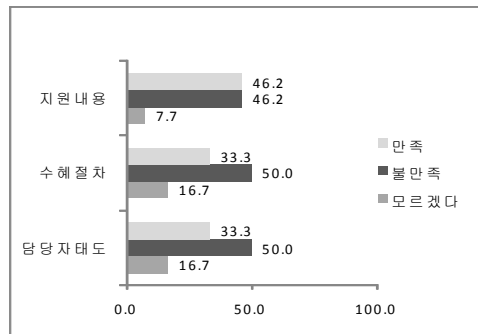
1. 산모도우미 파견(N=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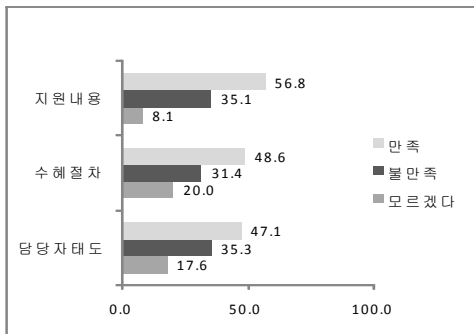
2.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급(N=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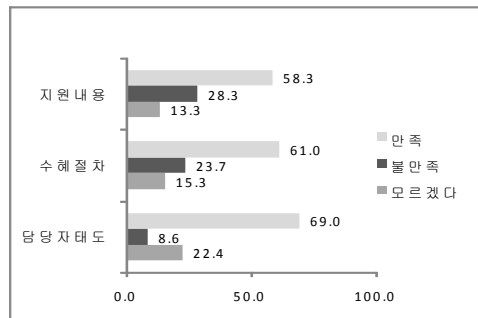
3. 셋째자녀 양육수당지원(서울시민 N=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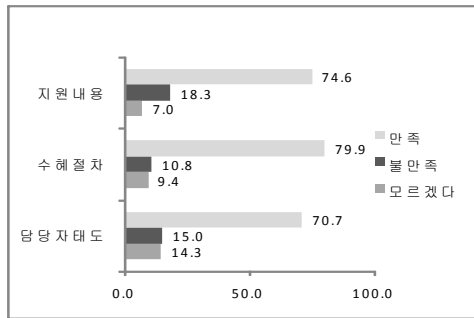
4. 보건소 임신부 건강검진(N=41)



5. 영유아 무료건강검진(N=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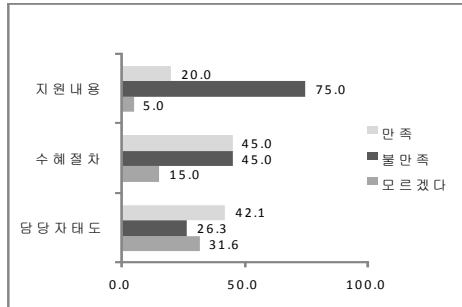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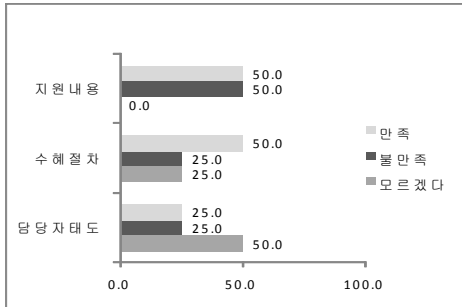


6. 예방접종 무상 서비스(N=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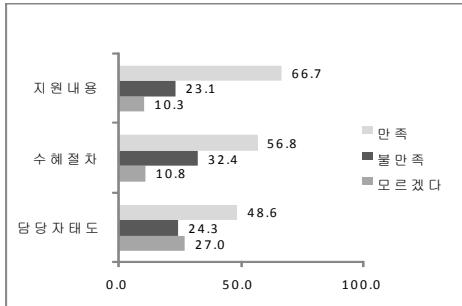


[그림 3-1-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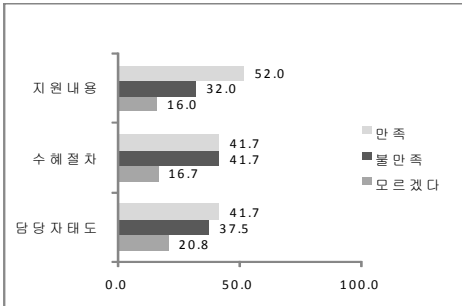
7.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N=4) 8. 출산장려금 차등지급(N=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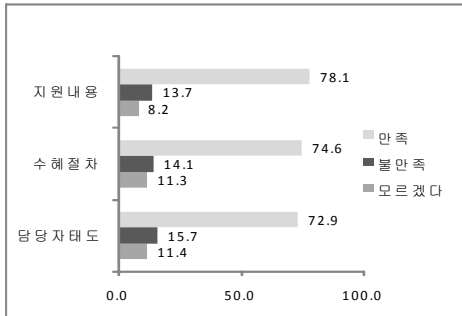
9. 출산휴가제도(N=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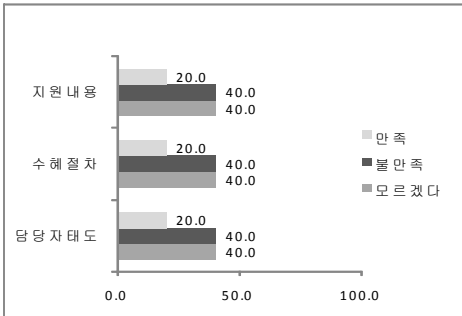
10. 육아휴직(N=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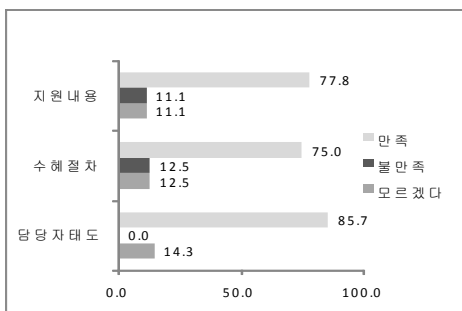
11. 임신부 철분제 지급(N=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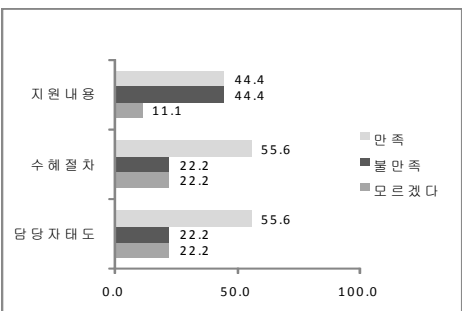
12.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N=5)



13.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N=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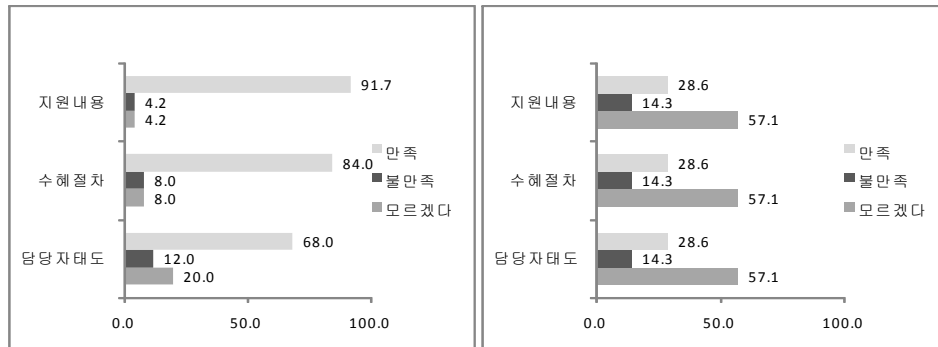


14. 다자녀우대카드(N=9)



[그림 3-1-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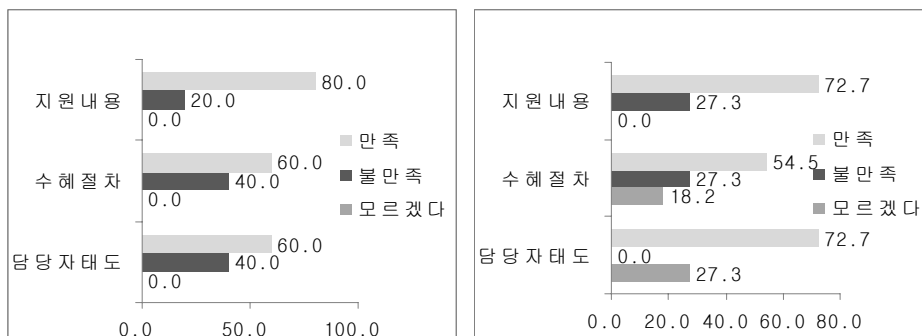
15. 대중교통 3자녀(영유아)무료승차(N=27) 16.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관련 지원(N=7)



현재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다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1-11]에 제시하였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의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세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들은 “셋째 자녀 양육수당 지원”과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에 대해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 가족에게 양육비 및 병원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11] 세 자녀 어머니의 다자녀 지원 사업 만족도

1. 셋째자녀 양육수당 지원(서울시민 N=6) 2.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N=11)



## 2.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만족도 분석

설문조사는 양적 방법론으로써, 객관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수혜자인 기혼 가임 여성으로 현재 자녀가 없거나, 한 명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제도들이 다자녀 가족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제도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인센티브 요인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자녀 가족과 기혼 가임여성 대상 초점집단면접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로 각각 하나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세 집단, 경기도 오산시에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오산사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의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서 한 집단은 8명으로 구성하였다.

### 1) 면접 대상

초점집단면접은 서울시와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둘 계획 중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7회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서울시와 오산시, 그리고 아버지 집단에서 한 집단을 구성한 면접 대상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3-1-10~12>와 같다.



〈표 3-1-10〉 서울시 초점집단면접 대상

서울시	면접인원	면접 대상 특성	취업 여부
1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3명 2자녀 어머니: 4명 기혼가임여성: 1명	취업모 6명 비취업모 2명
2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5명 2자녀 어머니: 3명	취업모 4명 비취업모 4명
3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3명 2자녀 어머니: 3명 기혼가임여성: 2명	취업모 5명 비취업모 3명

〈표 3-1-11〉 오산시 초점집단면접 대상

오산시	면접인원	면접 대상 특성	취업 여부
1차 FGI	8명	3자녀 어머니: 8명	비취업모 8명
2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3명 2자녀 어머니: 5명	취업모 8명
3차 FGI	8명	1자녀 어머니: 4명 2자녀 어머니: 4명	취업모 3명 비취업모 5명

〈표 3-1-12〉 아버지 대상 초점집단면접

오산시	인원	면접 대상 특성	취업 여부
1차 FGI	8명	3자녀 아버지: 2명 2자녀 아버지: 3명 1자녀 아버지: 3명	비취업모 8명

## 2) 면접 방법

면접은 2008년 1월 14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총 7회 실시하였다. 1회 면접 인원은 8명이었고 면접진행자와 기록자가 함께 참석하였다. 면접 시간은 1회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현재 자녀가 몇 명인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자녀를 출산, 양육하면서 정부 혹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이 있는지, 지원 받은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면접자들이 대답하면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 3) 초점집단면접 결과

다음에 초점집단면접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1) 출산 계획

◎ 자녀가 1명, 특히 첫째 자녀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현재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둘째를 생각할 여력이 없고,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경우 둘째를 가질 생각이 있다.

현재 8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출산할 당시만 해도 당연히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현재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사립학교 특수교사, 1자녀 어머니).

현재 5세 여아를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에 기관에 처음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잘 적응해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다. 그리고 나니 아이에게 형제 혹은 자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둘째를 생각 중에 있다(프리랜서, 1자녀 어머니).

◎ 한 자녀만 둔 어머니의 대부분이 둘째 자녀를 낳고 싶으나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인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둘째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있었다.

첫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더 낳고 싶지 않다. 화장실에서 모두 샤워를 한 적도 있고, 여방접종 같은 경우도 무료로 받기 위해서 집에서 차타고 40분 이상 가야했다. 집 앞에 있는 동사무소 보건소에 갔더니 그 곳에서는 여방접종에 관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다. 지하철 타고 병원 가면서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야기 기저귀 갈고 싶지 않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기본만 해도 120만 원 정도 나간다. 고학년 올라갈수록 단위가 점점 커지니까 둘째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 자녀가 두, 세 명인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가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었다. 특히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에게 부담과 손해가 되어서 더 낳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를 출산할 계획이 있거나 출산하는 이유는 아

이에게 형제자매가 필요해서라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형제에게도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더 낳을 계획이 없다. 아이들도 1자녀, 2자녀 아이들보다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것 같다. 외출 계획을 세워 봤다가도 아이들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불만들이 많다. 부모 입장에서든 여러 가지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세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어머니의 경우 둘째까지는 계획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으나, 셋째 출산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인 경우도 있었다.

결혼 후 아이를 원했으나 아이가 생기질 않아 병원을 찾아가며 첫아이를 낳고 계획 하에 둘째까지 낳았다. 이후 특별히 피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에 없었던 셋째 임신으로 기존의 두 아이에게 소홀할까 걱정되어 고민하였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되었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면접에 참여한 아버지 중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는 1명이었고 대부분은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의 지원이 확대되면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다는 아버지도 있었다.

더 이상 낳을 계획이 없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나이인데, 아빠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교육비이다.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보다는 교육비가 제일 문제다.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팽배해서 엄마들끼리도 피아노, 태권도, 좋은 학원 등 교육비,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회사원, 2자녀 아버지).

## (2) 혜택 받은 정책

### ① 정부 혹은 지자체

◎ 세 자녀 가족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셋째 자녀의

보육료 면제, 초등학교 특별활동비 한 과목 면제, 출산 축하금, 임신 기간 동안 철분제 지급, 다자녀 우대 카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세 자녀는 학교에서 한 명 당 한 가지씩 특별 활동비를 면제해 준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학원비도 큰 부담이 되는데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 좀 더 바란다면 영어나 컴퓨터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도록 면제 혜택을 주면 좋겠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1, 2 자녀 어머니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았거나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 출산 축하금, 출산 선물
-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급, 초음파 검사, 당뇨검사
- 육아 도우미 바우처, 유축기 대여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북 바우처
- 영유아 건강검진

현재 ○○구에 거주하는데 육아도우미 신청했고 48,000원의 바우처를 지급 받는다고 했다. 다섯 군데 도우미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유축기도 대여해 주고, 초음파 검사, 철분제 지급, 당뇨검사를 해 주었다(전업주부, 첫째 자녀 임신 중).

## ② 기업

◎ 취업모 본인이나, 비취업모의 경우 배우자가 다니는 기업에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혜택은 다음과 같았다.

- 취업모의 경우 출산 휴가 90일
- 기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 기업에서 산모 병원비 지급 및 공제 혜택으로 병원비 환급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육아시간, 출산 축하금
- 현대 차 구입 시 자녀수에 따른 할인 혜택

◎ 취업모의 경우 법으로 보장이 되었더라도 공무원, 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

고는 현실적으로 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출산 휴가 후 직업에 복귀한 뒤 모유 수유, 보육 문제 등 전반적인 양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다.

첫째 때 출산 휴가를 받았고, 1년 휴직했는데, 1년은 육아 휴직비가 나온다(교육경력, 호봉 경력 모두 산정해서 지급), 추가로 2년 더 휴직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급 휴직이다. 육아 휴직의 경우 현재 법이 바뀌어서 취학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첫째 때 교육 공제회에서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급받았다(공립유치원교사, 둘째 자녀 임신 중).

출산 휴가 3개월 받았다. 하지만 사립학교라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해주긴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자리가 줄어들면 일순위로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 3년 휴직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육아시간(1시간 일찍 퇴근)은 받았다. 원래 퇴근 시간이 4시 반이므로 3시 반에 갈 수는 있지만 아이들 하교 시간이 3시라서 엄밀히 3시 반에 퇴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 사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부여한다(사립학교 특수교사, 1자녀 어머니).

### (3) 정책에 대한 만족

◎ 지원 받은 정책 중에서 어머니들이 만족한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 보건소 혜택(지역별 차이)
- 출산 축하금

◎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만족과 불만족이 모두 표출되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산모 도우미에 대한 임금을 서비스를 받는 산모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낮추어서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소득이 좀 낮아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아이 낳고 일주일 있다가 시작해서 2주 정도 도움을 받았다. 좀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친손자처럼 너무 잘해 주셨다. 지금은 소득이 올라서 아이를 낳아도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면 좋겠다(자영업, 2자녀 아버지).

◎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보육료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보육시설 중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없었으면 세 자녀 키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신청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서 만족한다. 하지만 시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를 해야 해서 힘들다. 아이가 어릴 때는 집에서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지원이 되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 집에서 돌보고 싶은 어머니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자영업, 3자녀 어머니).

#### (4) 정책에 대한 불만족 및 개선 방안

◎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 내용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면접 대상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 •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같은 시기에 출산을 해도 어느 지역에서 출산했는지에 따라 출산 축하금을 못 받기도 하고, 받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많다. 또한 실제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서울 ○○구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은 어머니의 경우 첫 아이는 5만원 상당의 전자 체온계, 둘째 아이는 10만원을 받았다. 받아서 기분은 좋았지만 이것이 향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 대부분의 정책이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어 중류층은 혜택을 못 받는다.
-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직장에 복귀하면 모유를 유축할 공간이 없다.
- 아이를 데리고 이동할 때 모유 수유할 공간이 없다(예, 지하철 등 공공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

예방 접종 시 보건소에서는 용터 안 남은 주사는 없고, 집에서 멀어서 아기를 데리고 가기도 어렵다. 거주지 보건소 중에서도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다. 결국 가까운 소아과를 찾게 된다. 소아과에서 예방접종하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 토요일 보건소 이용

첫 아이 때는 토요일에 보건소를 이용했었는데 둘째 아이 때는 주 5일 근무가 시행이 되면서 토요일에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취업모는 거주지 보건소를 토요일 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토요일에 쉬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하다, 보건소에서 철분제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매달 받으러 가야 한다,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 찾아가기 힘들다, 철분제도 산부인과에서 받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간호사, 2자녀 어머니),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는 다른 날 와서 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 데리고 한번 병원 가는 것이 어려운데 상담 받으면서 다른 진료도 가능하면 좋겠다(전업주부, 2자녀 어머니),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연계된 치과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영유아 건강검진에 안과 검진도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다(간호사, 2자녀 어머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 검진이 되는 병원에 대한 리스트도 직접 찾아봐야 해서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 소아과는 찾아보니 살고 있는 지역에 한 군데 소아과가 있었고 치과의 경우는 연계된 치과를 찾지 못했다, 연계된 치과가 있는 다른 지역에는 갈 수 없다고 했다, 소아과는 이미 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지만 치과는 필요한데 오히려 연계병원이 없었다, 그리고 키, 몸무게, 문진 외에 더 심도 있는 검사(예를 들어 발달 검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 홍보 부족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 정부 정책인데 구 별로 내용도 너무 다르고 홍보도 너무 부족하다, 산부인과 혹은 소아과에라도 홍보 책자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인데 집에서 인터넷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또한 제대로 준비기간 안 된 상태에서 정책 시행(예,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하는 것도 문제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에 안과 같은 곳도 첨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발달이 늦은 애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들도 다양한 지원 혹은 정책
-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학교의 학기와 같은 기간 운영
- 학교장 재량 휴교일로 인해 취업모의 경우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움

첫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기간이 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학기 시작 후에 시작해서 방학 2주 전에 끝난다. 만약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방과 후 프로그램 시작 전과 끝난 후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다. 학교장 자량 휴교일도 문제다. 법정 공휴일 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휴 있을 때 맞춰 학교도 쉬는데 만약 내가 직장을 다녔으면 그때도 휴가를 내야 하고 또 방학도 있고 해서 어려웠을 것이다(전업주부, 2자녀 어머니).

- 육아휴직을 쓴 겨우 근무평가에서 불이익

교사 근무 평가에서 육아휴직 쓴 사람에게 무조건 최하 점수를 주기도 한다. 공립이라서 그런 차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실적 없고, 노력하지 않는 교사보다 아이 낳아서 육아 휴직 사용한 교사가 근무 평가 최하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아기를 몇 명 낳았다고 돈을 얼마 주고 그러는 것 보다 직장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공립유치원 교사, 둘째 자녀 임신 중).

- 일관적인 정책 추진

지원을 해주다가 예산이 없다고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줄이는 등 정책이 계속 변화해서 믿을 수가 없다(2자녀 아버지).

#### (5) 정부 혹은 기업에 바라는 점

면접 대상자들이 정부나 기업에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 가족에 유류세, 자동차세 할인

유류세, 자동차세 할인 같은 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기는 너무 힘들다. 예방주사를 맞히러 가는 경우도 택시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실제로 아이 데리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아이가 너무 울어서 젖 물리면서 운전을 한 적도 있다(프리랜서 방송작가, 1자녀 어머니).

- 다자녀 가족에 콜택시 이용 및 택시비 할인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택시비의 50%정도라서 만족도가 높다. 아이 여럿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사립학교 특수교사, 1자녀 어머니).

-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한 혜택

어린이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려면 매일 차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요일제를



신청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일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구청 주차장과 같은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녀가 있는 집은 주차 할인 등 요일제와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셔틀 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구립어린이집에 다자녀 가족, 비정규직에 우선 순위 조정

정규직이 아닌 이상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자에도 올리지 못한다. 여성들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도 상당히 높는데 비정규직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회사원, 1자녀 어머니).

- 시간외 보육 필요
- 정부가 운영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확대

구립어린이 집은 아이가 6개월이 되어야 보낼 수가 있다. 출산 휴가 90일 끝난 다음에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맡길 곳이 없어서 사립 영아 전담에 맡겼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에산 한도 내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 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제공해 주고 그 안에서 다자녀 가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족에 일 년 동안 10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그 안에서 기저귀, 분유, 예방 접종비 등 다자녀 가족에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쿠폰 형태로 지급하던지 매장 혹은 병원을 지정해 주든지...(회사원, 둘째자녀 임신 중)

- 다자녀 취업모에게 자기 개발 기회 필요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 해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기 개발을 할 수 없어서 좋은 직장엔 지원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자기 개발은 안 하고 쉬고 있었던 사람 취급을 받았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베이비시터, 육아 도우미 자격관리
- 사교육비 경감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족을 위한 배려

기차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는 남들 눈치가 너무 보인다. 당연히 모유 수유도 힘들고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거 통제하기도 어렵다. 기차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 아이 있는 가족들도 덜 눈치 보게 될 것 같다(공립유치원 교사, 둘째자녀 임신 중).

- 자녀 출산시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 허용

최소한 자녀를 출산하고 퇴원할 때만이라도 남편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아내가 세 아이 모두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수술을 하고나면 2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집안 어르신 중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매우 힘들다. 한 1주일 정도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고 저녁에 병원에 와서 먹고 자면서 아내 수발을 들었다. 너무 힘들고 피곤했다. 수술해서 출산한 사람들에게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거나 출산 휴가를 1주일 정도 주었으면 좋겠다(회사원, 3자녀 아버지),

- 자녀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환경

어떤 식당은 초등학생이 3명 이상이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자녀를 낳으라고 하면서 자녀 있는 가족을 이렇게 천대하는 건 부적절하다(전업주부, 1자녀 어머니),

자질한 지원보다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보육만이라도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육아는 힘든 일이고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전업주부, 첫째 자녀 임신 중),

- 적극적인 홍보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자주 가는 곳(예, 출생 신고 시 동사무소, 산부인과, 소아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정리한 책자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부모님을 위해서 TV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회사원, 2자녀 어머니),

- 다자녀 가족에 교복비 지원

- 다자녀 가족에 의료비 감면제도(치과비용, 안경비 등)

- 다자녀 가족에 가스비, 전화요금 감면과 전기료 감면혜택 확대

애들이 많으면 모든 면에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 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비 등 피부에 와 닿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세 자녀가 있으면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전기를 많이 써야만 감면이 되고 감면비용도 적다. 아껴 쓰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감면액도 늘렸으면 좋겠고 전기료뿐 아니라 가스요금이나 전화료 감면혜택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전업주부, 3자녀 어머니),

-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출산휴가나 가족을 위한 제도를 잘 실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감사 횟수를 줄여준다거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기업 내 보육시설을 만들 때 지원 비용을 증액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회사원, 2자녀 아버지),

- 탄력근무제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걱정이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게 된다.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부모도 시간을 잘 맞춰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학원에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회사원, 1자녀 아버지).

### III. 다자녀 우대 정책의 활성화 방안

#### 1. 다자녀 우대 정책의 방향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단산으로 끝내는 것은 가임기 남·여가 자녀수를 줄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결과이다. 따라서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남녀가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것이 자신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나 최근 국회예산처(2007) 연구에 의하면 미혼남녀나 기혼여성들이 희망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수는 2명을 초과하여 인구 대체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실제 합계출산율은 2007년 현재 1.26명에 불과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출산에 대한 희망과 욕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부담에 의해 좌절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자녀수에 있어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다자녀 양육시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지원책이 제공되는 등 사회 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두 자녀 이상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자녀 출산을 꺼리는 현상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반(反)출산 친화적 근로환경 등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로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지원제도, 휴직휴가제도, 보육 및 교육 지원, 기타 지원책으로 분류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경제적 지원제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다자녀 출산에는 보육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양육비나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OECD회원국들 간의 비교에서도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저출산국에 비해 가족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 현금급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1) 세금감면 제도

현행 소득세제도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증가할 때마다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씩 늘어나 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하는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추가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이 너무 적고,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과 비교할 때 공제 액수가 매우 적어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세금 감면을 통해 양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인적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 가족이 실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현재와 같이 연간 10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50만원 상향 조정하여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금감면제도는 저소득층 다자녀가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아동수당제도 등 소득지원제도가 거의 없는 우리사회에서 중간 계층 이상의 다자녀 가족 양육 부담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다자녀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면제하고 있다. 다자녀가족의 경우 분만 시 비용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불해야 할 의료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초점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셋째 자녀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일정 비율 경감해 주면 다자녀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휴작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모성출산휴가, 부성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데, 프랑스는 자녀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 제도 설계 시 자녀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 다자녀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 자녀가 많은 경우 출산 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돌봄 노동이 가중화되어 부모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수에 따라 자녀 출산과 육아를 위한 부모의 휴직·휴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1) 산전후 휴가 기간의 조정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첫째 자녀는 현행 제도대로 하면서, 둘째 자녀부터는 산후 휴가기간을 5일씩 더 늘리는(즉, 둘째 자녀는 95일, 셋째 자녀는 100일)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산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이외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산전·후 휴가 기간 중 다자녀 인센티브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아버지 출산휴가

2008년 7월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되어 자녀가 출생한 후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아버지도 3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무급 혹은 유급휴가 여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소득 근로자들

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유급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자녀가 많은 경우 출산 후 돌봄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 증가하므로 아버지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한다면 다자녀가족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 3)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

####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현재 월 소득인정액(4인 398만원) 이하 가구로써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자녀(만 3~4세)에게 지원 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다자녀 가족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보육 및 교육비 지원 수준을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다닐 경우에는 유치원 (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중 둘째 자녀에게는 보육비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 (2) 다자녀 가족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보조비 지원

현재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도가 높으므로 다자녀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시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 (3) 다자녀 가족 자녀를 위한 아동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족이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용비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다자녀 가족 자녀를 위한 아동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기타 지원제도

##### (1)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

현재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 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핵가족이 가족 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생아 출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요구도가 높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의 수혜 계층을 확대하여 자녀를 출산한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다자녀가족카드의 실효성 확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름의 다자녀카드를 만들어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카드는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휴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다자녀 가족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았고 일반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좀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다자녀 우대카드 정책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 예로 현재 다자녀카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대부분인데,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등학생 이상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족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우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족의 부모들이 사교육비와 의료비의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학원이나 의료기관, 대형할인점, 서점과의 제휴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이중 혜택이 가능하도록(카드사 혜택 +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족 차량의 유류세, 자동차세 할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우대카드의 경우 현재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중 금융기관 금리 우대제와 같이 그 내용이 좋은 것들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간에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기타

다자녀 가족 자녀의 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족의 의료비 감면제도(치과비용, 안경비 등),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가스비, 전화요금 감면과 전기료 감면혜택 확대, 유류세 및 자동차세 할인,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해 요일제 차량과 같은 혜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처럼 다자녀 가족에 출산 및 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비용을 지급해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취업모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 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그 수와 종류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다자녀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자녀 우대 정책은 독립된 하나의 과제로서 보다는 포괄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1,074개 과제에 4조 7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 정부의 저출산 지원과 다자녀 우대 정책 수행의 의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실효성에 대한 조사 결과, 기본적으로 다자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았고, 수혜자들의 만족 정도와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행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현행 다자녀 우대 정책의 보완

다자녀 우대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본 보고서에서 개괄한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더 다양한 사업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 조사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의 결과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우대 정책 중에 모순이 있거나, 지원의 정도가 미흡한, 혹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수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수혜자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목록 홍보 방안, 치과·안과·전문적인 아동 발달 검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검진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이외의 보건소나 일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방안 등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 해주는 방안, 다자녀 가족에게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다자녀의 개념 재정립 필요

현재 정부 정책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자녀”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제Ⅱ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 중 다자녀 관련 사업도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둘째 자녀부터 수혜 대상이 되는 사업이 더 많았다. 또한 출산 지원금, 다자녀 카드 등 주요한 다자녀 지원 사업이 신생아와 영아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출산 순위에서 세 째 이상의 자녀는 4만 6천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현재 출산율이나 부모들의 자녀 출산 계획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는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 3) 정책 시행 시 일관성 유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는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중단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감면제를 시행하고는 어느 시점에서 감면제를 없애버리거

나,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다가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줄이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수혜자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된 사업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4) 정책의 형평성 제고

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시·도별로 그 수혜 내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수혜자들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시·도별로,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구에 따라 차등이 심하다. 서울시의 경우 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시 50~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100~3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용산구와 양천구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의 8개 구에서는 2008년 3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도별로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시와 강원도는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없이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광주시는 두, 셋째가 출생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 구성 및 인구 수, 인구 이동,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구에서 출산했느냐에 따라 지원 액수에 큰 차이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따라서 불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수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 개발

정책은 수혜자의 특성에 맞추어 시행되었을 때 만족도도 높고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 다자녀 지원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혜자가 전업주부인지 취업모인지에 따라 효과가 있는 정책이나 정책의 실행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요구에 맞추어서 취업모의 경우 임신부 철분제 지급은 거주지 보건소가 아니라 직장이 위치한 보건소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진료 받는 산부인과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 6) 보편적인 인구정책으로서의 다자녀 우대 정책 개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자녀 우대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추후에는 보편적인 인구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정책 홍보 방안의 다각화 및 적극적인 홍보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홍보 방법도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동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수혜 내용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홍보”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수요자들에게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동사무소나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수의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에 다자녀 우대 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담은 자료를 비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는 세대별, 계층별로 홍보 효과에 차이가 커서 정보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령이나 계층의 경우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자녀 양육에서 어려움과 부담되는 측면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의 경우 다자녀 출산의 이유로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필요해서’, ‘아이가 좋아서’, ‘아이 기르는 게 좋아서’라고 응답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을 고려해 보면 형제·자매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등의 연구 결과 소개, 자녀 양육의 즐거움과 보람 등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등, 다자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TV 드라마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부각시킨다면 다자녀 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 제13회 출생동향기본조사(독신자조사).
-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07). 선진국 가족친화정책 연구 및 사례조사 연수보고서.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2006). 세계 여성정책 동향.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프랑스 편.
- 유해미(2005).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입법정보, 제179호.
- 윤홍식(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pp.341-370.
- 장지연(2005).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ECD 자료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경, 홍승아, 송치선(2005).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 조애저, 김형모, 김유경, 이상헌, 이재연(2000).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구묵(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연구, 57(3), pp.337-361.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한국개발연구원.
- 홍승아(2005).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후생노동성(2006). 국민생활기초조사.

일본 내각부(2006). 저출산사회백서(少子化社会白書).

일본 내각부(2007). 저출산사회백서(少子化社会白書).

ADECRI(2005). *The french social protection system*.

Anne Pla(2008). *INSEE PREMIERE*, No.1170.

Caussat, L(2006a). 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10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6-74.

Caussat, L.(2006b). 프랑스의 출산율 동향과 출산장려정책: 양자간의 상관관계 연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 발표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2007).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Piketty, T(2005). Impact de l'a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sur l'activité féminine et la fécondité en France. in Cécile Lefèvre (ed.), *Histoires de familles, histoires familiales*, Cahiers de l'Ined, n° 156.

Spieess, Katharina(2006). *Familienbezogene Politiken in Deutschland*. Frankreich und Grossbritannien. gender politik.

<http://www.nso.go.kr>(통계청)

<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Politikbereiche/familie,did=97820.html>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

<http://www.insee.fr>

<http://www.issa.int/germ/homef.htm>

<http://www~ssw.issa.int/sswge/lpext.dll?f=templates&fn=main~h.htm&2.0>

[http://www.ipss.go.jp/ps~doukou/j/doukou13\\_s/doukou13\\_s.asp](http://www.ipss.go.jp/ps~doukou/j/doukou13_s/doukou13_s.asp)

<http://www.stat.go.jp/data/kokusei/2005/kekkgai.htm>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06/1-3.html>

<http://www.city.shinagawa.tokyo.jp/hp/page000000900/hpg000000850.htm>

[http://www2.city.atsugi.kanagawa.jp/kougyou/angel\\_s/page\\_16063.html](http://www2.city.atsugi.kanagawa.jp/kougyou/angel_s/page_16063.html)

<http://www.i-oyacom.net/prepass/prepass.html>

<http://www.nakagawakousan.com/newhouse/>

<http://www.suginami-kosodate.jp/ouenken/tick00.html>

#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서론

과거 1960년대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인구대체수준인 2.1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 중반까지 1.5~1.7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의 최저 수준인 1.08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7년에 출산율은 1.26으로 상승하여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 중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지출하는 보육·교육비가 경제적인 이유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실로 2004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77.2%가 교육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대다수가 교육비로 인하여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괄목한 만한 경제 발전은 높은 자질의 우수한 노동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바가 크며 이러한 이면에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큰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

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의 기능은 저하되고 사교육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 인프라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자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지만 실증적으로 이러한 부담 수준이 실제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보육·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 의향이 낮아지면 결국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며 이러한 출산 기피 현상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본 고에서는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 수준이 자녀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의 보육 및 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뒤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설명한 후 자료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동 연구에서는 전화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기술 분석과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적인 제언을 제공한다.

## II. 이론적 배경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인적자본 이론, 선별가설, 소비자 수요 이론, 자녀 수와 자녀 질의 모형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동 연구의 가설 및 모형 설정을 위해 각 이론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 보고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물적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지닌 능력



및 지식, 기술, 경험, 건강 태도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등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형식 혹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훈련, 경험 및 노동 유동을 통해서 개발된다(박미희, 여정성, 2000).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받는 높은 소득은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 인식된다(Schultz, 1961).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임금, 미래 소득, 사회적 지위의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계는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소득을 받게 된다고 봄으로써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간주한다(정영숙, 1996).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미래의 잠재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은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으며, 교육이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부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이 개인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적자본론의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선별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선별가설은 인적자본이론의 교육·생산성·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선별가설에 따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선별가설에서는 대학이 단순히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곳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똑

똑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여과과정 (filtering process) 혹은 분류과정(sorting process)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Lang and David, 1986; Liu and Wong, 1982; Riley, 1979; Stiglitz 1975; Weiss 1995; Wolpin 1977). Arrow(1973)은 선별가설을 주도하였는데 개인의 생산 능력이 완전하게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Layard and Psacharopoulos, 1974). 즉, 자신의 능력과 생산성을 잘 알고 있는 개인과는 달리 고용주는 그것을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지표나 신호를 가진 사람이 대개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조건부 기대치를 갖게 되며 이때 주로 학력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이정우 1995). 이러한 선별 가설은 교육이 선별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학력 간 소득격차의 상당 부분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보다 과대 평가되고, 사람들은 선별가설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채용, 결혼, 지위 상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경제학적 출산 행태 모형에서는 부모를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소비자라고 보고 있다.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 함수는 예산제약 하에서의 효용 극대화 과정을 거쳐 도출되며 자녀의 가격과 가계 소득의 함수로 나타난다. 자녀의 가격 변화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소비자 이론에서의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와 유사하며 가계 소득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 효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 자녀 수의 수요에 미치는 자녀의 가격 변화는 자녀 양육비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변화(부양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양육비 지원 등) 등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는 자녀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일반적인 수요 이론을 따른다.

한편, 소비자 수요 이론을 적용한 출산 행태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가설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적인 모형을 기초로

다양한 출산 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한 모형들이 뒤따라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의 초기 형태로 부모가 자녀의 수에 대한 수요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해서도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자녀 수와 질의 모델(quantity and quality model)이 있다. Becker의 출산 행태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문들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다. Becker(1960)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자녀가 열등재라거나 자녀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은 고소득의 가정이 높은 자녀 가격에 직면하고 있어 출산률이 낮다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Becker는 자녀는 정상재라는 전제 하에 자녀에 대한 수요가 자녀의 수로 대변되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녀 1인당 지출 비용과 같은 질적인 측면과 관련 있다고 봄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 연구 결과들은 앞서 제시한 이론들의 내용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는 보육·교육비 부담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비 부담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해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용복과 이소희(2004)는 오늘날 자녀의 의미가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재로서의 자녀를 중시하는 자영업·농가세대가 저하되고 영구 소비재로 자녀를 중시하는 고용자 세대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영구소비재로서의 아동의 경제적인 가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 취업률의 상승 등이 영구 소비재로서의 아동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가족은 많은 수의 자녀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한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 이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손승영(2005)은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전통적 요인은 약화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 사회에 작용하는 경쟁 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사회에서도 자녀가 제공하는 물리적·심리적 혜택에 변화가 있어와 과거에 비

해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자녀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유교적 규범마저 변화하고 있어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무나 물질적 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훗날 부모에게 제공할 물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2%에 이르고 있다(장혜경 외, 2004).

손승영(2005)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으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녀를 남들과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키우거나 남들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사회 압력이 한국 부모들에게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압력이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을 훨씬 높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주(2005)는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과 함께 낳아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결혼 후 이상적인 수 만큼 자녀를 낳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요구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 때문이라고 하였다.

차경옥(2004)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 출산에 적극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취업주부들은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한명에게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치가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변화함에 따라 부모들은 양적으로는 적은 수의 자녀와 질적으로는 우수한 자녀를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질적으로 우수한 자녀를 선호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녀 질에 대한 투자가 부모들로 하여금 점점 더 높은 액수의 보육·교육 비용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 학벌 주의 등이 자녀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결국 적은 수의 자녀를 선택하고 적은 수의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다시 자녀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순환적인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으로 하였다. 연령대를 25~39세로 한정 한 이유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연령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혼인 상태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연령별·지역별 조사 대상 샘플 수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비율에 따라 할당하였다. 조사 대상 샘플은 전국의 전화번호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2008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절감될 때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여기서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는 자녀의 현재 교육 단계로부터 두 단계 이상의 보육 혹은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았다. 즉,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교육비와 중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만을 대상으로도 수행하여 보육·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출산 의향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수행하여 1자녀에서 2자녀로의 출산 의향과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의향에 보육·교육비 절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술 분석 결과

#### 1) 현재 자녀 출산 의향 및 기대 자녀수

전체 응답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소득 계층별로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약간 낮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sup>7)</sup>

자녀 출산 의향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는 여성 중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 1명 있는 경우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7) 조사 대상 샘플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은 약 3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응답자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최저소득층 22.0%(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14.0%(201만원~290만원이하), 중산층 27.8%(291만원~360만원이하), 고소득층 16.2%(361만원~490만원), 최고소득층 20.0%(491만원이상)으로 나누었다.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비율은 9.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적어도 1명의 자녀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여성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희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출산 의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자녀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sup>1)</sup>	계
전체		363(24.2)	1,137(75.8)	1,500(100.0)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77(24.1)	243(75.9)	320(100.0)
	저소득층	57(27.9)	147(72.1)	204(100.0)
	중산층	87(21.5)	317(78.5)	404(100.0)
	고소득층	53(22.6)	182(77.4)	235(100.0)
	최고소득층	79(27.1)	212(72.9)	291(100.0)
지역	대도시	170(24.9)	512(75.1)	682(100.0)
	중소도시	170(23.5)	552(76.5)	722(100.0)
	농촌	23(24.0)	73(76.0)	96(100.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143(24.4)	442(75.6)	585(100.0)
	비취업중	220(24.0)	695(76.0)	915(100.0)
어머니 학력	중졸	0( 0)	18(100.0)	18(100.0)
	고졸	111(20.0)	445(80.0)	556(100.0)
	대졸	230(26.6)	634(73.4)	864(100.0)
	대학원졸	22(35.5)	40(64.5)	62(100.0)
양육 자녀수	없음	93(89.4)	11(10.6)	104(100.0)
	1명	185(43.5)	240(56.5)	425(100.0)
	2명	76( 9.2)	748(90.8)	824(100.0)
	3명 이상	9( 6.1)	138(93.9)	147(100.0)
어머니 연령	25~29세	144(55.6)	115(44.4)	259(100.0)
	30~34세	158(27.4)	419(72.6)	577(100.0)
	35~39세	61( 9.2)	603(90.8)	664(100.0)

주: 1) “없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임.

현재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 1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7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명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21.8%, 3명 이상을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은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 자녀 수는 소득 수준, 지역,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대 자

녀수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약 40% 정도가 1명의 자녀를, 약 50% 정도가 2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현재 기대자녀 수(출산 의향 있는 여성)

(단위: 명, %)

구분		자녀수				계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269(74.1)	79(21.8)	13( 3.6)	2(0.6)	363(100.0)
소득수준	최저소득층	60(77.9)	14(18.2)	3( 3.9)	-	77(100.0)
	저소득층	43(75.4)	12(21.1)	2( 3.5)	-	57(100.0)
	중산층	59(67.8)	22(25.3)	5( 5.7)	1(1.1)	87(100.0)
	고소득층	36(67.9)	15(28.3)	1( 1.9)	1(1.9)	53(100.0)
	최고소득층	62(78.5)	15(19.0)	2( 2.5)	-	79(100.0)
지역	대도시	119(70.0)	44(25.9)	6( 3.5)	1(0.6)	170(100.0)
	중소도시	132(77.6)	32(18.8)	5( 2.9)	1(0.6)	170(100.0)
	농촌	18(78.3)	3(13.0)	2( 8.7)	-	23(100.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중	105(73.4)	34(23.8)	3( 2.1)	1(0.7)	143(100.0)
	비취업중	164(74.5)	45(20.5)	10( 4.5)	1(0.5)	220(100.0)
어머니 학력	고졸	89(80.2)	15(13.5)	6( 5.4)	1(0.9)	111(100.0)
	대졸	165(71.7)	57(24.8)	7( 3.0)	1(0.4)	230(100.0)
	대학원졸	15(68.2)	7(31.8)	-	-	22(100.0)
양육 자녀수	없음	39(41.9)	48(51.6)	5( 5.4)	1(1.1)	93(100.0)
	1명	157(84.9)	25(13.5)	3( 1.6)	-	185(100.0)
	2명	66(86.8)	6( 7.9)	3( 3.9)	1(1.3)	76(100.0)
	3명 이상	7(77.8)	-	2(22.2)	-	9(100.0)
어머니 연령	25~29세	93(64.6)	45(31.3)	6( 4.2)	-	144(100.0)
	30~34세	122(77.2)	28(17.7)	7( 4.4)	1(0.6)	158(100.0)
	35~39세	54(88.5)	6( 9.8)	-	1(1.6)	61(100.0)

## 2)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보육·교육비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게 지출하는 그룹과 전국 평균 비용보다 낮게 지출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출산 의향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과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sup>8)</sup>



〈표 3-2-3〉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구분	지출수준	출산 의향			$\chi^2$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7(23.1)	90(76.9)	117(100.0)	0.231
	전국평균이상	72(25.4)	212(74.6)	284(100.0)	
유치원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7(10.8)	58(89.2)	65(100.0)	0.881
	전국평균이상	49(15.3)	272(84.7)	321(100.0)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5(9.3)	147(90.7)	162(100.0)	0.199
	전국평균이상	47(8.2)	529(91.8)	576(100.0)	
중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2(4.4)	43(95.6)	45(100.0)	0.006
	전국평균이상	5(4.2)	115(95.8)	120(100.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전국평균이하	1(6.7)	14(93.3)	15(100.0)	1.000
	전국평균이상	2(6.5)	29(93.5)	31(100.0)	

주: † p<0.1, \*p<0.05, \*\*<0.01, \*\*\*<0.001

### 3)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은 현재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도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를 1명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결과에서도 보육·교육비 부담 수준별로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집단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집단과 비슷한 정도의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역시 보육·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여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8) 지면상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여성과 2명을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결과표는 기재하지 않았다. 동 결과표는 신윤정 외(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정도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3-2-4〉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분	부담수준	출산 의향			$\chi^2$ -test
		있다	없다	계	
보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67( 24.2)	210( 75.8)	277(100.0)	0.701
	보통이다	24( 27.6)	63( 72.4)	87(100.0)	
	부담스럽지 않다	8( 21.1)	30( 78.9)	38(100.0)	
유치원비 지출	부담스럽다	42( 13.5)	268( 86.5)	310(100.0)	1.390
	보통이다	9( 20.0)	36( 80.0)	45(100.0)	
	부담스럽지 않다	5( 16.1)	26( 83.9)	31(100.0)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49( 8.7)	513( 91.3)	562(100.0)	0.815
	보통이다	11( 8.1)	125( 91.9)	136(100.0)	
	부담스럽지 않다	2( 4.8)	40( 95.2)	42(100.0)	
중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7( 5.2)	128( 94.8)	135(100.0)	1.732
	보통이다	0( 0.0)	26(100.0)	26(100.0)	
	부담스럽지 않다	0( 0.0)	6(100.0)	6(100.0)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부담스럽다	3( 7.1)	39( 92.9)	42(100.0)	0.306
	보통이다	0( 0.0)	3(100.0)	3(100.0)	
	부담스럽지 않다	0( 0.0)	1(100.0)	1(100.0)	

주: † p&lt;0.1, \*p&lt;0.05, \*\*&lt;0.01, \*\*\*&lt;0.001

## 4)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변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 유치원비 32.7%, 초등학교 교육비 25.8%, 중학교 교육비 19.8%, 고등학교 교육비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상위 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교육기관에 대해 응답한 사람이 연령이 높고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자녀 출산 의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의 감소 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비용으로 감소하면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희망하는 비용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감소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전체여성)

(단위: %, 명,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 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있다	178( 44.1)	49.1	193,508
	없다	226( 55.9)	43.2	127,415
	계	404(100.0)	46.0	165,697
유치원비	있다	130( 32.7)	50.0	176,691
	없다	267( 67.2)	49.5	168,588
	계	397(100.0)	49.7	171,380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191( 25.8)	49.3	176,276
	없다	549( 74.2)	42.5	160,058
	계	740(100.0)	44.3	164,542
중학교 교육비	있다	33( 19.8)	46.8	257,969
	없다	134( 80.2)	41.1	189,412
	계	167(100.0)	42.3	203,940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11( 23.9)	60.9	316,666
	없다	35( 76.1)	43.3	242,604
	계	46(100.0)	47.5	260,238

한편, 현재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본인  
인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절감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  
답자 중 약 15~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비 28%, 유치원비  
23.6%, 초등학교 교육비 19.3% 중학교 교육비 17.5%, 고등학교 교육비 23.3%).  
이러한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을 파악한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비율은 전체 여성  
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게 약 50% 절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보육·교육비 지출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 명, 원)

구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지출비용과 적정비용간의 차이 평균
보육비 지출	있다	84( 28.2)	54.9	190,367
	없다	214( 71.8)	43.4	118,287
	계	298(100.0)	47.0	140,021
유치원비 지출	있다	78( 23.6)	51.1	178,040
	없다	252( 76.4)	49.9	169,735
	계	330(100.0)	50.2	171,791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131( 19.3)	51.6	183,927
	없다	547( 80.7)	42.5	160,431
	계	678(100.0)	44.4	165,294
중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28( 17.5)	47.9	257,593
	없다	132(82.5)	41.1	189,658
	계	160(100.0)	42.4	202,396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있다	10( 23.3)	62.9	318,519
	없다	33( 76.7)	44.2	242,111
	계	43(100.0)	48.6	259,744

##### 5)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비 지출 여성과 유치원비 지출 여성의 57.4%,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의 51.2%를 보였다. 중학교 교육비와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각각 37.2%와 29.1%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23.9%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보다 보육·교육비 절감에 따른 출산 의향이 높은 이유는 아직 해당 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람보다 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보육·교육비 감소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감소율은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 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과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2-7〉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전체 여성)

(단위: 명, %)

구 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있다	272( 57.4)	37.8
	없다	202( 42.6)	35.2
	계	474(100.0)	36.7
유치원비	있다	272( 57.4)	36.5
	없다	202( 42.6)	31.2
	계	474(100.0)	34.2
초등학교 교육비	있다	527( 51.2)	29.4
	없다	503( 48.8)	30.4
	계	1,030(100.0)	29.9
중학교 교육비	있다	438( 37.2)	31.1
	없다	741( 62.8)	32.4
	계	1,179(100.0)	31.9
고등학교 교육비	있다	232( 29.1)	38.5
	없다	566( 70.9)	36.3
	계	798(100.0)	36.9
대학교 교육비	있다	44( 23.9)	40.0
	없다	140( 76.1)	33.5
	계	184(100.0)	35.1

〈표 3-2-8〉 보육·교육비 향후 예상 비용이 적정비용으로 절감할 때 출산 의향(출산의향 없는 여성)

(단위: 명, %)

구 분	향후 적정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비용 감소 평균
보육비 예상 지출	있다	86( 30.8)	38.4
	없다	193( 69.2)	35.4
	계	279(100.0)	36.2
유치원비 예상지출	있다	86( 30.8)	37.0
	없다	193( 69.2)	31.1
	계	279(100.0)	32.7
초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19( 31.2)	31.2
	없다	484( 68.8)	30.5
	계	703(100.0)	28.7
중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266( 26.7)	31.2
	없다	729( 73.3)	32.5
	계	995(100.0)	27.8
고등학교 교육비 예상지출	있다	171( 23.3)	38.0
	없다	562( 76.7)	36.3
	계	733(100.0)	25.8
대학교 교육비예상지출	있다	39( 22.0)	40.0
	없다	138( 78.0)	33.5
	계	177(100.0)	22.9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낮았다. 이들이 응답한 향후 보육·교육비 희망 감소율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하여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심층 분석 결과

### 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다. 첫번째 모형은 현재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출이 현재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우선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녀 1명 있는 여성과 자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이유는 1자녀에서 2자녀로, 그리고 2자녀에서 3자녀로의 출산 이행 의사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교육 단계별로 보육·교육비 지출 정도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유치원비를 지출하는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는 여성 각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sup>9)</sup>

첫 번째 모형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유무, 어머니연령, 어머니학력, 어머니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

9) 중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167명 중에서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7명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여성 43명 중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3명으로 6.5%에 지나지 않았다. 샘플수와 자녀 출산 의향 변수의 변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비 지출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동 모형에서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은 지난 3개월간 자녀의 보육 혹은 교육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비용(만원)으로서 가구당 지출한 전체 보육·교육 비용과 자녀 1인당 지출한 비용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보육·교육비 지출이 감소되면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을 통제하고 지출 감소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비용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 유무,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교육비 지출 감소” 변수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수준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세 번째 모형은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때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향후 지출할 보육·교육비는 현재 자녀의 교육단계에서 2단계 높은 교육단계로까지 보았다. 이러한 분석 역시 전체 여성과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세 번째 모형의 주된 분석 목적은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교육비가 감소되는 경우 여성의 출산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파악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양육자녀수, 남아자녀 유무,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통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감소” 변수는 2007년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비용으로의 감소 비율이다.

동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설명은 <표 3-2-9>와 같다. 동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0

의 값을 가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선형모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2-9〉 로짓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값
첫번째 모형	종속변수	현재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 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 (만원), 연속 변수
두번째 모형	종속변수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 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 독립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 적정 수준)/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	월평균 보육·교육비 (만원), 연속 변수
세번째 모형	종속변수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비용 절감시 자녀 출산 의향	자녀 출산 의향 있음=1, 없음=0
	주요 독립변수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절감 비율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적정 수준)/ 전국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100, 연속변수
공통 독립변수		소득수준	최저소득층=1 혹은 0 / 저소득층=1 혹은 0 중산층=1 혹은 0 / 고소득층=1 혹은 0 최고소득층=1 혹은 0(준거집단)
		양육자녀수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 연속변수
		남아자녀유무	남아자녀 있음=1, 없음=0
		어머니연령	응답자 여성의 연령, 연속변수
		어머니학력	어머니대졸이상=1 혹은 0 어머니 고졸이상=1 혹은 0(준거집단)
		어머니취업	어머니 취업=1, 어머니 비취업=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1 혹은 0 중소도시 거주=1 혹은 0 농촌 거주=1 혹은 0(준거집단)

## 2)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추정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번째 모형에서 중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과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 그리고 세 번째 모형에서 대학교 교육비 지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이러한 모형들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1) 첫 번째 모형 추정 결과

첫 번째 모형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여성, 자녀를 2명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모두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역시 해당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 지출 변수를 가구당 전체 비용으로 한 경우와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경우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육비 지출 변수 대신 양육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최고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출산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부모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교육 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출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 등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자녀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낳으려는 경향도 보육·교육비 지출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이유라고 판단된다.

자녀가 1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여성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자녀 출산에서 2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혹은 2자녀에서 3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자녀는 두 명 있어야 한다,” 혹은 “자녀에게 형제 자매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연령인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다는 사실은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높은 연령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3-2-10〉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가구당 지출	자녀1인당 지출	양육자녀1명	양육자녀2명
가구당 보육교육비지출	-0.002 (0.003) [0.998]			0.000 (0.004) [1.000]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0.003 (0.003) [0.997]	-0.004 (0.004) [0.996]	
최저소득층	-0.340 (0.264) [0.712]	-0.358 (0.263) [0.699]	-0.563 (0.368) [0.569]	-0.029 (0.411) [0.972]
저소득층	-0.226 (0.279) [0.798]	-0.244 (0.279) [0.783]	-0.116 (0.377) [0.891]	-0.318 (0.465) [0.728]
중산층	-0.326 (0.242) [0.722]	-0.342 (0.243) [0.710]	-0.227 (0.338) [0.797]	-0.513 (0.392) [0.598]
고소득층	-0.657* (0.284) [0.518]	-0.671* (0.284) [0.511]	-0.396 (0.368) [0.673]	-1.034† (0.540) [0.356]
양육자녀수	-1.541*** (0.165) [0.214]	-1.591*** (0.158) [0.204]		
남아자녀있음	-0.099 (0.169) [0.905]	-0.095 (0.169) [0.909]	-0.087 (0.219) [0.916]	-0.101 (0.302) [0.904]
어머니연령	-0.200*** (0.025) [0.818]	-0.199*** (0.025) [0.819]	-0.227*** (0.035) [0.797]	-0.174*** (0.040) [0.840]
어머니대졸이상	-0.082 (0.171) [0.922]	-0.085 (0.171) [0.918]	0.248 (0.246) [1.281]	-0.424 (0.265) [0.655]
어머니취업	-0.116 (0.180) [0.891]	-0.097 (0.181) [0.907]	-0.278 (0.250) [0.757]	-0.061 (0.291) [1.063]
대도시	-0.136 (0.320) [0.873]	-0.132 (0.321) [0.877]	-0.182 (0.436) [0.834]	0.598 (0.654) [1.819]
중소도시	0.009 (0.316) [1.009]	0.006 (0.317) [1.006]	-0.291 (0.438) [0.748]	0.888 (0.639) [2.430]
-2 Log L	1,031.264	1,030.631	494.664	451.728
Model chi-square	299.752***	300.385***	70.406***	41.138***
df	12	12	11	11
N	1,349	1,349	412	798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표 3-2-11〉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보육비, 유치원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가구당 보육비지출	0.004 (0.005) [1.004]					
자녀 1인당 보육비 지출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4 (0.007) [0.996]			
자녀 1인당 유치원비 지출				-0.005 (0.009) [0.995]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07 (0.006) [0.993]	
자녀 1인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06 (0.008) [0.994]
최저소득층	-0.243 (0.487) [0.784]	-0.299 (0.484) [0.741]	-1.576** (0.551) [0.207]	-1.577** (0.550) [0.207]	0.247 (0.466) [1.280]	0.296 (0.470) [1.344]
저소득층	-0.439 (0.506) [0.645]	-0.481 (0.502) [0.618]	-1.042† (0.605) [0.353]	-1.047† (0.606) [0.351]	-0.164 (0.540) [0.849]	-0.135 (0.543) [0.874]
중산층	-0.294 (0.432) [0.745]	-0.341 (0.432) [0.711]	-1.222** (0.461) [0.295]	-1.227** (0.462) [0.293]	-0.249 (0.438) [0.779]	-0.229 (0.439) [0.795]
고소득층	-0.349 (0.475) [0.706]	-0.374 (0.475) [0.688]	-2.563** (0.841) [0.077]	-2.558** (0.840) [0.077]	-0.797 (0.565) [0.451]	-0.784 (0.564) [0.456]
양육자녀수	-1.884*** (0.297) [0.152]	-1.872*** (0.301) [0.154]	-1.378*** (0.342) [0.252]	-1.403*** (0.343) [0.246]	-0.850** (0.278) [0.427]	-0.904** (0.286) [0.405]
남아자녀있음	-0.127 (0.302) [0.881]	-0.129 (0.302) [0.879]	0.035 (0.373) [1.035]	0.045 (0.373) [1.046]	-0.357 (0.322) [0.700]	-0.357 (0.321) [0.700]
어머니연령	-0.163** (0.048) [0.850]	-0.166** (0.048) [0.847]	-0.198** (0.059) [0.820]	-0.195** (0.059) [0.823]	-0.200*** (0.054) [0.819]	-0.203*** (0.054) [0.816]
어머니대졸이상	0.010 (0.328) [1.010]	0.011 (0.328) [1.012]	-1.051** (0.369) [0.350]	-1.048** (0.369) [0.351]	-0.010 (0.311) [0.990]	-0.002 (0.312) [0.998]
어머니취업	-0.383 (0.317) [0.682]	-0.346 (0.315) [0.708]	0.107 (0.376) [1.113]	0.103 (0.376) [1.109]	0.110 (0.305) [1.116]	0.094 (0.305) [1.099]
대도시	0.727 (0.646) [2.070]	0.748 (0.644) [2.112]	-0.776 (0.678) [0.460]	-0.774 (0.678) [0.461]	-0.508 (0.564) [0.602]	-0.522 (0.565) [0.593]
중소도시	0.862 (0.641) [2.368]	0.862 (0.639) [2.369]	-0.433 (0.657) [0.648]	-0.434 (0.657) [0.648]	-0.092 (0.537) [0.912]	-0.096 (0.538) [0.908]

〈표 3-2-11〉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2 Log L	336.368	336.991	242.907	242.873	357.955	358.595
Model chi-square	102.188***	101.564***	59.293***	59.326***	43.732***	42.750***
df	12	12	12	12	12	12
N	388	388	376	376	710	708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 (2)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서 보육비, 초등학교 교육비, 고등학교 교육비 절감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 큰 유효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2〉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지출감소	0.012** (0.005) [1.012]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09 (0.006) [1.009]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5)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5 (0.006) [0.995]			
초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11** (0.004) [1.011]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지출			-0.012** (0.004) [0.988]		
중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02 (0.010) [1.002]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지출				0.016† (0.008) [1.016]	
고등학교 교육비지출감소					0.059† (0.032) [1.061]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지출					0.010 (0.028) [1.010]
최저소득층	0.158 (0.484) [1.171]	-0.880 (0.421) [0.415]	0.181** (0.338) [1.198]	1.370 (0.851) [3.936]	-1.391 (2.023) [0.249]
저소득층	0.532 (0.498) [1.702]	-0.527 (0.471) [0.591]	-0.210 (0.375) [0.811]	0.229 (1.097) [1.258]	-1.799 (2.262) [0.165]
중산층	0.389 (0.429) [1.476]	-0.485 (0.357) [0.616]	-0.151 (0.290) [0.860]	1.112 (0.801) [3.040]	0.940 (1.853) [2.560]
고소득층	0.231 (0.465) [1.260]	-1.253† (0.463) [0.286]	-0.395** (0.339) [0.674]	0.395 (0.812) [1.484]	0.251 (1.771) [1.285]
양육자녀수	-1.668*** (0.279) [0.189]	-1.246*** (0.267) [0.288]	-0.689*** (0.189) [0.502]	-0.388 (0.375) [0.678]	-2.124 (1.308) [0.119]

〈표 3-2-12〉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남아 자녀있음	0.149 (0.300) [1.161]	-0.353 (0.279) [0.702]	-0.302 (0.237) [0.739]	0.719 (0.684) [2.053]	-0.701 (2.053) [0.496]
어머니 연령	-0.110* (0.043) [0.895]	-0.086 (0.044) [0.917]	-0.158* (0.039) [0.854]	0.099 (0.167) [1.104]	-0.026 (0.713) [0.975]
어머니 대졸이상	-0.437 (0.297) [0.646]	-0.526 (0.272) [0.591]	-0.193† (0.210) [0.824]	-0.341 (0.540) [0.711]	-1.194 (1.723) [0.303]
어머니 취업	0.325 (0.282) [1.384]	0.200 (0.288) [1.222]	-0.100 (0.206) [0.904]	-0.390 (0.459) [0.677]	2.450 (1.923) [11.592]
대도시	0.334 (0.533) [1.397]	0.229 (0.566) [1.257]	0.199 (0.408) [1.221]	-0.036 (0.487) [0.964]	-0.858 (1.278) [0.424]
중소도시	0.538 (0.519) [1.712]	0.286 (0.562) [1.331]	0.093 (0.400) [1.097]		
-2 Log L	361.769	387.766	639.704	138.624	28.755
Model chi-square	86.946***	55.069***	71.892***	13.295	16.799
df	13	13	13	12	12
N	324	343	606	148	41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표 3-2-13〉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지출감소	0.018** (0.006) [1.018]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11 (0.007) [1.011]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6)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8 (0.007) [0.992]			

〈표 3-2-13〉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감소			0.013** (0.005) [1.013]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12** (0.005) [0.988]		
보육비 지출감소	0.018** (0.006) [1.018]				
가구당 보육비 지출	0.011 (0.007) [1.011]				
유치원비 지출감소		0.002 (0.006) [1.002]			
가구당 유치원비 지출		-0.008 (0.007) [0.992]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감소			0.013** (0.005) [1.013]		
가구당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0.012** (0.005) [0.988]		
중학교 교육비 지출감소				0.003 (0.010) [1.003]	
가구당 중학교 교육비 지출				0.013 (0.009) [1.013]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감소					0.161† (0.088) [1.175]
가구당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0.036 (0.050) [1.037]
중산층	0.917 (0.562) [2.503]	-0.299 (0.430) [0.741]	-0.029 (0.333) [0.972]	0.558 (0.852) [1.748]	-2.072 (3.003) [0.126]
고소득층	0.749 (0.607) [2.114]	-0.724 (0.509) [0.485]	-0.210 (0.379) [0.810]	0.265 (0.822) [1.303]	-0.959 (2.856) [0.383]
양육자녀수	-0.964** (0.003) [0.381]	-1.413*** (0.341) [0.243]	-0.614** (0.214) [0.541]	-0.505 (0.409) [0.604]	-4.230† (2.451) [0.015]

〈표 3-2-13〉 계속

구분	보육비 지출 여성	유치원비 지출 여성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남아 자녀있음	0.328 (0.369) [1.388]	-0.161 (0.330) [0.851]	-0.157 (0.276) [0.855]	0.497 (0.696) [1.643]	-5.935 (4.201) [0.003]
어머니연령	-0.030 (0.052) [0.970]	-0.061 (0.051) [0.941]	-0.138** (0.046) [0.872]	0.046 (0.175) [1.047]	-0.746 (0.974) [0.474]
어머니대졸이상	-0.310 (0.336) [0.733]	-0.360 (0.315) [0.697]	-0.238† (0.238) [0.788]	-0.631 (0.607) [0.532]	-3.141 (3.719) [0.043]
어머니 취업	0.496 (0.324) [1.641]	0.303 (0.331) [1.361]	-0.137 (0.236) [0.872]	-0.737 (0.514) [0.479]	8.893† (4.853) [7283.251]
대도시	-0.025 (0.598) [0.975]	0.652 (0.707) [1.919]	0.533 (0.500) [1.704]	-0.039 (0.523) [0.961]	-2.535 (2.493) [0.079]
중소도시	0.280 (0.580) [1.323]	0.581 (0.708) [1.788]	0.237 (0.495) [1.267]		
-2 Log L	263.187	301.064	512.280	123.416	19.060
Model chi-square	34.934**	32.844**	46.838***	11.379	22.544*
df	13	13	13	12	12
N	240	294	551	141	38

주: 1) † p<0.1, \*p<0.05, \*\*<0.01, \*\*\*<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 (3) 세번째 모형 추정 결과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비와 유치원비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비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할 비용의 절감이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변경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지출할 보육·교육비의 절감이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의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향후 보육료나 유치원비 지출에 대한 절감은 자녀 출산 의향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이 보다 높은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 비용의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모형에서 독립 변수인 예상지출감소는 전국 평균 비용으로부터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출 비용으로의 절감이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제로 지출할 비용이 전국의 평균 비용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 평균 비용으로 부터의 절감은 여성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절감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현실감이 부족한 비용의 절감은 자녀를 출산 하도록 의향을 갖도록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육비 절감이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으로의 비용 절감이어야 여성들이 출산 의향을 갖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3-2-14〉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전체 여성)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0.008* (0.004) [1.008]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0.008* (0.004) [1.008]				
초등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01 (0.003) [1.001]			
중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00 (0.002) [1.000]		
고등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03 (0.003) [1.003]	
대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15† (0.009) [1.015]

〈표 3-2-14〉 계속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최저소득층	0.113 (0.389) [1.120]	0.068 (0.392) [1.070]	-0.049 (0.251) [0.953]	-0.067 (0.228) [0.935]	-0.063 (0.278) [0.939]	0.116 (0.655) [1.124]
저소득층	-0.267 (0.419) [0.765]	-0.307 (0.420) [0.736]	-0.222 (0.267) [0.801]	-0.174 (0.245) [0.841]	-0.125 (0.309) [0.882]	-0.339 (0.785) [0.712]
중산층	-0.055 (0.384) [0.946]	-0.077 (0.386) [0.926]	-0.307 (0.229) [0.736]	-0.305 (0.201) [0.737]	-0.307 (0.246) [0.736]	-0.002 (0.594) [0.998]
고소득층	-0.336 (0.423) [0.714]	-0.344 (0.422) [0.709]	-0.305 (0.258) [0.737]	-0.392 † (0.230) [0.676]	-0.426 (0.282) [0.653]	0.294 (0.606) [1.342]
양육자녀수	-1.408*** (0.187) [0.245]	-1.410*** (0.188) [0.244]	-1.252*** (0.129) [0.286]	-0.982*** (0.129) [0.375]	-0.570*** (0.156) [0.565]	-0.505† (0.300) [0.604]
남아자녀있음	-0.415 (0.254) [0.660]	-0.372 (0.255) [0.689]	-0.262 (0.165) [0.770]	-0.278† (0.155) [0.758]	-0.331† (0.201) [0.718]	0.730 (0.555) [2.075]
어머니연령	-0.033 (0.038) [0.967]	-0.032 (0.038) [0.968]	-0.081** (0.024) [0.922]	-0.136*** (0.022) [0.873]	-0.138*** (0.033) [0.871]	0.072 (0.148) [1.075]
어머니대졸이상	-0.234 (0.260) [0.791]	-0.296 (0.260) [0.744]	-0.274† (0.165) [0.760]	-0.184 (0.145) [0.832]	-0.240 (0.181) [0.787]	-0.415 (0.449) [0.660]
어머니 취업	-0.213 (0.332) [0.808]	-0.243 (0.333) [0.784]	0.111 (0.167) [1.118]	0.082 (0.145) [1.085]	-0.113 (0.176) [0.893]	-0.548 (0.405) [0.578]
대도시	-0.070 (0.477) [0.933]	0.004 (0.480) [1.004]	0.067 (0.307) [1.069]	0.249 (0.286) [1.283]	0.475 (0.378) [1.609]	1.109 (1.116) [3.031]
중소도시	0.079 (0.475) [1.082]	0.162† (0.478) [1.176]	0.164 (0.304) [1.178]	0.293 (0.283) [1.341]	0.451 (0.373) [1.570]	1.497 (1.096) [4.470]
-2 Log L	478.354	478.043	1,115.055	1,305.918	852.083	177.313
Model chi-square	144.784***	145.095***	247.883***	162.684***	54.886***	14.460
df	12	12	12	12	12	12
N	456	456	984	1,107	749	173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표 3-2-15〉 향후 보육·교육비 예상 지출 절감이 자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자녀 출산 의향 없는 여성)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보육비 예상지출감소	0.004 (0.005) [1.004]					
유치원비 예상지출감소		0.007 (0.005) [1.007]				
초등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01 (0.003) [1.001]			
중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01 (0.003) [0.999]		
고등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03 (0.004) [1.003]	
대학교 교육비예상 지출감소						0.016 <sup>†</sup> (0.009) [1.016]
최저소득층	0.054 (0.459) [1.056]	-0.045 (0.463) [0.956]	0.132 (0.292) [1.141]	-0.040 (0.259) [0.960]	-0.215 (0.310) [0.806]	-0.413 (0.701) [0.662]
저소득층	-0.567 (0.524) [0.567]	-0.668 (0.529) [0.513]	-0.176 (0.322) [0.838]	-0.209 (0.283) [0.812]	-0.152 (0.337) [0.859]	-0.581 (0.798) [0.559]
중산층	-0.173 (0.453) [0.842]	-0.248 (0.456) [0.781]	-0.204 (0.272) [0.815]	-0.250 (0.231) [0.779]	-0.338 (0.270) [0.713]	-0.473 (0.634) [0.623]
고소득층	-0.647 (0.545) [0.524]	-0.832 (0.564) [0.435]	-0.197 (0.310) [0.821]	-0.234 (0.259) [0.792]	-0.331 (0.301) [0.719]	0.221 (0.614) [1.247]
양육자녀수	-0.534* (0.289) [0.586]	-0.536* (0.240) [0.282]	-0.680*** (0.154) [0.507]	-0.685*** (0.146) [0.504]	-0.448* (0.169) [0.639]	-0.561 <sup>†</sup> (0.317) [0.571]
남아자녀있음	-0.359 (0.316) [0.698]	-0.283 (0.321) [0.754]	-0.228 (0.197) [0.796]	-0.249 (0.178) [0.779]	-0.235 (0.223) [0.790]	0.529 (0.567) [1.698]
어머니연령	-0.009 (0.045) [0.991]	-0.007 (0.046) [0.993]	-0.034 (0.028) [0.966]	-0.100*** (0.025) [0.904]	-0.118* (0.037) [0.888]	0.030 (0.154) [1.031]
어머니대졸이상	0.051 (0.320) [1.052]	-0.030 (0.322) [1.030]	-0.149 (0.194) [0.861]	-0.214 (0.164) [0.808]	-0.311 (0.198) [0.732]	-0.657 (0.495) [0.519]
어머니 취업	-0.432 (0.428) [0.649]	-0.541 (0.436) [0.582]	0.107 (0.195) [1.113]	0.076 (0.164) [1.079]	-0.107 (0.194) [0.899]	-0.839 <sup>†</sup> (0.442) [0.432]

〈표 3-2-15〉 계속

구분	향후 보육비 지출 여성	향후 유치원비 지출 여성	향후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중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향후 대학교 교육비 지출 여성
대도시	0.942 (0.812) [2.566]	1.028 (0.821) [2.795]	0.311 (0.383) [1.365]	0.474 (0.345) [1.606]	0.890† (0.470) [2.435]	0.862 (1.123) [2.369]
중소도시	1.348† (0.807) [3.849]	1.464† (0.814) [4.324]	0.505 (0.379) [1.658]	0.497 (0.342) [1.644]	0.749 (0.466) [2.115]	1.293 (1.104) [3.644]
-2 Log L	313.202	309.024	796.264	1,034.790	727.109	160.299
Model chi-square	19.983†	21.795*	42.382***	59.027***	31.995*	15.841
df	12	12	12	12	12	12
N	270	269	671	932	690	166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coefficient 값이며, ( )안은 standard error, [ ]안은 odds ratio임.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거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 수준의 보육·교육비 수준에 대해서도 비용 지출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보육·교육비 부담에 대한 계층간 차별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경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은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데 더욱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육비 절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보육·교육비 지출이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교육비까지 고려한다. 또한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에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만을 가지고서는 여성들의 자녀 출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녀를 반드시 하나쯤은 낳아야 한다”는 사고도 자녀 보육·교육 비용이 출산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갖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과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녀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개별 가정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자녀를 낳되 한 명만 낳게 되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육비 절감이 유효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육·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국 평균 비용 수준에서의 보육·교육비 절감은 출산 의향에 그다지 큰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전국 평균 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용에서의 절감은 많은 부모들에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출산 의향에 유효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육료 절감의 효과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계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출산력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

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여성의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클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김영주(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3권 제2호.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pp.189-206.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2호, pp.285-316.
- 신윤정, 성태윤, 최은영(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복, 이소희(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복지학, 제9권 제2호, pp.95-113.
- 이정우(1995). 교육과 소득분배. 서울: 비봉출판사.
-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 개발원.
-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 학연구, 7(1), pp.1-13.
- 차경욱(2005).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 No.2.

- Becker, G(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ference Series 11(NBER, Princeton, NJ).
- Lang, K. & David, K(1986). Human capital vs. sorting, The effect of compulsory attendance law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August), pp.609-624.
- Layard, R. & Psacharopoulos, G(1974).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pp.958-998.
- Liu, Pal-Wai & Wong, Yue-chim(1982). Educational screening by certificates : An empirical test. *Economic Inquiry*, 20(January), pp.72-83.
- Riley, J. G(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pp.227-252.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1), pp.1-17.
- Stiglitz, J.(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pp.283-300.
- Weiss, A(1995). Human capital vs. signaling explanations of wages.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9(4), pp.133-154.
- Wolpin, K. I(1977). Education and scree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pp.949-958.



##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조희금(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고선강(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어성연(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낮은 출산율은 미래의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저출산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저출산과 관련이 깊은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만혼과 혼인 기피 현상이다. 우리사회는 법적 혼인이 아닌 남녀의 동거에 의한 출산이나 혼외 출산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삼식 외(2005)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20세~44세의 미혼남녀의 약 79%가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에서도 혼인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는 결혼에 의한 출산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혼지연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4.8세, 1997년 25.7세, 2007년 28.1세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또한 1990년 27.8세, 1997년 28.6세, 2007년 31.1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혼연령 상승의 추세는 여성의 연령대 별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20대 여성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두섭 외, 2007). 김두섭 외

(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기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23.6세였고, 1997년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였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고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취업난으로 인한 학습기간 연장 및 경제적 독립 시기 연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만혼 및 결혼기피의 사유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관, 결혼의사 등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의 동향조사(예: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이루어졌으나, 결혼 적령기에 속한 코호트의 세부적인 대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관 변화, 결혼관과 혼인실행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미미하다.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의 결혼지연 및 기피 요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부 대상 집단의 결혼지연 및 기피요인에 따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대상 집단의 결혼지연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집행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결혼 지연 취약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 집중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가임기 여성의 결혼지연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남성과 여성의 결혼지연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결혼에 관한 것보다는 ‘출산’ 장려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합법적 혼인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으로 장려되므로,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출산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은 대부분 결혼 결정 이후의 단기적 지원(예: 신혼부부 주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혼 남녀의 결혼 결정을 독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가족의 형성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지연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적령기 코호트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이성교제과정,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

족, 사회적 장애/조성 요인을 발견하고, 세분화된 정책대상 그룹별 결혼관련 정책 인지도 및 요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결혼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여러 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해 알려졌다. 2003년 전국가족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미혼남녀 중 남성 28%, 여성 29.6%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경제적 기반부족’과 ‘일에 열중하기 위한’ 이유를, 여성은 ‘일에 대한 열중’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를 주요이유로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71.4%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49.2%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두섭 외(2007)는 통계청의 1998년, 2006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남녀차이가 있으며, 결혼의향과 결혼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한 김정석(2006)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있어서 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여러 관련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성은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여성과 비교해서 남성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혜택(benefit)과 비용(cost)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로 설명하며, 남성은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을 여성은 결혼으로부터 비용을 더 인지한다고 해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에서 여성의 경우 연령과 결혼의향의 관계가 남성의 경우보다 뚜렷이 나타나 결혼연령에 대한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여

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보다는 독립가구 거주여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여성들이 결혼과 취업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들에게 취업여부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이수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차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석(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학력과 취업여부는 남성에게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았지만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 시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은기수(1999) 연구에서도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양상은 남성과 여성에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먼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만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회에서 일반적이라 여기는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자는 남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생애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규범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생애과정에 대한 규범보다는 결혼적령기라는 연령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의 결혼시기 지연의 원인을 분석한 박경숙 외(2005)의 연구도 남녀의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1990년 이후 결혼한 남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고, 취업여부도 결혼시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결혼기회가 교육수준과 취업상황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1990년~1997년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결혼을 통한 대리적 지위확보의 기능이 축소된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유보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김정석(2006), 이수진(2006)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박경숙 외(2005)의 연구는 취업이 여성의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우 비취업자와 비교하여 취업자의 초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고학력 남성이 갖는 고학력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고용시장의 불안과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 강화와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를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그간의 출산지원정책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조병구 등(2007)은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결과에서, 출산율 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지연 및 단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1993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결혼감소 요인의 분석결과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금을 상승이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에 교육비로 인한 자녀비용의 상승,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공공재 가격 상승 등이 결혼이 주는 매력을 감소시켜 결혼지연 및 단념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혼의향, 결혼시기 등에 관한 최근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성은 결혼의향, 결혼시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남녀의 결혼의향,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과 취업이 여성의 결혼의향 및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특히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시기 및 장애요인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및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 주요 결혼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을 제한한 근거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혼인 희망연령이 미혼 남성은 30대 초(31.8세), 여성은 30세 전후(29.7세)로 나타났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07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1세로 여성 28.1세로 나타나 평균초혼 연령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미혼 남녀를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동년배 cohort 중 기혼자들을 배경집단으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주된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남녀이고, 배경집단으로서의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성인자녀를 가진 부모 및 기혼자로 정의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통합적 방법론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과 함께 양적연구의 패러다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Johnson & Christensen, 2004).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혼지연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자료 수집

#### (1) 대표표집 조사 자료의 활용

편의 표집에 의한 양적 사회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신뢰도가 높고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 대표표집 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판단 하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자료는 결혼의 필요성, 이상적인 혼인연령, 결혼계획, 결혼 장애 요인, 결혼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20세~45세의 미혼, 기혼 남녀에게 조사한 자료이다.

#### (2) 면접 자료의 수집

현상학적 집단 심층 면접(Phenomenological Focus Groups) 분석은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그 배경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개인/집단의 가치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

서 심층적 기술을 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에 관한 평가를 제공하고자 정책 입안자들의 향후 정책 진행 방향을 제시한다. 세부 집단을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유용한 방법으로 외국의 경우 정책 분석 연구에 빈번히 사용된다. 하나의 Focus Group(이하 FG)는 넷에서 열 명까지의 인원이 참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개인들을 모으는 것이 원활한 토론을 도모하고 논의 중 파벌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Auh, 2006). 따라서 동질성을 띠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집단을 모집하는 것이 성공적인 FG의 조건이 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정책 대상군은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남녀이고, 이들은 성별과 취업력에 의한 두 개의 하부 집단으로 분리 되어 조사되었다. 총 10개 집단을 대상으로 FG 면접이 실시되었다. 비교집단으로 동 연령 Cohort에 속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G 면접을 한 집단 추가로 진행하였다. 모집단의 수가 적어서 리크루트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산직 미혼 여성집단이 생산직 기혼집단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다. 총 10세션의 FG에 36명의 미혼남녀와 15명의 기혼남녀가 참가하였다.

FG는 한 명의 moderator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의 허락하에 FG내용은 녹음 되었고 현장에서 연구보조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후 녹취된 음성화일은 전사자에 의해서 전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10세션 FG의 실시결과 총 3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전사 자료와 현장/추후 기록이 자료 분석을 위한 기록 자료로 창출되었다. 녹음된 음성화일의 반복된 청취와 기록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FG 인터뷰 결과를 개방코딩, 축코딩, 연합과 비교를 통한 주제 도출의 단계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혼인적령기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전반적 경향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 중 미혼자 자료의 연구대상 연령(28세~40세)에 있는 미혼 남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김정석, 2006 등)에서 논의 되었듯이, 성과 취업상황은 결혼의향, 결혼계획 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들은 취업이 남성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김정석, 2006; 이수진, 2006) 여성의 초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박경숙 외, 2005)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성과 취업을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에 주요한 영향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을 취업 유무로 나누고, 취업집단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취업과 직종으로 분류된 5개 집단 안에서 결혼의향 등에 대한 성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sup>10)</sup> 분석대상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 중 본 연구의 대상연령인 28~40세 사이로 한정하였다. 직군별 분석대상 표본의 수, 직군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3-3-1〉 직군별 분석대상 표본 수 및 직군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단위: 명, 세, 만원, %)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sup>11)</sup>	무직
남자		557	185	86	164	120
여자		257	141	49	11	56
계		814	326	135	175	176
연령(세)		31.69	31.17	31.80	32.69	31.57
소득(만원)		164.37	182.76	158.46	153.05	140.20
교육 수준 (%)	중졸	30( 3.7)	1( 0.3)	6( 4.4)	13( 7.4)	10( 5.7)
	고졸	326(40.1)	55(16.9)	73(54.1)	123(70.3)	74(42.3)
	초대졸	133(16.4)	66(20.3)	15(11.1)	24(13.7)	27(15.4)
	대졸이상	324(39.9)	204(62.6)	41(30.4)	15(8.6)	64(36.6)

#### 1)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의향, 결혼계획 연령

미혼 남녀의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각 직군별 남녀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직군에서 남성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직군과 비교해서 판매·서비스직의 남녀차가 크게 나타났고, 무직의 남녀차이가 상대

10) 교육수준도 결혼의향과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나 연구결과 도출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직종에 의한 연구대상 세분화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1)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층화표집하였기 때문에 직군별 빈도의 비율이 전체 미혼남녀의 직군별 비율과 유사할 것이라 생각하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8세~40세 사이의 미혼남녀의 직종분포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연령대의 미혼여성의 생산직 종사 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본인의 결혼의향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서 남녀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직군에서는 남성들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았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결혼은 여성들에게 혜택보다는 비용의 측면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8세~40세의 미혼여성의 대다수가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부정적 결혼의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혼여성의 결혼지연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질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과 남성들의 결혼의향의 뚜렷한 차이는 동일 직종의 남성들의 결혼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의 부정적 결혼의향의 이유에 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표 3-3-2〉 28~40세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남자 빈도(비율)	여자 빈도(비율)	계 빈도(비율)	X <sup>2</sup>
전문 사무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132(72.53)	57(41.61)	189(59.25)	30.95***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50(27.47)	80(58.39)	130(40.75)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161(87.03)	99(70.21)	260(79.75)	14.01***
		결혼생각 없다	24(12.97)	42(29.79)	66(20.25)	
판매서 비스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59(71.95)	15(33.33)	74(58.27)	17.82***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23(28.05)	30(66.67)	53(41.73)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67(77.91)	30(61.22)	97(71.85)	4.30*
		결혼생각 없다	19(22.09)	19(38.78)	38(28.15)	
생산 노무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107(67.72)	3(27.27)	110(65.09)	7.40**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51(32.28)	8(72.73)	59(34.91)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121(73.78)	6(54.55)	127(72.57)	1.92
		결혼생각 없다	43(26.22)	5(45.45)	48(27.43)	
무직	결혼에 대한 생각	해야 좋다 <sup>1)</sup>	64(55.17)	22(40.74)	86(50.59)	3.07
		하지 않아도 좋다 <sup>2)</sup>	52(44.83)	32(59.26)	84(49.41)	
	결혼 의향	결혼생각 있다	83(69.17)	34(60.71)	117(66.48)	1.22
		결혼생각 없다	37(30.83)	22(39.29)	59(33.52)	

주: 1) '해야 좋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를 합친 것임

2) '하지 않아도 좋다'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게 낫다'를 합친 것임

남녀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생각은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무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남녀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남성의 결혼적령기,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사무직 남성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평균 27.7세로 나타난 반면, 전문·사무직 여성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9.3세로 나타났다. 전문·사무직 남성들이 기대하는 여성의 적절한 결혼연령이 전문·사무직 여성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연령보다 약 1.6세 낮게 나타났으나, 본인의 결혼 계획 연령은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여성 모두 평균 33.3세 32.7세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결혼 적정 연령이 여성 스스로 생각하는 결혼 적정연령보다 낮은 반면 여성과 남성의 결혼 계획연령이 비슷한 것은 남녀의 결혼 연령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전문·사무직에서 나타났던 여성의 결혼적령기에 대한 남녀의 시각 차이는 판매·서비스직에서도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 미혼남성은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27.5세로 보는 반면, 판매·서비스직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적령기를 29.2세로 약 1.7세 더 높게 보고 있었다. 사전 분석결과 판매·서비스직 남성의 평균 연령이 31.8세이고, 판매·서비스직 여성의 평균연령이 31.9세로 두 집단간의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계획 연령은 남성이 34.1세 여성이 32.6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계획 연령의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표 3-3-3〉 28~40세 미혼 남녀의 결혼적령기, 결혼계획연령

(단위: 명, 세)

구분		남자		여자		t-test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전문사무직	남자결혼적령기	185	31.04	140	31.77	- 2.84**
	여자결혼적령기	185	27.68	140	29.26	- 6.71***
	결혼계획연령	159	33.27	92	32.79	1.42
판매서비스직	남자결혼적령기	86	30.79	47	31.79	- 2.30*
	여자결혼적령기	86	27.54	47	29.15	- 4.55***
	결혼계획연령	67	34.10	28	32.57	2.92**
생산노무직	남자결혼적령기	161	30.48	11	29.91	0.70
	여자결혼적령기	161	27.32	11	28.46	- 1.57
	결혼계획연령	107	34.21	6	32.00	1.64
무직	남자결혼적령기	119	30.83	55	31.73	- 2.64**
	여자결혼적령기	119	27.61	55	29.11	- 3.97***
	결혼계획연령	82	34.54	31	32.32	3.46***

## 2) 결혼하지 않은 이유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가 최다 빈도를 나타냈다. 남성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상위 순위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결혼보다 자신의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생활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등 일과 관련된 이유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사무직 남성은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과 결혼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전문·사무직 여성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3-3-4〉 전문·사무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남성			
순위	1순위(빈도)	순위	2순위(빈도)
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37)	1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21)
2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4)	2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16)
	결혼비용(혼수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24)	3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5)
3	소득이 적어서(14)	4	결혼비용(혼수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3)
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13)	5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1)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3)	6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
5	시간이 없어서(12)	7	소득이 적어서(9)
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0)		시간이 없어서(9)
7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9)	8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8)
8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8)	9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6)
여성			
순위	1순위(빈도)	순위	2순위(빈도)
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41)	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5)
2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8)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5)
3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2)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11)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2)	2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11)
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8)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1)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8)	3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0)
5	시간이 없어서(6)	4	결혼제도가 남편집안 중심이기 때문에(7)
6	결혼비용(혼수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5)		소득이 적어서(5)
7	소득이 적어서(4)	5	결혼을 하면 옹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5)
	아직 결혼을 하기에 이른 나이가아(4)		시간이 없어서(5)

전문사무직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위한 물리적, 경제적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혼을 지연하고 있는 반면, 전문사무직 미혼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만나는 기회의 부족), 결혼과 자신의 일 사이의 경쟁관계로 인해 결혼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전문사무직 미혼 남성들은 같은 직군의 여성들에 비해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날 기회가 더 많고,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 반면, 전문사무직 미혼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나기가 어렵고, 자신의 일과 결혼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매·서비스직 미혼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소득, 결혼비용 부족이다. 그 뒤를 이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도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가치관,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결혼준비를 위한 비용의 측면과 현재 소득의 부족을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생각하는 반면, 판매·서비스직 여성은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것,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은 것,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생산·노무직 남성의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소득이 적다는 것이(42명) 1순위로 최다빈도를 나타냈으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점이 2순위 최다빈도를 나타냈다. 다른 직군의 남성들과 달리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결혼 적령기 제약의 빈도수가 상위에 들어가는 점이 특이하다.

무직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실업상태, 소득 부족, 고용 불안정이었으며,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결혼적령기를 놓쳤거나 이성교제 기회부족이었다. 무직 여성의 경우 적절한 배우자감 부재, 실업상태, 건강문제, 이성교제 기회부족이었다. 무직 남성의 경우 고용과 소득에 대한 압박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주요한 이유들인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적절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한 것, 결혼적령기 규범, 결혼이 주는 구속감 등을 주요한 결혼기피 또는 지연의 이유로 표현하였다.

종합적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와 적절한 만남의 기회 부족을 여성들은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

려움을 주된 이유라고 답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사무직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 보다 적절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한 것, 만남의 기회 부재 등 적절한 만남의 기회 부족이 최다빈도로 나타난 반면,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 남성은 결혼비용, 소득 부족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배우자감을 찾지 못한 것, 일의 중요성, 기회 부족 등의 빈도가 높았다. 남성은 경제적인 이유, 여성은 일과 결혼생활의 병행에 대한 부담이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나, 남녀 모두 적절한 배우자감의 부재, 만남의 기회 부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28세~40세 사이의 미혼 남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이성교제의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들에게는 결혼의 경제적인 부담을, 여성들에게는 결혼으로 인한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

28~40세 사이의 미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종을 구분하여 성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3-3-5〉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반대	171	67	55	38	28	8	48	2	38	19
	%	30.7	26.1	29.7	27.0	32.6	16.3	29.4	18.2	33.2	33.9
	찬성	386	190	130	103	58	41	115	9	80	37
	%	69.3	73.9	70.3	73.0	67.4	83.7	70.6	81.8	67.7	66.1
		$\chi^2$		1.822		.303		4.205**		.639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반대	247	72	84	40	32	15	83	1	45	16
	%	44.3	28.0	45.4	28.4	37.2	30.6	50.9	9.1	38.1	28.6
	찬성	310	185	101	101	54	34	80	10	73	40
	%	55.7	72.0	54.6	71.6	62.8	69.4	49.1	90.9	61.9	71.4
		$\chi^2$		19.676***		9.854***		7.221**		1.526	

〈표 3-3-5〉 계속

(단위: 명, %)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반대	315	90	113	50	48	18	92	2	58	20
	%	56.6	35.0	61.1	35.5	55.8	36.7	56.4	18.2	49.2	35.7
	찬성	242	167	72	91	38	31	71	9	60	36
	%	43.4	65.0	38.9	64.5	44.2	63.3	43.6	81.8	50.8	64.3
	$\chi^2$	32.618***		21.008***		4.547**		6.073**		2.773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반대	302	87	93	46	47	20	94	3	65	18
	%	54.2	33.9	50.3	32.6	54.7	40.8	57.7	27.3	55.1	32.1
	찬성	255	170	92	95	39	29	69	8	53	38
	%	45.8	66.1	49.7	67.4	45.3	59.2	42.3	72.7	44.9	67.9
	$\chi^2$	29.236***		10.187***		2.390		3.859*		8.012***	

주: \*p&lt;0.1 \*\*p&lt;0.05 \*\*\*p&lt;0.01

결혼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28세-40세의 전체 미혼 남녀의 생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판매서비스직의 남녀의 생각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성의 67.4%가 결혼의 가족 관계적 측면에 대해 찬성한 반면, 여성의 83.7%가 찬성하였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전체 남녀의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였고, 여성이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사무직 남녀의 찬성 비율이 남성이 54.6%, 여성이 71.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산·노무직도 유의한 남녀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남녀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의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에 대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태도도 미혼 여성 중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6.1%, 미혼 남성 중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5.8%로 여성들의 긍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찬반이 전체 남녀, 각 직종별 남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부모 가정에 대한 태도는 전문·준전문직, 생산·노무직, 무직의 집단에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혼전 동거에 대하여 28~40세의 전체 미혼 남녀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문항들과는 달리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찬성 비율이 여성 보다 높았다. 28~40세 사이 전체 남성의 54.7%가 혼전동거에 찬성한 반면, 전체 여성의 41.6%만이 찬성하였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사무직, 무직 남녀의 찬성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혼인과 관계없는 성관계에 대한 태도도 혼전동거에 관한 태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전체 남녀의 태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문·사무직, 무직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들의 혼전 성관계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남성의 64.3%가 혼인과 관계없는 성관계에 찬성하였고, 여성의 46.7%가 혼인과 관계없는 성관계에 찬성하였다.

〈표 3-3-6〉 혼전동거 및 혼전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다	반대	252	150	84	89	38	20	76	6	51	35
	%	45.3	58.4	45.4	63.1	44.2	40.8	46.6	54.5	43.2	62.5
	찬성	304	107	101	52	48	29	87	5	67	21
	%	54.7	41.6	54.6	36.9	55.8	59.2	53.4	45.5	56.8	37.5
		$\chi^2$		11.96***		10.082***		.145		.259	
										5.647**	
구분		전체		전문·사무		판매서비스		생산노무		무직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반대	199	137	67	84	27	20	61	3	41	30
	%	35.7	53.3	36.2	59.6	31.4	40.8	37.4	27.3	34.7	53.6
	찬성	358	120	118	57	59	29	102	8	77	26
	%	64.3	46.7	63.8	40.4	68.6	59.2	62.6	72.7	65.3	46.4
		$\chi^2$		22.423***		17.558***		1.221		.457	
										5.572**	

주: \*p<0.1 \*\*p<0.05 \*\*\*p<0.01

미혼 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중 이혼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들의 긍정 비율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 생산노무직,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혼전 동거, 혼인과 관련 없는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들의 긍정 비율이 여성과 비교했을 때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 무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4)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의향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들과 ‘결혼할 의향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과 그 외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8세~40세 사이의 미혼 남녀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집단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는데 있어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갖는 효과가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나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찾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령이 높은 경우 결혼계획 연령을 당연히 현재 연령보다 높게 대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답한 결혼계획 연령에서 현재 연령을 차감하여 앞으로 몇 년 후에 결혼계획이 있는가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분석은 <표 3-3-7>에 제시하였다.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 연령, 직종, 형제의 이혼, 부모의 이혼 여부로 나타났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인 경우,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하겠다는 의향을 갖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전문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무직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거나,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형제의 이혼, 부모의 이혼은 유의수준  $p<.05$ 에 근접하였는데, 형제의 이혼 경험, 부모의 이혼 경험은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겠다는 의향을 갖는데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 연령, 직종, 부모의 이혼경험으로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 여성과 비교해서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계획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사무직 종사자와 비교해서 무직의 미혼남녀는 보다 먼 미래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경험이 없는 미혼남녀와 비교해서 결혼계획 연령을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28~40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구분	결혼의향			결혼계획 연령		
	B	유의확률	odds ratio	B	$\beta$	유의확률
성 <sup>1)</sup>	.802	.001	2.231	.405	.136	.002
연령	-.115	.001	.892	-.133	-.288	.001
교육수준 <sup>2)</sup>	.172	.398	1.188	-.193	-.070	.139
로그가구소득	.163	.162	1.177	-.061	-.035	.452
판매서비스 <sup>3)</sup>	-.369	.171	.691	.047	.013	.777
생산노무	-.416	.132	.660	-.202	-.061	.228
무직	-.598	.021	.550	.302	.089	.074
부모이혼	-.600	.054	.549	.693	.117	.005
형제이혼	-.586	.053	.556	-.049	-.008	.838
상수	3.63	.002	37.774	6.600		.001
모형 $X^2$ / F	61.258***			7.808***		
R2				.117		
-2 Log 우도	816.932					

주: 1) 준거집단은 여성

2) 준거집단은 고졸이하

3) 준거집단은 전문·사무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28~40세의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는 확률은 높으나, 결혼계획 연령은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결혼의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여성이 낮은 결혼의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무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없는 경우에 속할 확률이 높고, 결혼의향이 있다하더라도 결혼 연령을 뒤로 미루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모의 이혼 경험, 형제의 이혼 경험과 같은 원가족의 결혼관련 경험이 28~40세의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 연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직종에 따라 더 확대되거나 좁혀짐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의향, 배우자의 조건, 결혼하지 않은 이유의 남녀차이, 직종별 차이를 큰 범주로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좀 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질적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을 직종, 성에 따라 구분하였고, 포커스 그룹인터뷰의 개념적 구성, 질문자료, 배경자료로 활용하였다.

## V. 면접조사 결과

총 10세션 FG에 참석한 5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사회문화맥락에 근거한 주제들이(Cultural Themes)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들은 미혼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현실 및 이들을 바라보는 동년배 그리고 부모 세대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다.<sup>12)</sup> 28세에서 63세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혼 남녀들의 결혼지연에 관련된 총 6개의 문화특성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혼인 적령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보다는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결혼이고 그 시기는 본인들이 결정한다는 사고가 주도적이었는데, 본인들의 결정 시기는 단순히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가족,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 하에서 사고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복잡하게 얽힌 개인을 둘러싼 생활, 문화 환경 속에서 미혼 남녀들이 겪어 가고 있는 현실적 생활상들과 그들의 인식의 변화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되었다. 미혼 남녀들의 내부자적 견해는(emic perspectives) 물론 동년배집단 그리고 부모, 상사 등의 Reference Group의 외부자적 견해를(etic perspectives)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문화특성적 주제들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 1. 보편적 혼인적령기 규준의 약화현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결혼에 관한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 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혼은 개인의 가치관과 Life Style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었고 결혼을 역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의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는 현세대의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30대 초중반(30~34)이면서도 아직도 나의 혼인 적령기는 오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젊은이

12) 면접조사 자료의 수집과정과 참가자들의 Profiles는 지면 상 생략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인 조희금·고선강·이성연(2008)의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들을 보면서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계몽의 필요성을 발견 한다. 젊은이들의 의식의 변화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도도한 물결은 간단히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만 대중매체나 광고 등을 이용한 공공의 캠페인은 올바른 인생의 설계라던가 결혼의 시기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담론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여성의 연령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이 출산 및 출산의 다양한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환, 2008). 그러므로 결혼의 지연이 단순히 개인적인 혼인조건의 충족여부를 떠나 그 후의 임신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 2. 길어진 교육 연한 및 직업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언

2007년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대 청년인구의 70% 이상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졸업의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엘리트교육이 아닌 직업개발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지는 직업세계의 현실이 세계적 추세임을 반영할 때,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교육 연한을 줄이는 제안보다는 늘어난 교육연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창출 및 확대를 제안한다. 외국과 같은 대학 캠퍼스내의 학생가족기숙사의 신설 또는 대학 내 탁아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혼인 적령기에 접어든 미혼 남녀의 결혼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한 학생을 위한 학자금의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가족 수에 의거한 기초생계비의 일부의 지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3. 결혼 결정에 대한 부모의 중요한 영향력과 건강한 분리에 대한 제언

20~30대 성인 남녀의 결혼의사결정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결혼지연에 관한 사회적 대응방안의 주된 대상이 미혼남녀를 넘어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확대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물질적 성취를 이룬 한국의 Baby-Boomer

들은 본인들의 생활은 물론 자식들 (성인자식포함)의 생활마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성취에 대한 기대는 성인자녀들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간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선위 세대로서의 결혼에 대한 조언은 발전적이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칫하면 성인자녀의 자율성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고 성인자녀가 원하는 결혼계획을 파국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에, 성인자녀와의 애착관계에서 건강한 분리에 대한 중노년기 부모교육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본다. 또한 자녀와의 건강한 분리는 이미 성장한 자녀와 부모를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 이전에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른 적절한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결혼적령기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중·고·대학의 교과과정과 그 시기의 부모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중재 필요성에 대한 제언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이성교제의 기회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지지가 요구된다. FG를 진행하면서 30대 중 후반의 연령대인 남성참가자들의 경우 일부는 결혼을 전제로 20대 초·중·후반의 여성들을 사귀고 있었고 이들의 결혼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성들의 결혼결정에 달려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조합의 경우, (여성 측) 부모의 반대로 인해 혹은 여성 자신의 의지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기도 한다. 반면에 연령차이가 적은 상대(30대 초·중반)와 교제를 하는 남성참가자의 경우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성교제의 경우, 연령의 차이가 좁을수록 그 성공의 확률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의 확대가 요구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적 모임, 등을 통해 동질혼적 요구를 채우기 위한 매칭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장, 지역 사회적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안하는 바이다.

## 5.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성에 대한 제언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결혼 시 남성은 집을 여성은 살림을 장만한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 공간 준비에 대한 남성들의 부담은 결혼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주거에 대한 준비는 신랑 측 부모의 몫으로 돌아갔고 신혼살림과 혼수 등의 비용은 신부 측 부모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마련에 대한 남성들의 부담은 결혼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남성들의 주거마련 비용 증가는 여성들의 혼수, 살림마련 비용증가를 유발하고 있어, 전반적인 결혼시작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FG에 참가한 미혼 남녀는 물론 기혼 남녀 그리고 부모세대의 참가자들이 가장 우선시한 대책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이었다. 부부가 전세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예로 최대 5년까지 국가가 염가의 소형 임대 주택/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아울러 제1 금융권에서 융자와 대출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득능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결혼자금의 대출의 증가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나친 혼수와 기타 결혼 비용에 대하여 부모세대의 참가자들은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는데,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만 불필요한 혼수와 예단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혼수와 예단의 과소비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의 명확한 전달체계에 관한 요구에 대한 제언

정확한 정책관련 정보가 전달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신문을 꼽았다.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준비를 위한 많은 정보를 한곳에 모은 웹사이트가 개발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반응을 참가자들은 보였는데 특히 인기도가 높은 포털사이트에 연결하는 것도 웹사이트의 인지도를 높일 것이라는 제안도 하였다. 각기 다른 FG에 참가한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웹사이트의 메타포는 구직 사이트와 같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였다. 즉 방문자

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정부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결혼관련 자원센터를 웹사이트로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외국의 경우,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서비스 지원의 트렌드가 물리적 센터 중심에서 전자정부적 센터(웹사이트)로 점차 옮겨지는 것을 볼 때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결혼자원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 여겨진다. 결혼자원센터의 경우,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교육관련 콘텐츠는 물론 물물교환장터나 정보공유 BBS를 포함하는 단계를 넘어서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준비와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 사료된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모기지주택 모기기 계산기가 무료로 웹사이트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는 물론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빚 그리고 수입을 간단히 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단기 혹은 장기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주택 모기지를 납입해야 하는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두 번째로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센터의 43개 주의 웹사이트 들이다. 미네소타,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하와이 등의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각각 주의 특성에 맞추어 각기 다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주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을 증가시킨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로 하여금 국가복지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서비스의 전달체계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 불가능해 보이는 양질의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가 전자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 졌다(Auh & Shelley, 2007). 이러한 웹사이트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7. 보편적·지속적·체계적 결혼장려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제언

면접대상자 대부분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결혼장려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 지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출산보조금 지원 등의 단발적인 정책은 그들을 결혼으로 이끄는 아무런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현금지원에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정부의 단편적인 결혼 장려 정책은 오히려 다자녀 양육이 가능한 중산층 집단의 결혼의 결정 시기와 출산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결혼장려 정책들은 그 대상이 한정되므로, 전문직 미혼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옛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 쌍의 성인 남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8. 일·가정 양립에서 일·데이팅 양립을 위한 제언

면접결과 20대 중·후반의 미혼남녀가 이성을 만나고,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운 직장·사회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미혼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을 현재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대 중·후반의 사람들은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도한 경쟁사회에서의 과중한 업무 시간, 비정규직의 불안함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생각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대 중·후반 세대가 일 중심에서 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담론에 기초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어 지고 또한 그들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도출된 문화특성적 주제들은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남녀들과 그들의 동년배 그리고 부모·상사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Life Style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발견된 주제들과 관련한 사회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sup>13)</sup>

## VI.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세대적 요인

- 1) 결혼관의 변화 - 약해진 결혼 규범
- 2) 강해진 자아실현의 욕구 - 교육 연한의 증가
- 3) 길어진 교육 연한과 높은 청년 실업율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침체에 따른 20대 남녀의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 부족
- 4)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증가한 소득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상승혼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배우자 Pool의 부족
- 5) 교육수준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들의 배우자 Pool의 부족
- 6) 혼기를 지난 30대 남녀의 만남의 기회의 양극화 - 빈익빈 부익부의 기회
- 7) 배우자 선택 및 결혼결정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영향력 V.S. 결혼 당사자의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의존성

### 2. 사회적 요인

- 1) 결혼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미비
- 2) 기존 결혼관련 국가 정책의 낮은 가시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
- 3) 건강한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을 지원하는 사회교육 서비스나 매칭 프로그램의 미비,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지연에 영향요인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 13) 본 연구에서는 면접 조사와 더불어 국내외 결혼장려 정책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혼지연에 영향을 주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면 사정상 본 발표에는 국내외 결혼장려 정책들에 관한 부분은 생략되었으므로 조희금·고선강·어성연(2008)의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여성들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 부모의 결혼과정 개입을 줄이고 자녀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가족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 3. 정책적 제언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sup>14)</sup>

#### 1)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결혼관 확립을 위한 캠페인의 전개

우리사회에 건강한 결혼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을 상대로 한 지속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정책사례에서와 같이 대중매체에 데이팅과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장면들의 지속적인 노출은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벤치마킹의 사례로 2008년 시행되었던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계몽을 통하여 건강한 결혼관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미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은 결혼을 통한 이득보다는 부담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직종별로는 전문·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은 일과 결혼의 양립의 어려움을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하였고, 일에 대한 성취에 결혼이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일을 지속할 경우 제대로 된 엄마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할 시기의 미혼여성들에게는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지속적인 이미지 캠페인이 필요하다. 결혼이 직업과 일에 대한 성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

14) 지면관계상 두 가지 방안만을 제시한다.

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꾸준한 매스컴 홍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혼 남성들에게는 결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홍보와 결혼생활에서의 가사분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미혼 남성들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 특히 주거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를 경감시켜주는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는 미혼 남성들이 결혼에 대한 적극성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미혼 여성들의 일과 결혼의 병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미혼 남성들에게 가사노동 수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이 요구된다.

캠페인은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성과 직종에 따른 결혼지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제로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캠페인의 방식 또한 성과 직업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를 분석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총체적이고도 맞춤형의 결혼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체계 구축

본 연구는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중재의 필요성과 더불어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대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혼남녀를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전달될 때에 비로소 그 정책의 가시성도 증가하고 국민들의 관련 요구들이 충족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20~30대 성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이 언급되었다. 2006년도 한국정보통신개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20~35세 성인의 9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는 바로 결혼관련 종합정보(information clearing house)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구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개설된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의 웹사이트([www.match.kr](http://www.match.kr))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의 가시성이 매우 낮은 점 그리고 매칭 서비스에 중점을 둔 제한적 서비스 등에 의해서 총체

적인 결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 결과, 만남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많은 참가자들이 언급을 하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매칭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여성 참가자들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골적인 매칭 프로그램 보다는 교육적 기능과 이성의 만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혹은 직종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의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의 구축이 그 첫 단계의 과업의 하나가 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결혼장려정책 서비스인 Social Development Unit(SDU)와 Social Development Service(SDS)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한다. SDU와 SDS는 국가가 매칭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발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통해 개인들의 만남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노골적인 매칭 프로그램에 대한 미혼남녀들의 거부감들은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완화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정확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정보(information clearing house) 사이트의 기능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 되었듯이 사용자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상업적인 정보들도 검색이 가능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첫 번째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웹사이트는 ‘구직사이트’ 그리고 ‘벼룩시장’ 등 이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결혼과 관련된 정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한 상업적 사이트나 혹은 다른 웹사이트와 연결하는 Portal 시스템의 구축이다. 아무리 잘 만든 전자정부적 서비스체제라 할지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가시성이 낮으면 그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가시성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 따라야 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Search Engine에 링크를 하거나 조그만 박스로 홍보할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는 정확하고도 총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더욱더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단계 이후의 전자정부의 진화의 단계는 맞춤형 서비스 전달을 위한 로그인 기능을 갖춘 상호작용적 전자민원 시스템의 구축이다. 다른 전자정부의 웹사이트와 같이 로그인 기능을 갖추게 되면, 개인의 정보가 저장되고 개인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이나 전자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입, 나이 그리고 교육수준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경제 수준에 맞는 신혼부부용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플랜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준다거나 혹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검색 후 자신이 선택한 시나리오를 저장하고 있다가 추후에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미혼 성인남녀의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의 가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벤치마킹 용 웹사이트로 미국의 주택마련 계획을 돕는 물가지 칼큘레이터 웹사이트를 추천한다. 아울러 좀 더 선진의 총체적 전자서비스의 예로 미국의 노인과 가족을 위한 자원센터의 웹사이트(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ADRC) 등을 추천한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리고 뉴저지 등의 웹사이트를 보면,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자신의 요구에 대한 선택 리스트를 간단히 선택하면 각각의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등의 리스트의 제공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보가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의 전산망에 연결됨으로써 질적인 대 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로 ADRC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 이전에는 한 개인이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3종류의 신청서를 각각의 해당 관청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처리기간도 최소 2주에서 3개월 등 민원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자정부서비스로의 행정전환 이후에는 초기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 작성한 서류가 모든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eligibility가 충족되면 서비스가 개시가 된다. 이로써 이전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간의 단축은 물론, 개인의 사소한 요구까지 파악되어 맞춤형 서비스의 전달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 하지만 IT 강국

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비용적 효율성도 뛰 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로그인 기능을 통한 개인의 정보의 입력과 서비스에 대한 요 구가 저장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시기가 되면 매칭 프로그램의 실험적 실시도 제안하는 바이다. 여성들의 경우 기존의 매칭 서비스의 여성에게 불리한 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표출 하였고 이러한 불만은 불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자신이 매칭 프 로그램에 등록한 것에 대한 비밀의 보장과 인성 테스트 등의 결과 그리고 희망 배 우자상, 등의 정보가 반영된 총체적인 측면이 고려된(경제적 측면, 인성적 측면, 종 교, 가정의 배경, 개인의 선호, 등)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기존의 프로그램들 보 다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되어 질 수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김두섭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유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 박정한(2008). 출산율 감소에 따른 모성 및 신생아 건강문제. 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저출산대책 포럼 자료집.
-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pp.47-71.
- 은기수(2004). 가치관과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 이삼식 외(2006).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pp.131-156.
- 조병구, 조운영, 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최세은·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pp.53-73.
- Auh, S. & Shelley, M.(2007). *Evaluation of Iowa Department of Elder Affair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Reported to Iowa Department of Elder Affairs. Ames, IA: Research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Auh, S. & Shelley, M.(2007). *A comparison study on the E-governmen services in the U.S. and the other countries*’.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Reported to IBM Center for Government Business.
- Auh, S.(2006). *Semi-Annual Report of Iowa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Reported to Administration on Aging, Center for Medicaide and Medicare, and Lewin Group. Baltimore, MD: Lewin Group.
- Brewer. J. & Hunter, A.(1989). *Multi-method research: A synthesis of styles*. Newbury Park, CA: Sage Pub.
- Johnson, B. & Christensen, L.(2004).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New York: Pearson, Co.
- Johnson, R. B. & Turner, L. A.(2002). Data collection strategies in mixed methods research.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Webb, E. J., Campbell, D. T., Schwartz, R. D., Sechrest, L., & Grove, J. B. (1981). *Nonreactive measures in the social sciences*(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제고대책

최숙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2008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발표되어 전년의 1.25명에 비해 하락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의 출산율이 2008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의 제고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한 국가 중의 하나인 프랑스도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15년이 소요되었다. 1970년 2.47명이던 출산율이 1993년 1.65명으로까지 감소하였고, 2008년이 되어서야 다시 2.02명으로 회복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의 중심에는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주어지는 각종 재정적 뒷받침이 있다.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2002년 출산율이 1.17명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심지어 2005년에는 1.08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의 경제침체 국면으로 인해 향후 상당 기간 출산율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고용과 자녀양육은 대체관계에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최근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



율이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탄력적인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고찰해 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 고용율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의 동시 상승이라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저출산 대책의 효과 분석<sup>15)</sup>

저출산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통계자료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시계열 자료의 경우, 장기간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OECD(d'Addio, 2005)의 연구모형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20개 국가<sup>16)</sup>의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를 수집하였다.

15) 최숙희, 김정우(2006)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함.

16)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20개 국가이다. 관련 통계자료는 OECD, Benefits and Wages: gross/net replacement rates, country specific files and tax/benefit models, 2006; Whiteford, Peter,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Paper for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Finnish Social Policy Association, 2005;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의 데이터와 <표>를 참고하였다.

〈표 3-4-1〉 저출산 대책요인 및 사용자료(분석대상: OECD 20개 국가)

구분	변수명	내용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자녀비용 경감	직접비용	대리변수: 두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정과 무자녀 맞벌이 가정의 순소득 차이*를 기존 소득 대비로 표시	%	8.21	3.94
	기회비용	대리변수: 맞벌이 가정과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정의 소득차이를 기존 소득 대비로 표시	%	74.03	38.88
사회·직장 환경조성	파트타임	전체 여성 고용자 중 파트타임 고용자의 비중	%	73.21	7.40
	부모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모의 휴가 기간	주	51.82	41.98
	남성일자리 우선권*	일자리에 있어 남성일자리우선권 더미(dummy)변수 (남성일자리우선권이 낮은 경우 = 1)	0, 1	0.55	0.51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이용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71.80	21.48
	유급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 비율	%	81.89	24.84

주: 1) 순소득(net income) = 전체 소득 - 소득세 - 사회보장기금 + 사회지원(최저생계비) + 실업, 주거 및 가족 관련 지원 + employment conditional benefits

2)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경우,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OECD 평균 12%보다 낮으면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그보다 높으면 불평등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이 비율이 각각 9%, 8%,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1%, 2%로 나타났으나, 한국과 일본은 각각 14%, 16%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양성평등 수준이 낮았다. 이 비율은 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하여 계산되었으며,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에서 인용하였다.

사용자료 중 비용 관련 변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의 형태로 구해서 사용하였다.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은 2004년 기준 OECD의 “Tax/Benefit” 모형 관련 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비용은 자녀 2명인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순소득 차이로 구했다. 기회비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을 목적으로 직장을 포기했을 경우의 비용으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와 1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순소득 차이를 나타낸다. 보육시설 이용 관련 변수는 3세에서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공공시설에 위탁, 보육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맡기기보다는 부모나 친척이 직접 키우거나, 외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연령인 3세 이상으로 국한하였다.

수집 가능한 OECD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출산과 관련된 각국의 직·간접비용, 보육 상황,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모형에 반영했다. 상기 변수로 구성된 선형모형을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정모형과 변수는 다음과 같다.

추정 모형:

$$TFR_i = \alpha + \beta_1(DICost_i) + \beta_2(OPCost_i) + \beta_3(PWEmp_i) \\ + \beta_4(PLeave_i) + \beta_5(Equ_i) + \beta_6(FCare_i) \\ + \beta_7(MRate_i) + \epsilon_i$$

TFR : 합계출산율, DICost : 직접비용, OPCost : 기회비용, PWEmp : 파트타임

PLeave : 부모휴가, Equ : 남성일자리우선권, FCare : 공공보육시설 이용

MRate : 유급출산휴가, i : OECD 20개 국가,  $\epsilon$  : 교란항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유급출산휴가, 부모휴가의 추정치 부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호가 사전적인 기대와 일치했다. 부모휴가 기간에 대한 추정치는 분석 전의 기대와는 달리 음(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왔으나, 그 크기가 0에 가깝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아서 합계출산율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4-2〉 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직접비용	-0.01707		0.01504	-1.14	0.289
기회비용	-0.00346	**	0.00149	-2.33	0.048
파트타임 비중	0.00709		0.00671	1.06	0.321
부모휴가	-0.00003		0.00109	-0.02	0.982
남성 일자리 우선권	0.24733	**	0.08492	2.91	0.020
보육시설 이용	0.00462	*	0.00205	2.26	0.054
유급출산휴가	-0.00489	**	0.00155	-3.15	0.014

주: \*p<0.1, \*\*p<0.05

통계적 유의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회비용, 공공보육시설 이용 정도, 유급출산휴가, 남성일자리우선권에 대한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급출산휴가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부호가 기대치와 반대라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유급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기간과 합계출산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추정결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장 복귀에 대한 불

확실성이 높아져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대책에 대한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추정치 크기를 보면, 남성일자리 우선권에 대한 더미변수가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가치관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이 요인의 변화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변수에는 관련 소득, 주거 관련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지원이 포함된다. 또 추정 시 사회·직장환경 개선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성 고용자의 파트타임 비중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추정치가 크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추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성 직장생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17)</sup>.

본 연구에서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증감할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 요인들의 민감도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증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 중 남성일자리우선권과 부모휴가의 단위는 %가 아닌 0과 1로 구성된 더미이거나 기간을 나타내며, 단위가 %인 변수들도 그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 대비 변화 정도를 나타내지만 유급출산휴가, 파트타임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의미한다. 특히 양성평등 관련 변수의 경우 분석 모형에서 더미변수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해진 값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평등 상태로 이전할 때의 합계출산율 변화 정도(shift)를 의미하므로 비교시 주의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별로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요인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파트타임, 보육시설 이용, 자녀비용과 출산휴가의 유급 비율이 각각 10.0%p 증가되었을 때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남성일자리우선권(양성평등 변수)의 경우,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0에서 1로 변했을 때의 영향을 의미한다.

17) 저출산 대책으로 모형 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녀비용 이외에도 가계의 비용 부담이 적은 공공보육시설 보급 정도와 출산율이 연관되어 있으며, 유급출산휴가와 부모휴가 등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형 추정 시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4-3〉 대책별 출산율의 영향 정도

(단위: 명)

자녀비용 경감	사회·직장 환경 조성		보육환경 개선	
직접·기회비용	파트타임 비중	남성일자리우선권	보육시설 이용	유급출산휴가
-0.205	0.071	0.247	0.046	-0.049

주: 각 대책이 10%p 증가 시(단 남성일자리우선권의 경우는 0에서 1로 변화 시) 출산율을 얼마나 증감시키는지를 의미한다.

‘자녀비용 경감’, ‘사회·직장 환경 조성’, ‘보육환경 개선’으로 다시 정의한 요인에 대해 합계출산율의 요인별 민감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상으로는 ‘사회·직장 환경 조성’의 하나인 남성일자리우선권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용변수가 다른 변수들과는 달리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해석상의 제약이 따르는 하지만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되면 0.25명 정도의 합계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트타임 비중이 10.0%p 증가할 때에는 합계출산율이 0.07명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인 ‘자녀비용 경감’이 소득 대비 10.0%p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21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10.0%p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05명 정도 향상되었으나, 출산휴가의 유급 비율은 오히려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II. 기업부문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 분석<sup>18)</sup>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여건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sup>19)</sup>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EU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50%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친가족적 근로 환경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 부문일수록 잘 조성되어 있다. 적어도 OECD 20개국에서는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 총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다(OECD,

18) 홍승아 외(2008)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함.

19) 30대 여성은 자녀 양육에 의해 고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 고용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직장에서 조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쉽게 대체가 가능한 고용자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Kiser, S. J., 1996).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x, S. and Scheibl, F., 1999).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업부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계량모형을 시도하였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자료설명

분석을 하기에 앞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조건에 관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된 자료는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와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가 유일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조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위 두 자료는 기업부문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하여 주요한 자료의 제공처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부문에 관한 효과분석에 사용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EU자료인 위의 두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미국, 일본과 한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탄력근무제 사용여부와 부모휴가의 이용비율, 일과 생활의 양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Fo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EWCS; 2007)와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ESWT; 2006)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EU 20개국이 선정되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

드, 터키 등 20개국 자료가 사용되었다.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EWCS)”는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1~3차 설문은 각각 1991년, 1995년과 2000년에 수행되었고, 4차 설문이 2005년 9월 19일~1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EU 31개국 약 3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상황에서 근로 조건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100개 항목이 질문되었다. EWCS는 EU 각국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설문조사이다.

또 다른 주요 설문자료인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ESWT)” 역시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에 의해 2004~2005년에 수행되었다. EU 21개국에서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ESWT는 EU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국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2. 변수설명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 고용률은 25~54세 여성의 2006년 고용률을 사용하였다. 여성 고용률은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여성 취업자수의 비중이다. 여성 파트타임비중은 25~54세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으로 2006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총 모성육아휴가는 모성과 육아휴가의 총계이다. 자료의 한계에 의해 Whiteford(2005)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휴가급여율은 Fagan & Walthery(2007) 자료가 사용되었다. 두자녀/무자녀 가구간 가처분소득차는 Jaumotte(2003) 자료에 의해 두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나타낸다. 일과 생활양립만족도비율은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007) 자료로서, 일과 생활의 양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근로탄력성은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007) 자료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고용

주가 정하는지 근로자가 정하는지를 나타낸 비율로서, 근로자가 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에 직원 중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2007)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표 3-4-4〉 효과분석에 사용된 자료(분석대상: EU 20개 국가)

구분	국가수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
여고용률 <sup>1)</sup>	20	%	27	82	69.86	12.16
여성파트타임비중 <sup>1)</sup>	20	%	4.2	59.7	25.10	13.17
총모성육아휴가 <sup>2)</sup>	20	주	12	180	95.64	51.97
휴가급여율 <sup>3)</sup>	20	%	66	100	89.10	13.32
두자녀/무자녀 가구간 가처분소득차 <sup>4)</sup>	20	%	0	21	9.00	5.63
일/생활양립만족도비율 <sup>5)</sup>	20	%	57.9	88.1	79.38	8.25
근로탄력성 <sup>5)</sup>	20	%	21.0	61.2	39.08	11.20
지난3년간직원중부모휴가사용비율 <sup>6)</sup>	18	%	25	89	54.22	13.68

자료: 1) OECD(2007). *Employment Outlook*.

2) Whiteford, Peter(2005).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3) Fagan, Colette & Walthery, Pierre(2007).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ime Policies for Reconcili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 OECD.

4) Jaumotte, Florence(2003).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5)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7).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6) Fagan, C., Smith, M., Anxo, D., Letablier, M. & Perraudin, C.(2007).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 *European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 3. 추정모형

기업부문에서의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고용률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수록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과 가족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고서는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중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계량모형 분석에서는 기업부문에서의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부문 변수가 여성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집 가능한 EU, OECD와 기타 보고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고용률과 관



런된 각국의 통계자료를 모형에 반영했다. 상기 변수로 구성된 선형모형을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정모형과 변수는 다음과 같다.

$$FEMP_i = \alpha + \beta_1(WLB_i) + \beta_2(MPL_i) + \beta_3(PaidL_i) + \beta_4(FlexTime_i) + \epsilon_i$$

FEMP : 여성 고용률, WLB : 일과 생활양립만족도 비율

MPL : 지난 3년간 직원중 부모휴가사용 비율, PaidL : 휴가급여율

FlexTime : 근로탄력성, i : EU 20개 국가,  $\epsilon$  : 교란항

#### 4. 모형추정 결과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독립변수의 추정치 부호가 정(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여성 고용률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생활 양립 만족도 비율과 지난 3년간 직원 중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여성 고용률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휴가급여율과 근로탄력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추정치 크기를 보면, 일과 생활의 양립 만족도 비율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있어 일과 생활의 양립 가능성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지난 3년간 직원 중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휴가급여율과 근로탄력성 순으로 중요 요인이 결정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모형 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형 추정시 사용되는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4-5〉 모형 추정결과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상수	6.411	12.843	0.499	0.626
일/생활양립만족도비율	0.583***	.132	4.427	0.001
지난3년간직원중부모휴가사용비율	0.197*	.095	2.059	0.060
휴가급여율	0.074	.084	0.880	0.395
근로탄력성	0.039	.116	0.336	0.743

주: \*p<0.1, \*\*\*p<0.01

여성 고용률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요인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과 생활 양립의 만족도 비율, 지난 3년간 직원 중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 휴가급여율과 근로탄력성 비율이 각각 10.0%p 증가되었을 때의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과 생활 양립의 만족도 비율이 10%p 올라가면 5.83%의 여성 고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직원 중 부모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10.0%p 증가할 때에는 여성 고용률이 1.97%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휴가급여율이 현재보다 10.0%p 증가할 때 여성 고용률은 0.7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탄력성 비율이 10.0%p 증가할 때 여성 고용률은 0.39%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V. 시사점

Jaumotte(2003)에 의하면, 육아보조금과 유급 부모휴가는 파트타임보다 풀타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여성의 고용참가율은 증가하고, 적어도 몇 개국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여성의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실증연구 결과, 육아보조금은 확실히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성 고용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동수당(child benefits)이 육아보조금(childcare subsidies)보다는 덜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성휴가, 부모휴가, 육아휴가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 고용율을 촉진한다. 일자리 보호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연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급 부모휴가가 OECD 9개국의 고용율을 증가시켰다는 실증 분석결과도 있다(Ruhm, 1998). Jaumotte(2003)는 다변량 계량분석(Multivariate Econometric analysis)을 통해 파트타임 비율, 육아, 유급휴가가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반면, 가구의 두 번째 소득자(APW의 67% 소득 수준에서 측정된)와 단독 개인 간 조세격차(tax wedge)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낮춘다고 분석하였다. Chevalier & Viitanen(2002)의 영국 사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아 보조가 여성의 고용참여율에 영향을 주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Gelbach(2002) 또한, 미국의 결과에서 육아보조로부터 여성 고용참여율에 대한 강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위의 계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8.9%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sup>20)</sup>이며, 여성 고용 중 파트타임의 비중도 한국이 12.5%에 불과해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이다. 학업,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 전환 청구권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여성, 청년,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길 원할 경우 이를 기업 측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금은 비례산정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시간 근로권(Part Time Right)이란 상용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원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위원회, 2003).

둘째,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증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 2007년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OECD 유럽 평균 16.1%, 네덜란드 36.1%, 호주 24.1%, 스위스 25.4%, 영국 23.3%, 독일 22.2%, 프랑스 13.4%, 미국 12.6%이다. 그리고 여성 고용 중 파트타임의 비율은 OECD 유럽 평균 28.7%, 네덜란드 60.0%, 호주 38.5%, 스위스 45.6%, 영국 38.6%, 독일 39.2%, 프랑스 23.1%, 미국 17.9%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2008).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호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의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로서 고용증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에도 고용증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증진을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과 단시간근로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기업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에 파견되는 산업현장 대체인력에 대해 1인당 2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현재의 20만~30만 원에서 더 확대하거나 월급의 일정 비율로 인상하거나,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 단시간근로 근무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정착에 기반이 되는 대체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의 완화, 모범기업 표창 및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풀타임과 단시간근로간의 격차도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 및 노동시간 유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크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와 남용방지를 통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정원호, 2004). 다양한 단시간 근로형태의 작업 스케줄이 제시되고 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다면 잠재인력으로 숨어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와 가족간호휴가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영아를 둔 여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영아는 육아에 비해 탁아비용도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정서상으로도 부모와 긴밀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부모가 영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휴가 등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은 부모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 유럽 국가 가운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이 담당해왔던 가족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족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보호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족간호휴가제도는 가족이 아플 때 여성근로자에게 3개월에서 최장 1년간 휴가를 주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뿐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대부분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 보장을 위해 권장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이인재외(2004).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
- 정원호(2004).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 연구: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숙희, 김정우(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최저임금위원회(2003).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 홍승아 외(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 Andersson, G.(2002). Fertility developments in Norway and Sweden since the  
early 1960s. *Demographic Research*, Vol. 6(4), pp. 67-86.
- Blau, D. M. and Robins, P. K.(1988). Child 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pp.374-381.
- Blau, D. M. and Robins, P. K.(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Vol. 25(2), pp.287-299.
- Chevalier, A & Viitanen, T.(2002).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Issue 14, pp.915-918.
-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 Dex, S. and Scheibl, F.(1999).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4(4), pp.22-37.
- Ermisch, J.(1989).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pp.79-192.
- European Commission(1998). *Care in Europe*. Directorate 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Brussels.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7).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6). *European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an companies(ESWT 2004/2005)*.
- Fagan, Colette & Walthery, Pierre(2007).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ime Policies for Reconcili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 OECD, pp.75-116.
- Fagan, C., Smith, M., Anxo, D., Letablier, M. & Perraudin, C.(2007).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 European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 Gelbach, J.B.(2002).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Issue 1, pp.307-322.
- Jaumotte, Florence(2003).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pp.51-108.
- Kiser, S. J.(1996). *Friendly to Whose Families? A Case Study of the Delivery of Work-Family Benefits in a Model Fir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aft of 22 November, mimeo.
- OECD(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 OECD(2001, 2007). *Employment Outlook*.

OECD(2007). *Modernising Social Policy for the New Life Courses*.

Røsen, M.(2004).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Vol. 10(10), pp.264-286.

Ruhm, C.(199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Issue 1, pp.285-317.

Whiteford, Peter(2005).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지적임. 4개의 토론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대부분의 발표문이 기존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므로, 후에 논문으로 다시 꾸며질 기회가 있다면 정책적 제언이 연구 분석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 제시되었으면 함.
- 첫 번째 발표문의 경우 2008년부터 합계출산율 기준이 바뀌었으나 과거의 기준에 의거해 출산율을 적용하였음. 현재 합계출산율이 국내거주 출생아로 바뀌었으므로, 과거의 기준으로 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1내지 0.2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표본의 대표성에 의문이 드는데, 표본 중 195명이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65%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개중에 의미 없는 질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셀 값이 0인 경우도 있어 카이스퀘어 값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발표문에 관해서는 전화조사의 자료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보육비나 교육비 감소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서 그 기준이 동일했는지 의문임.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자녀의 수에 따라서 기준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 또한 전화를 통한 가상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답변했는지 의문임. 본 연구결과에서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임. 최상위층과 차상위층은 경제위기에 대한 민감도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가령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집단분류가 필요함.
- 발표4의 경우 20개 남짓한 표본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결과가 매우 유의미함. 다만 여성 고용율을 매개변수로 놓고, 세 개의 변수를 떼는 모형으로 만들면 보다 간결하면서 양자 간의 효과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함.

### ○ 옥선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가족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자료에서의 함의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겠음. 발표문을 보고 저출산의 심각성에 관해 어떤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효과적일지 생각해보았음.
- 세 번째 발표의 만혼현상에 대해 한두 가지 질문이 있음. 우선 본 연구는 통합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혼지연에 관한 문화적 특성을 발견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임. 다만, 앞에서 계량적 자료 해석 시 특히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후반부에 그것에 대한 결과 제시가 미흡함. 또한 발표자의 얘기 중에 젊은 층이 결혼에 대해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환경으로 인해 결혼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그리고 결혼에 있어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집합적 가치를 측정하는 보수적인 문향에서 매우 높은 값이 나온 것이 의아함. 혹시 인터뷰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됨.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집단에 소속될 경우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표자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름.
- 실제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볼 때 사랑은 오케이, 결혼은 글썄, 그리고 출산은 그냥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음. 연구자가 해석하는 ‘우리도 결혼이나 아이도 낳고 싶지만 경제가 문제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응답일 수 있음. 이들 집단에 게 가족은 억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초혼은 어렵다고 보며, 30대 중반에 결혼할 경우 사실상 다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함.
- 네 번째 발표자인 최숙희 박사님의 주제에서 일과 가정 양립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경제학자임에도 같은 견해를 가졌다는 것에 놀라움. 다만, 유럽을 벤치마킹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 없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가족친화적 제도의 관계가 유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또한, 파트타임이나 대체인력자원에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 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폭발적인 대응책이 수요자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혹시 기업측면에서 간파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함.

### ○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정책이 효과적인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어떤 독립변수가 투입이 될 것인지 부터가 문제임. 유럽의 경우 일 가정 양립이 효과가 있음이 판명되었으나 양육수당이라든지 가치관 변화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논의를 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논문도 유럽과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기초자료를 스크린 하려는 것인지 정책 자료를 만들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움. 인식이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 정책에 바로 반영하는 것인지도 의문임. 정책이 국민의 의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문의 목적에 입각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에서는 지엽적인 대안만 제시하는 불일치를 보임. 혹시 대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추측되며, 이로 인해 논문의 성격과 대안에 대한 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됨.
- 양성평등이나 일 가정양립이 중요한 변수로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독립변수로 투입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 충분한 환경이 조성 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임. 그럴 경우 다문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음. 일본의 경우도 자민당의 100만인 외국인 수용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시도한 정책임. 이처럼 입양아를 들이는 것이 단기적인 방안은 될 수 있으나 갑작스런 인력수급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장·단기적인 출산율정책이 함께 제고되어야 한다고 봄.
- 전해정 교수님 논문에서 방향은 좋지만,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실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의 오판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고선강 교수님의 세대적·사회적 요인에서 세대적 요인에 포함시킨 것 중 많은 것들이 사회적 요인이라고 생각됨. 두 개 모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이 먼저인가를 볼 때는 사회적 요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이럴 경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대책을 입안할 경우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규범적으로 나온 데이터로부터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효과성에 대해 분명히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결론이 상당히 공허할 수 있음.
- 또한 FGI의 결과로부터 부모의 과도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양적조사에서는 없는 내용임. FGI의 케이스가 몇 개인지 궁금하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부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표집상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대안으로 제시한 싱가포르의 결혼장려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출산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음으로 판명되었음. 이 정책으로 인한 결혼의 대부분이 외국인과의 결혼이고 국내 결혼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임이 통계적으로 판명되었음.
- 최숙희 박사님의 논문에서는 분석결과에서 탄력적 근무의 영향정도가 낮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에서는 일자리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함.

#### ○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윤정, 최숙희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하겠음.
- 신윤정 박사님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함. 발표문의 앞부분에서 인적자본과 함께 자녀의 양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또, 자녀의 가치가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이전되었다는 선행연구를 밝혔는데, 그 부분은 분석자체를 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음. 그리고 자녀에 대한 투자는 자녀의 수에 불문하고 이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분석에서는 보육비 변동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임.
- 전화인터뷰상의 대표성문제를 지적함. 전화를 하여 안 받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함. 분석내용에서 보육,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로 단계적으로 나누었으나 보육비 및 교육비가 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또한 교육단계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 공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실제 보육비와 유치원비는 여성의 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을 하는 여성에게 3세 이상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비용이 잡힐 것이며, 일을 하지 않은 여성은 보육비 지출이 잡히지 않을 것임.

- 종속변수로 자녀 출산의향을 질문하였으나, 이것은 출산력을 나타내는 변수 중 하나 일뿐 유일한 변수는 아님. 따라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과 출산에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임.
-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보육비 지원을 증가시키면 자녀를 많이 낳겠지만, 초등학교 이후의 과정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같으므로 교육비 정책에서 봤을 때 교육비를 유치원 이하를 지원해야하는지 고등학교 등에 지원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결정임. 결과적으로는 보육비 지출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논문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자녀의 양적인 것 뿐 만아니라 질적인 것까지, 자녀의 지출수준 및 발달수준까지 본다면 더 좋은 정책제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최숙희 박사님의 논문에서 출산율을 제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으나 그 이유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 같음. 회귀분석을 두 가지를 시행했는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부분임. 지금은 횡단면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므로 그것을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려움. 그렇지만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해석도 유의미 하다고 생각함. 저출산과 일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두 가지 분석을 따로 하여 약간의 혼란이 있었음. 동일한 정책적 종속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
-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분석상에서 나오는 제언은 아님.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 ○ 김서중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자녀를 하나만 낳고 그대로 멈추는 것임.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가정형성을 조기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여러 장애요인들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간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함.

-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지금처럼 1년에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률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양육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줄여주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임. 지금처럼 0~5세 사이의 아이양육을 보육기관에 맡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만 5세는 학교에서 맡는 것이 좋을 지도 고려중임.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 유효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유치원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함.
- 일과가정양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는 필요조건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이는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 자체가 너무 길고,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지금의 사업주 입장에서 사람을 새로 고용하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지금까지 모성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왔으나,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 일단 가족이 형성되면 최소 한명의 자녀는 낳는 것 같음. 따라서 과거에는 다자녀가정을 3자녀로 봤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2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정책을 실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됨. 보육료 자체도 첫째 아이는 지금처럼, 둘째 아이부터는 모든 계층에게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육아휴직도 첫째아이는 임금의 30%, 둘째는 50%를 주는 등의 차별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어야함.
- 현재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며, 결국 문제는 재원임. 2007년의 경우 약 4조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0.4%임. 그러나 OECD국가 평균이 2.3%임을 고려할 때 저출산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차원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고민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함.

□ 토론장

○ 유계숙 (경희대학교 교수)

- 결혼지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함. 발표된 연구에서는 평균초혼연령으로 끊어서 제시하고 있으나, 혼인 적령기라는 말 자체가 특정 연령 범위를 담고 있으므로, 이것이 결혼지연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됨. 만약 그렇다면 30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해서 계몽을 해야 하는 건지, 혹 계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공캠페인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 발표자 답변

○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0~15분 사이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조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인 정확한 지출비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계조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주제는 보육비 부담 정도이지 보육비지출이 아니었음. 따라서 전화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부담수준은 비교적 잘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향후에 이러한 지출비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도 가계조사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다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화조사의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 야간조사와 주말조사까지 실시하여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였음.
- 지적하신 대로 보육비와 유치원비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학자 간에도 서로 상이하여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보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유치원비는 교육비에 대한 정의로 간주함.
- 어머니의 취업·비취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에서 취업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음.
- 너무 보육비하고 초등학교비용만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실적

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출산 극복을 양적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제시한 결론이며, 향후 전체 보육과정과 인구의 질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교수)

- 옥선화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 결국 우려했던 바가 드러남. 면접조사 결과가 원고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됨. 면접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 희생이고 의무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결혼이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많이 보임. 둘째, 결혼은 가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조사 대상이 28-40세 사이의 미혼남녀라는 점과 이 문항에 대한 찬성율이 높은 그룹이 판매,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임을 고려해야 함. 결론적으로 이 문항에 찬성비율이 높은 집단은 결혼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을 반영함.
- 김성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적인 부분은 사회적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본 연구에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책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이 FGI를 일반화할 수 없다면 본연구의 한계가 될 것임. 부모의 과도한 영향력이 결혼지연요인이라고 꼽은 것은, 부모의 결혼 압력 속에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결혼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결혼으로 이어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 하자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혼관련 자료를 구축 시 참고하자는 것임.
- 결혼지연의 정의 및 혼인 적령기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본 연구는 초혼연령이상을 결혼지연으로 봤음. 물론 이에 대해 개인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있으며, 선택은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함.

#### ○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두 번째 모형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번째 모형은 충분한 자료를 찾지 못했음. 또한 옥선화 교수님 말씀처럼 북구유럽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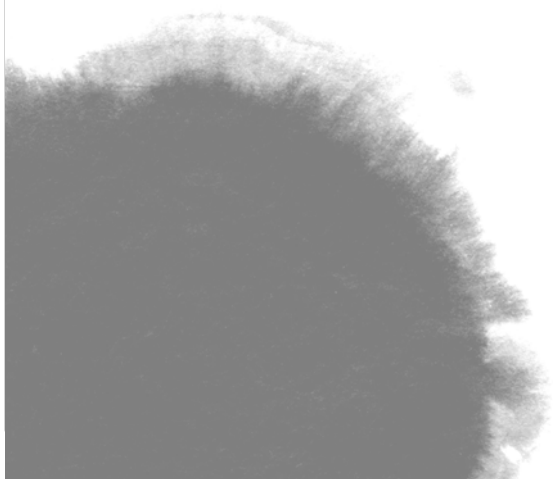


러나 이것이 기업 차원으로 적용될 경우 그 격차가 줄어들. 즉, 여성의 고용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경우 기업의 가족친화라든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임. 실질적으로 가족친화가 안 되는 나라는 남녀 간 갭(gap)이 큰 나라임. 그러나 우수한 인력일수록 이러한 갭은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함.

- 탄력적 근무의 영향정도가 낮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에서는 일자리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약간의 한계를 인정.
- 김정호박사님의 지적대로 분석결과를 상관관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제4차 저출산대책포럼





## 제4차 저출산대책포럼

### 프로그램

#### 주제발표

좌 장: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발표 1: 부산광역시의 저출산과 한국 인구정책의 미래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2: 부산광역시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방안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윤경자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발표 3: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추진현황

안삼달 (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

발표 4: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극복 관련 민간단체 사업 추진 현황

이정숙 (부산시 출산양육후원협의회 공동의장)

#### 지정토론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계숙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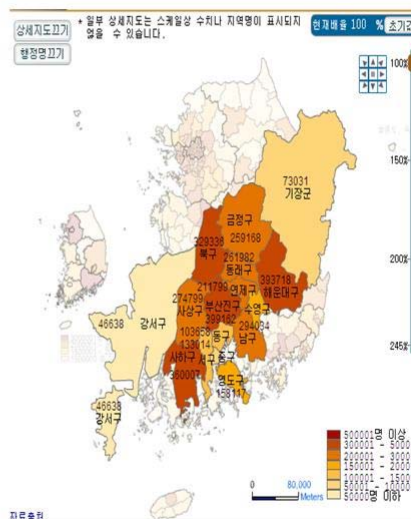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의 저출산과 한국 인구정책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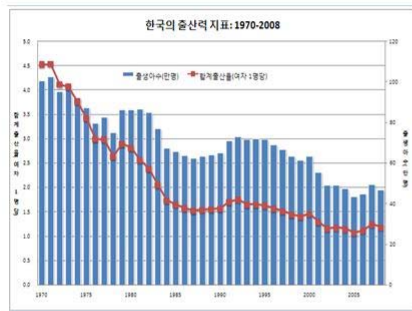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목적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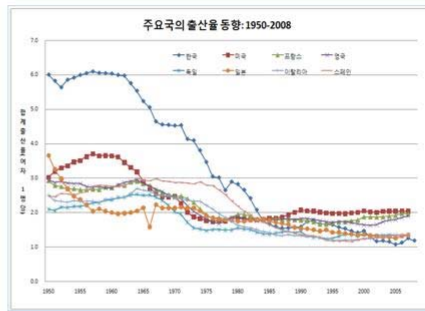
- 부산은 최근 3년 수치를 평균하여 합계출산율 0.938, 조 출생률 7.30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보다 낮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대체수준 2.1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의 영속화는 젊은 인구의 유출을 경험하는 부산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의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게 될 것임
- 부산의 저출산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우리나라 초(超) 저출산 체제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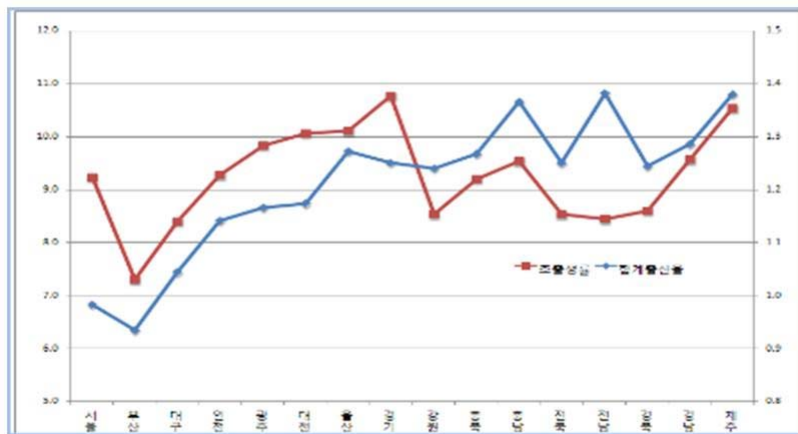


- 출생아 수는 70년대 100만 명 수준에서 2000년 초반부터 45-50만 명대로 감소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1983년 2.08 (대체인구수준)으로 감소하고, 2005년에는 1.08로 최저점을 기록
- 2003년 이후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 저출산 시대로 진입하여, 반등의 기미는 확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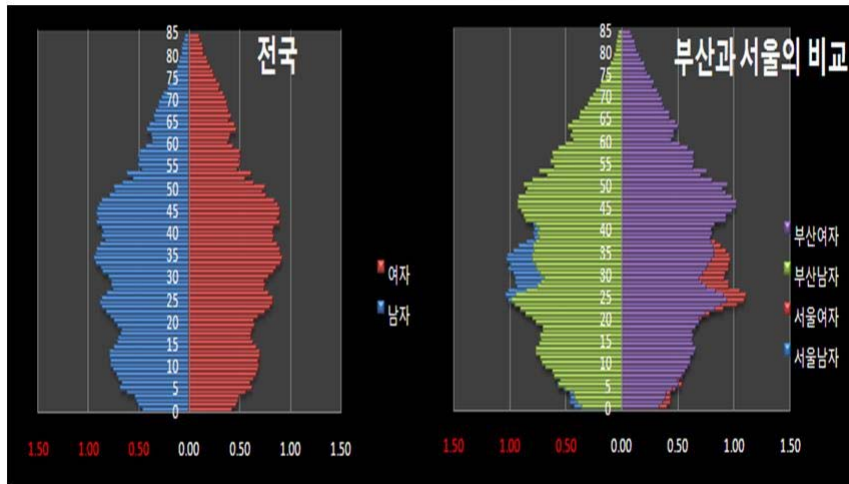
-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난 50여 년간 출산력 저하의 폭이 가장 큰 나라
- 합계출산율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선진국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노동시장, 보육시설, WLB(work-life balance), 육아지원, 조세감면,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등이 있음

## 광역지자체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2005-2007년





## 전국, 부산, 서울의 인구피라미드: 2005년



## 전국, 서울, 부산의 모아비(CWR): 2005년 센서스 자료

		전국	서울	부산
가임여성의 구성비 (%) (총 인구 대비)	15-19세	3.13	3.03	3.23
	20-24세	3.71	4.52	4.08
	25-29세	3.86	4.97	3.90
	30-34세	4.33	4.75	3.86
	35-39세	4.35	4.21	4.02
	40-44세	4.34	4.23	4.46
	45-49세	4.12	4.40	4.85
	합계	27.84	30.10	28.41
아동의 구성비 (%) (총 인구 대비)	0세	0.88	0.83	0.69
	1세	0.97	0.89	0.76
	2세	1.00	0.89	0.80
	3세	1.03	0.90	0.82
	4세	1.18	1.00	0.95
	합계	5.06	4.51	4.02
모아비	0세 자녀/15-49세 여성 (여자 1000명당)	31.6	27.71	24.27
	0-4세 자녀/15-49세 여성 (여자 1000명당)	181.9	149.93	141.58

## 부산과 서울의 가임여성 연령집단별 평균 출생아 수(CEB): 1970-2005년

	부산						서울				
	모든 여성(미혼 + 기혼)										
	1970	1980	1990	2000	2005	1970	1980	1990	2000	2005	
20-24	0.380	0.282	0.108	0.042	0.023	0.307	0.207	0.094	0.035	0.016	
25-29	1.647	1.441	0.947	0.530	0.254	1.468	1.208	0.808	0.429	0.203	
30-34	3.026	2.412	1.726	1.430	1.085	2.807	2.222	1.621	1.268	0.941	
35-39	3.941	3.045	2.151	1.777	1.650	3.626	2.812	2.051	1.700	1.534	
40-44	4.621	3.635	2.611	1.889	1.824	4.274	3.373	2.444	1.826	1.753	
45-49	5.040	4.120	3.124	2.174	1.889	4.686	3.790	2.889	2.069	1.825	
20-49(평균)	2.598	1.992	1.552	1.299	1.160		2.270	1.814	1.433	1.154	1.014
	기혼 여성										
	1970	1980	1990	2000	2005	1970	1980	1990	2000	2005	
20-24	0.900	0.828	0.592	0.612	0.622	0.895	0.776	0.616	0.535	0.522	
25-29	1.861	1.659	1.217	1.055	0.851	1.745	1.500	1.147	0.910	0.704	
30-34	3.087	2.473	1.811	1.652	1.453	2.888	2.321	1.762	1.547	1.319	
35-39	3.958	3.079	2.205	1.866	1.813	3.664	2.859	2.126	1.824	1.755	
40-44	4.625	3.657	2.639	1.934	1.892	4.292	3.400	2.481	1.898	1.855	
45-49	5.040	4.137	3.150	2.207	1.934	4.696	3.810	2.917	2.120	1.894	
20-49(평균)	3.127	2.545	2.020	1.800	1.729	2.897	2.429	1.948	1.696	1.626	

## 서울과 부산의 가임여성 연령집단별 평균 출생아 수의 변화율: 1970-2005년

	부산					서울				
	모든 여성(미혼 + 기혼)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5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5	
20-24	-0.843	-3.356	0.338	0.327		-1.416	-2.319	-1.410	-0.494	
25-29	-1.154	-3.095	-1.432	-4.290		-1.511	-2.686	-2.316	-5.141	
30-34	-2.215	-3.115	-0.919	-2.576		-2.184	-2.753	-1.306	-3.191	
35-39	-2.510	-3.339	-1.670	-0.578		-2.479	-2.965	-1.530	-0.770	
40-44	-2.348	-3.264	-3.106	-0.437		-2.329	-3.150	-2.679	-0.457	
45-49	-1.973	-2.727	-3.555	-2.647		-2.091	-2.671	-3.192	-2.251	
20-49	-2.058	-2.313	-1.153	-0.807		-1.761	-2.206	-1.389	-0.839	
(평균)										
	기혼 여성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5		1970-1980	1980-1990	1990-2000	2000-2005	
20-24	-2.975	-9.654	-9.402	-11.937		-3.964	-7.903	-9.858	-15.230	
25-29	-1.333	-4.203	-5.810	-14.707		-1.950	-4.028	-6.321	-14.944	
30-34	-2.271	-3.343	-1.884	-5.526		-2.338	-3.152	-2.457	-5.960	
35-39	-2.579	-3.476	-1.908	-1.483		-2.543	-3.156	-1.876	-2.055	
40-44	-2.400	-3.307	-3.238	-0.703		-2.367	-3.221	-2.920	-0.815	
45-49	-2.015	-2.765	-3.626	-2.817		-2.124	-2.713	-3.339	-2.511	
20-49	-2.658	-2.492	-1.783	-2.263		-2.241	-2.358	-2.168	-2.587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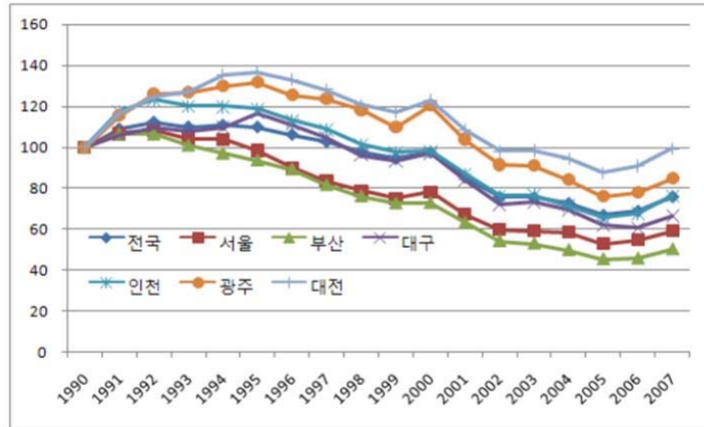
## 부산시 저출산의 현황

- 2007년 현재 부산의 조출생률(CBR) 1000명당 7.8, 합계 출산율(TFR)은 여자 1인당 1.02으로 전국 최저수준  
(CBR: 전국 10.0, 서울 9.8, 대구 8.9, 인천 10.0)  
(TFR: 전국 1.25 서울 1.06, 대구, 1.13, 인천 1.25)
- 1990-2007년의 18년 간에 걸쳐, 부산의 인구는 380만 명에서 359만 명으로 5.5%가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56,023명에서 28,223명으로 49.6%가 감소하였음  
(총인구: 서울, 1,047만→1019만 2.7% 감소, 대구, 229만→249만 8.7% 증가, 인천, 190만→266만 40.6% 증가)  
(출생아 수: 서울, 168,833→100,107명 40.7% 감소, 대구, 33,271 → 22,169명 33.3% 감소, 인천 34,886 → 26,538명 23.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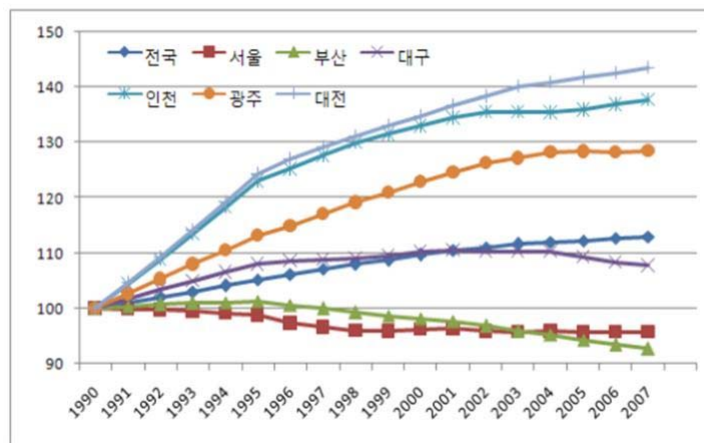
## 부산의 저출산 추이의 특징

- 부산시는 물론 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는 전국적인 저출산 추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전국 출산율을 하향 평행이동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음  
(합계출산율 차이의 최대 0.25 최소 0.16)  
최대(2000년) 0.25 부산 1.22 전국 1.47  
최소(1993년) 0.16 부산 1.50 전국 1.66
- 1990년대 전반에는 대구에서 전국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이 현상은 사라지게 되고, 서울은 1990년대 전반, 인천은 1990년대 전 후반 모두 전국의 조출생률을 상회하였으며, 인천은 1990년대 후반까지 전국의 합계출산율을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에 진입하면 서부터 이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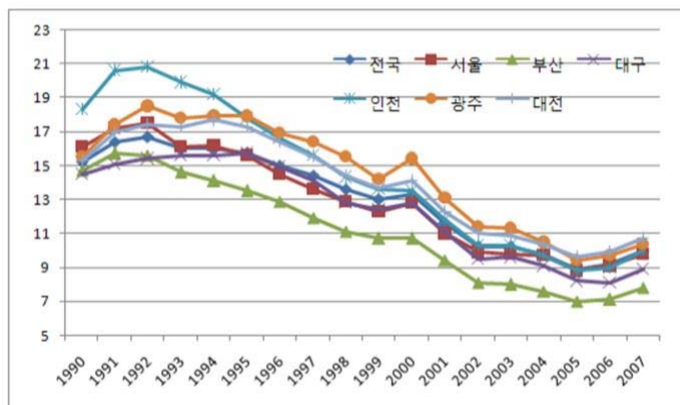
## 주요도시 출생아수 추이: 1990-2007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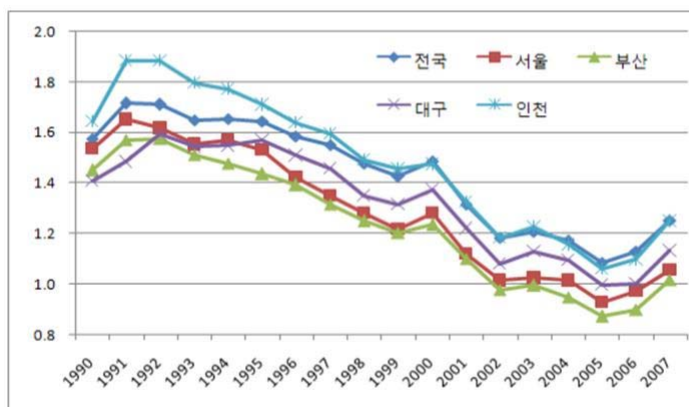
## 주요도시 인구 추이: 1990-2007년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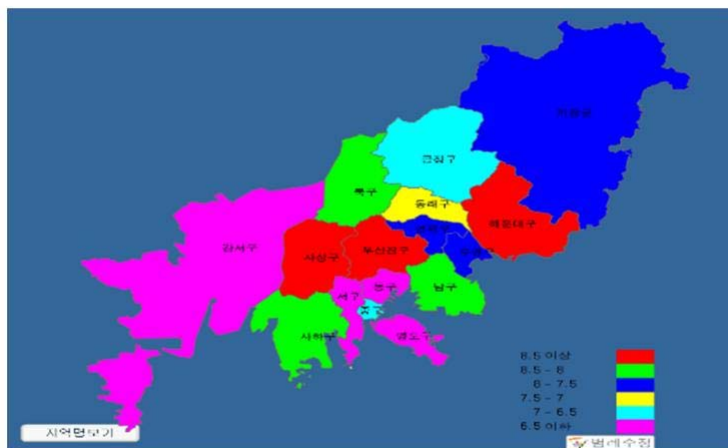
## 주요도시 조출생률 추이: 1990-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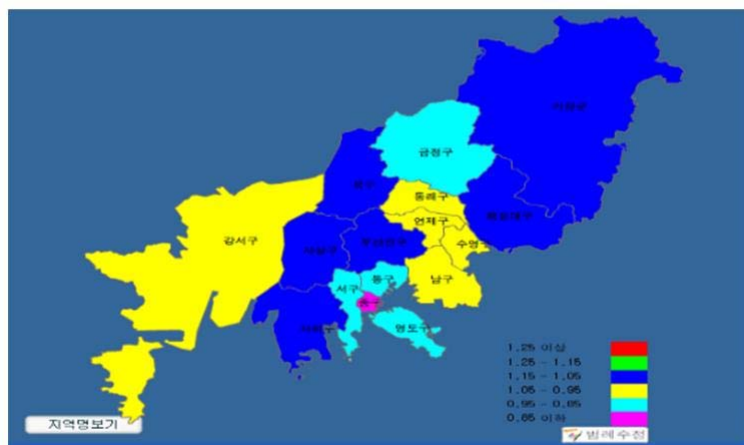
## 주요도시 합계출산율의 추이: 1990-2007년



## 부산 기초지자체 조출생률(CBR):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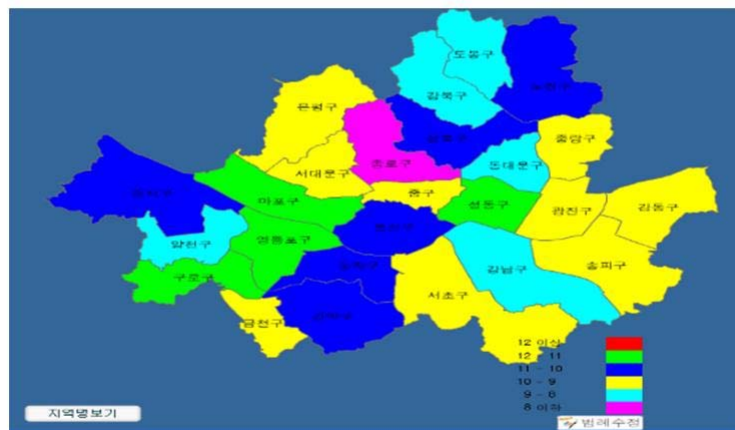


## 부산 기초지자체 합계출산율(TFR):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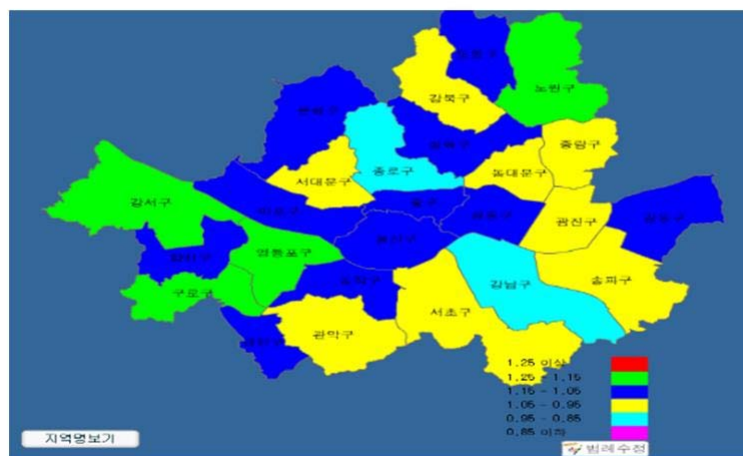




## 서울 기초지자체 조출생률(CBR): 2007년



## 서울 기초지자체 합계출산율(TFR): 2007년



## 부산 기초지자체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분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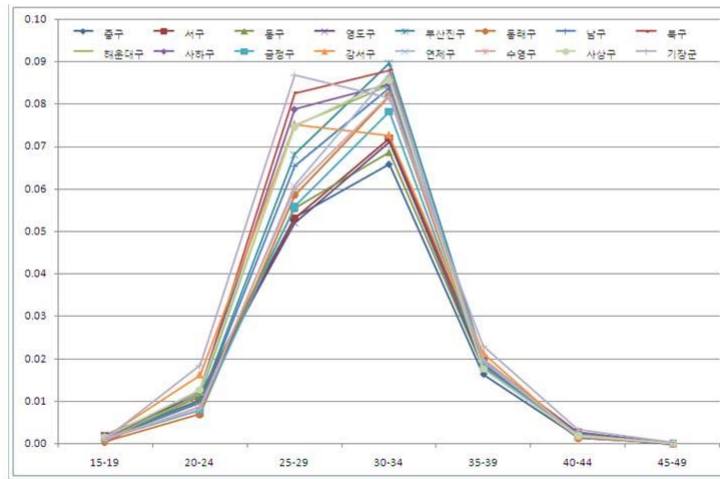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성비)
		6.5이하	6.5-7.0	7.0-7.5	7.5-8.0	8.0-8.5	8.5-9.0	
합계출산율 (여자 1인당)	0.85이하		중구					50,004 (1.4)
	0.85-0.95	서구, 영도구	동구, 금정구					651,891 (18.2)
	0.95-1.05	강서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1,024,297 (28.6)
	1.05-1.15				기장군	북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1,861,247 (51.9)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성비)	444,776 (12.4)	308,938 (8.6)	284,901 (7.9)	470,476 (13.1)	986,661 (27.5)	1,091,687 (30.4)	3,587,439 (100.0)

## 서울 기초지자체의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분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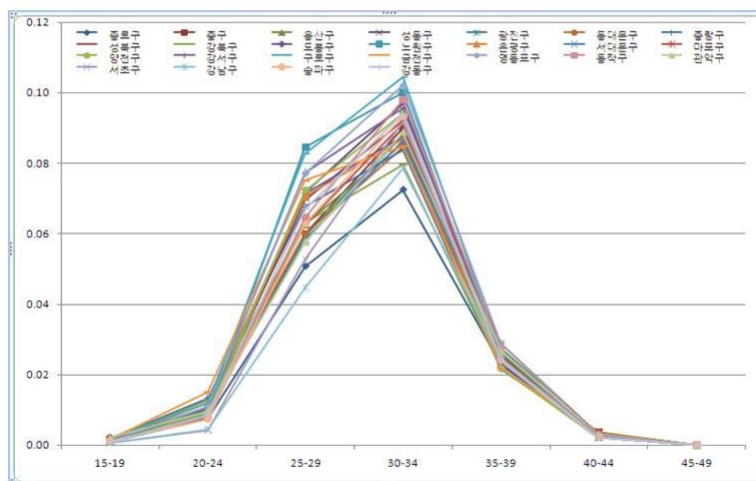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성비)
		8이하	8-9	9-10	10-11	11-12	
합계출산율 (여자 1인당)	0.85-0.95	종로구	강남구				726,804 (7.1)
	0.95-1.05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중랑구, 서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3,439,533 (33.7)
	1.05-1.15		도봉구, 양천구	중구, 은평구, 금천구, 강동구	용산구, 성북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4,020,476 (39.4)
	1.15-1.25				강서구, 노원구	영등포구, 구로구	2,005,897 (19.7)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성비)	165,846 (1.6)	2,162,482 (21.2)	3,484,957 (34.2)	2,824,520 (27.7)	1,554,905 (15.3)	10,192,7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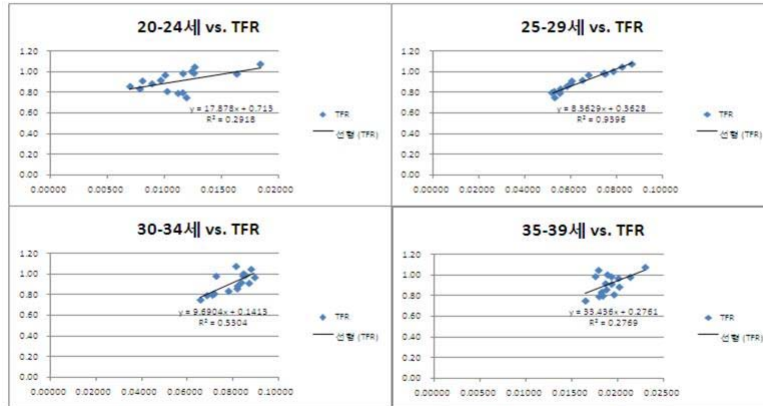
## 부산 기초지자체 연령별 출산율: 200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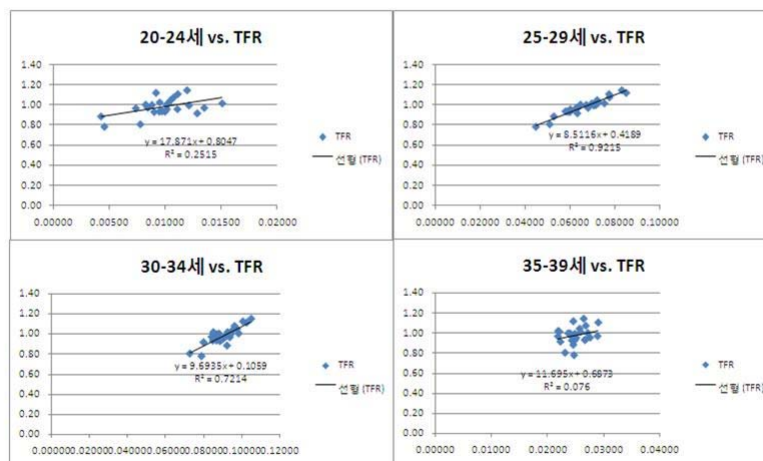
## 서울 기초지자체 연령별 출산율: 2005-2007년



## 부산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5-2007년



## 서울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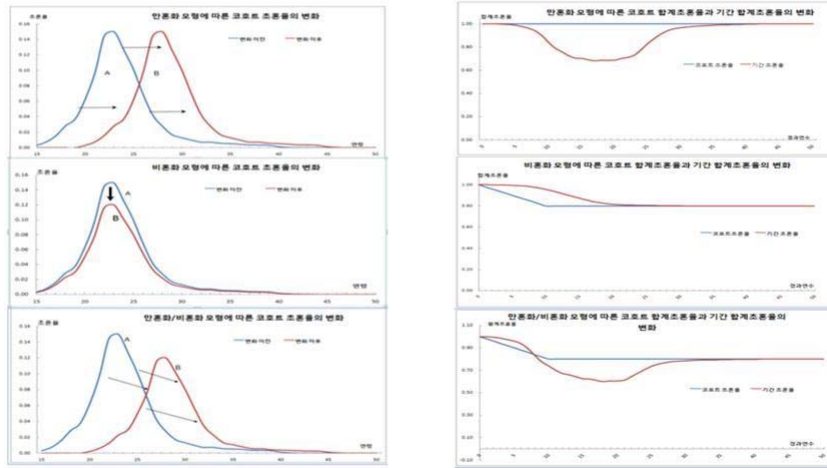
## 만혼화/비혼화 시뮬레이션 모형의 가정

- ① 만혼화, 비혼화, 만혼화/비혼화 세 모형 모두 변화 이전에는 초혼율의 연령분포가 똑같다
- ② 변화 이전의 초혼연령 분포의 합계는 1.0이고, 여자 출생 코호트의 전원이 무조건 연령별 초혼율 스케줄에 따라 결혼한다. 곧 미혼 또는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대의 수치인 24.2세 정도를 가정하고, 만혼화 모형에서 10년 동안 5세 가량 상승한다
- ③ 변화 이후의 초혼율의 연령별 분포는 각각의 모형의 가정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변화 이전부터 변화가 일어난 후까지의 경과연수는 10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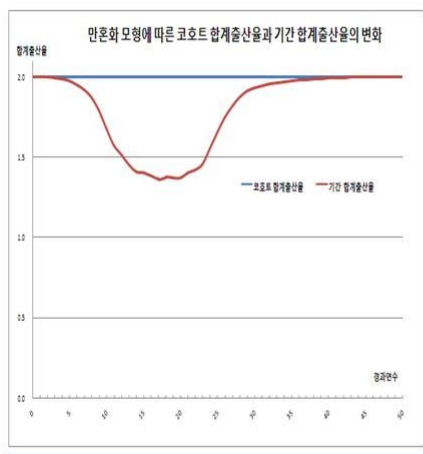
## 만혼화/비혼화 시뮬레이션 모형의 가정-계속

- ④ 출산은 결혼 직후에 일어나며, 출생아 수는 2.0명으로 결혼한 여성은 모두 2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한다
- ⑤ 이혼·재혼 등은 출산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여성 본인의 사망으로 당초의 코호트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 코호트 초혼율의 변화와 기간 초혼율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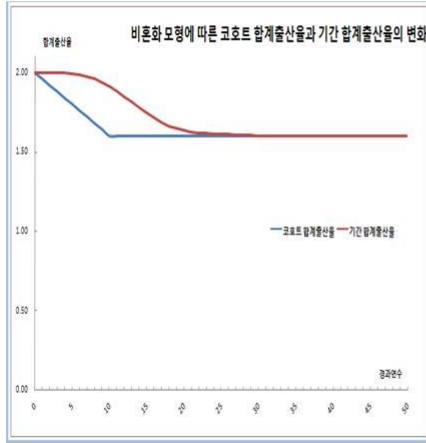


## 만혼화 모형: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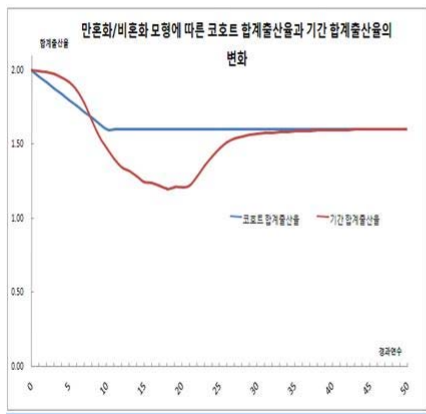
- 기간 합계초혼율이 일시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코호트 초혼율의 연령이동 곧 만혼화로 기간초혼율 스케줄에서 하나 하나의 출생코호트의 낮은 초혼율이 역출(translation)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 초혼연령이 10년간에 걸쳐 24.2세에서 29.2세로 상승하는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최대 2.0명에서 1.4명으로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원래의 수준인 2.0명을 회복한다

## 비혼화 모형: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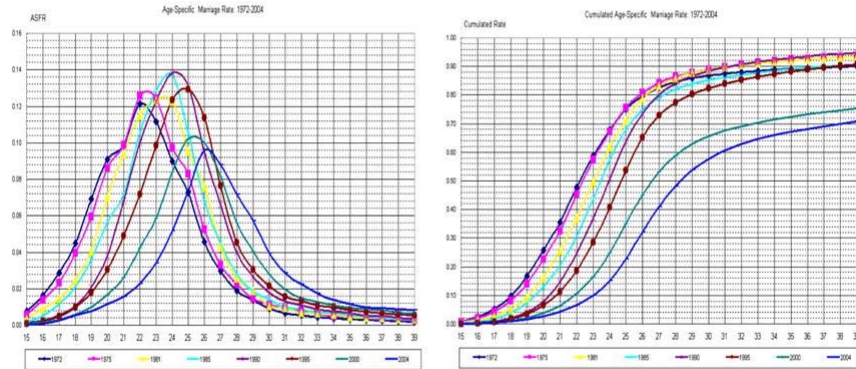
- 초혼 발생의 연령이 변하지 않고, 초혼 발생의 빈도만 출생코호트 간에 변하는 경우, 기간 합계초혼율은 코호트 합계초혼율의 변화에 따라 저하한다
- 초혼연령분포의 수준 변화가 10년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 코호트 관찰이든 기간관찰이든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원래의 수준인 2.0명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 만혼화/비혼화 모형: 코호트 출산율과 기간출산율의 관계



- 결혼의 연령과 분포의 모양이 출생코호트간에 변하는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비혼화하는 동안에 변화하기 시작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대폭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 기간 합계출산율은 코호트의 합계출산율 변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출현하지만, 비혼화로 인하여 출산율이 원래의 수준인 2.0명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수준인 1.6명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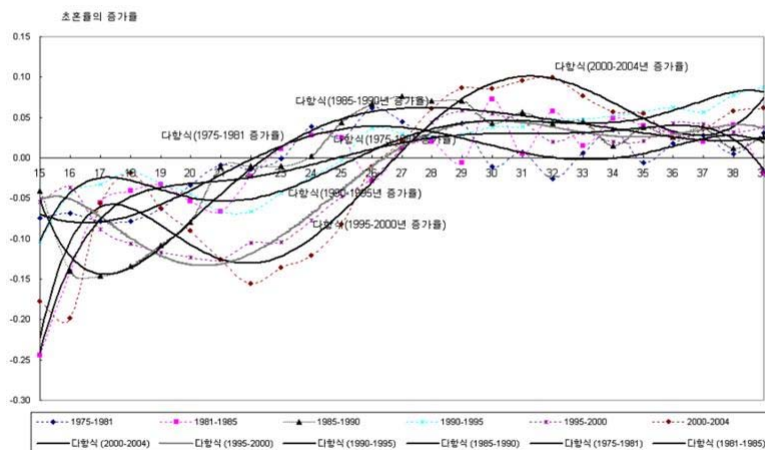
## 연령별 혼인율 변화와 출산력 반전의 가능성



연령별 혼인율:  
1972-2004

연령별 누적 혼인율:  
1972-2004

## 여자 연령별 혼인율의 시차별 증가율: 2000-2004년



## 출생아 수의 수리적 이해

B = 출생아 수,  
N = 가임 여성수,  
TFR = 합계출산율,  
G = 평균세대규모

$$B = \sum_{i=15}^{\infty} B_i = \sum_{i=15}^{\infty} (N_i \times \frac{B_i}{N_i})$$

$$= \sum_{i=15}^{\infty} N_i \times f_i = \sum_{i=15}^{\infty} f_i \times \frac{\sum_{i=15}^{\infty} N_i \times f_i}{\sum_{i=15}^{\infty} f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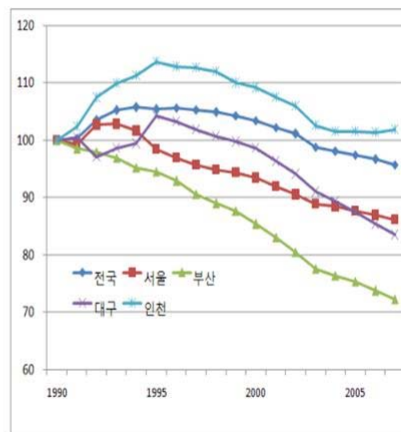
$$= TFR \times G$$

따라서,  $G = \frac{B}{TFR}$

1. 합계출산율(TFR) = 한 여자가 총재생산기간(15-49세) 35년 동안, 현재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 연령별 출산율( $f_x$ )의 스케줄에 따라서 출산을 할 때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를 말해주는 지표
2. 평균세대규모(G) = 합계출산율에 대한 연령별 상대기여도에 따라 가임 여성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지표. 연령별 출산율이 불변이라도 해당연령의 가임여성이 줄어들면, 평균세대규모는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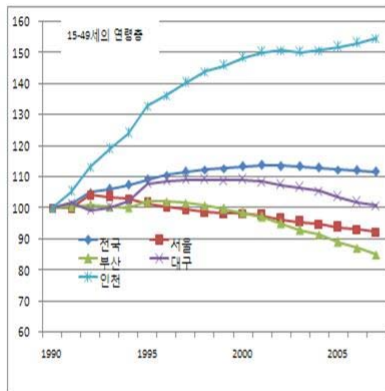
## 부산의 저출산과 평균세대규모

- 부산의 평균세대규모(mean generation size, B/TFR)가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할 때, 28%나 감소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는 4% 감소했으며, 서울 14% 감소, 대구 16% 감소했으나, 인천 2% 증가하여 부산의 평균세대규모 감소의 템포는 여타 대도시와 현격한 차이를 이룸
- 평균세대규모는 부산 1990년, 서울 1995년, 대구와 인천은 모두 1995년이며, 우리나라 전체는 1994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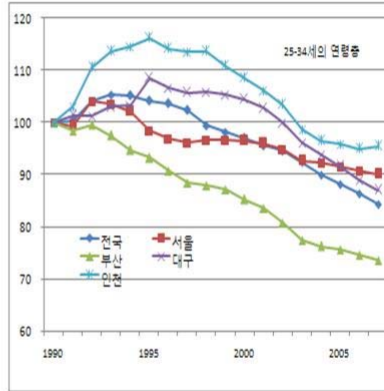




## 부산의 재생산연령 여성수의 감소추이: 1990-2007 (199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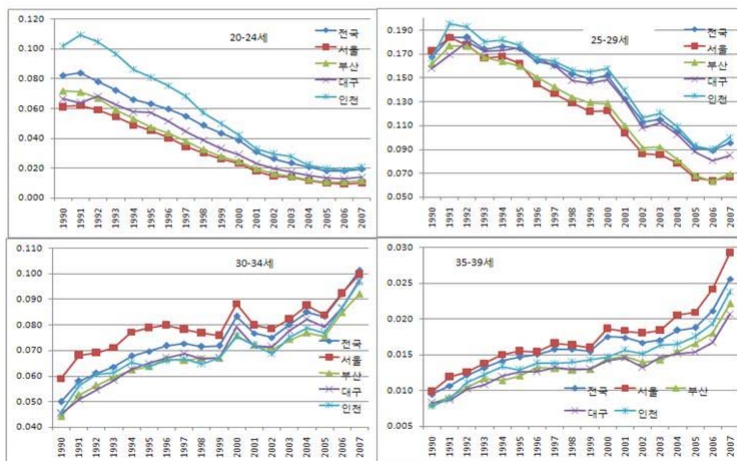


모든 가임여성(15-49세)



주 출산 연령층(2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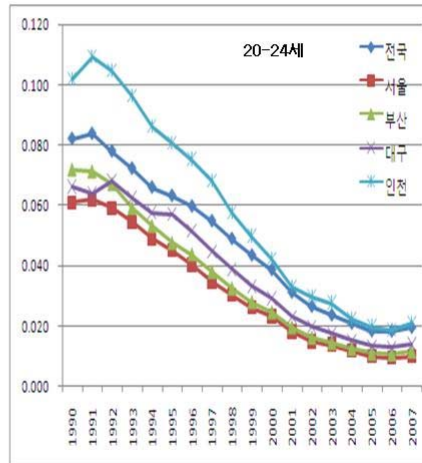
## 주요도시 연령계급별 출산율: 1990-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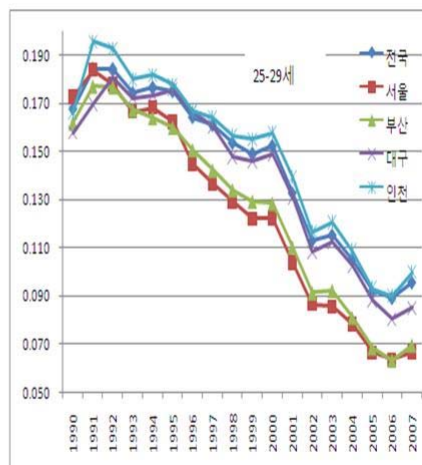
## 20-24세 연령계급의 출산율: 1990-2007

- 20-24세의 출산율은 부산이 1990년대 초반은 서울, 대구보다 높았지만, 대구는 약간 반등하고, 부산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 20-24세 출산율의 경우 부산의 변화유형은 전국 수준이나 서울, 대구 인천과 유사한 편이지만, 인천이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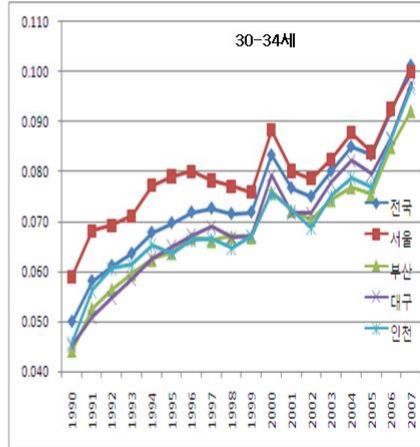
## 25-29세 연령계급의 출산율: 1990-2007

- 25-29세의 출산율은 부산이 1990년대 전반에는 서울보다 약간 낮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는 약간 높았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 인천과 대구의 경우 시기별로 약간 예외가 있으나 전국 수준과 유사한 유형으로 변화하며, 부산이나 서울도 그리 예외라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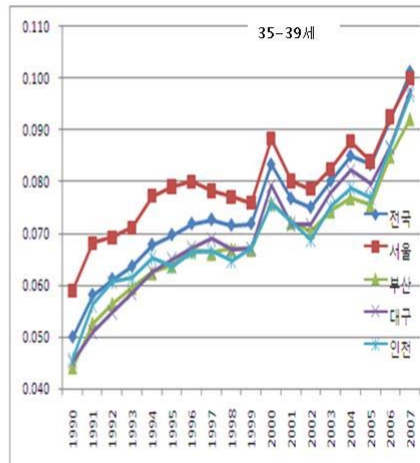
## 30-34세 연령계급의 출산율: 1990-2007

- 30-34세의 출산율은 부산이 2000년 전에는 대구와 함께 경쟁적으로 최저수준이고 서울이 최고수준에 있으며, 최근에 이르면서, 만혼화와 만산화의 경향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부산의 30-34세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변동은 전국은 물론 서울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적 평행이동을 하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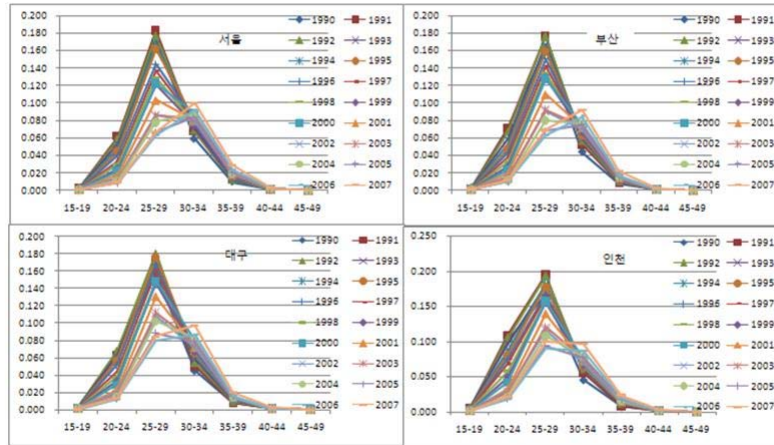


## 35-39세 연령계급의 출산율: 1990-2007

- 35-39세의 출산율은 부산이 2000년 전에는 대구와 함께 경쟁적으로 최저수준이고, 서울이 최고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약간의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부산의 30-34세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변동은 전국은 물론 서울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느낌을 준다



## 주요도시 합계출산율의 변동: 양과 템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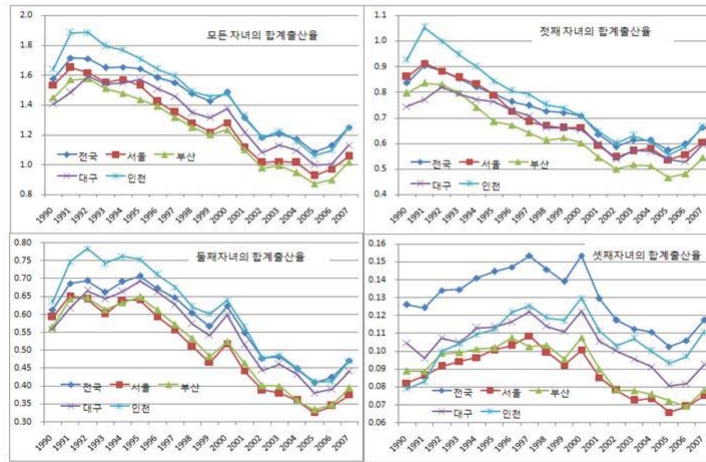
## 조정 합계출산율의 계산

- 조정 합계출산율(ATFR): 출산연령 상승의 효과를 제거한 합계출산율
- $TFR_i$ :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로 이것을 모두 더하면, 종래의 통상적인 합계출산율이 된다
- $m_i$ :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 조정합계출산율은 출산순위별로 평균출산율의 변화를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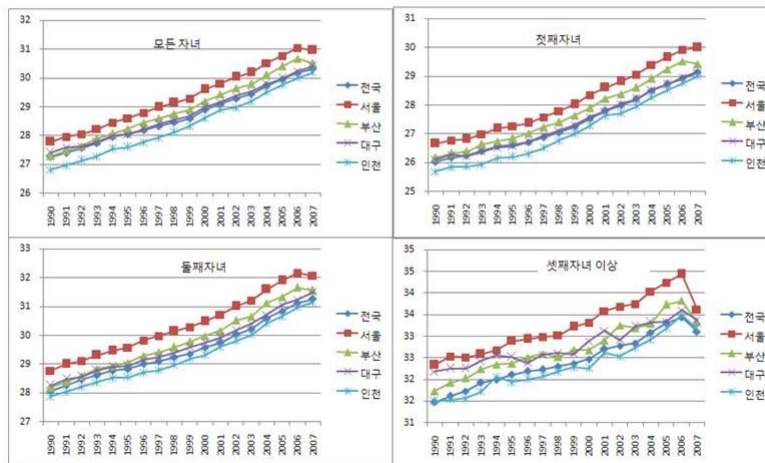
$$ATFR = \sum_{i=1}^l \frac{TFR_i}{1-m_i}$$

$$= \frac{TFR_1}{1-m_1} + \frac{TFR_2}{1-m_2} + \dots + \frac{TFR_l}{1-m_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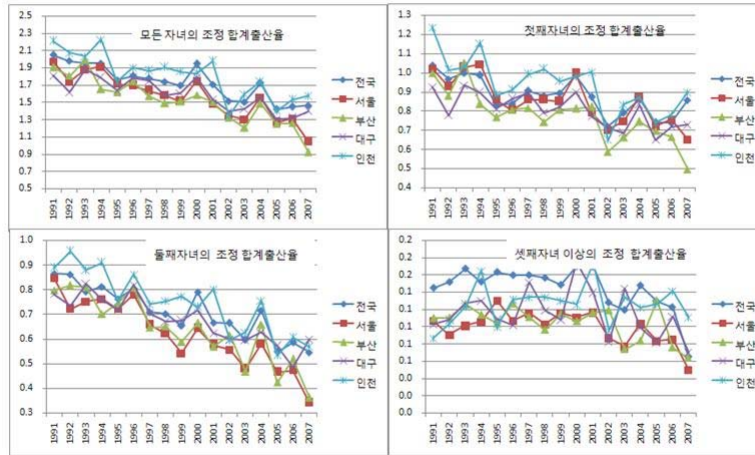
##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2000-2007년



## 출산순위별 출산연령: 1990-2007년



## 주요도시 조정 합계출산율: 1991-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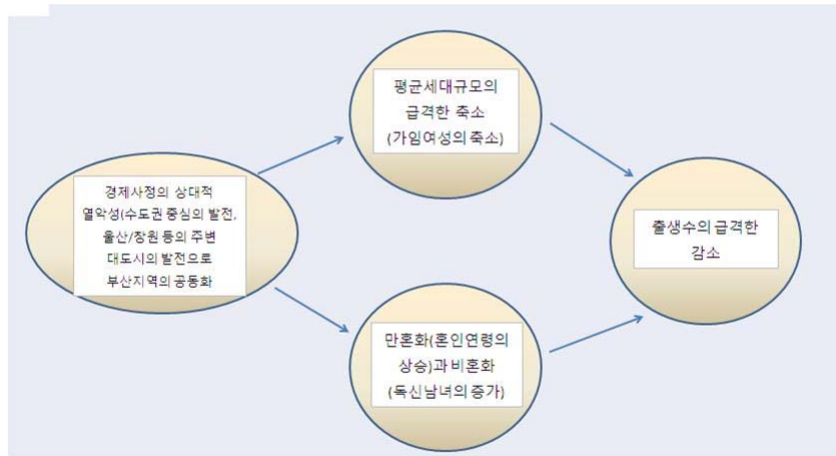


## 부산의 합계출산율의 인구학적 해석

-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템포를 조정한 보정합계출산율(ATFR)이 2.0에 이르렀고, 1990년 중반에 이르러 1.5 수준으로 저하하여, 최근에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영향을 제거한 조정합계출산율 자체가 최저출산력(lowest-low fertility)의 상태인 1.0 이하로 추락하여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음
- 부산의 출산력 위기는 첫째 자녀의 조정 합계출산율이 전국 수준은 물론 서울, 인천, 대구 등보다 낮은 0.665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재확인되며, 이것은 혼인연령 상승(만혼화)에 의한 출산연기는 물론, 독신남녀의 증가(비혼화)에 의한 출산감소와 직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부산시 출생수 감소의 경로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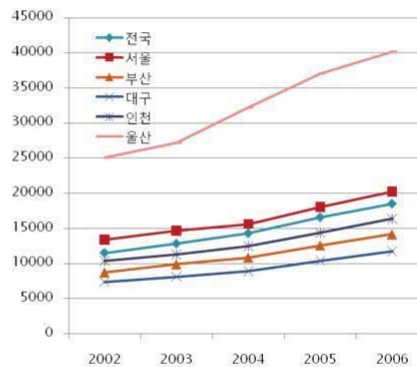
## 부산 지역의 경제 현황

- 경제규모 및 성장: 2006년 명목지역총생산은 48조원(전국 5.6 %)을 차지, 1인당 총생산액은 \$14,200 정도, 실질 시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5% 성장. 건설업(-8.7%), 농림어업(-5.3%) 등은 감소, 제조업(4.5%), 도소매업(4.2%) 등은 증가함
- 산업구조: 서비스업이 6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18.0%), 건설업(9.2%) 순, 서비스업 중 운수업(10.8%→9.9%)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2.9%→13.1%)의 비중은 높아졌음
- 지출증감: 민간소비지출은 주류/담배, 교통비 등의 지출은 감소, 의류/신발, 오락문화,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임대료 및 수도광열 등이 증가하여 2.8% 증가  
 시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주거용 건물과 구축물이 감소하여 9.8% 감소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8.8% 증가

## 수도권 집중과 주요도시의 1인당 지역총생산: 2006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			인구 구성비(%) <sup>1)</sup>		
	2005	2006	증 감	2005	2006	증 감
수도권	47.3	47.7	0.4%p	48.2	48.5	0.3%p
서울	22.6	22.6	0.0%p	20.8	20.7	-0.1%p
인천	4.6	4.7	0.1%p	5.4	5.4	0.0%p
경기	20.1	20.3	0.2%p	22.0	22.4	0.4%p
비수도권	52.7	52.3	-0.4%p	51.8	51.5	-0.3%p

1) 통계청, 시도별 경제인구추계, 200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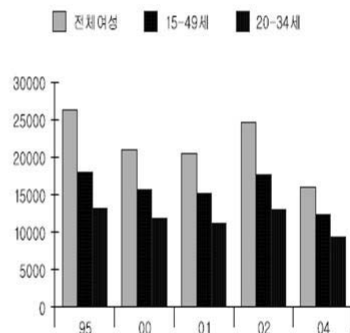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 총생산과 인구

1인당 지역 총생산액(달러)

## 부산의 평균세대규모의 축소와 젊은 여성의 마이너스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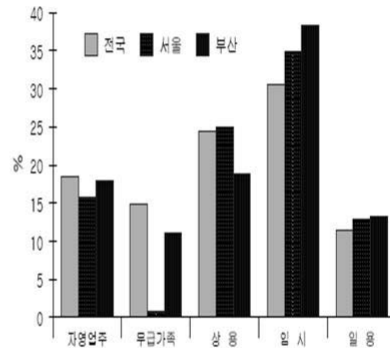
- 2000년대에는 부산시 역외전출 여성 중에서 20-34세의 주재생산연령층이 50-60%에 이르고 있음 (주요도시 중에서,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젊은 여성이 전입하여 평균세대규모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함)
- 주 출산 연령층의 역외전출은 부산 도심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주거지 이동이거나, 산업/직업의 공간 재배치에 따른 직장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부산 여성의 연령별 순이동

## 부산 여성의 혼인력과 고용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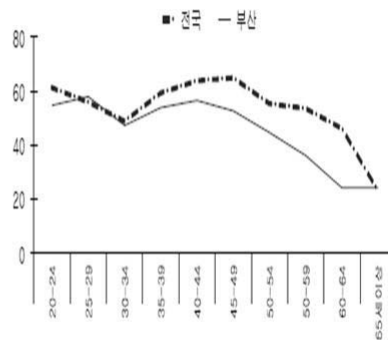
- 2006년 현재, 부산 여성의 고용 형태는 전국수준과 비교할 때, 상용직 비율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아서, 여성 노동의 비정규화(contingent workforce)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여성의 혼인력 특히 만혼화(혼인연령 상승)와 비혼화(독신여성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고용의 불안정성은 구미선진국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제조업의 쇠퇴, 경제의 서비스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음



고용상태의 분포(2006)

## 부산의 저출산과 일/가정의 양립문제

- 부산 여성의 만혼화/비혼화 문제와 함께, 기혼여성의 출산력이 낮은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일/가정의 양립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와 더불어 출산 후 직장복귀나 재취업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 부산시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와 고용의 불안정성은 만혼화, 초산연령의 상승, 출산연기, 출산포기 등의 연쇄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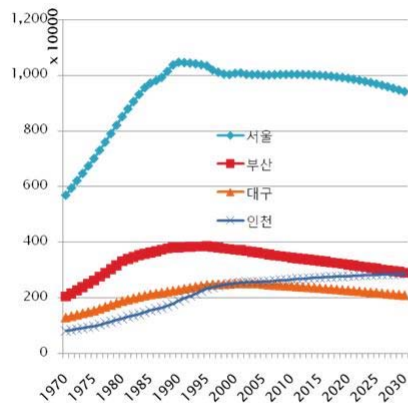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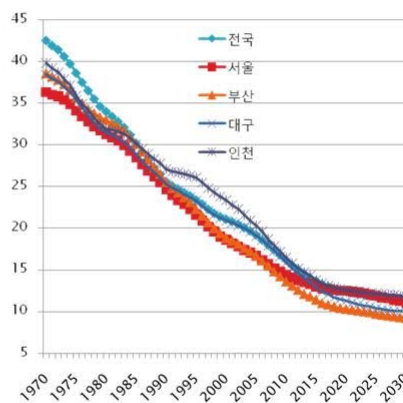
## 부산의 초저출산 원인분석의 시사점

- 부산시의 초저출산은 젊은 인구의 역외전출(평균세대규모의 위축)과 함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부산시가 세계화, 국제화의 전반적 추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성과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는 전국수준이나 여타 대도시보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의 저출산대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응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인구특성의 변화: 197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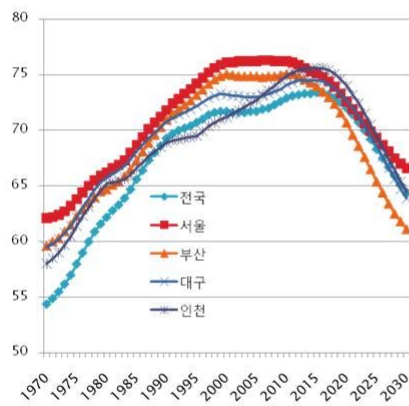


주요도시의 인구:  
197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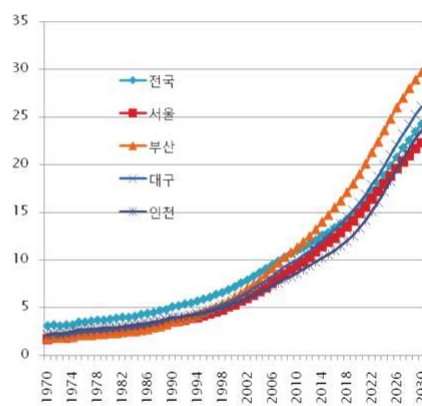


주요도시의 0-14세  
인구구성비

## 주요 인구특성의 변화: 197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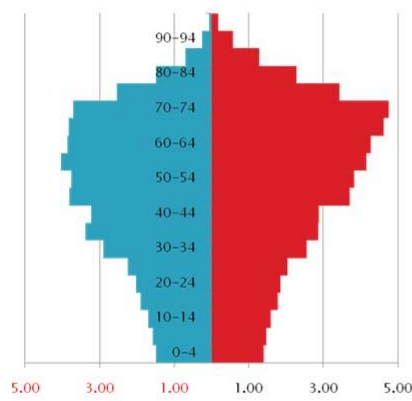


주요도시의 15-64세  
인구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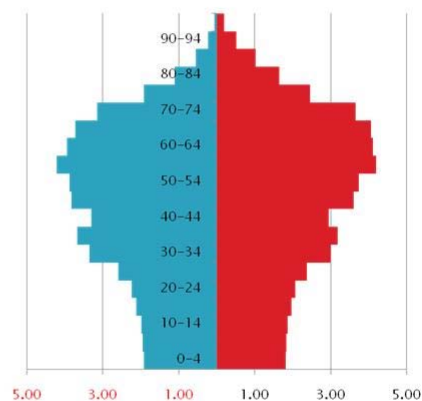


주요도시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

## 부산의 인구피라미드: 2030년



부산(2030)



한국 전체(2030)

## 차세대 육성을 위한 지자체 인구정책의 필요성

-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 평균세대규모의 감소나 미혼화/만혼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차세대육성의 차원에서 경제정책, 주택정책의 정비라는 이름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을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
-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교육, 특히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보완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반적 흐름에 맞는 market-friendly population policy의 필요성을 강조할 시점에 왔음

##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구성요소

직접적 정책	간접적 정책				
	금전적 유인책	보육정책	산전후 휴가	가족친화적 작업장	복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현금 이전</li> <li>• 은행대출시 우대조건</li> <li>•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세금공제</li> <li>• 주택 등 특별지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면에서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관련 휴가/휴직을 규제하는 법제도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렉스 노동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유형에 중립적인 정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 합산 또는 별산 조세제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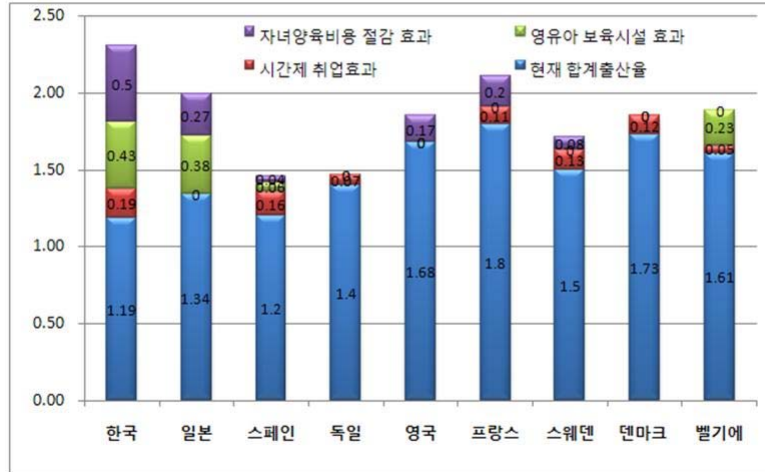
## 출산효과 시뮬레이션의 정책변수

- 자녀양육의 직접비용을 절감하는  
조세나 이전혜택(transfer benefit)
- 여성의 시간제 고용기회의 확충
-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휴가기간의 연장
- 학령 이전 자녀 공보육 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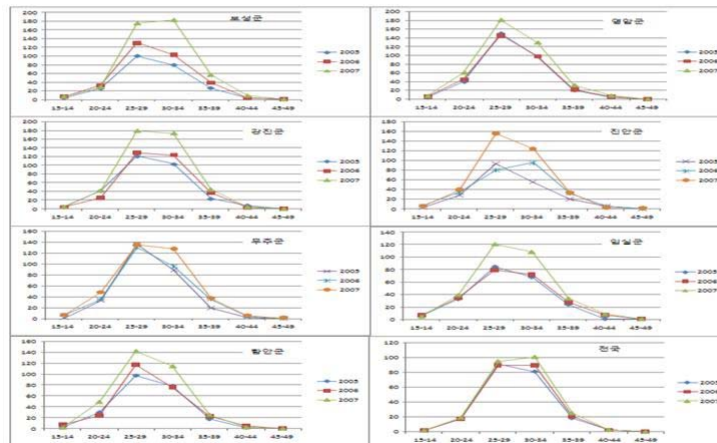
## 정책변수의 조작화

- 자녀양육의 직접비용: 부부가 모두 취업하고, 주 소득자가 평균 생산직 노동자(APW) 소득의 67%를 벌고, 종 소득자가 33%를 벌어들이는 가정의 경우, 무자녀 가정과 2자녀 가정의 가족유지비용을 조정한 이후의 가처분 소득차이가 얼마인가
- 여성의 시간제 취업 기회의 확충: OECD국가 중 시간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 곧 일본, 네덜란드, 영국을 벤치마크한다
- 보육시설의 확충: 공보육 시설 등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덴마크, 스웨덴, 미국을 벤치마크한다

## 정책변수의 출산력 상승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출산장려금 제도와 기초 지자체의 출산율: 2005-2007년



## 기초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례-1

- 출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내용: 첫째 자녀 : 240만원(월 20만원/1년) 둘째 자녀 : 360만원(월 30만원/1년) 셋째 자녀 이상 : 600만원(월 50만원/1년)
-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 내용 : 첫째자녀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자녀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셋째 자녀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 기초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례-2

- 지원대상: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생일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지원기준
- 지원금액: 첫째 자녀 : 50만원(일시금), 둘째 자녀 : 120만원(일시금), 셋째 자녀 : 360만원(3년간 연 120만원씩 분할지급), 넷째 자녀 : 480만원(4년간 연 120만원씩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 600만원(5년간 연 120만원씩 분할지급)
- 지원대상: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신고를 한 자
- 지원금액: 둘째 자녀 : 50만원(함안군 시책사업), 셋째 자녀 이상: 500만원(함안군 시책사업 + 경상남도 시책사업비 20만원 포함)

전남 무주군

경남 함안군

## 베이비 보너스 제도-1

-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한 적이 별로 없다
- 이제라도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 사업을 전국 수준에서 베이비 보너스 제도로 체계화·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 국민의 80~90%가 도시에 살고 있는 오늘날, 농어촌 과소지역(過疎地域)에서는 출산율이 2.0명을 넘는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도 총 출생아 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 그 이유는 가임 여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며, 자녀양육의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고 원정출산 등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지급기간 등을 지역특성과 정부재정을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하는 기초연구도 필요하다

## 베이비 보너스 제도-2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면서 지역마다 지급액이 들쭉날쭉한 현재의 출산장려금 제도만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원, 보육시설 확충, 산모도우미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불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정책 수단들이 있다
- 그렇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강력한 저출산 대책인 아동수당, 즉 '베이비 보너스 제도'를 계속 미루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 베이비 보너스 제도-3

- 일부에서는 제한된 가용 재원을 이유로 저출산 대책의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프랑스의 소중한 경험을 적절히 원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장려정책을 사회체제의 근간으로 만들었고, 1939년에는 가족법을 제정하여 자녀양육비의 직접 지원 등 방대한 재정투입을 실천했다. 그것이 현재 프랑스가 2.0명이라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출산율이 1.19명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면서 '준(準)비상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애국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 현황과 사회적 방안: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sup>1)</sup>

윤경자(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 1. 들어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저출산 확산 흐름에서도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인 1.19명을 기록하고 있다(WHO, 세계보건통계 2009, 한국일보 인용).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체인구율을 상회하는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면서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기가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 힘입어 이제는 대체인구율보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추세라는 점이며 지나치게 높은 출산율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만큼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도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1.19명을 나타내었다(표 4-2-1 참조). 이러한 초저수준의 출산율은 사회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인구의 감소와 미래 세대에게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부담을 과도하게 지게 함으로써 차후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시대별로 나타난 출산표어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의 ‘덜어놓고 낳고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2004년의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으

21) 본 원고는 한국인구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을 토대로 하였음.

로 70~80년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출산장려로 바뀌었고 이제는 ‘출산이 애국이다’로 국가적 우선과제로 바뀌었다. 만혼과 높은 이혼율, 만혼이면서도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세대들의 등장, 동거커플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현상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초저출산은 21세기의 주요 위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저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소수의 특정 정책보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문화적 개선책을 다각도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족친화환경 조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과도한 자녀교육비,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출산율 향상은 어려울 것이다. 즉 가사일과 육아의 주요 책임이 여성들에게 지워져서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과 가사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출산과 직장의 양자택일 문화와 사회구조, 결혼에 대한 달라진 여성들의 인식, 남성 권위중심의 가족문화, 이혼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II. 부산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부산은 광역시·도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아주 낮아서 1990년 1.55명을 기록한 후 이후 2002년 0.96명, 2007년 1.02명으로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도 지속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통계청에서 합계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없으며 1990년부터는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낮은 출산율로서 지속적으로 전국 최저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하여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부산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매우 필요하다.

〈표 4-2-1〉 우리나라 주요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기본항목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출산율(명)	1.57	1.52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출생건수 (명)	691,226	668,344	634,790	614,233	634,501	554,895	492,110	490,543	472,761	435,031	448,153	493,189	466,000
혼인건수 (건)	434,911	388,960	373,500	360,407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조혼인율 (천명당)	9	8	8	8	7	7	6	6	6	7	7	7	7
이혼건수 (건)	79,895	91,160	116,294	117,449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조이혼율 (천명당)	2	2	3	3	3	3	3	3	3	3	3	3	2
출생시 기대 여명	남	70	71	71	72	72	73	73	74	75	75	76	76
	여	78	78	78	79	80	80	80	81	81	82	82	83

자료: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특히 출산율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기혼 및 미혼여성들의 인공유산이다. 인공유산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 여성들이 별다른 제약없이 인공유산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생명존중운동과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도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입양 등을 통하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생건수는 49만여 건이지만 한해 임신중절 건수는 이것의 2배에서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의 출생아수는 2007년보다 약 2만 7천 명 정도 줄었으나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라지는 아기가 더 많은 현상은 방치되고 있다. 인공유산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현황이다.

〈표 4-2-2〉 시·도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국	4.01	2.84	2.14	1.60	1.72	1.51	1.26	1.13	1.16
서울특별시	3.05	2.28	1.77	1.52	1.61	1.29	1.07	0.97	1.0
부산광역시	3.38	2.53	1.92	1.48	1.55	1.26	1.04	0.91	0.94
대구광역시	-	-	1.91	1.43	1.65	1.41	1.16	1.01	1.02
인천광역시	-	-	2.05	1.61	1.89	1.53	1.26	1.10	1.12
광주광역시	-	-	-	1.52	1.89	1.64	1.34	1.14	1.15
대전광역시	-	-	-	1.52	1.82	1.55	1.28	1.14	1.15
울산광역시	-	-	-	-	-	1.68	1.35	1.22	1.21
경기도	3.8	2.85	2.25	1.73	1.89	1.69	1.38	1.22	1.22
강원도	4.46	3.25	2.39	1.62	1.61	1.56	1.36	1.19	1.2
충청북도	4.41	3.2	2.43	1.65	1.74	1.62	1.35	1.22	1.22
충청남도	4.49	3.29	2.45	1.66	1.63	1.69	1.44	1.31	1.32
전라북도	4.96	3.47	2.55	1.64	1.68	1.61	1.35	1.20	1.21
전라남도	4.76	3.61	2.65	1.79	1.72	1.74	1.47	1.32	1.32
경상북도	3.94	2.88	2.46	1.74	1.64	1.56	1.32	1.19	1.19
경상남도	4.1	3.05	2.38	1.66	1.81	1.58	1.35	1.22	1.22
제주도	4.73	3.31	2.49	1.49	1.83	1.74	1.49	1.34	1.36

자료: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4-2-3〉 부산시 여성 합계출산율 추이(가임여성 1명당)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전국	1.19	1.3	1.1	1.13	1.2	1.2	1.17	1.30	1.47	1.42	1.47	1.54
부산	1.02	1.0	0.9	0.91	0.9	1.0	0.96	1.09	1.22	1.20	1.24	1.30

자료: 통계청(2009). 온라인 통계 DB([www.kosis.kr](http://www.kosis.kr)), 행정구역(시·도)합계출산율.

### III. 부산의 최저출산율 요인

#### 1. 부산여성의 혼인 및 만혼 현황

부산의 최저출산율은 부산의 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의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표 4-2-4 참조). 연간 혼인건수는 2008년 2만 149건으로 2000년에 비해서 6,315건이 줄어들었다. 인구 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2000년 6.1건에 비해서 2008년 5.6건으로 줄었으며 2005년도에 5.2건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어서 낮은 출산율을 심화시킨다.

〈표 4-2-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인구천명당 건)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전국	362,673	7.7	334,030	7.0	320,063	6.7	306,573	6.4	304,932	6.3
부산	25,495	6.7	23,343	6.1	21,825	5.8	20,916	5.6	20,027	5.4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전국	308,598	6.4	314,304	6.5	330,634	6.8	343,559	7.0	327,715	6.6
부산	19,898	5.4	18,973	5.2	20,017	5.5	21,484	6.0	20,149	5.6

자료: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부산의 평균초혼연령은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남편 31.48세와 처 28.88세에 이르렀으며 전국 평균초혼연령(남편 31.38세, 처 28.32세)보다도 만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런 추세에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취업율, 결혼관의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 혼인결정에서 당사자 의견 중시와 관련된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초혼연령은 1996년과 비교하여 남자는 2.78세, 여자는 3.08세가 증가하였다.

〈표 4-2-5〉 평균초혼연령

(단위: 세)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전국	남편	31.4	31.1	31.0	30.9	30.5	30.1	29.8	29.6	29.3	29.1	28.9	28.4
	처	28.3	28.1	27.8	27.7	27.5	27.3	27.0	26.8	26.5	26.3	26.1	25.5
부산	남편	31.5	31.2	31.1	30.9	30.6	30.4	30.0	29.7	29.4	29.3	29.1	28.7
	처	28.9	28.6	28.4	28.1	27.9	27.6	27.0	26.7	26.6	26.3	26.1	25.8

자료: 통계청(2009). 2008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2. 부산의 이혼건수

부산의 이혼건수는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총 이혼건수는 만 2,065건으로 1994년도에 비하여 두 배가 되었고,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3.8명으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었다.

그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산의 이혼율은 2008년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높은 가족해체 현상은 2003년 기준 혼인 대비 이혼율의 경우 전국에서 인천광역시와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70.5%)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동거기간에 따른 부산의 이혼율은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상승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03년까지는 결혼 4년 이내의 이혼보다는 5년 이상된 부부들의 이혼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으며 신혼초기인 결혼 4년까지의 이혼율은 2008년까지도 여전히 전체 동거기간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혼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이혼 특징은 가족생활주기 중 빈둥지기에 해당하는 결혼경력 20년 이후의 부부들의 이혼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 참고 살던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에 해당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주기별로 특화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관련 상담과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혼인율도 타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해체 현황을 볼 때 부산에서는 가족체계를 안정시키고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위해 더욱 요구된다.

〈표 4-2-6〉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건)

구분	전국		부산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1994	65,015	1.4	6,084	1.6
1995	8,279	1.5	6,235	1.6
1996	79,895	1.7	6,957	1.8
1997	91,159	2.0	8,211	2.1
1998	116,294	2.5	9,895	2.6
1999	117,449	2.5	9,666	2.5
2000	119,455	2.5	10,129	2.7
2001	134,608	2.8	10,489	2.8
2002	144,910	3.0	12,065	3.2
2003	166,617	3.4	14,120	3.8
2004	138,932	2.9	11,334	3.1
2005	128,035	2.6	9,905	2.7
2006	124,524	2.5	8,953	2.5
2007	124,072	2.5	8,677	2.4
2008	116,535	2.4	7,908	2.2

자료: 통계청(2009). 시·도/인구동태건수.

〈표 4-2-7〉 동거기간별 이혼

(단위: 천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8.9	128.0	124.5	124.1	116.5
0- 4년	36.8	34.5	35.2	38.1	39.1	41.0	35.0	33.1	33.0	33.7	33.1
5- 9년	28.0	26.9	26.7	31.1	33.8	38.6	31.8	28.5	27.3	25.5	21.7
10-14년	22.7	22.3	22.4	25.7	28.2	32.8	26.3	23.6	22.4	21.7	18.3
15-19년	18.2	18.4	18.4	20.0	21.4	24.9	20.5	18.9	18.0	18.3	16.5
20년 이상	10.8	16.0	17.2	20.1	22.8	29.8	25.4	23.9	23.8	25.0	26.9
부산	9.9	9.7	10.1	10.5	12.1	14.1	11.3	9.9	9.0	8.7	7.9
0- 4년	2.8	2.7	2.6	2.8	2.8	3.0	2.6	2.3	2.1	2.0	2.0
5- 9년	2.1	2.1	2.2	2.3	2.6	3.1	2.4	1.8	1.7	1.8	1.4
10-14년	1.9	1.7	1.9	1.9	2.3	2.7	2.1	1.7	1.7	1.5	1.2
15-19년	1.7	1.6	1.7	1.7	2.0	2.2	1.7	1.4	1.4	1.3	1.2
20년 이상	1.5	1.5	1.8	1.9	2.4	3.2	2.5	2.2	2.0	2.0	2.1

자료: 통계청(2009). 2008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다음으로 사유별 이혼을 살펴보면, <표 4-2-8>에서 보듯이 부산 이혼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이며 가족간 불화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부정과 정신적, 육체적 학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2003년에 그 이전

보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혼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침과 방법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용될 경우 이혼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이혼까지 가기 전에 예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혼은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협의이혼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3년 부산의 이혼을 종류별로 보면 협의이혼이 약 4천건, 재판이혼이 약 1천건으로 나타나 이혼이 대부분 협의이혼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판이혼은 1993년 19.6%에서 2003년 13.4%로 감소하였다. 부산의 이혼은 2003년에 1만 4천건으로서 1993년 5.9천건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고 대부분 재판이혼(15%)보다 협의이혼(85%)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이혼은 1993년 19.1%에서 2003년 15.0%로 감소한 반면에 협의이혼은 1993년 75.1%에서 2003년 84.8%로 증가하였다.

〈표 4-2-8〉 사유별 이혼구성

(단위 건)

구 분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상	기타	미상
전 국	2000	9,736	5,210	26,269	12,793	48,157	1,054	15,571	1,192
	2001	11,781	6,309	23,795	15,617	58,069	975	17,121	1,347
	2002	12,560	6,947	20,887	19,727	65,001	924	17,898	1,390
	2003	12,287	7,163	21,735	27,354	75,706	1,025	19,940	1,886
	2004	9,692	5,850	13,958	20,472	68,704	888	16,873	2,495
	2005	9,708	5,706	12,159	19,105	63,028	803	15,448	2,078
	2006	9,434	5,637	11,092	18,277	62,004	953	14,872	2,255
	2007	9,658	5,956	9,982	16,946	58,229	913	18,779	3,609
	2008	9,430	5,882	8,977	16,565	55,649	750	17,278	2,004
부 산	2000	722	489	1,898	1,061	4,711	91	1,143	14
	2001	588	392	2,385	1,252	4,319	108	1,427	18
	2002	816	459	2,481	1,698	4,646	89	1,836	40
	2003	766	528	3,247	2,557	4,493	111	2,294	124
	2004	724	481	1,142	1,712	5,367	95	1,590	223
	2005	722	407	831	1,470	5,037	78	1,205	155
	2006	632	412	738	1,348	4,737	75	885	126
	2007	688	490	643	1,309	3,980	83	1,216	268
	2008	654	421	676	1,359	3,725	73	947	53

자료: 통계청(2009). 2008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표 4-2-9〉 재판종류별 이혼

(단위: 천건)

구분		199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계	59.3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협의이혼	43.9	97.6	98.9	100.2	111.7	121.9	143.6
	재판이혼	11.6	19.1	18.9	19.2	22.6	22.7	22.3
부산	계	5.9	9.9	9.7	10.1	10.5	12.1	14.1
	협의이혼	4.4	8.2	8.0	8.4	8.8	10.1	12.0
	재판이혼	1.1	1.7	1.7	1.7	1.7	1.9	2.1

자료: 통계청(2003). 2003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3. 혼인형태별 혼인 구성

부산여성의 혼인 형태를 보면, <표 4-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혼은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89.3%로서 전국평균율(8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재혼의 경우 대다수가 이혼 후 재혼이라는 점에서 혼합가족에 관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4-2-10〉 처의 혼인종류별 혼인 구성

(단위: 건, %)

구분	2003	2002	2001	2000
전국	304,932	306,573	320,063	334,030
초혼	247,614	253,019	266,382	284,742
재혼	55,791	52,595	52,543	48,324
사별후 재혼	6,055	5,528	5,923	5,514
이혼후 재혼	49,736	47,067	46,620	42,810
미상	1,527	959	1,138	964
부산	20,027	20,916	21,825	23,343
초혼	16,044	16,902	18,053	19,672
재혼	3,937	3,999	3,766	3,668
(재혼율)	(19.7)	(19.1)	(17.3)	(15.7)
사별후 재혼	420	395	426	359
이혼후 재혼	3,517	3,603	3,340	3,309
미상	46	15	6	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총괄, 혼인, 이혼편), 2003.

부산의 혼인형태별 구성을 <표 4-2-11>에서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부부 모두 이혼후 재혼이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었다. 특히 부인이 이혼

후 재혼이며 남편이 초혼인 경우(1,017건)가 부인 초혼 남편 이혼후 재혼(686건)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결혼가치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혼은 남녀 모두에게서 사별후 재혼보다는 이혼후 재혼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부산의 재혼가족 평균 연령을 보면(표 4-2-12 참조), 전국적인 추세와 함께 재혼연령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2008년에 남편 45.4세, 부인은 41.3세로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혼기간이 긴 중년기 결혼의 해체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며, 이혼이 가족생활주기 전체 주기로 확대된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11〉 부산광역시 혼인형태별 혼인구성(2003)

(단위: 건)

구 분	부인의 혼인종류	초혼	재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미상
남편의 혼인종류	20,027	16,044	3,937	420	3,517	46
초혼	16,409	15,292	1,114	97	1,017	3
재혼	3,576	748	2,819	322	2,497	9
사별후 재혼	281	62	217	86	131	2
이혼후 재혼	3,295	686	2,602	236	2,366	7
미상	42	4	4	1	3	34

자료: 통계청(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총괄, 혼인, 이혼편.

#### 4. 부산의 맞벌이 실태

부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주요 광역시도 중에서도 최하위(2008년, 46.9%)를 나타낸다(표 4-2-12 참조). 이것은 부산지역의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 지역 경제상황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같은 양상을 보여 준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부산의 여성들은 타지역 여성들보다 경제활동에 적게 참여하면서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지역 경제상황이 바뀌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효율을 생각할 때에는 보다 쉬운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12〉 시·도 여성경제활동 비율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서울특별시	48.8	49.6	49.7	50.0	51.6	52.0	51.9	51.7	51.0
<b>부산광역시</b>	<b>47.5</b>	<b>47.5</b>	<b>49.0</b>	<b>45.4</b>	<b>46.1</b>	<b>46.9</b>	<b>47.1</b>	<b>47.5</b>	<b>46.9</b>
대구광역시	47.4	48.9	49.9	49.1	50.2	50.8	49.8	48.9	47.4
인천광역시	46.5	47.6	48.5	47.3	48.3	47.1	47.9	48.8	48.4
광주광역시	45.8	47.4	49.4	46.3	47.5	48.5	48.2	48.7	48.0
경기도	47.4	47.5	47.5	46.8	48.5	48.7	49.3	49.2	49.6
충청북도	49.0	48.2	49.2	47.0	48.0	48.4	49.0	48.9	49.2

자료: 통계청(2009). 온라인 통계 DB(<http://www.kosis.kr/>).

〈표 4-2-13〉 평균 재혼 연령

(단위: 세)

구분	전국		부산	
	남편	처	남편	처
1994	39.7	35.0	39.4	35.4
1995	40.4	35.6	40.4	35.8
1996	40.2	35.5	40.6	35.6
1997	40.5	36.0	40.8	36.4
1998	41.6	36.9	42.0	37.7
1999	42.2	37.5	42.2	38.2
2000	42.1	37.5	42.1	38.3
2001	42.1	37.6	42.1	38.6
2002	42.2	37.9	42.2	39.0
2003	42.8	38.3	42.8	39.0
2004	43.8	39.2	44.1	39.8
2005	44.1	39.6	44.8	40.1
2006	44.4	39.7	44.9	40.7
2007	44.8	40.1	45.5	41.3
2008	45.0	40.3	45.4	41.3

자료: 통계청(2009). 시·도/인구동태건수.

## 5.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견해

부산에 사는 여성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 거주 여성들과 비교하여 결혼에 관하여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표 4-2-14 참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부산여성들의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산 남성들도 전국 평균이나 서울에 비하

여 낮았지만 여성들보다는 그 차이가 적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 부산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며, 아이도 가장 적게 낳는 등 출산율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적 지표를 나타낸다.

〈표 4-2-14〉 결혼·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 분		계	결혼			이혼		
			해야 한다 <sup>1)</sup>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sup>2)</sup>	해서는 안된다 <sup>3)</sup>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2002		100.0	69.1	27.2	1.9	58.4	32.9	6.6
2006		100.0	67.7	27.5	2.2	59.9	29.4	6.8
2008		100.0	68.0	27.7	2.9	58.6	31.9	7.1
전국	남자	100.0	74.6	21.9	2.2	63.8	27.8	5.7
	여자	100.0	61.6	33.3	3.6	53.7	35.8	8.3
서울	남자	98.6 <sup>4)</sup>	73.6	22.8	2.2	—	—	—
	여자	98.7 <sup>4)</sup>	62.7	33.3	2.7	—	—	—
부산	남자	98.1 <sup>4)</sup>	73.1	22.1	2.9	—	—	—
	여자	98.1 <sup>4)</sup>	57.9	35.7	4.5	—	—	—
미혼 남자		100.0	64.8	30.0	2.8	48.2	38.4	8.2
미혼 여자		100.0	46.5	46.8	4.0	31.1	50.3	14.1
15~19세		100.0	53.6	39.0	3.4	40.0	42.4	10.6
20~29세		100.0	61.9	33.8	3.0	43.3	43.5	10.0
30~39세		100.0	60.8	34.9	3.2	50.6	40.4	7.1
40~49세		100.0	65.3	30.2	3.4	58.9	32.5	7.1
50~59세		100.0	76.6	20.0	2.5	68.9	23.3	6.2
60세 이상		100.0	84.5	12.0	2.1	81.9	12.9	3.4

주: 1) ‘해야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3) ‘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를 합한 수치임.  
 4) ‘잘 모르겠다’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 6. 가사분담에 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표 4-2-15>에서 보면, 부인이 주도한다는 대답이 부산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산의 남성들과 서울 남성들의 2006년 자료를 보면, 부산의 남성들이 서울보다 확연하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3.5% vs. 68.9%).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항목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표 4-2-15〉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계	부인이 주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2(전국)	100.0	65.9	7.2	58.7	30.7	3.3	2.8	0.5
2002(부산)	100.0	66.7	6.9	59.8	30.2	3.1	2.6	0.5
2006(전국)	100.0	65.4	5.9	59.4	32.4	2.3	1.9	0.3
남자	100.0	71.3	8.0	63.3	26.1	2.6	2.2	0.4
여자	100.0	59.7	3.9	55.8	38.4	1.9	1.6	0.3
2008(전국)	100.0	66.5	6.7	59.8	32.4	1.1	0.9	0.2
남자	100.0	71.8	9.1	62.7	27.0	1.2	1.0	0.2
여자	100.0	61.5	4.5	57.0	37.5	1.0	0.8	0.2
2006(서울)								
남자	100.0	68.9	7.1	61.8	28.4	2.7	2.4	0.3
여자	100.0	55.0	2.9	52.1	42.9	2.1	1.8	0.4
2006(부산)								
남자	100.0	73.5	9.1	64.5	24.1	2.3	1.9	0.4
여자	100.0	64.4	4.1	60.4	34.0	1.6	1.2	0.4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가사분담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면, 부산의 남성과 여성들은 서울지역과 전국의 부부들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표 4-2-16 참조). 즉 가사일은 ‘부인이 주도’하거나 ‘부인이 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서울에 비해 매우 높았다. 부산의 부부들은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이라는 응답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들이 42.7%에 이르러 부산의 여성들이 맞벌이, 육아, 보수적 성역할 태도 및 행동 등 가족내 다양한 불평등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산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편들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본인들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부인의 역할을 수용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부산의 높은 이혼율과 최저출산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그 감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산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

히 보육시설 지원과 가족내 가족구성원(들)의 지원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맞벌이 여성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을 혼자 져야하는 가족문화는 여성의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휴가와 고용문제와 함께 가족구성원과 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산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산지역에서의 가족가치 및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4-2-16〉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

(단위 : %)

구 분	계 <sup>1)</sup>	부인이 주 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 담	남편이 주 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6(전국)								
남편	100.0	89.5	31.9	57.6	7.5	2.9	2.4	0.6
부인	100.0	89.7	36.5	53.2	7.9	2.3	1.9	0.4
2008(전국)								
남편	100.0	89.4	33.4	56.0	8.7	1.9	1.4	0.4
부인	100.0	89.5	35.7	53.8	9.0	1.5	1.2	0.3
2008(서울)								
남편	100.0	86.8	26.0	60.8	11.8	1.4	1.2	0.2
부인	100.0	87.3	28.0	59.3	11.5	1.2	1.0	0.2
2008(부산)								
남편	100.0	90.5	36.6	53.9	7.6	1.8	1.6	0.2
부인	100.0	91.4	37.0	54.4	7.2	1.4	1.0	0.4

주: 1)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만 응답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 7.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전반에 걸친 만족도와 세부적인 영역에서의 만족도는 2006년보다 2008년에는 향상이 되었다(표 4-2-17 참조). 그 중 2008년 배우자와의 만족도를 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부산의 부부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배우자 만족도는 남성들의 배우자 만족도에 비하여 전국평균보다 '만족'영역에서 7% 포인트가 더 낮은 수준이었고 여성들은 불만 수준도 전국평균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산의 부부들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만족하지 못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여성들은 불만족의 수준이 더 높아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이혼율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2-17〉 가족관계 만족도(전국)

(단위 : %)

구분		계	만 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 통	불 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2002	배우자와의 관계	100.0	60.7	34.6	26.1	31.8	7.5	5.2	2.3
	자녀와의 관계	100.0	69.1	39.1	30.0	26.6	4.3	3.6	0.7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61.0	32.7	28.4	34.4	4.6	3.7	0.9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48.7	25.0	23.6	42.6	8.7	6.6	2.1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51.9	24.3	27.6	42.1	6.1	4.4	1.6
2006	가족생활전반	100.0	50.4	22.9	27.4	40.7	8.9	7.2	1.7
	배우자와의 관계	100.0	57.3	29.6	27.7	33.0	9.7	6.8	2.9
	자녀와의 관계	100.0	65.7	33.7	31.9	29.2	5.1	4.3	0.9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57.0	27.3	29.6	37.4	5.6	4.5	1.1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47.6	23.0	24.5	43.5	9.0	6.3	2.7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48.2	21.1	27.1	45.2	6.5	5.2	1.3
2008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39.7	17.2	22.5	50.4	9.9	7.4	2.5
	가족생활전반	100.0	56.1	18.6	37.5	39.8	4.1	3.5	0.6
	배우자와의 관계	남	100.0	70.6	33.8	36.8	25.6	3.8	2.8
		여	100.0	60.8	23.7	37.0	30.3	8.9	6.5
	배우자와의 관계 (부산)	남	100.0	67.1	30.9	36.2	29.5	3.4	2.4
		여	100.0	53.8	20.4	33.4	35.6	10.5	7.9
	자녀와의 관계	100.0	72.7	34.6	38.1	23.8	3.5	3.0	0.6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64.5	26.6	37.9	31.1	4.4	3.6	0.8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52.5	20.2	32.2	39.8	7.8	5.9	1.9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53.0	19.0	34.0	41.3	5.7	4.6	1.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43.8	14.6	29.2	47.4	8.8	7.0	1.8

자료: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 IV. 저출산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부산 여성인구의 현황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전국 최저의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 인구고령화 현상, 여성들의 가장 낮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높은 가사노동 부담과 책임, 불평등한 성인지적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불평등, 성별 결혼만족도 차이,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 저하 등이 총체적으로 어울려서 결혼에 대한 전국 최고의 부정적 생각과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부산의 현황을 통해서 부산의 여성들은 불평등한 성인지적 사회 분위기에서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남편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며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가사노동의 불평등 등으로

생활이 고단하다고 느끼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여성의 개인적 특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미루거나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 등에는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으로 다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남편들만의 기대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으로 서로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 요인들 중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 1.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은 사회체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의미있고 비중있는 변수이며 이혼자의 대다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직업과 같이 하나의 선택이자 대안으로 여겨지는 등 결혼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지기는 했으나 결혼한 사람과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포함)간에는 결혼이라는 변수만으로도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기혼자들은 독신자들보다 장수한다(Lillard and Waite, 1995). 이 차이는 남성들에게서 더욱 뚜렷하였다. 일반적으로 기혼, 사별, 이혼, 결혼경험이 없는 독신의 순으로 수명이 짧았으며 남성들은 그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다. 기혼자들은 또한 음주와 흡연 등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더 잘 관리하며(Elstad, Dahl, & Hofoss, 2006; Umberson, 1992), 주관적 안녕 상태가 높으며(Mastekassa, 1994; Williams, 2003), 정서적 만족감도 높다. 기혼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었고 수입도 높았다(Shek, 1995; Williams, 2003).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한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가 있을 때보다 학업 성취도, 학교 중도탈락, 정서적 안정감, 위기 행동에의 개입, 범죄율, 성행동 관여, 정서적 안정감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가난도 적게 경험하였다(Amato & Keith, 1991; Ermisch & Francesconi, 2001; Imamura et al, 2007; Morrison, & Cherlin, 1995; Sun & Li, 2001; Wojtkiewicz, 1993).



미혼들이 만혼을 피하고 결혼을 중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에서 더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고생길’이라는 등식에서는 결혼기피는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 2.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화 조성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의식이 달라졌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여성들이 가정에 에너지와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사일과 양육, 직장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우리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으며 부산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임이 더 과중하다. 이것이 여성들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한 출산율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이혼율은 높아질 것이다.

성인 남성 중심의 비유통적인 직장문화는 여성들의 직장 진입을 막고 이미 진출한 여성들에게는 직장가정 중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어서 기존 제도권의 여성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가임기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며 끝내 단념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25~35세 사이의 출산적령기 여성들에게 탄력적 근무시간과 full-time work로의 복귀가 가능한 part-time work 등이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다. Part-time work 여성들은 가사일과 양육을 위해 full-time work보다 part-time work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el Boca, 2002).

## 3. 부산의 가족환경 변화

부산시의 시정 방향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천적 전략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부산의 여성들은 전국 평균보다도 행복하지 않다.

가족내 성차별적 문화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임기 여성들은 저

출산 시대에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녀로서 과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양성평등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결혼후 상응하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많은 책임과 양육 및 노인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혼자 맡으려고 하지 않으며 높은 이혼율로 이어질 수 있다. 결혼 전까지 남성들과 대등한 교육을 받으며 높은 성취를 경험한 여성들은 결혼 후 이중부담을 겪게 된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감을 가진 채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동시에 긴 가사노동과 양육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중역할을 경험하면서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광역자치 단체에서도 정책이 기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과 같은 값비싼 제도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을 시상·홍보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민들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을 고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육아수당, 육아휴직 보장과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의 복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도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원 연수 및 교육에 가족가치를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5. 보육시설 확충과 이용 수월성

최근 몇 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부산의 보육시설은 그 수와 질이 과거보다도 향상되었다. 수요자가 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인증제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직장 탁아시설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들에게는 직장퇴근시간과 맞지 않는 보육시설의 이용시간과 영아의 경우 맡길 곳이 적어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사의 질에 대한 신뢰 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도우미 확충,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를 위한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부산광역시 기초단체 구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자들이 홍보부족으로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좋은 서비스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6. 인공유산 방지 방안과 캠페인

인공유산은 적은 혜택과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인공유산을 하는 당시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불임, 자궁유착, 습관적 자연유산, 심리적 스트레스, 윤리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유산이 불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 집계가 되지 않는데, 한해 인공유산으로 인해 태어나지 않는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자료(2008)에서는 기혼여성들의 임신중절률도 20~24세인 경우 59%에 이르며 20~44세는 평균 34%에 달한다. 이것은 1997년 44%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 7. 과도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결혼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과도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보육비, 사교육비 비용이 높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공·사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도 부모들의 자식 뒷바라지가 계속되어 결혼비용과 주택구입비 지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경향닷컴에서 재인용, 2007.11.13)에서 부모들의 27%는 ‘혼인할 때까지’로 대답하였고, ‘취업할 때까지(11.9%)’와 ‘언제(까지)라도(5.5%)’라고 대답한 부모

도 20%에 달했다. ‘대학 졸업때까지(46.3%)’라는 응답한 부모들을 포함하면 부모들의 인생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부모됨의 고비용 구조’하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부모가 되더라도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려고 한다.

## 8. 가족정책의 확고한 시행

대중들의 인식 변화와 병행하여 확고하게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가족정책 부분이다. 다만 가족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부분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확대와 이중과세와 결혼지위에 따른 면세 제외와 같은 불평등 해소
- 비동일 주민등록거주 부모 부양 인정
- 가족수당 확대
- 다자녀 가족 가족수당 지급
- 육아휴직의 철저한 시행과 급여지급을 증대
-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탄력적 근무시간 시행 확대
- 직장탁아시설 설치 확대
- 영아(0-2세)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확대

## V.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전문가들의 관심을 떠나서 일반인들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 수년의 일이다. 가족문제는 오랫동안 ‘가족’의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문제가 가족만의 은밀

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 되어야 한다면 저출산과 같은 문제는 미래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도 사회의 구조와 문화, 신념, 의식 등 심층적 접근과 세부적 방법론적인 전략적 접근을 모두 필요로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육아휴직과 수당 등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등도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대한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구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나은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어도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난다. 잠재적인 사회적 배경처럼 여겨져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을 것같은 문제들이 의외로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학력의 능력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고령화사회에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출산과 가족, 결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 변화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각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잘 활용된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윤경자(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동의논집* 28, pp.721-740.
- 통계청(2000). 2000년 시도별성별연령별 총조사인구.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2003).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혼인, 이혼편).
- 통계청(2004).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통계청(2008).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온라인).
- 통계청(2009). 2008년 사회조사통계.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pp.26-46.
- Del Boca, D.(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rt time oppp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tlity decisions in Italy. *Population Economics*, 15, pp.549-573.
- Elstad, J I., Dahl, E., & Hofoss, D.(2006). Associations between ralative income and mortality in Norway: a register-based stud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 6, pp.640-644.
- Ermisch, J. & Francesconi, M.(200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achievements. *Population Economics*, 14, pp.249-270.
- Imamura, M., Tucker, J., Hannaford, P., da Silva, M. O., Astin, M., Wyness, L., Bloemenkamp, K. , Jahn, A., Karro, H., Olsen, J, & Temmerman, M.(2007).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7, 6, pp.630-636.

- Lillard, L. A. & Waite, L. J.(1995). Til death do partus part: Marital disruption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pp.1131-1156.
- Mastekaasa, A.(1992).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me evidence on selection in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pp.901-911.
- Morrison, D. R. & Cherlin, A. J.(1995). The divorce process and young children's well-being: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3.
- Sun, Y. & Li, Y.(2001). Marital disruption, parental inve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Issues*, 22, pp.27-62.
- Umberson, D.(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behavio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 pp.907-917.
- Williams, K.(2003). Has the future of amarrriage arrived? A contemporary examination of gender,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4, pp.470-487.
- Wojtkiewicz, R. A.(1993). Simplicity and complexity in the effects of parental structure on high school graduation. *Demography*, 30, 4, pp.701-716.

#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추진현황

안삼달(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

## 1. 기본현황

### 1. 부산광역시 출생 및 인구 통계

□ 2008년 출생신고자는 27,664명으로 2007년 출생신고(29,173)에 비해 1,509 (5.2%) 감소함.

〈표 4-3-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구분		'97년	'00년	'05년	'06년	'07년
출생아수	부산	46,067	40,877	25,459	25,673	28,223
	전국	675,227	636,780	438,062	451,514	496,710
합계출산율	부산	1.30	1.22	0.88	0.91	1.02
	전국	1.54	1.47	1.08	1.13	1.26

〈표 4-3-2〉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단위 : 명, %)

순위별	'00	'05	증감률	'06	증감률	'07	증감률
총계	40,877	25,459	△37.7	25,673	0.8	28,223	9.9
첫째아	19,984	13,531	△32.3	13,700	1.2	15,829	15.5
둘째아	17,220	9,705	△43.6	9,876	1.8	10,118	2.5
셋째아 이상	3,519	2,023	△42.5	1,893	△6.4	2,070	9.4
미상*	155	200	29.0	204	2.0	206	1.0

주: 미상은 출생신고시 순위 미상수임.



〈표 4-3-3〉 7대 도시인구 및 출생현황

구분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천명)	49,540	3,565	10,201	2,493	2,693	1,423	1,481	1,112
출생아수(명)	496,710	28,223	100,107	22,169	26,538	14,736	15,705	11,918
합계출산율(명)	1.26	1.02	1.06	1.13	1.25	1.26	1.27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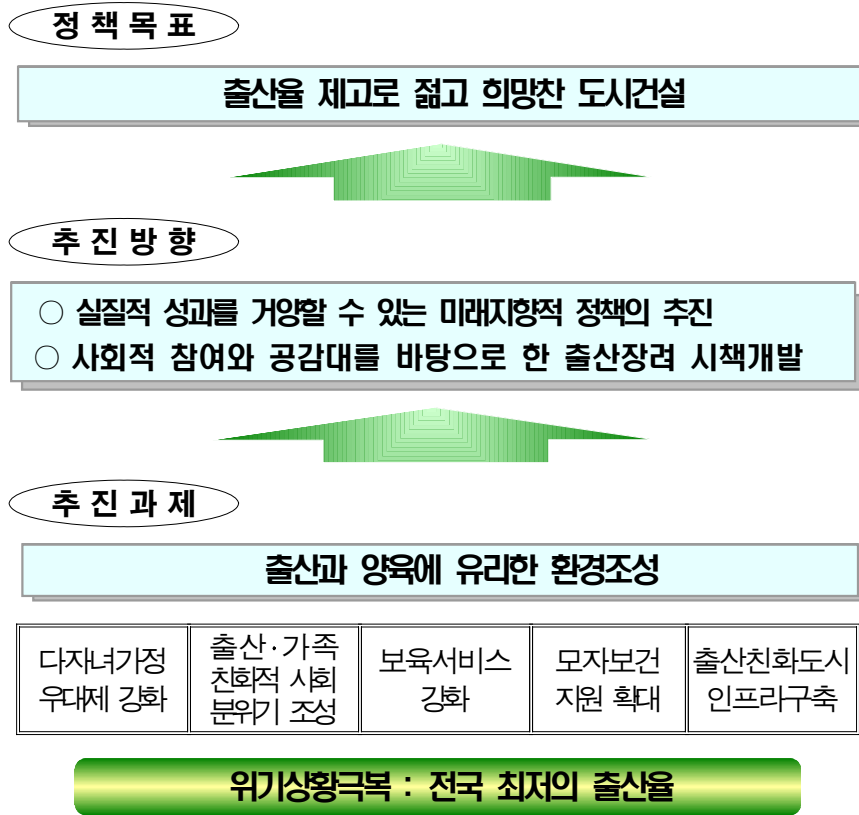
## 2.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

- ☐ 초혼연령 상승,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가정 양립곤란
  - \* 초혼연령 : 전국 28.1세, 부산28.6세(전국2위)
- ☐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부담 증가
- ☐ 주출산 연령인 20~30대 여성 미혼율 증가(전국 43%)
- ☐ 30대 부부의 자녀 한명 출산문화 확산
- ☐ 신혼부부의 인근지역 역외유출 ▷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 작용

## II. 추진 방침 및 과제

- ☐ 정책목표: 출산율 제고로 젊고 희망찬 도시건설
- ☐ 추진방향: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의 추진
  -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출산장려 시책개발
- ☐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① 다자녀가정 우대제 강화
  - ②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③ 보육서비스 강화모자보건
  - ④ 지원 확대출산친화도시 인프라구축

[그림 4-3-1] 부산시 저출산정책 목표 및 과제



### III. 분야별 추진사항

- 출산 장려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 지정 및 전담 조직 신설('06.7월)
  - 출산장려·고령화대응 종합대책 수립('06. 9월)
  -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08. 4월)

## 1. 다자녀가정 우대제 강화

### □ 다자녀가정우대제 가족사랑카드 발급: '06.11.1부터(전국최초)

- 지하철요금 할인 (50%),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50%),차량가격할인, 공영주차장주차요금 감면(50%)등

### □ 다자녀가정우대제 동참 기업(기관) 확대

- '08년 1,400개 → '09년 1,500개 → '10년 1,600개 업체

- ◇ 금융기관 : 출생기념통장 출시,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및 면제
- ◇ 제조·유통 : 의류·유제품·가구 등 물품 구매시 할인
- ◇ 보육·유치원·학원 등 : 입학금, 보육료, 학원비 등 감면·할인
- ◇ 사 진 관 : 가족·웨딩·베이비사진 등 촬영료 할인
- ◇ 서비스업 :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이용시 할인
- ◇ 문화시설·강좌등 : 관람료 면제(할인), 각종강좌 우선선발 및 수강료 면제등

### □ 다자녀가정의 날(11.1) 지정, 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시상

### □ 둘째, 셋째 자녀 출산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가정 1회 20만원 지급('09. 5.1부터 시행)
- 셋째자녀 출산 지원금 지급
- '06년 10만원 → '07년 20만원 → '08년 50만원 → '09년 120만원

## 2. 출산·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시민인식 개선 홍보 교육

- 출산장려 언론 캠페인 전개 : 라디오 방송3사, 지역TV방송, 신문사
- 민방위대원 교육시 출산장려 관련 교육 권고
- 부산시내 대학교 출산장려 슬로건 현수막 설치 및 특강·강좌 개설
  - '09년 2학기부터 시행(특강 1개교, 정규 강좌 1개교)
- 종교시설 출산정책 참여 서한문 발송 : 2,555개 종교시설

□ 출산장려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출산장려 UCC, 슬로건, 캠페인송 등 공모 시상
- 다자녀가정 참여 『출산장려 동산』 만들기 추진(09.3.28)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 (19개 기관·단체, 20명)
  - '07. 11월 출범, 사회협약 채택, 출산장려 캠페인 등 전개
- 출산장려 및 가족가치관 확립 캠페인 전개: 여성, 시민단체 등 30개 주요단체

□ 출산장려 시책 홍보

- 혼인신고 창구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 구·군, 읍·면·동 비치(09년도 40,000부)
- 어린이날 기념 행사, 아이파크 및 롯데자이언츠 홈 스포경기 등
  - 출산장려 동영상 상영, 캠페인 송 등 홍보
- 출산·육아교육전(09.6.4~6.7) 홍보부스 설치 대시민 홍보

□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 '09년 상, 하반기 각 1회, 각 50쌍

□ 『손주愛』운동 전개

- 손주를 돌보는 아름다운 조부모상 정립을 위한 으뜸 조부모를 발굴·표창 육아 문제 해결 분위기 조성

□ 버스, 지하철 등 전광판 활용 출산장려 홍보

### 3. 보육서비스 강화

□ 국공립·공보육 시설 확충 및 공보육 운영 지원

- 시설확충: '06년 114개소 → '08년 136개소 → '09년 156개소
- 민간보육시설 정부지원시설 수준화, 10~20개소
- 예산: 1,000백만원(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지원비)

□ 둘째자녀부터 특별보육료 지원

-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 본인부담금내 월 100천원 지원('09 예산 1,440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06년 45,397명55,977백만원 → '07년 54,177명66,107백만원 → '08년 54,800명88,328백만원

□ 영아 보육시설 전문도우미 배치 및 환경개선

- 도우미 배치 : '07년 22개소 → '08년 44개소 → '09년 66개소

- 환경개선 : '07년 5개소 → '08년 17개소 → '09년 44개소

□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 야간보육시설 확대: '07년 157개소 → '08년 189개소 → '09년 230개소

-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 '07년 11개소 → '08년 15개소

□ 보육지원센터 운영('09. 9월 개원)

- 보육수요자들의 욕구 충족과 새로운 보육 문화 창출

- 예산: 1,400백만원(내부기자재 등 1,200백만원, 운영비 200백만원)

#### 4. 모자보건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08년 2회 300만원 → '09년 3회 450만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만44세 이하 여성 시험관아기 시술자

□ 임신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확대 시행

- 대상 : 최저생계비(4인가족2,532천원)미만 가정 수유부, 0-5세 영유아

- 내용 : 수유부 영양식 재료, 영유아 분유·이유식재료 지원

- '08년 4개 구·군 1,000명 → '09년 16개 구·군 1,815명

□ 산전 산후 프로그램 지원 : 전 임신부에게 철분제 및 산모수첩제공

- 철분제 3,800명→11,000명, 산모수첩 26,800→46,598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 12일간 저소득층 가정 방문 지원

- '06년 423가정169백만원 → '07년 2,020가정1,110백만원 → '08년 2,757가정1,500백만원

## 5. 출산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 ☐ 신혼부부 주택마련 위한 대출자격요건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
  - 시금고 협의 0.5% 인하(부산은행)
- ☐ 임산부, 초등학생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 저상버스 보급,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지하철역사 시설개선, 보도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추진
- ☐ 시 조례·규칙 제정시 다자녀가정 우대 조항 신설('07~)
  - 입장료·사용료 등 부담금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 ☐ 시 직원 3자녀 이상자 인사우대정책 강화 추진
  - 출산력 높은 하위직의 승진, 전보, 전보유예 우대 등
- ☐ 청년층 일자리 창출 추진
  - 공공근로사업확대, 청년인턴십 추진, 청장년실업해소 맞춤훈련 등 청년실업대책 조기추진

## IV. 문제점 및 대책

-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관심도에 따른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수혜에 대한 불평등 인식 우려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연계 해결
    - 예) 다자녀 출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정년 연장, 보육시설 확충 등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시급
  - ⇨ 전국 방송TV, 라디오, 중앙신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출산 유인책 마련

##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극복 관련 민간단체 사업 추진현황

이정숙 (부산시 출산양육후원협의회 공동의장)

### 1. 목적

- ☐ 부산 지역의 民·官이 저출산은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아래 『부산광역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함

### 2.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0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3. 「民·官 협의회」 구성 현황

- ☐ 정식 명칭: 『부산광역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 ☐ 民·官 공동 대표
  - － 民 공동 대표(선출직) :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이정숙)
  - － 官 공동 대표(당연직)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배영길)

□ 참여 민·관 단체: 부산광역시 등 19개 기관·단체

번호	기관 및 단체	번호	기관 및 단체
1	부산광역시	11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2	부산광역시의회	12	부산여성회
3	부산광역시교육청	13	부산여성신문
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4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5	부산상공회의소	15	부산기독교총연합회
6	부산광역시보육시설연합회	16	천주교부산교구 주교좌남천성당
7	부산유치원연합회	17	부산광역시간호사회
8	부산YMCA	18	부산산부인과 의사회
9	부산광역시주례전문인협회	19	부산광역시조산사회
10	한국청년회의소부산지구JC	간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 4. 「民·官 협의회」 추진 경과

□ 민·관 협의회 구성 사전 협의 : 부산광역시←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 기획회의

- 1) 일시 : '07.10.5(금) 15:00~17:00
- 2) 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 8명 / 자문단(TF팀) 실무위원 5명, 협회 3명
- 4) 내 용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부산지역 추진 계획 설명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참가 기관 및 단체 추천 토의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자문단(TF팀) 구성 협의·확정
    - ※ 자문단(TF팀): 부산광역시 등 5개 기관·단체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민·관 공동 대표 선정 토의
    - 官 대표(당연직):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民 대표(선출직): '07년 1차 실무회의시 선출·상정 의결



□ '07년 1차 실무회의

- 1) 일시: '07.11.1(목) 15:00~17:00
- 2)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15명(실무위원 12명, 협회 3명)
- 4) 내용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부산지역 추진 계획 설명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참가 민·관 단체 현황 설명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민·관 공동대표 선정 토의
  - － ‘출산·양육 민·관 협의체 출범식 및 1차 본회의’ 계획(안) 설명·토의

□ 출범식 및 '07년 1차 본회의

- 1) 일시: '07.11.6(화) 16:00~17:15
- 2) 장소: 부산광역시청 행정부시장 회의실(7층)
- 3) 참석자: 30명(실무위원 16명, 부산시 관계자 2명, 새로마지 친선대사 4명, 협회 8명)
- 4) 내용
  - － 출범식
    - (1) 민·관 공동 대표 선출·추대
      - 官 대표(당연직/확정):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民 대표(선출직):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 (2) ‘출범 선언문’ 채택(선포)
    - (3) ‘출범 선언문’ 서명
  - － '07년 1차 본회의: 민·관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07년 2차 실무회의

- 1) 일시: '07.11.29(목) 15:00~17:00
- 2)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16명(실무위원 13명, 협회 3명)

4) 내용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안) 설명
- ‘사회 협약식’ 계획(안) 토의

□ '07년 이행사항 평가회의

- 1) 일시: '07.12.11(목) 14:00~15:30
- 2)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7명(실무위원 5명, 협회 2명)
- 4) 내용
  - '08년 운영 계획(안) 토의
  - '07년 2차 본회의 및 사회 협약식 계획(안) 토의/확정
  - '07년 추진실적 평가

□ '07년 2차 본회의 및 사회 협약식

- 1) 일시: '07.12.26(수) 15:30~16:30
- 2) 장소: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1층)
- 3) 참석자: 79명(위원 15명, 실무위원 5명, 시 관계자 6명, 새로마지 친선대사 34명, 인구교육 전문강사 2명, 협회 17명)
- 4) 내용
  - '07년 2차 본회의
    - 초빙강연(저출산 극복방안)
    - 민·관 단체별 '08년 중점 추진과제 확정·발표
  - 사회 협약식
    - ‘사회 협약문’ 채택(선포)
    - ‘사회 협약문’ 서명

## □ '08년 1차 실무회의

- 1) 일시: '08.3.28(금) 15:30~17:00
- 2)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13명(실무위원 11명, 협회 2명)
- 4) 주요 내용
  - 민·관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08년 1월~3월) 발표/토의
  - 民 공동 대표(선출직) 임기·선출 시기 토의 → '08년 1차 본회의 상정 의결
  - '08년 운영 계획(안) 토의/의결 → '08년 1차 본회의 상정 의결

## □ '08년 1차 본회의

- 1) 일시: '08.6.20(금) 14:00~15:00
- 2) 장소: 부산광역시청 행정부시장 회의실(7층)
- 3) 참석자: 29명(위원 14명, 시 관계자 5명, 협회 10명)
- 4) 주요 내용
  - 추진경과 및 '08년 운영 계획 보고
  - 民 공동대표 임기·선출시기 토의·의결
    - 임기: 「1년」 의결
    - 선출 시기: 하반기 본회의시 익년도 民 공동대표 선출 의결
  - 기관·단체별 '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발표 및 토의

## □ '08년 2차 실무회의

- 1) 일시: '08.10.21(화) 16:00~17:30
- 2)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13명(실무위원 11명, 협회 2명)
- 4) 주요 내용
  - '08년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지원사업 「지역특색사업」 소개
  - '08년 민·관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 및 '09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 발표

- '09년 민·관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발표
- '09년 『민·관 협의회』 운영 계획(안) 토의 → '08년 2차 본회의 상정 의결

□ '08년 이행사항 평가회의

- 1) 일시: '08.10.28(화) 11:00~12:00
- 2)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의실
- 3) 참석자: 7명(자문단 실무위원 4명, 협회 3명)
- 4) 주요 내용
  - '08년 『민·관 협의회』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 검토·토의
    - 우수 기관·단체(1곳) 선정 : 부산여성신문
  - '09년 자문단(TF팀) 역할 및 운영(안) 토의

□ '08년 2차 본회의

- 1) 일시: '08.12.5(금) 14:00~15:30
- 2) 장소: 부산광역시청 행정부시장 회의실(7층)
- 3) 주관: 민·官 공동 대표
- 4) 참석자: 30명(위원 19명, 시 관계자 4명, 협회 7명)
- 5) 주요 내용
  - '08년 1차 본회의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
    - 건의사항: ‘출산시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꽃바구니 또는 축전 선물 제안 등 8개 항목
  - 기관·단체별 '08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 및 '09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 발표·토의
  - '09년 운영 계획(안) 토의·의결
  - '09년 민 공동 대표 선출 및 인사
    - '09년 민 공동 대표 :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회장(이정숙)/승계

□ 공동 사업('07년~'09년)

일 자	장 소	행 사 명	내 용	비 고
'08.4.6(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제2회 두리하나 여성건강마라톤 대회	출산 장려 및 난임극복 캠페인	부산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8.6.5(목)	벡스코	임산·출산·육아 박람회	출산 장려 홍보 및 임산부 건강검진	"
'08.6.22(목)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부산갈매기 사랑 만들기	미혼남여 만남행사 (미혼남여 각 50명)	-주최:부산광역시 -주관: 인구보건복지협회부 산지회 -후원: 출산·양육 민·관 협 의회
'08.8.5(화)	광안리 해수욕장	세계모유수유주간 캠페인	모유수유 캠페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간 호사회, 부산광역시 조산사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8.9.4(화)	해운대 그랜드 호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출산 장려·홍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간 호사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8.10.9(화)	서면 지하철역	‘임산부의 날’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 캠페인	부산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9.4.26(일)	강서구 맥도 생태공원	제3회 두리하나 여성건강마라톤 대회	출산 장려 및 난임극복 캠페인	부산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09.5.5(화)	사직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어린이 날 큰잔치 체험놀이도시교환전	출산 장려 캠페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 육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부 산지회
'08. 6.~10.	인구보건 복지협회 부산지회	초보임산부 출산·양육 멘토·멘티 교실	지원봉사자(멘토)의 임산부(멘티) 1:1 지원 (멘토 50명 멘티 50명)	출산·양육 민·관 협의회
'09.6.21(일) (예정)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09년 상반기 미혼남여 만남행사	미혼남여 만남행사 (미혼남여 각 50명)	-주최: 부산광역시, 인구보 건복지협회 부산지회 -후원: 출산·양육 민·관 협 의회

□ '09년 「민·관 협의회」 추진 현황

- 1) 민·관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추진 / 연중
- 2) 「민·관 협의회」 공동 캠페인 및 공동사업 추진 / 연중
  - 공동 캠페인, 「초보 임산부 출산·양육 멘토·멘티 교실」 운영
- 3) '09년 「민·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연 3회

## 5. 성과 및 평가

『부산광역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는 '07년 출범식 및 사회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정기회 의(본회의 4회, 실무회의 5회, 자문단 회의 2회)를 통해 지역특색사업 공동추진, 직능단체별 사업 추진실적, 단체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건강한 출산·양육환경조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 협의회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8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출산·양육 인식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음.

## 6. 「민·관 협의회」 향후 발전 방향

- 1) 민·관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적극 추진
- 2) 「민·관 협의회」 공동 캠페인 및 공동사업 적극 추진
- 3) 「민·관 협의회」 대내·외 활동의 내실화 및 지속화 추진
- 4) 부산지역 출산·양육 장려의 대표적 협의회 위상 구축

## 7.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직능단체별 세부 사업실적

〈표 4-4-1〉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직능단체별 세부 사업실적

직능단체	'07년 사회협약체결	세부사업목표	'08년 세부사업 실적	'09년도 계획(안)
교육계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건전한 가족 가치관 확립 등 저출산고령화사 회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	- 저출산 고령사 회 대비 학교 교육 및 홍보 강화  - 다자녀 가정(넷 째아 이상) 유 아 교육비 지원	- 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 반영 - 2008학년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시 2007년 개발·보급 된 교수·학습 자료 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시행 및 장학지도도를 통한 단위학교 점검 - 학교별 학부모, 교직원 자율연수 활성화 - '08학년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 직원 및 학부모 연수자료 발 및 보급 ·연수과정 : 3차시 ·자료구성 : PPT, 강사용 유인물, 수강 생용 유인물 - 월간, 주간 홍보물 보급 - 월간 홍보용(8건): 초·중·고 홈페이지 팝업용) - 주간 홍보용(32건): 유치원·초(가정통신문용) - 출산 대응 자체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08년 3/4분기 유아교육비 - 지원 대상 :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세~ 만5세의 넷째 이상 자녀(부모소득 무관) - 지원 지수: 77명 - 1인당 지원액 : ·공립유치원: 월 55천원 이내 ·사립유치원: 월 167천원 이내 - 지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지 원 단가에 의함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 교교육 및 홍보 강화 - 자체 개발 교수·학습자료 및 보건복지 가족부 발간 인구교육 교재 적극 활용 권장 (초등학교 및 중·고 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초등: 학년별 관련 교과, 재량활동 연간 시간 2시간 이상 편성 ·중등 : 재량활동 연간 1시 간 이상 편성·운영 - 단위 학교 학부모·교직원 자율연수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내 용 3시간 이상 편성·운영 -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자 용 월별 홍보 자료 개발·보급 ·저출산·고령화 현황, 현안 사항 및 관련 정책 등 홍보 - 다자녀가정(넷째아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추진 계획에 의한 '09년도 유아 교육비 지속 지원
보건계 (부산광역시 조산사회)	생명존중 및 양성평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 인을 전개	- 산모와 신생아 의 위기 대처 법 교육 - 영유아 응급상 황 대처법 및 아기 마사지 교육 실시 - 새터민 임신부 를 위한 무료 출산 준비 교육 - 모유 수유를 위 한 유방 관리법 등	- 산모 신생아 위기 대처법 교육 - 1월~12월 보건소와 협조, 평균 이들에 한번씩 교육 실시 - '준비된 엄마, 아빠 행복한 아기의 출산 준비교육' - 유휴인력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기간 : 6월~8월 ·장소 : 협회, 산후조리원 개업 조산원 ·교육수료 : 87명 ※ 산모신생아 도우미 심화과정 교육 예정 (11월~12월, 교육인원 : 40명) - 사회 복지시설 '사랑샘' 미혼모 출산 준 비 교육 ·일자 : 매주 월요일(총 37회) ※ 12월까지 지속 시행 ·장소 : 사회 복지시설 '사랑샘' ·대상 : 시설 미혼모(평균 15~20명)	-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 임신부를 위 한 출산 준비교육 실시
경제계 (부산 상공회의소)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 노력	-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내 환경개선 -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인근 보육시설 이 용을 제고	-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 내 환경 개선 추진 중 -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추진 중	-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 내 환경 개선 추진 중 -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 추 진중

〈표 4-4-1〉 계속

직능단체	'07년 사회협약체결	세부사업목표	'08년 세부사업 실적	'09년도 계획(안)
경제계 (부산 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li> <li>- 여성인력 고용 활성화</li> <li>- 여성인력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화</li> <li>- 양성 평등 기업환경 조성</li> </ul>		
보육시설계 (부산시 보육시설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지원 시설에서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전담시설 주관 임신부 및 출 교육 실시</li> <li>- 학부모 및 보육시설 대상으로 적극적 출산 장려 홍보</li> <li>- 학부모 대상 관련 자료 배부 및 보육인 대회 활용</li> <li>- 다자녀 가정 우대제 적극 동참(참여시설 확대)</li> <li>- 영아전담 보육시설 보육도 우미제 도입</li> <li>-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적극참여로 보육수준 향상</li> <li>- 출산장려와 취업모를 위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li> <li>- 수준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원장·교사 직무연수</li> <li>- 종일반 교사 수당 증액</li> <li>- 다자녀 가정 우대제 적극 동참(참여유치원 확대)</li> <li>- 출산 장려를 위한 창작동화 구연대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적극적 참여</li> <li>- 보육수준향상, 환경개선</li> <li>- 보육시설 영아반 보육도우미 파견 활성화</li> <li>- 간호조무사 유휴인력활용 참여 시설확대, 2007년22개소→2008년 44개소 확대</li> <li>- 자녀안심하고 키우기</li> <li>- 성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촛불 기원제</li> <li>- 보육인1000명, 부산시민참여, 우리 아이 지키기 발대식, 서명운동, 리플렛 배부</li> <li>- 다자녀 가정 우대제 적극동참(참여시설 확대)</li> <li>-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및 입학금 할인(30~50%)에 적극 동참 중→ 부산시 150여 유치원</li> <li>- 출산장려와 취업모를 위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li> <li>- 부산시 공·사립 유치원 전체(370개원) 종일제 운영</li> <li>- ※ 시청의 종일반 인건비 보조(월 20만원)가 취업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경감의 효과 있음</li> <li>- 유치원 원장 직무 연수교육 실시('08.4.24)</li> <li>- 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일원화 방안을 위한 연수</li> <li>- 출산 장려를 위한 창작동화 구연대회 개최</li> <li>- 5개 지역 교육청 단위의 창작동화 구연대회 예선 실시 완료('08.5월)</li> <li>- 기타 활동 사항</li> <li>- 어린이날 유치원 체험놀이 한마당 축제 참가 및 어린이 회관 협찬: '08.5.5(사적야구장)</li> <li>- 장난감, 놀이감, 문화·경제 체험 등의 체험활동 및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li> <li>- 스승의 날 유치원 교사 기념행사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08.5.15)</li> <li>- 출산 장려와 취업모를 위한 유치원 종일제 운영으로 질 높은 교육·보육을 결의</li> <li>- 부산광역시「우리아이 자라기」선정 동참('08.5.28)</li> <li>-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및 서명 운동</li> <li>- 유치원 연합회 회장의 단체대표 결의문 낭독</li> <li>- SOS 알림 시연, 유아 캠페인 송 시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생활문화 체험과 올바른 유아보육 인식 개선 사업</li> <li>- 관련 행사 개최</li> <li>- 사업시기(횟수):연중 7회</li> <li>- 예산안: 70,000천원</li> <li>- 행사내용 : 각종 선발대회(보육천사, 어린이 모델 등), 환경대회, 달리기 대회, 만들기 대회, 모래놀이 대회등</li> <li>- 관련 기관, 기업과 '09년 행사 연계 개최</li> <li>- 사업시기:'09년 상시</li> <li>- 예산 : 15,000천원</li> <li>- (캠페인)대상 : 보육시설 관계자, 학부모, 원생, 시민 등</li> <li>- 행사내용 : clean zone, safety zone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li> <li>- 출산장려와 취업모를 위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li> <li>- 수준 높은 교육·보육을 위한 원장·교사 직무연수</li> <li>- 종일반 교사수당 증액</li> <li>- 다자녀 가정 우대제 적극 동참(참여 유치원 확대)</li> <li>- 출산 장려를 위한 창작동화구연대회 개최</li> </ul>



〈표 4-4-1〉 계속

직능단체	'07년 사회협약체결	세부사업목표	'08년 세부사업 실적	'09년도 계획(안)
시민단체 (부산 YM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대상 출산장려 홍보 활동 전개</li> <li>- '아기 스포츠단' 및 '어린이집 부모(대상)</li> <li>- 미혼 남녀 대상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시민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대상 출산장려 홍보활동 전개</li> <li>- '아기 스포츠단' 및 '어린이 집' 학부모 등에게 출산장려 적극 홍보</li> <li>- 미혼 남녀 대상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시민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에 적극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대상 출산장려 홍보 활동 전개</li> <li>- '아기 스포츠단' 및 '어린이집' 학부모(대상)</li> <li>- 미혼 남녀 대상 결혼 및 가족 가치관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시민 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li> </ul>
시민단체 (한국 청년회의소 부산지구 JC)	생명 존중 및 양성평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JCI 부산 아·태 대회를 활용 홍보 강화</li> <li>- 홍보자에 출산·양육 정보 게재 등</li> <li>- 민·관 협의회 추진 내용을 각 로컬(지구)에 홍보</li> <li>- 지구별로 출산 관련 체험수기 공모/시상, 신문지상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JCI 부산 아·태 대회를 활용 홍보 강화</li> <li>- 홍보지에 출산·양육 정보 게재 등</li> <li>- 민·관 협의회 추진내용을 각 로컬(지구)에 지속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협의회 추진 내용을 각 로컬(지구)에 홍보</li> <li>- 지구별로 출산관련 체험수기 공모/시상, 신문지상 홍보</li> </ul>
시민단체 (부산시 주례 전문인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 활용, 자녀 가치관 개선 홍보 활동 전개</li> <li>- 주례인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교육</li> <li>- 주례사중 출산과 자녀에 대한 중요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 정책 홍보 모임</li> <li>·일 자 : '08.2.19(화)/6.24(화)</li> <li>·장 소 : 호림 한정식</li> <li>·주 관 : 부산시 주례전문인 협회</li> <li>·대 상 : 협회 소속 전문 주례인 40명</li> <li>·내 용 :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 활용, 자녀 가치관 개선 홍보 활동 전개</li> <li>- 주례인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교육</li> <li>- 주례사중 출산과 자녀에 대한 중요성 강조</li> </ul>
시민단체 (부산시주례 전문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마지 친선대사 활동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li> <li>- 효율적인 저출산 시책 개발 필요</li> <li>- 초혼 및 출산연령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li> <li>-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우선 정립 필요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마지 친선대사 활동 강화</li> </ul>

〈표 4-4-1〉 계속

기능단체	'07년 사회협약체결	세부사업목표	'08년 세부사업 실적	'09년도 계획(안)
여성계 (부산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심포지엄 개최</li> <li>- 행복한 출산, 넘치는 기쁨! 거리 캠페인</li> <li>- '08년 4월~5월중 대학로 주변, 대학생 대상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심포지엄 개최 →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교육 및 토론회에 출산장려와 더불어 가정을 지키는 방안 등을 내용에 첨부</li> <li>- 「2008부산여성대회(’08.6.12)」초빙강사(주한 호주 대사관 박영숙 보좌관)의 강연 시 ‘부산의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 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심포지엄 개최</li> <li>- 출산·양육 장려 캠페인</li> </ul>
여성계 (부산여성회)	<p>생명 존중 및 양성평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여성 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li> <li>-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li> <li>-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li> <li>- 올바른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 체험 여행</li> <li>- 이주 여성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하는 다문화 가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기간 : '08.6월-8월 2회 워크숍 진행</li> <li>-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육도우미사업 3차년도 보고대회 ·기간 : '05년 11월~'08년 10월</li> <li>- 대상 :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 3년간 총 파견 가구 수 101가구 3년간 총 돌봄 아동 : 153명 3년간 총 파견보육사 : 9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개발 워크숍 → 양성이 평등한 여성정책 개발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li> <li>- 성 리더십 향상 교육 → 올바른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지도자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향상 교육</li> <li>- 올바른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사업 → 평등 가족 실천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 체험 사업</li> <li>- 다문화 가족사업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 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 하는 다양한 사업</li> </ul>
언론계 (부산여성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 기획 보도 및 지속적인 언론 캠페인 전개</li> <li>- '08년 편집방향 : 출산·양육 환경 조성</li> <li>-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자상 좌담회 개최</li> <li>- 다자녀 가정 발굴, 기획 연재 보도</li> <li>- 민·관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활동 소개</li> <li>-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 건강 걷기대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 기획 보도 및 지속적인 언론 캠페인 전개(총42회)</li> <li>- 다자녀 가정 기획기사 연재 : 4회</li> <li>- 부산광역시 출산·보육 추진 정책보도 : 10회</li> <li>- 기업·단체의 출산·양육 추진 현황 보도 : 6회</li> <li>- ‘저출산의 심각성’ 기획기사 보도 : 2회</li> <li>- 출산 장려 공익 캠페인 광고 게재 : 16회</li> <li>- 기타 활동 ·‘자녀출생이벤트’를 위한자녀출생 마라톤대회(’08.5.24)</li> <li>·‘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홍보 활동 전개</li> <li>·제2회 양성평등 사진공모전 개최 10.22(수)~10.26(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 기획 보도 및 지속적인 언론 캠페인 전개</li> <li>- '09년 편집방향 : 출산·양육 환경 조성</li> <li>-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자상 좌담회 개최</li> <li>- 다자녀 가정 발굴, 기획 연재 보도</li> <li>- 민·관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활동 소개</li> </ul>

〈표 4-4-1〉 계속

직능단체	'07년 사회협약체결	세부사업목표	'08년 세부사업 실적	'09년도 계획(안)
언론계 (부산여성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8월(여성 주간 행사)</li> <li>- 제2회 양성평등 사진 공모전 개최</li> </ul>		
종교계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생명 존중 및 양성평등,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li> <li>- '08년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li> <li>- 적극적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실시</li> <li>- 부산시 권사연합회 및 기독교 여성기관 협력</li> <li>- 출산 장려를 위한 세미나 개최</li> <li>- 각 교회 여성교회, 미혼 남녀 청년회조직기관장, 담당목회자 등 초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 홍보</li> <li>- 예배 설교 및 교회 활동 시 출산·양육 적극 홍보</li> <li>- 부활절 연합 대예배(3.23)시 안내 책자에 '저출산,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민·관 협의회 홍보내용 메인 광고란 게재(칼라판)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배부</li> <li>- '부산광역시 출산·양육 장려 시책' 홍보 ·기간 : '08.5월(가정의 달)</li> <li>- 대상 :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교회</li> <li>- 내용 : 부산시 출산·양육 시책 홍보, 예배 설교 및 교회 활동시 '출산'의 중요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활성화 대책 마련 적극 홍보</li> <li>- '0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li> <li>- 적극적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실시</li> <li>- 부산시 권사연합회 및 기독교 여성기관 협력</li> <li>- 출산 장려를 위한 세미나 개최</li> <li>- 각 교회 여성교회, 미혼남녀, 청년회 조직 기관장, 담당 목회자 등 초청</li> </ul>
종교계 (천주교 부산교구주 교좌 남천성당)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 강론 및 교회 활동시 출산·양육의 중요성 강조</li> <li>- 출산·양육 친화적 교회환경 조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 강론 및 교회활동 시 출산·양육의 중요성 강조</li> <li>- 출산·양육 친화적 교회 환경 조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사 강론 및 교회 활동 시 출산·양육의 중요성 강조</li> <li>- 출산·양육 친화적 교회 환경 조성 추진</li> </ul>
의료계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9.4(목)</li> <li>- 모유수유의 중요성 홍보 및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li> <li>-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1천만원 기금조성 ('08.5.16)</li> <li>- 각종 교육 및 회원대상 출산장려 홍보</li> <li>- 홈페이지 및 '부산간호'(발간지)활용, 적극적 홍보</li> <li>- 출산·양육관련 내용 적극 홍보 중</li> <li>- 영유아 지역거점건강센터 발대식(10.7)</li> <l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추진</li> <li>- 지원 : 부산광역시 지원금 후원으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9.4(목)</li> <li>- 모유수유의 중요성 홍보 및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li> <li>-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1천만원 기금조성 ('08.5.16)</li> <li>- 각종 교육 및 회원대상 출산장려 홍보</li> <li>- 홈페이지 및 '부산간호'(발간지)활용, 적극적 홍보</li> <li>- 출산·양육관련 내용 적극 홍보 중</li> <li>- 영유아 지역거점건강센터 발대식(10.7)</li> <l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증진사업 추진</li> <li>- 지원 : 부산광역시 지원금 후원으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li> <li>- 모유수유의 중요성 홍보 및 출산장려 캠페인전개</li> <li>- 각종 교육 및 회원 대상 출산 장려 홍보 활동 강화</li> <li>- 홈페이지 및 '부산간호'(발간지)활용, 적극적 출산 장려 홍보</li> <li>- 영유아 지역거점 건강센터 운영</li> </ul>

〈표 4-4-1〉 계속

직능단체	'07년 사회협약체결	세부사업목표	'08년 세부사업 실적	'09년도 계획(안)
의료계 (부산 산부인과 의사회)	생명 존중 및 양성평등,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 인 전개	- 산부인과 병 (의)원의 지속 적인 출산율 을 높이기 홍 보 활동→ 홍 보물 배부 등 - '08년 출산율 높 이기 부산 시민 감사대회 개최	- 산부인과 병(의)원의 지속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홍보(홍보물 배부 등) 지속 전개 - 기타 활동 ·'지구촌어린이를 위한 지구촌 마라톤대 회' ('08.5.24)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회' 홍보 활동 전개	- 산부인과 병(의)원의 지속 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홍 보 활동
간사단체 (인구보건 복지협회 부산지회)	간사단체 역할 수행	- 건강한 출산· 양육 조성사업 추진	- 미혼남여 만남행사(6.22) ·행사명: 부산갈매기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 ·참석인원 : 100명(남:50명, 여:50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교육 전문 강사' 운영 ·부산지역 인구교육 전문 강사 : 7명 - 모유착용실 설치지원 ·북구 보건소(1.16), 어린이 회관(2.4), 중권선물거래소(5.9) - 저출산 극복 지자체 정책 활성화 '언론 인 간담회' / 9.24(수) ·장 소 : 동래구청 대회의실 - 2008 난임 부부 강연회 / 8.22(금) ·장 소 : 부산시청 대회의실(총 116명) - 임신부 출산교실 : 총 10회(1월~10월/ 월 1회) - 출산장려 자체 홍보 캠페인 : 3회 - 임신부의 날 홍보 캠페인 : 1회 - 제2회 두리 하나 여성건강 마라톤대회 (4.6)/부산시 공동 - 임신·출산·육아 박람회(6.5~6.8)/부산시 공동 - '세계모유수유주간' 캠페인(8.5)/부산시 공동 - 부산시 간호사회 제10회 모유수유아 선 발대회(9.4)/지원 - 음식 박람회(10.23~10.26)/부산시 공동	- 건강한 출산·양육 조성사 업 추진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늘 발표된 논문이 새로운 사실도 많지만, 이미 그 심각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실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과 시민의식이 제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두 가지 원인은 문화적 요인과 현재 정부의 정책이 가임여성에게 매력이 없다는 것임. 고출산 국가(스웨덴, 프랑스)는 양성평등, 육아 인프라, 이민문화, 여성 경제 참여율 높음. 이들 국가에 대해서 가족수당 현물 급여 등 경제적 지원이 제도화 되었음. 반대로 저출산 국가(독일, 스페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가족정책들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임.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도 일본 1.3 내외, 대만도 1.3 내외로, 문화가 다분히 유교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임. 따라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이러한 것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이 바뀌지 않을 것임. 문화의 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함. 여성 경제활동 증가를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노력은 미비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수적임. 결혼 이주자 100만이 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생산된 한국인 2세에 대해 관심 미비함.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이 저출산과 관련된 듯함. 미국의 한 가정은 아이들이 9명이지만, 모든 자녀는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자녀를 서울의 일류대학을 보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음. 한명을 낳아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짐.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의 가부장적 문화를 바꾸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전광희 교수님께서 부산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인 “매력없는 도시”라는

말에 공감함. 가부장적 사회, 일 직장 양립 불가, 여성 고용 저하 등이 해결되어야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 가능함.

-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스웨덴은 30년 전에 이미 저출산을 경험하였으며, 그 때 미르단이라는 학자의 분석결과는 그 원인이 주거였음. 스웨덴은 그 이후 주거 환경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저출산 극복한 사례임. 부산은 부동산이 비싼 이유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요인임. 서구형 임대아파트 등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을 보급한다면 외부로 유출되는 젊은이 막을 수 있음.
-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봄. 부산시의 발표내용 중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하나도 없음. 거의 돈이 안드는 정책뿐임. 그러나 그 원인은 경제 활성화 문제가 주 문제이므로 저출산은 우선 순위가 아님. 따라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감동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음.

#### ○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광희 교수님의 인구학적 분석, 윤경자 교수님의 가치관적 측면의 부산시 특징, 그리고 현장의 정책 실시 현황 등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된 듯 함.
- 부산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임. 부산은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고령화된 사회임. 경제활성화가 급한 문제이고 부산시에서 관련 정책을 실시중이지만(의료관광, 실버산업의 거점 도시 전략),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듦.
- 출산에 직결되는 문제는 두 가지임. 우선 가치관 문제를 들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부산이 특히 강함. 여성의 경제활동 채널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안 되는 원인이기도 함. 현재 부산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아버지는 빠져 있음. 기업들과 연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는 전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부산시는 직장보육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음. 동의대학교도 없음. 대학이 가장 양성평등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것은 일반 기업은 더 심각할 것임. 물론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유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부산시의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경우 0~4세까지의 아이들에 주는 정책은 예산 편성을 잘 하여서 적은 돈이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 좌장

- 너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 지원금은 효과만을 가지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임. 가부장적인 문화가 계속 나오는데, 대구는 더 가부장적이지만 출산력은 높은 수준임. 따라서 다른 요인을 분석해봐야 함.

#### ○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방향만 잘 설정된다면 저출산을 잘 극복할 것으로 보임.
-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은 보육비 증가,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산시는 가부장적 문화 요인이 주로 지적됨. 보수적 인식과 남성위주의 문화가 주요 요인이고 문화지체현상 나타남. 부산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음.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음. 스웨덴, 덴마크 등이 그러함. 반면, 이태리, 일본, 한국은 등은 둘 다 낮음.
- 흥미로운 사실은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율도 높다는 것임.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이혼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만 가짐.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 및 가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임. 일·가정 양립, 가정 중심의 문화 확대가 우선 필요함. 부산시 정책에서도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있지만, 남성의 가사참여 양성 평등 문화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음.
- 서울은 TF를 구성하여 노력중인데, 가정 내 일가정 양립, 남성의 가정 참여를 중요하게 여김. 부산시의 정책은 출산양육이 여성의 전형이라는 전제하에 성역할을

고정시켜놓고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점차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 평등이 이뤄지도록 포커스를 두고 출산양육정책보다는 여성이 아이 낳기 편한 정책으로 바꾸면 좋을 것임.

#### ○ 유계숙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전광희, 유경자, 안삼달 세 분의 발표를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함.
- 합계출산율 1.2를 밑도는 원인을 주출산 연령층이 떠나고, 만혼화, 일·가정 양립 불가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아동수당,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필요하다고 함. 특히, 조사연구의 필요성과 국제회의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려야한다는 것은 인정함.
- 윤경자 교수님 지적과 같이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자녀출산율 최저라는 것에 주목해야함. 부산광역시도 정책 마련 시 거시적 및 미시적(시민의 남성의 성역할 태도, 배우자 만족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차원도 간과해서는 안됨. 향후 시장친화적 인구정책을 수행하고 인구교육을 보완하기보다는 양자모두를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우리사회전체의 경제가치관의 문제임. 초혼, 건강한 가족관계 지속해야 함. 젊은 남성층을 대상으로 미혼 남성, 생애주기별 부부관계 증진 교육, 예비 부부 교육 등이 필요함.
- 프랑스와 같은 아동수당을 원론적으로 동의함.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보편적 아동수당을 주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시키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아동수당 정책 필요함. KDI의 2007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과 필요없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아동수당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떨어지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남.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조건부 수당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보육정책에 대해 지적에 대한 답변하면, 부산시는 보육시설을 10억 들여 150로 확충한다고 하나, 욕구 충족될지 알 수 없음. 보육 욕구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이 이뤄져야 출산율 향상 가능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인증을 통과하면 민관 상관 없이 시설비 지원. 맞벌이 부모의 욕구를 선택적으로 해야함.



□ 발표자 답변

○ 안삼달 (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

- 대부분의 토론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듯함.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출산율이 전국 최저이므로, 출산장려시책은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발표시간 10분 안에 몇 개밖에 나열이 안 되었지만, 이것도 너무 나열되었다고 지적하였음.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효과는 안보일지 모르나 가족과 직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제도 도입하고 있음. 보육정책의 서울형 어린이 집은 좋은 정책이지만, 우리 실정에 반영해야 할지 분석중임.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좌장

- 부산시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저출산 정책 효과를 평가한 시도를 한 적이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안삼달 (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

- 사실상 효과성 평가는 어려웠음.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매우 길어 분석 어려움.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그 쪽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전광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오늘 발표에서 우리나라도 아동수당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한 것은 부산이 두 번째 큰 도시이고 출산율 최하위이며,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을 감안한 내용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그러나 정책들을 다 읽어 봐도 아동수당은 없음. 프랑스는 보수당이나 자유당이나 가족친화 정책이 우선 순위임. 좌파나 우파 모두의 인식에 공유되어 있고 실천해야 함. 모든 정책들이 선택과 집중이 있지만, 우선은 파이를 크게 만들어 국방정책예산 만큼은 되어야겠다는 입장임. 아동수당정책은 유계숙 교수의 토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함.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아동수

당을 도입하였으면 함.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함.

○ 윤경자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 토론자들께서 공통적으로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음. 모든 토론자가 제 주장에 만족해 주셔서 감사함. 이 부분을 정책에 꼭 반영해줬으면 함.

□ 토론장

○ 이광석 (새로마지 홍보대사, 사단법인 주례전문인 협회 회장)

- 모든 만물의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손을 퍼뜨리고 있음. 적어도 자녀 3명을 낳아 존속의 의무를 가지자고 하지만, 대상자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음. 자녀 하나는 낳지 말라고 해도 놓음. 둘째는 한 달에 매달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주면 애 낳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낳으라고 하면 안 낳음. 바로 피부에 닿는 정책을 펴주기를 부탁함.

○ 좌장

- 금전적인 지원책이나 아동수당 얘기를 할 때마다, 근본적인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정부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아동수당을 주기는 쉽지 않음.
- 실제 프랑스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합계출산율이 0.1~0.2 상승한 수준임. 보성군의 경우 보성군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출산하는 사람에게 주지만,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인접지역의 형평성 문제이며, 지자체 선거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역의 상황이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배명조 (한자녀 더갓기 운동연합부산지역본부장)

- 토론자에 감사함. 유아교육을 전공, 현장에서 30여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중. 정부에서 돈 한푼 받지 못함. 현장교사 50명 채용중이지만, 보육시설을 150

개 확충하려는 부산의 정책은 양질의 보육시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문영화 (영화 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은 0~초등학교까지 맡고 있음. 부모님들에게 더 낫다고 하면, 저소득아  
이들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가정은 아무  
혜택이 없음. 수급자는 경제활동을 하면 혜택이 줄어들까봐 활동 안하고, 경제활  
동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대신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함. 따라서 0세부터 무  
상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젊은 층이 신바람에게 일하고 믿고 아  
이 맡기는 환경이 되었으면 함.

○ 안삼달 (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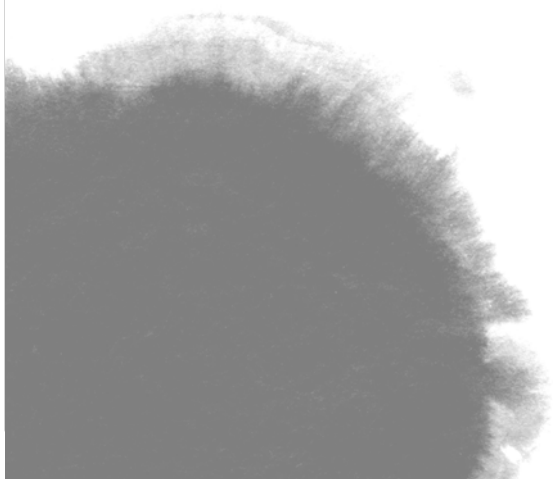
- 138개에서 150개로 확충되므로 20개 확충됨. 영유아 보육료는 자녀들을 맡기는  
학부모를 위해서 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므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소득연령별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고 지원폭은 늘려가는 중임.



# 03

K  
I  
H  
A  
S  
A

## 제5차 저출산대책포럼





## 제5차 저출산대책포럼

### 프로그램

#### 주제발표

좌 장: 안계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1: 저출산환경에서의 결혼전/임신전 상담/검진의 중요성

박문일 (한양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발표 2: 저출산시대의 임신전 관리와 태아건강

김영주 (이화여대 산부인과 교수)

발표 3: 최근 일본의 저출산대책과 시사점: 2008~2009년 주요 추진 정책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특성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양재혁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경혜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선희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36	2000년도에 작성된 표지에 대한 검토결과 표기
-----	----------------------------



## 저출산환경에서의 결혼전/임신전 상담/검진의 중요성

박문일 (한양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 1. 서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출생아 숫자가 약 2만 7,000여명 줄어들고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감소하였다. ‘쌍춘년’이었던 재작년과 ‘황금돼지해’였던 작년에 반짝 증가했던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아기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로 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출생시에 체중이 적은 저체중아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과 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복합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육아문제, 교육비 문제 등은 사실 단시간 내에 어쩔수 없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체중아 증가현상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숫자도 줄어드는 판에 인구의 질까지 나빠진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출생시의 신생아 체중은 임신 전 및 임신중의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령임신과 쌍둥이 임신시에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조산의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임신전 상담 및 검진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임신중은 물론 임신전 일반적 관리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이 없다.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평균결혼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고령임신이 늘어나고, 이

에 따른 임신 및 출산중 합병증 증가와 신생아 이환율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장기적으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혼전/임신전 상담 및 검진에 대하여 요약해 보기로 한다.

## II. 본론

### 1.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저체중아가 더욱 문제이다

저체중아는 의학적으로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경우이다. 그 빈도가 전체 출생아의 4.9%로서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작년보다 0.2%가 증가한 수치이며 2000년도의 3.8%와 비교하면 1.1%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으로는 출생아의 평균체중도 남아 및 여아 모두 작년보다 0.01kg이 감소하였다. 저체중아는 출생시 호흡이나 소화기능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 발육이 더디며 신생아 시기에 각종 질환이환율이나 사망율도 높다. 또한 성인에서의 대사증후군, 즉 당뇨병,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2~6배 이상 높아진다. 기타 비만 등의 성인병과의 관련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저체중아로 태어난 사실만으로도 평생 동안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체중아의 원인은 쌍둥이출산이 다소 증가한 탓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출산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탓이다. 작년도 평균출산연령은 30.8세인데 이는 10년 전의 28.5세보다 무려 2.3세가 늦어진 것이다. 전체 출산여성중 WHO에서 의학적으로 고령임신으로 분류하는 35세 이상 임신부가 14.3%로서 이 수치는 작년(13.1%)보다는 1.2%, 10년전(5.9%) 보다는 무려 8.4%가 늘어난 수치이다. 고연령 임신 자체가 저체중아의 원인이 되는 터에, 고연령 임신부들은 아기를 만삭 전에 분만하게 되는 조산율도 높아져 저체중아들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최근의 사회 풍조중에 임신중에도 날씬함을 유지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물론 임신전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 2. 산전검진과 임신前검진의 개념 정립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산전검진(antenatal care)과 임신전검진(pre-conception care)을 혼돈하고 있다. 산전검진은 일반적으로 임신중 검진을 뜻한다. 임신전검진은 물론 임신되기 전의 건강관리이다. 이 두가지 개념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는 계획임신이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 되어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임신間검진(inter-conception care)도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부류이다. 한가지는 결혼후 임신을 하여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년간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클리닉을 찾는 경우이다. 외국과 같이 임신전 방문, 나아가서 결혼전 방문이란 참으로 보기 드물다. 이런 여성들을 부단히 교육하여 임신전 및 결혼전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임신전 부부검진의 필요성

임신을 계획중이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임신부 자신의 몸 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의 준비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도 세세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임신 전 병원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병원을 규칙적으로 다니는 것과, 임신 전 방문은 분명히 다르다. 임신을 계획중인 것을 의사가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이 다른 것이다. 즉 의료진은 수태환경에서 평상시에는 문제없었던 부부의 건강상태에서 어떤 의미있는 의학적 사실들을 잡아낼 수 있다. 부부가 건강한 상태라고 해도 임신 전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의사는 자연임신을 위하여, 또는 임신중 특별히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부부가 미처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산부인과는 여자만 가는 곳이 아니다. 남편도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한다.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건강검진을 받듯이 부부가 임신전에 임신이 가능한지, 임신을 위한 부부의 몸의 상태는 어떠한지, 미리 치료할 부분들은 없는지 등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지극히도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며 또 필수적인 일이다. 남편들이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것은 산부인과가 여성들만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남편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그렇기 때문일 뿐이다. 아내의 손을 잡고 사이좋게 웃으며 임신전부터 부부가 같이 산부인과를 들어서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남편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기가 꺼리럽다면 종합병원이나 종합검진센터등에 설치되어있는 예비부부클리닉, 혼전클리닉 등을 방문하여 상담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역시 부부가 동시에 상담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부부에게서 어떤 위험요인이 진단되었다면 해당되는 각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개별상담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4. 계획임신의 필요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보고된 ‘계획임신율과 계획임신에 미치는 관련 요인 분석’(문명진 등, 2003)에 의하면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계획임신율은 전체 응답자 1,352명 중 657명, 즉 51.4%로 나타났다. 임신하는 부부중에서 겨우 절반정도만이 계획임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후 부부가 된 두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임신계획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건강한 아기의 임신을 원한다면 모든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임신을 기획하여야 한다. 부부의 평생 삶의 계획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본인들의 건강은 물론, 임신중의 임신부 건강, 장차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위의 논문결과에 의하면 계획임신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둘을 비교한 결과, 계획하지 않은 임신부에서 계획임산부에 비하여 임신 초기에 기형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았는데, 특히 알코올, 방사선, 약물에 대한 노출이 유의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계획 임신은 임신 초기 위험 요인 노출에 따르는 불필요한 임신 중절을 예방하고, 태아기형 유발 물질에 따른 기형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젊은 여성들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특히 임신 초기에 위험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 임신전에 검사를 하고 그에 따

른 간단한 조치만 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한 채 아기를 가지게 되고, 결국 자신은 물론 아기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러한 풍토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부는 필히 자연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병원에 확실한 검사를 받고 임신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한다.

예상치 않은 임신초기에 본인도 모르게 복용한 감기약, 건강검진목적으로 촬영한 X-ray 검사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생각한다. 위험요인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더구나 전문가와의 상의도 없이 대부분의 여성은 혼자서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면 임신중 약물복용으로 중절수술을 한 경우는 전체의 12.6%로 집계되었다. 이때의 중절수술은 본인들이 원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그것은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임신중절후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염, 출혈, 자궁외임신은 물론 심하면 불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역시 저출산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무계획한 임신은 임신부에게 우울증을 가져오며, 태아에게도 여러 가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부부사이에서도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 일수이며, 물론 주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결국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울증은 임신기간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출산 후 우울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태아의 영양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또한 뇌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 또한 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신생아의 양육에 문제를 미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정서적 장애 및 성격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크게 된다.

## 5. 임신계획은 결혼 전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

결혼전 상담/검진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라는 병의원의 진료과목이 마치 ‘어린 여학생들이나 미혼여성이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낙인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산부인과>라는 진료과목을 일본처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려 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상 쉽지가 않다. 진료과목이 바뀌지 않더라도 부디 우리나라에서 여학생, 미혼여성 등 모든 여성이 스스로 병의원을 찾아올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결혼전의 상담과 검진이 안 되었다면 결혼후의 <임신전 상담/검진>이라도 꼭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예비 임신부 부부의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예비 임신 부부의 건강 평가를 위한 기본 검사항목은 임신부가 초기에 해야하는 검사항목과 비슷하다. 의사와의 상담만으로도 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 본인의 영양상태는 물론, 각종 질병의 유무는 물론, 평상시의 생활 습관, 직장 및 가정의 환경 등에 대하여 조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서는 임신과 관련된 과거병력을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임신과 관련된 위험한 인자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그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6. 계획임신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계획임신의 장점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1) 부부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해 볼 기회가 된다.

결혼 후에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 그러나 임신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가장 건강한 정자와 가장 건강한 난자를 만나게 해주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의 건강을 최고조로 이끌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계획임신은 우선 부부의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된다.

### 2) 아내의 심신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무작정 임신하는 경우보다 가장 큰 장점이 임신부의 심신안정이다. 계획임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전에 직장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다. 가정주부라면 집안의 선후 처리계획을 세우고, 임신에 대비한 심리적 안정에 도움된다. 또한 여성들 자신의 임신에 해로운 습관 등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장차의 임신에 큰 도움이 된다. 임신중 태교를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3) 남편이 확실하게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계획임신은 부부공동의 노력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서 부부가 함께 계획하여 임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두사람의 직장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해로운 환경들, 예를 들면 임신부에 알맞는 가정내 환경 조정같은 것에 남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남편이 만약 흡연자였다면 임신계획 전부터 금연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음주도 마찬가지이다.

### 4) 원하는 시기에 임신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신을 계획하면 임신의 시도에 더욱 정성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태율도 높아진다. 만약 계획된 시기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임을 미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게 되므로 이것도 역시 장점이 된다.

### 5) 무계획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태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약물에 주의하게 되고, 나쁜 환경을 멀리하게 되며, 임신에 해로운 부부의 나쁜 습관들이 미연에 방지됨으로서 건강한 태아의 임신 및 출산에 기여하게 된다. 엽산 등의 임신에 필수적인 영양제를 부부가 임신전부터 미리 복용함으로써 기형아 출산을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태어나는 출생아의 저체중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 6) 임신과 관련된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장차 부부가 이끌고 나가야 할 가정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임신여부는 가정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축, 대출 등은 물론 주택마련 등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

## 7. 결혼전 상담/검진이 필요한 이유

결혼전 상담이 결혼후의 임신전 상담보다 중요한 이유는, 특히 성경험이 없는 미

혼여성들은 임신등의 산부인과 기본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기혼 여성들과 달리 성생활, 수태 및 자연적 임신의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을 하면 아직도 약 반수가 무계획임신을 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임신을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결혼전 상담은 임신전 상담보다 중요하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약 3개월 전에는 적어도 한번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다면 6개월전에 방문하는 것이 더욱 좋다. 예방주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지식에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서상 성교육이 부실하다. 유교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위해서 부부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성지식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결혼 전에 성생활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미리 상담을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준비해야한다.

결혼전 상담을 소홀히 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혼후에야 처음으로 산부인과 진료실을 찾는 여성들의 많은 고민 중에는 성생활문제, 습관성유산 문제들이 많지만 의외로 많은 것이 골반염이다. 즉, 결혼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산부인과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한 미혼여성들은 안타깝게도 해당시기에 특정 산부인과 질환이 발생할 경우 질환이 악화되어서만이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골반염이 것이다. 골반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난관감염이 되어 불임이 된다는 사실을 미혼여성들은 꼭 알아야 한다. 불임뿐만 아니라 난관이 좁아져서 난관임신, 즉 자궁외임신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도 다반사로 있는 일이다. 저출산국에서 불임여성의 증가는 또다른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서의 불임을 막을 목적으로도 결혼전, 임신전 상담 및 검진은 꼭 필요한 것이다.

## 8. ‘결혼면허증’ 제도 또는 ‘결혼서비스’ 제도를 제안함

결혼전 검사를 부부의 의무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중국만 하더라도 얼마 전 까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전 부부의 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강



제적인 의무로 되어있었다. 비록 최근에는 자율적으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한  
 아기만 가지자는 운동이 퍼지면서 국민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이렇게 강제조항까지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강제적 의무는 중국의 자율화 물결에 의하여 2003년도  
 10월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전 신체검사가 폐지된 이후 중국의 헤이룽장  
 (黑龍江)성에서는 “혼전 신체검사를 자율화한 후 신체검사를 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  
 으며 기형아 출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2005년도에 결혼전 신체검사를 다시 부활시켰다. 2005년 6월 24일에 공포된 ‘헤이  
 룡장 성 모자보건 조례’에 따르면 예비 신랑 신부는 혼전 신체검사와 건강교육을 의  
 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증명서가 있어야만 결혼등기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신체검사증명서는 결혼등기 기관에 보존된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결혼면허증’ 제도 또는 ‘결혼서비  
 스’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결혼전 부부의 건강검진을 중국처  
 럼 의무화 하고, 결혼전 상담과 교육을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산부인과, 보건소등을  
 통하여 받게 하고 병의원에서는 검진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결혼에 대한 의무를 알  
 게 한 후에 결혼면허증을 발급하자는 것이다. 강제적인 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  
 민모두에게 결혼전 건강과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것이다. 사실 운  
 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의사와 약사는 각각 의사면허증과 약사면허  
 증이 있다.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거나, 의사면허증 없이 환자를 돌본다면 어떻  
 게 될까. 전문적이고도 중요한 일에는 이렇게 공인된 면허증이 있어야 해당 업무를  
 할 자격이 생긴다. 면허증이라는 것은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즉 사고를 내  
 지말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발행되는 것이  
 다. 결혼처럼 일생에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꼭 결혼면허증이 아니더라도 이러  
 한 사항들이 공론화 되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결혼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제부터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건강과 행  
 복을 가져다 줄 ‘책임’이 이제 막 결혼하는 부부에게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등장하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responsibility인데 그 어원  
 은 ‘대답한다(response)’이다. 즉 부부의 사랑이란 서로 응답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결혼면허증은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차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부부가 될 사람들은 결혼에 대하여 그 책임감을 깊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두 사람이 만나 적어도 두사람을 다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도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 9. 임신전 상담/검진, 어떻게 하나?

임신전 상담은 임신전 검진의 기본이 된다. 임신 전 관리란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위해서 임신 전에 기본적인 상담과 진찰을 시행한 후, 해당 검사를 시행하고 특정 기왕력에 대한 상담 및 관리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을 계획하는 것은 부부는 물론 태아 모두에게 유익하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수정 후 몇 주가 지난 다음에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초기 기간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건강과 영양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 전 관리를 통하여 임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임신 전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예기치 못한 임신의 감소 효과, 내과적인 만성질환에 의한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성 감소 등이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간질 환자의 약물 중 태아 기형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의 최소화, 당뇨와 간질환자에서 엽산을 충분히 보충함으로써 신경관결손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을 조절하거나 임신 전 관리를 통해 선천성 대사이상, 신경관 결손증 등의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III. 결론

저출산시대의 모성관리는 첫째, 결혼 전 상담으로 가족의 중요성 및 가치, 적절한 피임기간등의 교육이 필요하며,

둘째, 임신 전 상담으로 임신전 건강한 몸 만들기, 유산후 임신, 출산 후 임신, 적

절한 터울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셋째, 부부에게 결혼전 및 임신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출산시대에서 <가족의 중요성> 및 <태어나는 아기들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提尙)하여 출산율과 출산아들의 건강의 질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시대의 모자보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문명진 등(2003). 계획임신율과 계획임신에 미치는 관련 요인 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지, Vol 46, No.9.

## 저출산시대의 임신 전 관리와 태아건강 -영양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 요약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임신 전부터 가임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출생할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저출산과 아울러 고령 산모의 증가가 매우 심각하며 이러한 고령 산모의 여러 가지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임신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태아시기의 건강이 성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태아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저출산시대에 임신 전 가임여성에 대한 영양학적 관리가 앞으로 태어날 귀중한 태아의 건강과 더 나아가 성인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인 것이다.

###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이며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18년이 소요되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 72만명/년으로 1.65였으나 2000년 1.47, 2002년 1.17, 2005년 1.08, 2007년 1.26 그리고 2008년에는 1.2도 채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별 평균 초혼 연령도

2000년의 남자 29.3세, 여자 26.5세에서, 2002년에는 남자 29.8세, 여자 27세, 그리고 2005년에는 남자 20.0세, 여자 27.7세로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임신여성의 연령에서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의 빈도가 2000년에는 5.4%였으나 2002년에는 7.0%, 2005년에는 9.4%로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40세 이상의 고령임신의 빈도도 2000년에 0.9%에 지나지 않던 빈도가 2005년에는 1.3%로 매우 증가하였다.

고령임신은 보통 임신부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임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피임법의 사용,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의 발달, 늘어나는 만혼,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

임신 전 관리는 수태 전(preconceptional) 또는 출생 전(prenatal)관리를 의미하며 그 목표는 임신에서 좋은 결과를 보장받기 위함이고 그 외에도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특히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시대의 임신전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임신전부터 여성을 관리를 시작하여 태아의 발생에 보다 이상적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회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원고에서는 저출산시대의 임신전 관리와 태아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 II. 본론

### 1.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임신부는 이미 의학적인 문제나 태아 기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신전 적절한 상담과 처치를 하였다면 미리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신전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태아의 발생에 보다 좋은 환경,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예로 무뇌아나 척추 이분증과 같은 신경관 결손의 예방을 위하여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복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태아기

의 자궁내 환경이 출생 후의 성인기의 여러 가지 질환, 즉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암등의 성인기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태아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 2. 고령임신은 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는가?

고령임신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임신 제1기에는 자연유산의 빈도가 매우 증가하여 Wilson 등은 30세 이하의 산모군의 자연유산의 빈도가 1.4%인데 반하여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군에서는 4.3%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보통 40대 산모군의 자연 유산율은 20대 산모군에 비하여 2~4배의 위험도를 가진다.

고령임신에서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조산, 태반조기박리, 조기파막 등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보고가 있었으며(길기철 등, 2007; 박희진 등, 2006; 최재호 등, 2006) 특히 임신성 고혈압이 고령 산모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중학 등(1987)에 의하면 대조군의 2.5배, Kessler 등(1980)에 의하면 약 4배 높음이 보고되었다.

고령 산모에서 주산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조기분만, 태아성장지연등에 의한 것이며 고혈압성 질환이 있을 경우 더욱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령 산모에서 주산기 사망이 증가하는 것은 선천성 기형의 증가와 고혈압성 질환의 합병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 태반 혈류부전 등에 의한 자궁-태반 혈류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왕절개술의 빈도도 증가하는데 이는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노화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로 비정상적인 진통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자궁수축의 효율성이 노화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박희진 등, 2006). 하지만 고령 산모의 경우 40세 이상의 경우와는 달리 35세에서 39세의 산모는 산과적인 여러 가지 산과적인 합병증의 빈도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전 관리를 철저하게 받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40세 이상의 산모의 경우에는 합병증의 빈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역시 철저한 임신 전 관리로 합병증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영양평가(Nutritional assessment)

여성에게 임신전에 식사 평가와 함께 태아에게 유익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임신전 관리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고 이때는 영양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영양상태의 조사는 키에 대한 체중의 적절성 여부, 식습관, 채식주의자인지, 다이어트중인지 그 외 다른 식습관의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여성에 맞게 맞춤요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정상 태아 발달을 위한 단백질의 보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콩, 계란, 치즈 등의 섭취가 필요하고 비만의 경우 고혈압, 당뇨, 자간전증, 지연임신, 제왕절개술의 증가 등의 합병증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체중관리와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식욕부진이나 폭식증에서는 전해질 장애, 심부정맥, 소화기계 등의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페닐케톤뇨증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 태어난 영아는 작은 머리증, 정신지체 등이 생길 수 있고 선천성 심장병, 태아발육지연 등의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이런 경우 임신 초기부터 혈중 페닐알라닌의 농도를 낮추는 식이조절이 태아 기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4. 생식능력을 높힐 수 있는 방법들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원에서는 1976년 30세에서 55세 사이의 12만명 이상의 기혼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지로부터 배란과 연관된 불임여성을 위해 생식능력을 강력히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내었다(조지 E 사바로 등, 2008). 저출산과 더불어 가임 여성의 연령증가는 임신의 확률을 감소시키고 불임의 확률을 현격하게 증가시키는데 20~24세의 여성의 불임확률은 3%인 반면 35~39세 여성의 불임확률은 15%이고 40~44세 여성의 불임확률은 32%에 이르게 되므로 나이 든 여성이 임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다음과 같은 영양적인 주의를 하여야 한다(조지 E 사바로 등, 2008).

- 1) 시판중인 많은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에 들어 있는 동맥을 막히게 하는 트랜스 지방을 피한다.



- 2)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 같은 불포화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한다.
- 3) 동물성 단백질은 더 적게, 콩이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더 많이 사용한다.
- 4) 몸에서 혈당이나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는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제품들 보다는 혈당이나 인슐린에 더 느리고 적게 작용하는 통곡물등 탄수화물의 다른 공급원을 선택한다.
- 5) 매일 전지 우유 한잔을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작은 한 접시 또는 전지방 요구르트를 먹도록 한다. 이러한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 탈지유나 탈지유로 만든 희고 연한 코티치즈 같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 식품 및 후로즌 요구르트 등은 멀리한다.
- 6) 엽산과 비타민 B종류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 제제를 복용한다.
- 7) 붉은 색 육류에서가 아니라 과일, 야채, 콩 등으로부터 풍부한 철분을 얻는다.
- 8) 음료수 중에서는 물이 가장 좋다. 커피, 차, 술등은 적당한 선에서는 허용되나 설탕이 들어 있는 탄산음료는 피한다.
- 9) 건강한 체중을 위해 노력하라. 만약 과체중이라면 5~10%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배란을 촉진시킬 수 있다.
- 10) 만약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지 못하다면 매일 운동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 5. 계획임신의 중요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주로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며 이때 의사들은 주로 영양 섭취가 임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 계획임신은 임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 만 아니라 임신 기간 중의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임신하기 전에 건강상태가 좋다면 잠재적인 합병증을 피할 수 있으며 태어날 아기가 건강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계획임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 임신하기 전에 건강한 몸무게에 도달하는 것은 임신을 보다 더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 2) 엽산의 섭취는 선천적인 기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3)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은 임신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4) 임신 이전에 약물상태를 조절하는 것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임신 전에 건강한 몸무게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는 몸무게가 자신의 키에 비해서 정상 보다 적게 나가는 여성들은 조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저체중의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체중 혹은 심각한 비만을 가진 여성들은 임신 기간중 합병증을 앓을 위험이 높고 난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W.알렌 워커, 2008).

〈표 5-2-1〉 임신전의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구분	체질량 지수
저체중	19.8 미만
정상 체중	19.8~26.0
과체중	26.0~29.0
심각한 비만	29.0 미만

주: 대한 비만학회에서는 WHO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진단기준에 따라서 한국인의 비만기준을 과체중의 기준을  $23\text{kg}/\text{m}^2$  이상으로, 비만은  $25\text{kg}/\text{m}^2$  이상으로 정함.

## 6. 엽산과 기형아 예방

2005년도 식생활 안내서(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서는 가임기의 모든 여성들에게 매일 엽산을 섭취하고,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엽산이 뇌와 척수의 선천성기형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엽산, 또는 폴산염(에스테르, folate)은 태아의 발달, 특히 신경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계는 처음으로 발생하는 신체기관중의 하나이다. 신경계는 작은 배아 내에 있는 특수한 세포들의 작은 원형반(disc)에서 시작한다. 임신 후 약 26일이 되면, 이 둥근 원형반은 접혀져서 뇌와 척수를 만드는 신경관(neural tube)이라고 불리는 실린더를 형성한다. 만약에 신경관이 완전하게 폐쇄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선천적 기형인 척추 이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척추이분증은 가장 일반적인 신경관 결손으로 이것은 신경손상, 수족마비, 학습장애 등을 유발한다. 엽산이 신경관의 폐쇄를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여성들은 태아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엽산을 몸에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경관의 폐쇄는 임신 사실을 알아채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임신 전에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연방정부에서는 미국인들의 엽산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엽산을 함유한 식품(특히 아침 시리얼과 밀가루)의 공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신경관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는 있지만, 엽산은 식품만으로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는다. 가임기의 여성들에게는 일일 6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섭취가 권고되고 있다. 이것은 종합비타민 또는 보충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4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고, 식품을 통해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할 수 있다. 매일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200 마이크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그 외 엽산의 복용은 신경관 결손증 뿐 만 아니라 선천성 심장기형이나 언청이 등의 예방도 가능하게 해주므로 임신전 3개월부터 엽산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W.알렌 워커, 2008).

〈표 5-2-2〉 엽산 함량이 높은 식품

강화된 아침 시리얼, 이집트콩, 얼룩덜룩한 강낭콩(pinto beans), 리마콩(lima beans),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양상추, 붉은 강낭콩, 밀 맥아, 오렌지 주스
---

7. 태아기의 건강이 평생을 좌우 한다 -태아프로그래밍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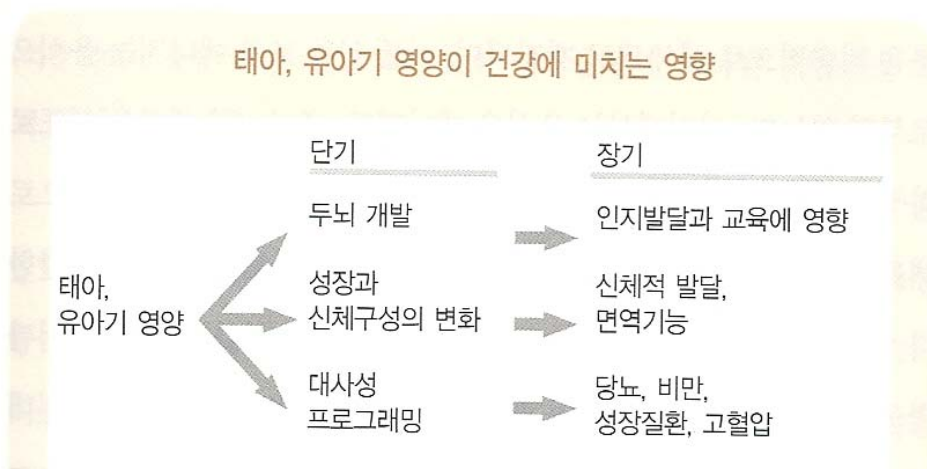
우리는 오랫동안 임신 기간 중 엄마의 건강 습관이 중요하다고 믿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임신 기간 중의 영양섭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태아기 동안의 영양 상태가 한 개인의 건강, 신진대사 그리고 만성질환의 위험 등 평생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임신 기간 중의 엄마의 건강이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기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영역은 여전히 아주 새로운 것이지만, 연구결과로부터 몇 가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 태아기 때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질환에 걸리기 쉽다.

- 자궁 내 환경은 아기의 신진대사를 영원히 변경시킬 수 있다.
-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건강상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분만과 아기의 장기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발견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좋은 영양섭취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들은 또한 삶의 가장 초기단계에서의 좋은 건강 상태는 일생에 걸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지해준다. 여성의 몸은 아기가 발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기를 위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임신 기간 중에 아기에게 전달되는 영양분은 마치 조각가가 진흙을 빚듯이 실제로 아기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태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태아 프로그래밍은 임신기간 중 좋은 영양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이것은 엄마 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아기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W.알렌 위커, 2008).

[그림 5-2-1] 태아, 유아기 영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III. 결론

따라서 현시대와 같은 저출산사회에서 태아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신전부터 가임기 여성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건강한 태아는 건강한 성인을 만든다는 태아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임신 전 관리에 적용한다면 전 국민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갈기철 등(2007). 40세 이상 고령 임신이 주산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주산회지, 18(2), pp.125-30.
- 박희진 등(2006).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산과적 예후. 대한산부회지, 49(10), pp.2066-74.
- 이종학(1987). 노령 초산부에 관한 임상통계학적 고찰. 대한산부회지, 30(2), pp.133-41.
- 조지 E. 사바로, 월터 C. 월렛. 불임극복의 식이요법. 조운커뮤니케이션.
- 최재호 등(2006). 고령 산모의 임신 및 출산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산부회지, 49(2), pp.294-308.
- W. 알렌 워커. 임신 출산 영양 가이드. 조운커뮤니케이션.
- Cetin I, Berti C, Calabrese S.(2009). Role of micronutrients in the periconceptional period. *Hum Reprod Update* 2009, pp1-16(advance access published June 30).
- Kessler I, Lancet M, Borenstein R et al.(1980). The problem of the older primipara. *Obstet Gynecol*, 56, p.2.
- Wilson RD, Kendrick V, Wittmann BK, McGillivray B.(1986). Spontaneous abortion and pregnancy outcome after normal first-trimester ultrasound examination. *Obstet Gynecol*, 67, pp.352-5.

##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2008~2009년 주요 추진 정책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서론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제1차 베이비붐 시기인 1947~1949년에는 4.32명의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4명으로 하락하였다. 그 후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9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57명으로 하락하였는데(1.57 쇼크), 이러한 출산률의 감소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 이후 출산률 회복을 위한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엔젤 플랜”을 1995년부터 추진한 이래 거의 1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일본의 합계출산률은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약 1.3명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일본이 인구동태추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2만 1,266명 감소하고 합계출산률 역시 1.26명으로 과거 최저 수준을 보이게 되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현재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저출산 정책의 최근 동향은 인구 감소와 국제적인 금융 위기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재정적 지원을 감안하여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직면하여 일본은 2006년 6월 이제까지 보육 지원 중심의 “엔젤플랜”에서 벗어나 사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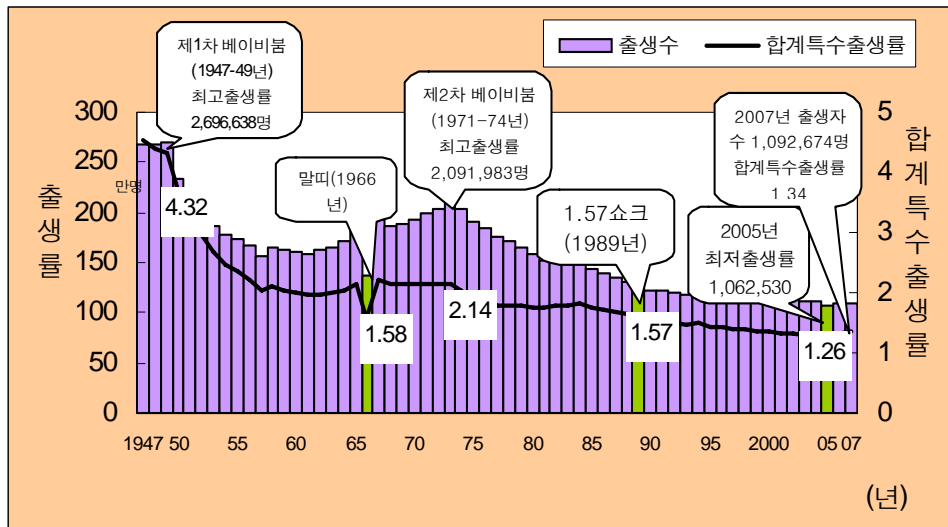
제적 대응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7월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5가지 안심플랜”하에 저출산 정책을 제시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사회보장국민회의 최종보고”를 통해 저출산 대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대책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1인당 GDP 수준이 유럽의 복지 선진 국가에 못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에 대한 지원 수준이 유럽 국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내 가족친화제도 역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이유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예산 투입이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평가된다. 일본 정부 역시 그간에 제시한 저출산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는 일본 저출산 정책에 대해 쏟아지는 많은 비판과 유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이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일본 저출산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2008~2009년 동안 추진한 일본 저출산 정책의 주요 동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최근 추진 동향은 유용한 시사점을 주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5-3-1] 일본의 출생자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1947~2007)



자료: 일본 내각부(2009). 평성21년판 소자화사회백서.

## II. 일본 저출산 정책의 추진 경과

일본에서는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 되었다<sup>22)</sup>. 최초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일본은 “엔젤플랜(1995~1999년)”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을 추진하였다. 엔젤플랜은 실천 계획에서 나타나듯이 보육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서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 기반 정비를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초기 저출산 정책은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확충에 초점을 둔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취업 여성들에 대해 보육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출산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확충에만 중점을 둔 것이 엔젤플랜의 가장 큰 한계성이다. 이와 더불어 엔젤플랜이 마련되고 추진될 당시 저출산 정책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강

22) 같은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도 1.58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 된 것은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후이다.

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엔젤플랜의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엔젤플랜(2000~2004)은 제2기의 일본 저출산 대책으로서 기존의 보육 서비스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상담, 모자 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분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은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만 확충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존의 편협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났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로서 취업 여성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 문화 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정책 속에 담게 되었다. 신엔젤플랜은 2003년 7월에 마련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중심 체계로서 “저출산사회대책 회의”가 마련되어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대책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모든 각료를 위원으로 하는 일본 내각부의 특별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일본 저출산 정책 추진의 중심 체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저출산대책 회의 위원에는 내각관방장관을 포함한 모든 각료를 비롯하여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과 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을 포함하고 있다<sup>23)</sup>. 엔젤플랜이 정책 추진의 중심 체계 없이 문부, 후생, 노동, 건설의 4대신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에 반해, 신엔젤플랜 이후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육아 응원 플랜(2005~2009)은 제3기의 일본 저출산 대책으로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으로 마련된 저출산사회대책대강의 중점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정책은 이제까지의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정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젊은이의 자립과 일과 노동에 관한 의식 개혁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한 특징이 있다.

한편, 2005년 일본의 총인구가 처음으로 2만 1,266명 감소하고 출생자수가 106만명, 합계출산률이 1.26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

23)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급 국무위원에 해당된다.

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2006년도에 마련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인구 정책 중심의 대응에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였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 여성,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되 급속한 생산연령인구와 노동력 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2008년 7월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도래하자 이에 따른 경기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5가지 안심플랜”을 제시하였다. “5가지 안심플랜”은 생활 지원 대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저출산 정책이 동 플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가지 안심플랜”에서 제시한 저출산 정책은 2010년부터 추진할 제4차 소자화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차세대육성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비롯하여 “안심어린이기금” 설치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긴급 종합 대책으로서 “안심 어린이 기금 창설,” “육아 응원 특별 수당 지급,” “임신 건강진단의 공비부담 확대,”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촉진”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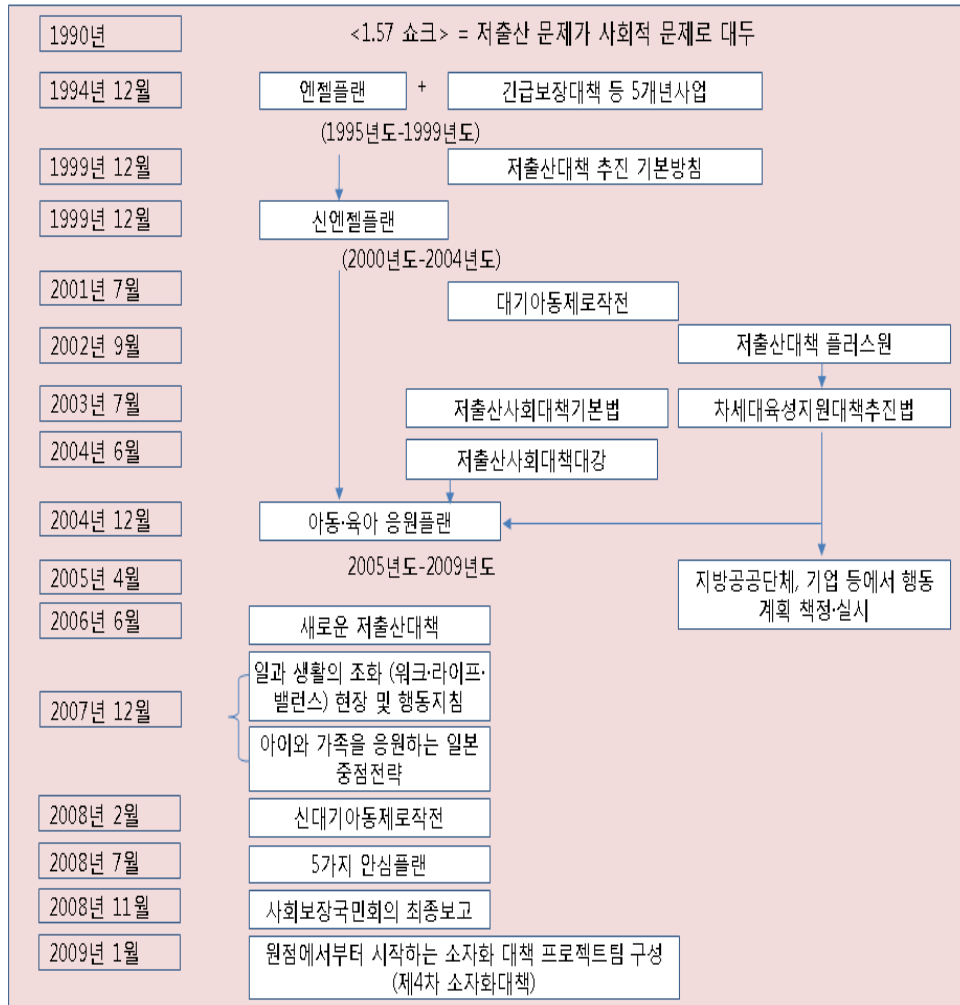
2008년 1월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는 “소득 지원(고용 및 연금),” “서비스 보장(의료, 개호,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구축 (소자화, 일과 생활의 조화)”의 3가지 분야에 대해 일본 사회 보장 제도의 방향성과 정부의 역할을 국민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소자화 대책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취업, 결혼, 출산, 육아의 양자 택일 구조를 해결하여 “희망과 현실의 괴리” 해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의 가족 정책 관련 지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데 동의하고 저출산 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논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제4기 소자화대책 마련을 위하여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인 소자화 대책담당대신 주관하에 “원점에서 시작하는 소자화대책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 해소,” “유아기 교육·보육의 무상화 등 교육비 경감,” “취약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지역에서의 육아 지원”의 5대 핵심 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09년 6월 현재

까지 독립적인 주제 하에 제10회 회의를 추진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4기 소자화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안심플랜,” “사회보장국민회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림 5-3-2] 일본 저출산 정책의 추진 경과(1990~2009)



자료: 일본 내각부(2009), 평성21년판 소자화사회백서.

### III. 최근 일본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2008~2009)

#### 1. “5가지 안심 플랜”에서의 소자화 대책(2008. 7)

2008년 7월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미래에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 것’, ‘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긴급대책-5가지 안심플랜”을 제시하였다.

5가지 안심플랜의 중점과제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실현의 괴리해소”,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정비”,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의 세가지 목표하에 <표 5-3-1>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안심플랜의 일환으로서 “안심어린이기금”, “육아응원 특별 수당”, “임신부 건강진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아지원 촉진”을 추진하였다. 첫째, “안심어린이기금”을 창설하여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 정비를 위한 1,000억엔의 기금을 도도부현에 마련하였다. 동 기금을 통해 인정 어린이집(공공어린이집), 임대 건물에 보육 시설 조성, 보육 마마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15만명 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시설 및 서비스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과후 아동클럽의 촉진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동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2008년도 긴급 조치로서 “육아 응원 특별 수당”을 마련하였다. 동 수당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3년간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1인당 3.6만엔(원화로 약 46만 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정의 “안심”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임신부의 충실한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건강진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부가 약 14회에 걸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넷째,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취득자 및 단시간근무제도의 이용자가 처음 발생한 경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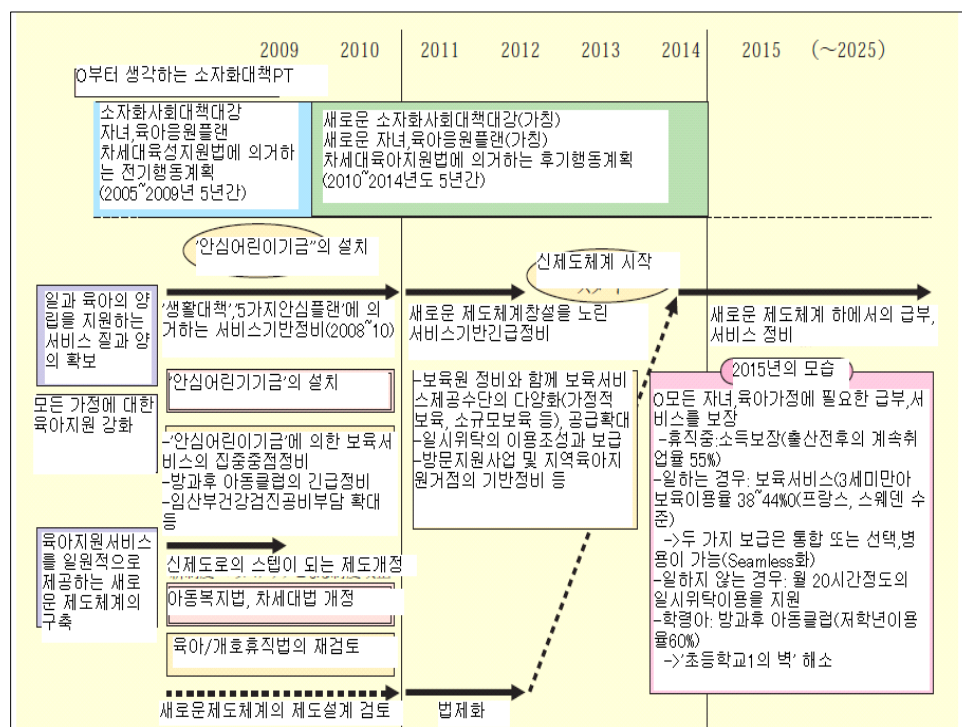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5명제까지 확대하고, 2명제 이후의 지급액을 현행 60만엔에서 80만엔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근로자가 이용한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대상 정부 지원금을 현재 비용의 ‘2분의 1’지원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하고 한도액을 1인당 30만엔에서 40만엔, 사업주 당 360만엔에서 480만엔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표 5-3-1〉 “5가지 안심플랜”에 포함된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

비전	미래를 짚어질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사회	
목표	1. 국민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실현의 과리 해소 2.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정비 3.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전략	보육서비스 등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정비	1. 인정어린이원의 근본적 개혁 - ‘어린이교부금’ 창설 및 종합적인 재정지원 검토 - 교부금 신청·집행의 일원화 추진 - 인정어린이원 제도개혁 2. 보육서비스 등의 확대 - 대가아동이 많은 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긴급정비 - 시간 연장보육 확대 - 충실한 병아·병후아(질병 후의 아동) 보육 - 방과후 아동클럽 설치 촉진 - 가정적 보육(보육엄마)의 제도화 3. 육아 불안을 안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 일시 위탁사업 등의 확대 - 사회적 양호체제 등의 확대 - 장애아·발달장애자 지원의 확대 - 각종 육아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4.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보육비 경감 검토 - 육아·개호휴직법의 재검토 (충실한 자녀의 간호휴가제도) - 형제자매 같은 보육원 우선 입소 - 주택 지원 등 5.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틀 만들기 구축 -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틀 구축에 대한 검토 6. 아동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 ‘카에루 재팬(Kaeru Japan)’ 캠페인 추진 -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 어드바이저 양성지원 - 육아·개호휴직법 재검토에 관한 검토(육아기 단시간근무제도 강화 등) 등

일본 정부는 2009년을 제4기 소자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안심플랜”을 기반으로 새로운 저출산 정책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심어린이기금”을 통해 보육 시설 및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 및 서비스 기반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이행 위해 아동복지법, 차세대법의 개정과 육아 및 개호휴직법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제4차 소자화대책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는 없지만, 사업의 종료되는 2015년 시점에서의 비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육아 휴직 기간 중의 소득 보장을 통해 출산 전후의 계속 취업률이 55%를 유지하고, 취업모 0~3세 자녀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인 44%까지 향상시키며, 전업 주부의 경우 월 20시간 정도의 일시 보육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학교 이용율을 60%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5-3-3] 소자화 대책의 향후 추진 방향



## 2. 사회보장국민회의 최종 보고(2008. 1)

2008년 1월 일본 정부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과연 무엇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어떠한 부담을 나눌 수 있을지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사회보장국민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회의에서는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①소득확보(고용, 연금), ②서비스 보장(의료, 개호, 복지), ③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소자화, 일과 생활의 조화)의 3가지 테마에 대해 분과회 및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중간보고를 거쳐 11월에 최종보고를 제출하였다.

중간보고에서는 소자화 대책을 미래의 일꾼들을 육성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취업과 결혼, 출산, 육아의 ‘양자택일구조’ 해결을 통한 ‘희망과 현실의 괴리’ 해소를 지향하며, 일과 생활의 조화 및 육아지원의 사회적 기반 확대를 ‘수레의 양쪽 바퀴’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데 동의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재원 확보를 도모한 뒤, 대담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과 양의 근본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보고 정리를 통해 최종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보육 환경 여건을 재검토하여 질이 좋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 다양한 제공주체의 참가, 일정한 질이 유지되기 위한 정부 책임의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 출산기 지원 확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다양한 주체의 참가 및 협동이 요청된다. 셋째, 소자화 대책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지속가능성의 근간에 관련된 정책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즉, 소자화 대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정부, 공공단체, 사업주, 국민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 3.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2009. 1)

2009년 1월에는 제4기 일본 소자화 대책(2010~2014)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인 소자화대책담당대신의 주관 하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대책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팀에서는 1995년 엔젤플랜 실시 이후 일본 출산률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마련한다기 보다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를 국민적 이해 및 관심 부족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팀에서는 출산 및 육아 당사자의 관점에서 매회 테마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팀의 5대 핵심 논의 과제는 ①일과 가정의 양립, ②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 해소, ③유아기 교육·보육의 무상화 등 교육비 경감, ④한부모 가정, 장애아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⑤지역에서의 육아 능력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 <표 5-3-2>와 같다.

〈표 5-3-2〉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

회 차	테 마	내 용
제1회 회의 (2009.2.10)	연애·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 대책의 첫 단추는 “연애·결혼”부터</li> <li>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기혼자 중심적임을 반성</li> <li>기혼자 중심적 대책으로는 저출산문제의 근본해결에 한계</li> <li>저출산 문제는 미혼·만혼·비혼화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li> <li>따라서 연애·결혼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li> <li>결혼 지원을 위한 국가적 정책 대안(예컨대, 새로운 만남의 장공, 커뮤니티 케이션 능력 제고, 카운셀링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가 중요</li> </ul>
제2회 회의 (2009.2.24)	젊은층의 고용과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층이 안심하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이후에만 초점이 놓여짐</li> <li>life-cycle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젊은층 지원정책의 미비</li> <li>젊은층에게 가족형성이 가능한 취업과 경제적 자립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나 출산이후 생애로 연결해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함</li> </ul>
제3회 회의 (2009.3.9)	불임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이나 가족형성에 관한 인식 보급</li> <li>만혼화 등의 사회적 변화, 자궁내막증, 무정자증의 증가 등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임</li> <li>특히 불임치료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소프트적 대응 요구</li> <li>학교 수준에서부터 임신이나 불임치료에 관한 정확한 교육과 지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함</li> <li>정책적 대안으로 불임치료의 ‘표준화’ 제고, 공적시설 및 연구강화, 카운슬링 인재 양성 등이 논의 중임</li> </ul>
제4회 회의 (2009.3.24)	work-life bal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잡한 경제정세에 대응한 노동환경의 변화 필요</li> <li>일과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요구</li> <li>‘work-life balance 현장’, ‘일과 생활 양립의 조화를 위한 행동지침’, 부친육아지원책 마련 등이 요구</li> </ul>
제5회 회의 (2009.4.7)	보육·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종합적 검토 필요</li> <li>여성의 사회활동 다양화, 육아능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적 관점에서 유아교육 무상화나 관련 보장제도개혁이 요구</li> </ul>
제6회 회의 (2009.4.21)	한부모가정과 어린이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빈곤과 격차 간의 연쇄 방지 필요</li> <li>어린이 빈곤 문제가 학력격차, 건강, 학대, 비행문제로 연결되는데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 요구(아동부양수당, 교비문제, 세제조치, 공공주택시설, 보육원의 방과 후 대책, 어린이 빈곤에 대한 성인교육 등)</li> <li>한부모가정(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책 실시</li> </ul>
제7회 회의 (2009.5.12)	학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li> <li>취학원조, 수업료감면, 장학금 등을 통한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li> </ul>
제8회 회의 (2009.5.26)	가정·지역·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전체가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li> <li>인재형성(차세대 인재 양성), 지역형성(공원/광장 등 교류공간 형성, 의료/보육지원 등 사회적 서비스 충실 등)을 통해 가정이나지역의 육아 지원기능 강화</li> </ul>
제9회 회의 (2009.6.9)	소아·의료·주산기 의료·병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병아 발생 시 부모의 불안 해소 및 병아 보육에 대한 대응 충실</li> </ul>
제10회 회의 (2009.6.23)	기존 회의내용의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세 1%를 어린이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 강구</li> <li>시대변화로 가족, 지역, 직업영역이 담당해 온 결혼이나 육아지원기능이 저하되면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재구축 요구</li> <li>국민적 관심 부재, 대처방법 미비, 재원부족(가족관계 시책 예산)을 해소 요구</li> </ul>

#### IV. 최근 일본 저출산 정책 동향의 시사점

2010년은 우리나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서 2011년부터 새로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된다. 이러한 2차 기본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은 교훈과 반성을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슈를 정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최근 저출산 정책 동향은 우리나라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정책이 아직 출산률 회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출산 정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구조 개선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출산률 회복은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년 간에 걸쳐 추진한 이래 오늘날과 같은 출산률 회복을 가져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스웨덴은 많은 사회적 변화와 제도상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엔젤플랜을 제시한 이래 약 15년 남짓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최근 저출산 정책 동향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특성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 머리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혼인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에는 출생성비 불균형 심화,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 등 많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다(김두섭, 2006). 이른바 국제결혼을 계기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통합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생활상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의 중의 하나로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오남, 2006; 서홍란 외, 2008; 왕한석, 2006; 이진숙, 2007; 조영달, 2006; 한건수, 2006).

한국 입국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건강에의 취약함과 자녀양육의 부담 및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환경의 조성은 한국 사회의 책무이자 과제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

책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건강과 자녀양육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젠더 이슈’와 ‘다문화 이슈’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3장에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 현황을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한다.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및 지역별 자녀의 수와 출신국가별 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성을 젠더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이슈

### 1. 선행연구 검토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최근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 비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행태와 출산력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표본조사나 사례조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행태 및 출산력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문화적 요인 등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임신·출산 관련 생식건강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두섭 외, 2008; 김영주 외, 2008; 김혜련 외, 2008; 이삼식 외, 2007; 차승은·김두섭, 2008).

이삼식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적 이민이 활발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이 비이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상황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이 억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은 한국의 출산율에 보다 근접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이삼식 외, 2007).

또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수준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스트레스 및 불안한 지위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 기혼여성보다 출산수준이 낮고 출산 간격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즉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타인과의 접촉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사회연결망의 직업 위세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김두섭, 2008).

그 외에도 출산과 관련한 건강에 대한 연구로는, 출신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출산과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 수행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연구(차승은·김두섭, 2008)와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분만, 출산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여성건강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김혜자, 2008).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왔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자녀 수의 급증은 국제결혼부부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 현실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로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양육 과정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들이다(김도희 외, 2007; 김영옥 외, 2008; 서현·이승은, 2007; 서홍란 외, 2008; 송미경 외, 2007; 오성배, 2007; 이진숙, 2007; 전홍주 외, 2008).

다른 하나는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연구로서, 주로 자녀들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수준, 자아정체감 등에 관한 연구와 초등학교 재학 자녀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적응 및 학습 수준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오성배, 2005; 이재분 외, 2008; 전홍주 외, 2008; 정은희, 2004).

이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은 높지만 언어 소통과 교육 관련 정보 습득에서의 취약함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개입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오성배, 2007; 전홍주 외, 2008).

이 중에서 이 글의 논의대상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임신·출산과 자녀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김도희 외(2007)는 농촌 거주 필리핀이나 일본

결혼이주여성보다 베트남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고, 서흥관 외(2008)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자녀 양육방식의 문화적 차이,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및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지원 체계 부족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신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불안과도 관련된다(송미경 외, 2007).

또한 자녀양육의 실질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가정의 아버지 양육참여는 중간 수준으로서 일상적 양육보다는 활동적인 놀이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진숙, 2007).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인 남편의 학력이 낮고 농업, 생산직 등 직업 위세가 낮은 업종에 종사할수록 자녀양육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림어업직 남성의 40%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52%가 빈곤계층에 속한다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가정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예상되며 이에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결혼이주여성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젠다-다문화 이슈와 정책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젠더 관점에서의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적 사회통합의 관점과 관련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를 확산시키고 다문화적인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대 등으로 자녀 양육은 여성 고유의 역할과 사적인 책임

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의 공적인 책임의 영역이 되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에 취약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할 과제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가 젠더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는 있어도 ‘돌봄 수행자’로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체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젠더 관점에서의 돌봄의 사회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나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정착과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출산과 같은 재생산 과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래없을 정도로 낮아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것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 개인의 다양한 생애설계와 행복추구권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건강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김인춘·최정원, 2008).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은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정책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젠더 이슈

- 임신·출산에 관한 선택 및 결정의 권리
- 모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사회적 지원
- 자녀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성별분업 체제 극복
- 취업과 출산 및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첫째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임신·출산과 관련한 상황에서 선택 및 결정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혹은 결혼이



주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정책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와 관련된다. 재생산권은 여성 자신이 출산을 할 권리와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련한 행위 및 상황에 있어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 및 자율성을 지닐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젠더 관점에서 모성은 여성 개인이 자연스럽게 지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아니라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제도가 결합된 것으로서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성은 여성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해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모성활동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짓지 않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어야 할 영역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놓여있는 양육 주체(여성, 남성, 가족 등)들의 모성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모성활동의 지원은 자녀양육에서의 전통적인 성별분업 체제를 극복하는 것과 연관된다.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자녀양육자인 여성이라는 성별분업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성평등적인 가족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의 참여에 취약한 국제결혼가정의 남편들의 자녀 돌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출산 및 양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국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 등을 이유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가 운용되고는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이나 남편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제도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체의 생산직, 서비스직, 농어업직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이주민’으로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문화 이슈

- 의사소통의 문제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모성건강
- 다문화적 출산 문화 및 자녀 양육문화 이해: 다문화 의료·보건 케어
-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유지와 다문화적 양육 및 교육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임신·출산 등 모성건강과 자녀양육에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임신 중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지 못했거나 자주 가지 못한 이유로 병원비 부담이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이유 외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주된 이유 중의 하나임을 밝혀낸 바 있다(김혜련 외, 2008). 이러한 현실을 본다면,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특히 입국 초기에 임신·출산을 할 경우, 한국출신의 여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련 외의 연구에서도, 임신 중 먹는 음식이 출신국가 음식과 달라 전혀 먹지 못한 경우는 12.8%, 잘 먹지 못한 경우 49.6%로 약 60%가 음식 섭취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빈혈이 19.6%, 산전 후 출혈 9.4%, 저체중이나 임신 중 체중증가 미달 8.3%, B형 간염 8.2%로 나타났다(김혜련 외, 2008).

이러한 사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민으로서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임신·출산 과정에서 건강상의 취약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성건강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가 다문화적 관점에서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바라본다면, 출산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과 자녀 양육 방식의 문화적 다양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출산은 생물학적 재생산의 과정만이 아니라 출산의 준비와 방법 등에 있어 다

양한 관습과 제도가 결합된 문화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는 이들의 다양한 출산 문화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접목되어야 한다.

### III.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현황

#### 1.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및 이혼

##### 1)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결혼이주여성의 혼인과 관련하여 출신국가별 혼인 추이, 혼인형태, 부부 연령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0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만 6,204건으로 총 혼인의 11.0%를 나타내며, 2005년의 13.5%를 정점으로 3년째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77.7%를 차지한다.

〈표 5-4-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증감	1,782	2,918	679	9,574	9,864	7,716	-3,597	-1,199	-1,356
증감률	18.1	25.1	4.7	63.0	39.8	22.3	-8.5	-3.1	-3.6
한국남자+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증감률	29.3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한국여자+외국남자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증감률	4.6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자료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표 5-4-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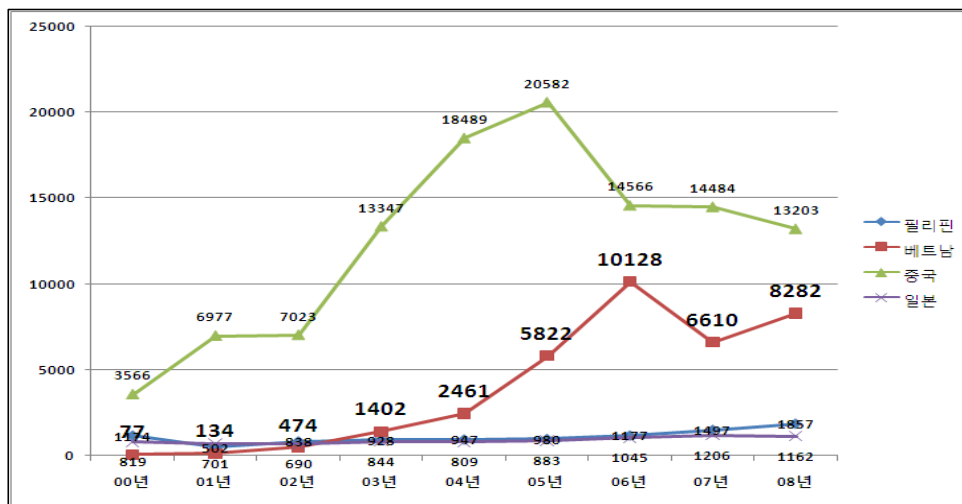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구성비
한국남자+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100.0
중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46.9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29.4
필리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6.6
일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4.1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59	2.3
태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2.2
몽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1.8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1.7
기타	962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4.8

자료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다음으로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은 중국이 46.9%, 베트남 29.4%, 필리핀 6.6%로 중국과 베트남이 약 76%를 점유하고 있다.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추이는 필리핀과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는 형태를 보이나 중국은 2005년까지 급증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은 2003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4-1 참조).

〔그림 5-4-1〕 ‘한국남성+외국여성’ 국제결혼의 배우자 출신국가 추이



자료: 통계청(2009). 혼인통계(www.kosis.or.kr).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혼인을 형태별로 보았을 때, 초혼은 64.7%, 재혼은 35.3%인데, 2006년 이후 조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 부부의 초혼율(76.1%)에 비한다면 재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4-3>의 통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재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배우자인 한국인 남성이 재혼인 경우가 1/3을 넘고 있다.

〈표 5-4-3〉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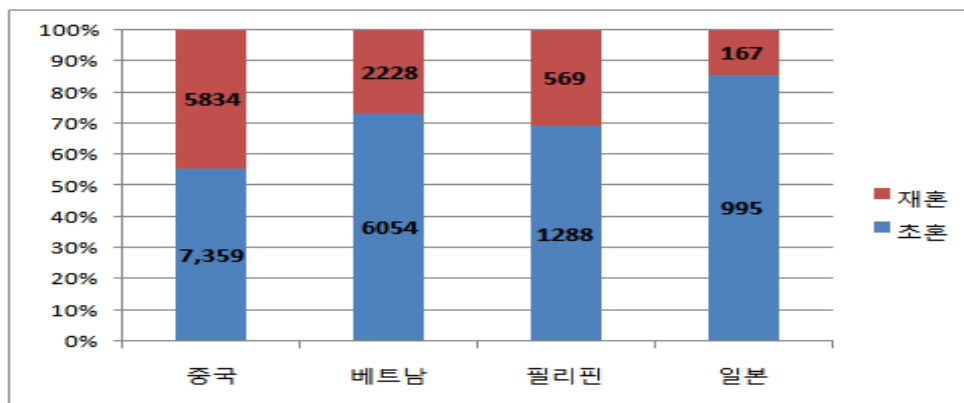
(단위: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남자+ 외국여자	초혼(A)	75.3	66.8	65.5	58.3	53.5	55.7	63.6	62.8	64.7
	재혼(B)	24.7	33.2	34.5	41.7	46.5	44.3	36.4	37.2	35.3
	비(A/B)	3.1	2.0	1.9	1.4	1.2	1.3	1.8	1.7	1.8
한국여자+ 외국남자	초혼(A)	63.2	61.2	63.3	56.8	45.9	43.3	55.2	57.6	58.4
	재혼(B)	36.8	38.8	36.7	43.2	54.1	56.7	44.8	42.4	41.6
	비(A/B)	1.7	1.6	1.7	1.3	0.8	0.8	1.2	1.4	1.4

자료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한국남성의 결혼형태와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남성의 결혼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중국여성과의 혼인은 한국남성이 재혼인 비율이 44.2%, 베트남 26.9%, 필리핀 30.6%, 일본 14.3%로 일본이나 베트남 여성보다는 중국(재중동포 포함)과 필리핀 여성과의 혼인에서 재혼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2] 한국남성의 배우자 출신국가별 결혼형태



자료: 통계청(2009), 통계데이터베이스(www.kosis.or.kr).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당시 혼인형태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재혼 비율은 비교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재혼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설동훈 외, 2005; 정기선 외, 2007),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재혼이 10%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주, 2006).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남 초혼/여 재혼’ 비율이 7.9%, ‘남 재혼/여 초혼’ 비율이 13.6%, ‘모두 재혼’이 16.7%로 여성의 재혼도 한국인 여성의 재혼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경기도 내 국제결혼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기선 외(2007)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신국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혼인형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 출신 여성은 한족 및 재중동포(조선족) 모두 다른 출신국가 여성에 비하여 재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설동훈 외, 2005; 장명선·이옥경, 2008; 정기선 외, 2007).

외국인과의 혼인과 재혼의 증가는 그만큼 한국의 혼인과 가족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부부의 연령차는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 보다 매우 크다.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한국인 부부보다 9.5세가 많다. 그리고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4.1세로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3세) 보다는 크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2000년의 6.6세에서 전반적으로 연령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1.8세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차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5-4-4 참조).

〈표 5-4-4〉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구분	(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남자+외국 여자	6.9	7.5	7.9	8.3	8.4	9.1	11.6	11.5	11.8
한국 여자+외국 남자	6.6	6.5	5.2	4.0	3.1	2.7	4.1	4.3	4.1
한국 여자+한국 남자	2.7	2.6	2.6	2.6	2.6	2.5	2.4	2.4	

자료: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연령 차이는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여성 및 중국여성과의 혼인에서는 부부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국 여성과의 혼인 시 부부 연령 차이는 15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장명선·이옥정, 2008; 정기선 외, 2007).

## 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국제결혼의 급증과 누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증가폭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은 2002년에 총 이혼 대비 구성비가 1.2%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9.7%로 8배가 증가하였다(표 5-4-5 참조).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이혼은 건수나 증감률에 있어서 매해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4-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증감	50	268	1,288	871	1,965	2,535	2,584
증감률	3.0	15.4	64.0	26.4	47.1	41.3	29.8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증감률	-1.8	43.9	186.5	52.0	65.1	45.1	39.5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증감률	4.4	7.4	18.3	3.2	23.1	34.5	11.1

자료 : 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결과.

또한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인 부부의 경우 2000년 이후 전체 이혼에서 동거기간 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2008년 33.1%), 동거기간 2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은 2.7년으로 매우 짧다.

〈표 5-4-6〉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평균 동거기간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2.2	2.3	2.1	2.1	2.2	2.5	2.7
외국인 남편+한국인 처	5.3	5.3	6.0	5.7	5.3	5.9	5.6

자료: 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결과.

결국 이러한 통계들은 국제결혼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결혼부부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계 외에도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수행과 기대, 생활방식 등 가족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는 달리 양계적인 가족관계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나 비교적 가사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부계중심적인 가족관계와 문화에서 생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한국남성의 가족들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강압적인 방식의 적응을 강요하거나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학대와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국적(혹은 출신국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규모나 연령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현황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첫 번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최근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두 번째, 지역별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와 결혼이민자 수 대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수와 지역별 분포와 함께 지역별로 부모의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연령대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현황과 부모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검토하였다.

먼저, 2009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약 16만 7천명이다. 이 중에서 결혼이주 여성은 약 15만명에 달하고 있다.<sup>24)</sup> 이는 외국인주민 전체의 14.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수는 대체로 해당 지역 인구규모와 상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인 「외국인 주민현황조사」를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카테고리 분류상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자녀수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즉, 2006년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현황조사」는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 가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sup>25)</sup>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서는 남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만, 남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만 5,246명에서 2009년 10만 3,484명으로 3년 사이 75.6%가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은 자녀 수가 전체 10만명이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43.9%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성비는 2007년 102.8, 2008년 105.9, 2009년 104.3으로 모두 정상성비를 보인다.

〈표 5-4-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25,246	44,258	58,007	103,484
남자	-	22,442	29,837	52,842
여자	-	21,816	28,170	50,642
증감률(%)	-	42.9	23.7	43.9

자료: 행정안전부(2006~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이러한 증가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결혼이민자 자녀 수를 추계한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2030년에는 20만이 넘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설동훈, 2008). 그리고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농업인 자녀들의 경우 2020년쯤에 1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강혜정, 2009).

24) 여기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여성도 포함된다. 2009년 5월 발표된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은 총 14만 9,853명으로 그 중에 혼인귀화여성은 3만 9,370명이다.

25)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현황통계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중·고 재학 자녀의 현황만 포함하고 있어 학령기 이전의 유아에 대한 자료는 제외되어 있어 전체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수와 연령대별 파악은 어렵다.

〈표 5-4-8〉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수 추계

(단위: 명)

연도	설동훈(2008) (결혼이민자 자녀)		강혜정(2009) (결혼이주여성농업인자녀)	
	결혼이민자	자녀수	자녀수(1명출산)	자녀수(2명출산)
2010	179,286	72,029	22,185	44,370
2015	266,426	107,037	42,363	84,726
2020	354,084	142,254	65,165	130,331
2025	446,844	179,520	-	-
2030	538,303	216,264	-	-

자료: 설동훈(2008), 강혜정(2009)의 다문화자녀 인구추계표 재구성.

강혜정(2009)의 연구에서는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는 24.5~4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결혼이주여성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는 앞으로 인구과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어떠한 위치와 여건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과 발전의 향배가 좌우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결혼이민자의 평균자녀수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4-9 참조). 결혼이민자의 평균자녀수는 0.62명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0.95명, 경남 및 울산 0.83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서울은 0.38명으로 가장 적고 경기(0.54명)와 대구(0.59명)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4-9〉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평균자녀수

(단위: 명)

지역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평균자녀수
	계	남	여		
전국	167,090	17,237	149,853	103,484	0.62
서울	39,275	6,717	32,558	14,897	0.38
부산	7,526	593	6,933	5,053	0.67
인천	4,965	408	4,557	3,577	0.72
대구	10,486	1,242	9,244	6,227	0.59
광주	3,267	186	3,081	2,393	0.73
대전	3,623	295	3,328	2,420	0.67
울산	2,950	163	2,787	2,463	0.83
경기	44,760	5,626	39,134	24,300	0.54
강원	4,188	201	3,987	3,968	0.95
충북	4,927	250	4,677	3,715	0.75
충남	8,003	366	7,637	6,268	0.78
전북	6,743	198	6,545	5,443	0.81
전남	7,290	144	7,146	7,264	1.00
경북	8,057	293	7,764	6,318	0.78
경남	9,586	461	9,125	8,003	0.83
제주	1,444	94	1,350	1,175	0.81

자료: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재구성.

세 번째로,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거의 큰 변화가 없고 필리핀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과 베트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부나 모를 둔 자녀의 수는 지난 2년간 77.3%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이 높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최근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들 출신국가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수가 많은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베트남 여성이 크게 증가하기 이전에 상당수가 입국하여 결혼기간을 지속하여 이미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한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신규 출산 자체가 적은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수준이 한국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낮고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 행위를 촉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두섭, 2008). 차후 출신국가별, 지역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행위 및 출산 수준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5-4-10〉 부모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단위: 명, %)

부모의 출신국	2007	2008	2009
계	44,258 (100.0)	58,007 (100.0)	103,484 (100.0)
중국	21,917 ( 49.5)	27,570 ( 47.5)	47,577 ( 45.9)
베트남	5,062 ( 11.4)	8,194 ( 14.1)	22,350 ( 21.5)
일본	6,016 ( 13.5)	6,508 ( 11.2)	6,751 ( 6.5)
필리핀	6,013 ( 13.5)	6,378 ( 10.9)	10,576 ( 10.2)
기타	5,250 ( 11.8)	9,357 ( 9.0)	16,230 ( 15.6)

자료: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재구성.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가별 자녀수와 시도별 현황을 교차하여 살펴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중국 출신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북, 경남, 충남 등 지역은 베트남 출신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4-11>를 보면, 지역별로 약간의 특이한 점들이 보인다. 전남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필리핀과 일본 출신 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도의 경우 일본 출신 자녀의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4-11〉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부모출신국가·지역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중국	중국(재중동포)	베트남	일본	필리핀	기타
서울	14,897	4,768 (-32.0)	4,856 (-32.6)	1,576 (-10.6)	735 (- 4.9)	855 (- 5.7)	2,107 (-14.1)
부산	5,053	1,902 (-37.6)	655 (-13.0)	1,140 (-22.6)	206 (- 4.1)	419 (- 8.3)	731 (-14.5)
대구	3,577	1,081 (-30.2)	631 (-17.6)	1,033 (-28.9)	211 (- 5.9)	240 (- 6.7)	381 (-10.7)
인천	6,227	3,564 (-57.2)	31,526 (- 8.4)	796 (-12.8)	155 (- 2.5)	424 (- 6.8)	762 (-12.2)
광주	2,393	642 (-26.8)	480 (-20.1)	514 (-21.5)	117 (- 4.9)	365 (-15.3)	275 (-11.5)
대전	2,420	971 (-40.1)	199 (- 8.2)	608 (-25.1)	87 (- 3.6)	203 (- 8.4)	352 (-14.5)
울산	2,463	624 (-25.3)	384 (-15.6)	948 (-38.5)	61 (- 2.5)	158 (- 6.4)	288 (-11.7)
경기	24,300	9,582 (-39.4)	4,644 (-19.1)	3,580 (-14.7)	1,146 (- 4.7)	1,730 (- 7.1)	3,618 (-14.9)
강원	3,968	942 (-23.7)	623 (-15.7)	778 (-19.6)	481 (-12.1)	713 (-18.0)	431 (-10.9)
충북	3,715	812 (-21.9)	671 (-18.1)	1,028 (-27.7)	292 (- 7.9)	470 (-12.7)	442 (-11.9)
충남	6,268	1,716 (-27.4)	797 (-12.7)	1,762 (-28.1)	404 (- 6.4)	922 (-14.7)	667 (-10.6)
전북	5,443	1,501 (-27.6)	603 (-11.1)	1,408 (-25.9)	486 (- 8.9)	961 (-17.7)	484 (- 8.9)
전남	7,264	1,340 (-18.4)	729 (-10.0)	1,840 (-25.3)	1,055 (-14.5)	1,542 (-21.2)	758 (-10.4)
경북	6,318	1,432 (-22.7)	800 (-12.7)	2,418 (-38.3)	577 (- 9.1)	585 (- 9.3)	506 (- 8.0)
경남	8,003	2,383 (-29.8)	674 (- 8.4)	2,642 (-33.0)	653 (- 8.2)	818 (-10.2)	833 (-10.4)
제주	1,175	372 (-31.7)	140 (-11.9)	279 (-23.7)	85 (- 7.2)	171 (-14.6)	128 (-10.9)

자료: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계산.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를 살펴보면, 일본이 1.26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08명, 베트남 0.73명, 중국 0.69명이고

재중동포 0.3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교차하여 살펴보면, 일본 여성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지역별 평균자녀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 여성의 평균자녀수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적고 강원이 3.19명으로 가장 많다. 그 외에 전남(2.84명)과 전북(2.31명)도 평균자녀수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울산 0.8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0.51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중국 여성은 울산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강원이 0.93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은 반면, 서울이 0.56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중동포 여성의 경우 평균자녀수가 다른 출신국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적은 가운데, 인천이 0.19명으로 가장 적고 전남이 0.69명으로 가장 많다. 필리핀 여성은 전남이 1.4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0.82명으로 가장 적다.

〈표 5-4-12〉 결혼이민자 출신국가별 평균자녀수

(단위: 명)

지역	평균자녀수	중국	재중동포	베트남	일본	필리핀	기타
전국	0.62	0.69	0.32	0.73	1.26	1.08	0.68
서울	0.38	0.56	0.23	0.51	0.55	0.82	0.51
부산	0.67	0.68	0.44	0.69	0.88	1.00	0.80
대구	0.72	0.79	0.48	0.77	1.34	1.23	0.64
인천	0.59	0.73	0.19	0.74	0.70	1.08	0.66
광주	0.73	0.63	0.65	0.74	1.05	1.13	0.72
대전	0.67	0.64	0.42	0.72	0.96	0.86	0.76
울산	0.83	1.00	0.54	0.87	1.09	0.99	0.94
경기	0.54	0.65	0.28	0.68	0.87	0.94	0.68
강원	0.95	0.93	0.62	0.79	3.19	1.28	0.90
충북	0.75	0.61	0.60	0.78	1.93	1.09	0.77
충남	0.78	0.70	0.61	0.76	1.44	1.08	0.82
전북	0.81	0.79	0.43	0.80	2.31	1.16	0.73
전남	1.00	0.82	0.69	0.81	2.84	1.40	0.91
경북	0.78	0.77	0.59	0.74	2.19	1.07	0.65
경남	0.83	0.87	0.54	0.77	1.92	1.20	0.72
제주	0.81	0.86	0.55	0.78	1.18	0.93	0.90

자료: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계산.

네 번째로, 연령대별 자녀 현황은 ‘만5세 미만’이 50,289명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만5세~만10세 미만’이 2만 6,041명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다. 만10세 미만이 자녀가 전체 73.6%를 차지한다(표 5-4-13 참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가와 자녀의 연령대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만5세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과 일본은 ‘만10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자녀수의 78.8%가 ‘만5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볼 때,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직후 및 유아기 자녀의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고,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의 경우 학령기 이후의 자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출신국가별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13〉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가별·연령대별 자녀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만 5세 미만	만 5~10세 미만	만 10~15세 미만	만 15~18세
계	103,484 (100.0)	50,289 (45.1)	26,041 (25.1)	18,447 (17.8)	8,707 ( 8.4)
중국	33,632 (100.0)	12,421 (36.9)	9,442 (28.0)	8,418 (25.0)	3,351 ( 9.9)
중국(조선족)	17,412 (100.0)	6,940 (39.8)	4,709 (27.0)	3,575 (20.5)	2,188 (12.5)
베트남	22,350 (100.0)	17,633 (78.8)	1,875 ( 8.3)	1,609 ( 7.1)	1,233 ( 5.5)
일본	6,751 (100.0)	2,028 (30.0)	2,557 (37.8)	1,792 (26.5)	374 ( 5.5)
필리핀	10,576 (100.0)	4,659 (44.0)	4,355 (41.1)	1,197 (11.3)	365 ( 3.4)
기타	12,763 (100.0)	6,608 (51.7)	3,103 (24.3)	1,856 (14.5)	1,196 ( 9.3)
필리핀	10,576 (100.0)	4,659 (44.0)	4,355 (41.1)	1,197 (11.3)	3,351 ( 9.9)
기타	12,763 (100.0)	6,608 (51.7)	3,103 (24.3)	1,856 (14.5)	2,188 (12.5)

자료: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재구성.

## IV. 정책적 대응 양상과 특성

### 1.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 1) 관련 법령

우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다. 법령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며,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 및 방향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다문화 정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으며, 복지관련 법령으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다.

먼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제12조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조항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차별금지,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9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도우미 파견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복지관련 법령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제3조 기본이념과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고, 차별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모든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은 제3조의 보육이념과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조항이 관련 되는데, 보육이념에 대한 규정에서는 「아동복지법」과 달리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26조에서 영아, 장애아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건강에 대한 권리와 보건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데, 이 법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와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제10조 건강권에서도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국적 미취득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집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32조에서 포괄적으로 여성의 건강한 자녀 출

산과 양육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에서는 제3조의3항에서 결혼이주 여성에게도 이 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모자보건 및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반 지원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임산부’나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와 같이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출신국가 등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 5-4-14〉 결혼이주여성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관련 법령

구분	법령	관련 조항
다문화 정책 관련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보육·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5-4-14〉 계속

구분	법령	관련 조항
복지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4조 (책임)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 ③영유아는 자신과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건강권 등) ②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1항에 따라 신고된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주요정책 현황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이 지원정책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에서부터이다.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대통령 주재의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이 대책은 결혼이주여성의 보건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 대책에 포함된 결혼이주여성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들은 2008년 2월 참여정부 당시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통하여 추진되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30일에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이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로서 3단계를 ‘자녀양육기’로 설정하고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 이전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보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부분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표 5-4-15〉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주기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결혼 탈법방지 및 결혼당사자 안전보호</li> <li>-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li> <li>-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li> </ul>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li> <li>-다양한 생활정보 제공</li> <li>-다문화가족 생활보장</li> <li>-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li> </ul>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 지원</li> <li>-부모의 자녀양육 능력배양</li> <li>-영유아 보육·교육 강화</li> <li>-부모·자녀 건강관리</li> </ul>
자녀교육기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언어·학습·정서발달 지원</li> <li>-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li> <li>-빈곤·위기 아동·청소년 지원</li> <li>-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li> </ul>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li> <li>-결혼이민자 사회 연계 강화</li> </ul>
가족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지원</li> <li>-요보호 아동 지원</li> </ul>
전(全) 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체계 정비</li> <li>-대국민 다문화 인식 제고</li> </ul>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을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건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5-4-16>에서 정리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대책」의 주요 정책을 검토해보면, 우선 첫 번째, 임신·출산 지원에서는 ‘임신·출산 방문 지원서비스’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의 준비와 건강관리 등에 대한 방문 교육이다. ‘산모도우미’ 파견은 저소득층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소를 통하여 월1회 이상의 영양 교육과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 153개 보건소에서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253개로 확대하였다.

〈표 5-4-16〉 결혼이주여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현황

대책명	구분		주요 정책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	기초생활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성년자녀 양육시 ‘모부자복지법’ 지원대상에 포함</li> <li>-미성년자녀 양육 국적취득 전 결혼이주여성에게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07~)</li> <li>-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06~)</li> <li>-‘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li> <li>-무료건강검진서비스 시범실시(‘07~)</li> <li>-방문간호사업대상에 포함</li> </ul>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보건소 통역서비스 확대(‘07~)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2008)	자녀양육기	임신·출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지원 방문서비스(‘07~)</li> <li>-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 중산층 확대(‘10~)</li> <li>-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08~)</li> </ul>
		자녀양육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07~)</li> <li>-아버지육아교육 실시(‘09)</li> </ul>
		영유아 보육·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구소득 하위 50% 이하)(‘09)</li> <li>-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사업(‘09)</li> <li>-아이돌보미사업 연계강화(‘07~)</li> <li>-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강화(‘08~)</li> </ul>
		부모·자녀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서비스 지원(‘05~)</li> <li>-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07~)</li> <li>-자녀 예방접종 정보집 배포(‘08)</li> </ul>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두 번째,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는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사업과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남편 대

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버지 육아교육’을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강화 분야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강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만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사업은 다문화 영유아 정서발달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교사 양성교육에 활용(09~), 보육시설에 한국어교사 및 치료사 파견(10~)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 연계강화’는 양육자의 출장·질병 등 돌봄 공백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시행 기관을 확대해 서비스 이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번째, 부모 및 자녀의 건강관리 분야는 의료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로서,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보건소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 예방접종 정보집’은 예방접종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2008년부터 8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한 사업이다.

이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보건소 이용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자를 보건소에 파견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시범보건소의 확대(’08년 10개소 → ’09년 15개소)와 통역요원(’08년 19명 → ’09년 30명)을 증원하여 수행 중에 있다.

## 2. 정책의 특성 및 과제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을 정리·검토해보았다. 2006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서 추진·관리되는 가운데 정책의 대상이나 범위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확대, 특히 정책 범위 및 대상의 확대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특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이 젠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가이다. 두 번째는 이 정책들이 과연 다문화적으로 접근되고 있는가이다.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되고 추진되는가에 따라 그 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차원에서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가?

현재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계중심적 가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선희·전영평, 2008;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점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자로서의 적응과 역할수행에 방점이 주어졌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관한 정책들은 과연 어떠한가? 2006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8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에서는 ‘자녀양육기’에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서비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정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임신·출산’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건강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국한지어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즉,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모자보건’에 치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이전 시기와 출산 이후 시기의 모성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가임기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문제와 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폭넓게 본다면 모자보건의 대상은 임신, 생산, 양육 과정에 있는 1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성과 성장기 아동을 포

함한다(조영미, 2008).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정책에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충분히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6)</sup> 이것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과 남편에 대한 성 교육 등이 임신 전후 시기에 의료적인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젠더 관점의 여성 건강을 논의한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건강이 신체, 심리, 사회 건강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영미, 2007). 낯선 환경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출산은 새로운 기대 혹은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유산의 경험이나 산후 우울증과 같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이러한 심리·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결혼이주여성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나의 예로 ‘아동양육 지원 방문교육’과 같은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의 방법이나 정보 등을 방문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자녀양육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방문교육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의 보육 서비스 확대나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자녀양육에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아버지 육아교육 실시’와 같은 정책이 올해에 처음 도입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교육 등에서 육아참여 필요성 및 육아법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26) 관련 연구에서는 모국에서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70.4%에 이르고, 피임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김희경·이현주, 2008).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이 자녀양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유인책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다문화적으로 접근되고 있는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젠더 관점에 기반한 정책들을 ‘성 인지적’인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면, 다문화적인 접근은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을 고려하는 ‘문화 인지적’(Wiseman, 1991; 조영미, 2007)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책의 추진 근거가 관련 법령에 있다고 할 때, 과연 관련 법령들, 특히 임신·출산이나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령이 얼마나 소수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복지관련 법령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우선 보육실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이념의 규정에서 『아동복지법』에서와 같이 ‘인종’ 혹은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건강권의 대상에 “인종” 혹은 “출신국가” 등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취약계층으로 “거주 외국인”의 항목을 포함시켜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이주민들에 대한 건강 지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얼마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는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한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중에서 ‘보건소 통역사 파견’사업이나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다언어 예방접종 정보집’ 배포, ‘보육시설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 등은 문화 인지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이 임신 중에 음식 섭취의 어려움(음식의 차이)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영양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모성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의 통역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언어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 다언어로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저하나 정서 발달 지체와 같은 현상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의 미숙함’과 직결지어 판단하고 과도하게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정서 불안이나 발달 지체와 같은 현상은 어머니의 한국어 소통 능력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이기보다는 부부갈등,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빈곤 등 안정적이지 못한 양육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물론 일부 자녀의 경우 인지 발달 및 정서 발달 지체를 보이는 사례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운 요인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여성과 자녀의 건강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출산과 양육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행위나 과정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관점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상기하여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은 이들의 ‘이중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적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의 범위는 협소한 차원의 서비스 지원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정책 대상자들에게 ‘지원’ 혹은 ‘서비스’로 다가갈 때, 젠더 평등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해결하는 노정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혜정 외(2009).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 김도희 외(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9집 제3호.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 김두섭(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한국인구학회.
- 김선희, 전영평(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가?.. 행정논총,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영주, 김희경, 이현주(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실태 및 건강 증진 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인춘, 최정원(2008).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성평등정책.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혜련 외(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 김혜자(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여성건강간호학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열린유아교육학회.
- 서홍관 외.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가족학회.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2008). 결혼이민자 자녀양육과 교육: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향후 대책, 국회의원 원희목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설동훈, 전광희(2009).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한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발전방안. 한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방향,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집.
- 송미경 외(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제32집 3호.
- 오성배(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모색. 인간연구, 제12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이삼식 외(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분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선, 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전홍주 외(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가족과 문화, 제20집 제3호, 한국가족학회.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집 제3호.
- 조영미(2007). 모자보건 정책분석을 통한 여성건강개념 확대방안. 여성건강, 제8집 제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 차승은, 김두섭(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한국인구학회.
- 홍승아(2008).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선진화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황나미(2007). 여성건강 관점에서의 공공 모자보건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여성건강, 제8집 제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 藤原ゆかり(2008). 多文化な出産とトランスカルチュラルケア. 川村千鶴子, 『移民國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 明石書店.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 양재혁(제일병원 산부인과 병원 과장)

- 출산율과 산모감소 현상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님. 이와 관련해서 산과현장 담당자의 입장에서 산전관리와 산모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산전 임신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산아는 10%, 기형아 3%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임.
- 현재 무계획 임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임. 임신 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 흡연, 음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산부인과를 찾아오는 산모의 40%가 임신 6주 무렵에 찾아오는데, 이미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무계획 임신이 기형아, 조산율 증가 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상담체제가 전무한 것이 현실임.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임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임신 전 계획에 대한 패러다임과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임신 전 체중조절이나 엽산보충, 약물상담에 의한 유산방지, 산부인과의에 대한 상담료 제도화 등의 문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
-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있어서는 산부인과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출산율 저하는 개인적 빈곤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중요함. 예컨대, 육아여성에 대한 파트타임제 실시, 육아휴가제도 확충 등의 관련 제도를 보충·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이경혜(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 저출산 대책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출산아의 질(quality)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장애아나 기형아를 관리하는 것 보다 임신전이나 임신중의 여성을 관리하여 미리 건강문제가 있는 아이의 탄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비용효과(cost effective)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함. 국가적으로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야 국가의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주교수가 임신 전 관리와 태아건강을 영양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건강한 출생아를 위한 문제해결의 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음. 본 토론지는 김영주교수의 논문에 대해 비판이나 평가를 하기보다 부족한 점을 더 보충하고자(comment) 함.
- 본 논문에 대한 comment에 앞서 최근 저출산문제를 고령사회와 연결해서 사회이슈화 하는데 대해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사회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한 단위(unit)로 이슈화하는 것은 출생하는 아이를 노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자원으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임.
- 건강한 아이의 출생은 그 아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이며 그 어머니 즉 임부의 권리고 의무임. 태아프로그래밍에 따라 아기(신생아)가 출생하여 성인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성이 임신 전부터 태아를 위한 건강관리를 받고 태교를 실천해야 함.
- 저출산문제를 경제적(국가경쟁력)으로나 정치적(유권자의 수)으로 접근하기보다 여성의 입장(women centered)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이 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출산율은 2005년의 1.08보다 2008년과 2009년의 1.19가 더 심각함. 왜냐하면 2005년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없을 때이고 2008년부터는 적극적인 저출산대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1.25보다 떨어진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가임여성의 영양 특히 임신중의 영양은 태아의 발육 및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영양평가(사정)를 하여 영양 부족이나 과잉에서 오는 문제를 예방하고

계획적인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이 필요함.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이 body image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나친 다이어트로 섭식장애(eating disorder)에 이환된 여성이 늘어나고 심지어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이어트를 하며, 산욕기에 식사를 하지 않아 모유수유를 못하는 것은 물론 신경성 식욕장애(anorexia nervosa)나 거식증(bulimia nervosa)에 이환되는 여성이 많음. 그러므로 의료인은 건강사정/평가(health assessment)에서 섭식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여성들은 대부분 섭식장애에 대해 부인하므로 임신중 체중증가가 잘 안된다거나 체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어할 경우 섭식장애를 의심해야 함. 신경성 식이장애는 월경이 없어지고 임신이 잘 되지 않음. 이때는 임상검사를 통해(혈액검사 전해질 검사, 갑상선 기능, BUN, Serum Creatinine) 확인을 해 보아야 함.

- 체중평가보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에 따라 적정한 칼로리의 균형식을 섭취하도록 식단을 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고령임부는 이미 다른 내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맞춤요법을 해야 한다는 김영주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영양평가를 위한 도구를 소개 하고자함(뒤페이지 표 참조).
- 여성은 아무 때나 임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수태율(fertility rate)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35세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 불임률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태율이 높은 30세 이전에 결혼과 임신을 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결혼과 임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여성이 결혼 혹은 임신전부터 생식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중요함. 이에 더하여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식품을 알려주어 그러한 식품이나 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함.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약물(피임약 등 호르몬제 포함)이며 그 외 카페인, 탄산음료, 설탕, 소금, 조미료 등임.
- 술(alcohol): 최근 여성의 알코올섭취(양, 회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여성의 음주는 남성에 비해 알코올분해 효소가 부족하므로 간에 더 많은 손상을 줌. 특히 난소를 손상시켜 배란을 방해하여 불임과 태아발달 지연 및 장애를 초래하고 저체중출생아,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을 일으킴.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태아의 안면기형과 학습부진을 나타냄. 산모 특히 수유부가 술을 마시면 유즙분비가 감소할 뿐 아니라 알코올이 유즙에 배출되어 영아가 약하고(weak), 기면(drowsiness),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 임부의 알코올섭취에 대한 안전수준은 없으므로 임부는 한모금의 술도 섭취해서는 안 됨.

- 흡연(nicotine): 흡연은 남녀 모두 불임의 원인이 됨. 간접흡연(second hand smoking)도 마찬가지임. 임신중의 흡연은 유산, 자궁내태아성장지연, 저체중출생아, 태반이상, 태아급사증후군(SIDS;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을 일으킴. 또한 난소를 손상시켜 월경장애, 배란장애로 불임을 초래하고 난소암의 발생률을 2배로 증가시킴. 산모의 경우에는 니코틴이 유즙에 배출되며 유즙분비감소, 신생아 체중감소, 영아의 호흡기질환 증가, 무호흡, 천식, 폐염, SIDS가 발생할 수 있음.
- 약물, 기호식품, 커피, 탄산음료: 여성이 수면제 항정신성 약물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인은 반드시 이것을 밝혀내야 함. 임신에 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물복용을 감소 혹은 끊도록 계획을 세워 치료와 간호를 해야 함. 월경조절을 위한 피임약 등의 호르몬제제의 과량 혹은 장기적인 복용은 불임을 일으킬 수 있고 호르몬체계의 교란으로 PMS 등의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음. 임신중의 호르몬제 복용은 태아기형을 발생 시킬 수 있음.
- 여성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60~120분후에 유즙에서 분비됨. 따라서 어머니가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신생아가 irritable하고 수면장애를 겪음. 카페인만 아니라 탄산음료, 차, 초콜릿 등에도 포함되어 있음. 탄산음료는 칼슘의 섭취를 방해하고 오히려 칼슘을 배출시키므로 태아발육을 위해 임신중에는 금해야 함. 그 외 조미료나 기타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식품과 용기에 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음.
- 여성에게 술 담배 약물의 사용을 사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즉,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음.
  - 임신중에 술이나 담배,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과거에 술이나 담배, 약물복용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 남편이나 파트너가 술, 담배, 약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 당신 부모중의 한사람이 알코올중독인 경우가 있습니까?

〈표〉 ASSESSMENT TOOL: Adult Nutritional Assessment Form

성명:		등록 번호:		
생년월일:	연령:	종교:	직업:	인종:
의사명:	간호사명:	평가날자:		
가족관계:				
현재진단명:				
과거병력:				
체중: 현재체중:		임신전 체중:		
신장:		BMI:		
활동정도: 좌식생활_____		보통정도의 활동_____		활발한 활동_____
건강문제(해당되는 것 모두 check)				
췌장:	삼키기:	보기:	듣기:	활동하기:
혼자 먹기:	식욕부진:	오심구토:	설사(5일 이상):	
음식 알레르기:		먹지 않는 음식:		
최근의 식사처방:		기간:		
간식(언제 무엇을 먹는지 모두 기록할 것):				
임상검사				
Glucose:		BUN:	Albumin:	기타:
1일 3식 식사목록(3일간의 보통 먹는 식사 종류와 양):				
식사와 관련되는 약물복용(laxatives, diuretics, insulin, 등):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비타민/무기질(목록):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한약 혹은 약초:				
필요한 영양소(영양사가 기록함)				
단백질_____g/kg/day		Kcal/kg/day	수분_____cc/kg/day	
작성자 서명_____				

자료: Susan A. Orshan, Maternity, Newborn & Women's Health Nursing, p.93.

- 한가지 질문할 것은, 임부에서 고지방 섭취는 케톤수준(ketones level)을 높이고 혈중 고 케톤수준은 태아의 신경조직을 손상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은데 ‘전지우유 전지방 요구르트를 먹고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기위해 저지방 코티치즈나 무지방 식품 및 후로즌 요구르트는 멀리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 계획임신의 중요성에 우리나라의 전통태교를 소개하고 그 과학성과 현대사회에서 태교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소개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엽산은 기형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고령여성일 경우 임신전(미혼이면 결혼전)부터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종합비타민을 살 때 엽산(folic acid)이 들어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함. 비타민 B군의 섭취는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며 비타민 B12는 엽산의 흡수를 도우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함. 특히 채식주의자들은 육류를 먹지 않으므로 비타민 B12의 결핍이 올 수 있음.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발육에 손상을 주어 무뇌어나 이분척추, 혹은 태아적아구증이 발생할 수 있음. folate(folic acid)는 최소한 임신 1개월 전(늦어도 첫 3개월)부터 복용해야 하며 그 적정량은 다음과 같음.

가임연령의 여성    400 $\mu$ g/일

임신여성            600 $\mu$ g/일

신경관손상의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 4mg/day

- 엽산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특히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엽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오렌지 100g 1개에 엽산 30 $\mu$ g). 비타민 C는 엽산이 산화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 엽산은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산화되어 파괴되기 쉬움(50~90% 파괴). 특히 열에 약하므로 신선한 생과일과 지나치게 열처리하지 않은 채소가(살짝 찌거나 볶은 것) 엽산 공급원으로 좋음.
- 한편 고령임부뿐만 아니라 10대 임신여성을 위한 영양평기도 중요한데 다음을 포함함.

◇ 영양섭취

- 모든 필수아미노산이 포함된 2가지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원
- 비타민 C            - 신선한 과일과 야채            -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통곡류)
- 칼슘원                - 철분    - 열량이 없는 식품
- 낙농지방

◇ 신체적 특성

- 임신전의 신장과 체중    - 임신동안의 체중변화    - 열량불량의 증상과 증후

◇ 임상검사

◇ 활동



- 임부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어 태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성인이 된 후의 질병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태아프로그래밍(fetal programming)의 개념에 의하면 임부의 영양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태아건강을 위해 중요함. 이것은 임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임. 우리나라 전통태교에 “태어나서 좋은 선생에게 받는 10년 공부가 자궁내에서의 어머니의 10달 교육 보다 못하고 자궁 내에서의 10달 교육이 하룻밤 아버지의 정심(正心)만 못하다”고 함. 임신중 어머니의 좋은 영양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태교를 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어머니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임신전부터 태교를 통해 태아프로그래밍을 잘 하면 건강한 어린이, 성인 인재로 자라게 할 수 있음. 최근에는 태교가 다소 왜곡되어 머리 좋은 아기를 출산하기위해 태아기부터 영어나 수학을 학습시키는 부모가 있는 데 이것은 태교가 아님. 태교는 아이가 완성된 인격의 소유자, 즉 군자(君子) 혹은 현인(賢人)으로 자라도록 하기위해 태중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받는 교육이므로 태교는 어머니가 실천하는 것이지 태아에게 직접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임.
- 결론적으로 김영주 교수의 저출산시대의 여성의 임신 전 관리와 태아 건강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가지를 더 보충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침.

#### ○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저자는 낮은 출산율에 대응해 일본이 시행해온 여러 가지 사회정책들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가장 최근의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같은 문제로 시름이 깊은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했음.
- 그간 추진되어온 정책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1)엔젤플랜 (1995-1999년)에서의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 기반 정비, (2)신엔젤플랜 (2000-2004년)에서의 보육상담, 모자 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분야, (3) 아동 육아 응원 플랜 (2005-2009년)에서의 젊은이의 자립과 일과 노동에 관한 의식 개혁까지 포함한 다양한 시책임. (4)금융 위기가 촉발한 국내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안심 플랜임.

- 가장 최근의 안심플랜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플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출산 정책과 관련한 몇가지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함.
- 영유아에 대한 보육 시설 및 서비스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공공 보육 서비스 시설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육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 기제에 맡기는 바우처 형태로 가고 있는가?
- 보육의 질을 시장 기제에 맡기는 바우처 형식의 보육서비스의 확충은 여성 노동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도 못 주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정책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장려에 유효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나, 출산유인을 강화하는 정책은 아닌 듯 보임. 안 낳고 혜택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임.
- “육아 응원 특별 수당”을 마련했다는데, 취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 지원에서 보편적인 아동 수당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가? ‘2015년 시점에서의 비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동 수당의 형태인 듯 보이는데, 이러한 방향 전환에서 사회적 반론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궁금함.
- 우리의 상황은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시각과 보편적인 아동권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음. 서구의 경험으로는 아동 수당의 지급은 여성의 취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지님.
-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강조,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음. 한 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발생 생활 지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출산장려금과 보육비 지원 등의 금전적 유인은 거의 무의미한 듯해 보임.
-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자화 대책 프로젝트팀”의 주요 논의 사항을 보면, 저출산 대책에 젊은층의 연애, 결혼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음. 일본도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저출산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논평자가 보기에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음.

- 자녀가 자립 가능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는지 못했는지로 판가름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것임. 노후보장 동기, 성인 자녀가 늙은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동기는 과거에는 강력했지만 노후생계에 대한 사회 규범은 스스로 내지는 국가가 해결하는 쪽으로 오래 전에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는 점점 상징재, 혹은 사치재가 되어 가고 있음.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실패-자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므로-에 대한 구조적 안전망이 사회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장시간 노동시장 관행을 바꿀 필요 있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 양육에 일정 정도 시간의 지출은 필수적이며, 돈은 일정 정도의 시간과 결합할 때에만 극대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시간과 돈이 완벽한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의 여부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사회적으로 ‘부모노릇’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은데, 이를 충족시킬 시간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인가? 아이를 낳아 놓고 남의 손에 키워야 한다면 누가 낳겠는가?
-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시간’을 어떻게 지원하여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산전 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노동시장 이탈 혹은 방출의 위험이 큰 방법인 듯 보임. 탄력적 근무시간제, 육아기 단시간근로제(최근 도입) 등은 시장노동시간을 유연화하거나 단축하여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러한 옵션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한 결국 부모노릇에 페널티를 가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시장노동참여 못지않게 출산, 즉 아이와의 시간, 교류가 의미와 보람이 있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될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이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근본적 구조의 전환이 있어야 함.

### ○ 백선희(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주여성의 출산율이 외국은 높는데 한국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보다는 취업의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음. 즉,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높을 수 없지 않는가?
-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자가 분석한 두 가지 관점(젠더와 다문화가정문제) 외에 인구학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이주여성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임.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결혼 관련 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은 편임. 경기도 부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센터가 10개정도 있음. 문제는 시설은 많으나 프로그램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점임.
- 국내 이주여성이 약 15만명, 그 자녀들이 7만 5천명정도인데 합해서 20만명에 불과함. 그나마도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왔다가 보다는 취업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하려해도 일하러 나가고 없음. 즉, 공급과잉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결국 많은 정책과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비용대효과 문제를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단순히 사회적 이슈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3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①인도주의적 접근, ②사회보장제도 등과 관련된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 ③수요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이 그것임.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특히 세 번째 접근이 중요하다고 봄. 즉, 인구학적이라 함은 결혼이주자 정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자들은 당장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 □ 토론장

### ○ 소아과전문의

- 포럼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출산율 증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출산율 증가보다는 건강한 육아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가정형성에 대한 젊은 층의 긍정적 사고를 배양, 아빠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동환경의 조성, 사교육 등 교육문제의 해소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단지 수당 등과 같은 금전적·경제적 관점에서는 근본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봄.

### ○ 복지부관계자(손주영사무관)

- 모든 분들이 정책적 측면을 지적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음. 육아는 모자보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박문일교수님께서 모자보건과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정건강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임. 먼저 발표하신 것처럼 출산이 비단 모자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자보건과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함.
- 또, 결혼 전 임신전 관리 가이드 등을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뿐 아니라 학자들의 자문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전문화할 예정임. 사회전체적 변화, 국민의 인식변화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 입장임.

### ○ 어린이집 관계자

-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얼마 전 방문한 복유럽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음. 복유럽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음. 이유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복지혜택의 증가였음. 요컨대, 복지혜택을 통해 증가된 출산율이야말로 국가의 인적 자원 확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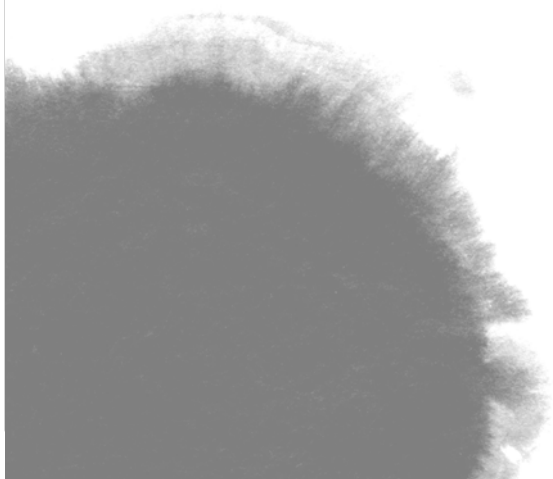
책기조의 변화는 한국에도 충분히 참고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 봄.

- 아울러,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었음. 물론 문화적으로 보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육아환경 정비의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면 보육아동의 포화상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 이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많으나 아동을 직접적으로 배려한 정책은 적음. 정책의 공급대상이 적절한가, 즉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는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육시설 현장의 정비만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모의 의식변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폐회인사(좌장: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 태아건강에 대한 서두 2편의 논문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임. 인공유산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음. 보수주의적인 생각일지 모르나 불법적 인공유산이 국내에서 30~40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만 제대로 통제된다 하더라도 1년에 1만 명의 출산이 가능하게 됨. 이는 수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산모건강, 아동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들은 바 있음. 따라서 본 포럼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별도로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출산문제는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쉽게 바뀌어지지 않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구조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 의식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서도 강한 의지가 중요함. 즉, 예산편성에 있어 어느 분야에 강한 의지를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봄. 이는 복지부 관계자의 과제일 것임.

## 제6차 저출산대책포럼







## 제6차 저출산대책포럼

### 프로그램

#### 주제발표

좌 장: 박상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1: 여성의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이경혜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발표 2: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최은영 (통계개발원 사무관)

발표 3: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발표 4: 저출산 대책과 아동보육 문제  
이 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지정토론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집담회: 저출산대책포럼의 역할과 발전



#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이경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출산률의 저하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19로 일본, 독일 영국 등 OECD 국가 중 출산률 감소가 가장 빠르다(e 나라지표, 2009). 출산률의 변화추이는 2005년에 1.08로 가장 낮았으나, 2007년 1.25로 다소 올라가는 듯 했으나 2009년 다시 1.19로 낮아졌다. 2005년의 1.08보다 2009년의 1.19가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정책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은 2008년에 비해 24.8%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임신 출산 지원과 보육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지원 등이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출산률이 다시 1.19로 낮아진 것은 정책이나 지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여성으로 하여금 아기를 낳지 못하게 혹은 낳지 않게 하는 것일까? 저출산문제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경제적 정치적 차원으로만 접근하였지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저출산과 고령인구대

책' 이라고 하여 저출산을 고령인구와 함께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여성과 아이를 노동생산성과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사회적 도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는 여성이 낳는다. 아무리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여도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가 없다.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 건강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왜 안 낳거나 못 낳는지? 출산이 늦을 때 올수 있는 건강문제를 알고 있는지? 등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출산은 결혼한 여성이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결혼시기와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혼전임신은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가임기여성의 교육 및 상담과 국가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각 요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적정시기에 결혼 및 출산을 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자료를 제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의 계획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출산률 증가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이 원하는 결혼 및 출산시기를 확인한다.
- 2) 여성이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 3) 출산시기가 여성 및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파악한다.
- 4) 여성이 원하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확인한다.
- 5) 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및 서술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세의 가임여성 300명이다. 그러나 자료로서 불충분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대상이 된 대상자는 219명이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참고문헌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보사연의 정책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과 자녀를 갖지 않는 기혼여성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과 출산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지원에 대한 질문은 대상 여성 모두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미혼여성을 위한 6문항 기혼여성을 위한 10문항,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을 위한 2문항, 미혼 기혼여성 모두가 답할 수 있는 문항 10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관 11문항으로 총 44문항이다.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 검정은 여성건강전공 교수와 박사과정학생들이 실시하였으며, 가임여성 3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문항의 적합성과 이해도 소요시간을 검정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도구의 구성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질문하는 11개 문항으로 5단계 Likert 형식이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한다.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검정을 위하여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정을 하였으며 Chronbach Alpha .78 로 비교적 높

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10~15분이 소요되었다.

#### 4. 윤리적 고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고안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설문지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informed consent)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가 끝난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여성은 미혼여성이 134명(61.2%) 기혼여성이 85명(38.8%), 총 219명이다.

연령분포는 최소 20세 최대 50세이며 평균 28.9(SD 7.12)세이다. 미혼여성은 최하 20세 최고 42세, 평균 24.8(SD 4.72)세이며 기혼여성은 최하 24세 최고 45세 평균 35.4(SD 5.23)세이다.

종교는 기독교 74명(33.8%), 천주교 43명(19.6%), 불교 19명(8.7%), 기타 4명(1.80%)이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79명(36.1%)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98명(44.7%), 대졸이 74명(33.8%), 대학원 이상이 47명(21.5%) 이었다.

대상여성의 직업은 학생 82명(37.8%)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68명(31.2%), 회사원 38명(17.5%), 가정주부 13명(6.0%)의 순으로 많으며 그 외 자영업/판매업 3명(1.4%), 서비스업 1명(0.5%), 일일 근로직 4명(1.8%), 순이며 무직이 4명(1.8%), 기타 4명(1.8%)이다. 기혼여성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45명(51.7%)으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판매업 21명(24.1%), 공무원 9명(10.3%), 전문직 6명(6.9%)이다. 그 외 서비스업, 일일근로직이 각 1명(1.1%), 기타 3명(3.4%) 이었다.

대상여성의 소득은 100만원 미만 32명(14.7%), 100~150만원 미만 26명(11.9%), 150~200만원 미만 18명(8.3%), 200~250만원미만이 38명(17.4%), 250~300만원 미만 12명(5.5%), 300만원 이상 23명(10.1%)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70

명(32.1%)이나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자중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남편의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48명(54.5%)이며 250~300만원 미만 16명(18.2%), 200~250만원 미만 12명(13.6%), 150~200만원 미만 8명(9.1%), 100~150만원 미만 3명(3.4%), 100만원 미만인 1명(1.1%)으로 여성의 소득보다는 높으며 300만원 이상이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200만원 이하는 12명(13.6%)에 불과하여 대부분 중산층임을 알 수 있다(표 6-1-1 참조).

〈표 6-1-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평균(표준편차)	빈도(명)	백분율(%)
나이(년)	전체	28.89(7.12)		
	미혼	24.80(4.72)		
	기혼	35.40(5.23)		
종교	기독교		74	33.8
	천주교		43	19.6
	불교		19	8.7
	기타		4	1.8
	없음		79	36.1
학력	고졸 이하		98	44.7
	대졸		74	33.8
	대학원 이상		47	21.5
결혼상태	미혼		134	38.8
	기혼		85	61.2
직업*	전문직		68	31.3
	회사원		38	17.5
	서비스업		1	0.5
	자영업/판매업		3	1.4
	일일근로직/파트타임		4	1.8
	학생		82	37.8
	가정주부		13	6.0
	기타		4	1.8
	무직		4	1.8
본인의 소득 정도*	100만원 미만		32	14.7
	100~150만원 미만		26	11.9
	150~200만원 미만		18	8.3
	200~250만원 미만		38	17.4
	250~300만원 미만		12	5.5
	300만원 이상		22	10.1
	소득없음		70	32.1
남편의 소득 정도** (n=85)	100만원 미만		1	1.2
	100~150만원 미만		3	3.5
	150~200만원 미만		8	9.4
	200~250만원 미만		12	14.1
	250~300만원 미만		16	18.8
	300만원 이상		45	52.9

## 2. 결혼 및 출산시기

미혼여성이 원하는 결혼시기는 최하 24세 최고 41세 평균 29.4세(SD 2.94)이며, 출산시기는 최하 26세, 최고 42세 평균 30.3세이다. 이 연령은 30세 이상 여성 19명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올라갔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여성들이 30세 전에 결혼과 출산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0세 이상 여성들은 원하는 결혼시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대상여성들이 응답하는 이상적인 출산시기는 27.4(SD 1.92)세이며 최하 23세, 최고 35세였다. 연령별로는 26~30세라고 응답한 여성이 167명(87.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23~25세(38명, 18.6%), 31~35세(8명, 3.7%)로 대부분이 30세 이전에 출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 미혼여성이 원하는 출산 시기는 최소 26세, 최대 42세 평균 30.3(SD 2.9)세 이다.

결혼과 출산시기와의 관계를 보면 평균 결혼후 1.6년 후에 출산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결혼생활에 적응된 후에’(42명, 37.5%)가 가장 많으며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다음으로 30명(26.8%)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기를 빨리 갖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이 13명(11.6%)이었는데 이들은 결혼 직후 바로 임신 출산하기를 원하였다. 그 외 직장생활이 안정된 후(6명, 5.4%), 학업이 끝난후(4명, 3.6%), 집장만/자녀교육비 마련후(4명, 3.6%)는 소수였다.

한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첫아이 출산연령을 알아본 결과 평균 28.3세(SD 3.95)이며 원하는 자녀수는 최소 1명, 최대 4명으로 평균 1.96명(SD 0.59)이었다. 기혼 여성 응답자 중 둘째아이를 가졌거나 가지기를 원하는 여성이 61명(80.3%)이며 원하지 않는 여성은 15명(19.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30세 이전에 2명 정도의 자녀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알아보기 위해 자녀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평균 3.43(SD .55)점으로 긍정적이었다. 이중 가장 높은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4.64)이며, 가장 낮은 것은 '자녀는 나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2.72, SD1.01),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2.78 SD1.11) 로 자녀를 갖는 것이 수단이나 목적보다는 부모가 되는 것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표 6-1-2 참조).

〈표 6-1-2〉 자녀에 대한 가치관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4.64	0.66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4.35	0.77
3)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4.20	0.92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03	0.98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78	1.11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3.25	1.16
7) 자녀는 나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	2.72	1.01
8) 자녀는 나의 자아성취에 제약이 된다.	3.09	1.05
9) 자녀는 나의 직업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3.19	1.06
10) 자녀를 갖는 것은 나의 체력을 허약하게 한다.	3.32	1.09
11) 자녀를 갖는 것은 나의 신체이미지(몸매)를 손상시킨다.	3.29	1.15
총점	3.43	0.55

#### 4.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이유

미혼여성 응답자 134명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응답이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62명)이며, 다음이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55명), '결혼상대가 없어서'(42명)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결혼자금마련을 위해'(18명), '직장생활 지속을 위해'(6명), '가족부양(3명)의 이유는 소수였다. 그러나 독신이 좋아서도 4명이나 되었다.

연령분포별로 결혼을 못한 혹은 안한 이유를 살펴보면, 24세 이하 미혼여성 134명중 54명이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고, 36명이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19명이 '결혼상대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4세 이하의 미혼여성은 대부분이 학생이고 아직 연령이 적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적령기인 25~29세 여성이 결혼을 못하거나 안한 이유는 '결혼상대자가 없

어서'가 16명,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0~34세도 '결혼상대가 없어서'가 4명,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4명,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 4명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은 '결혼상대가 없어서'가 4명이며,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2명, 그 외 '독신이 좋아서', '결혼자금 마련'이 각 1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혼여성이 결혼을 못하거나 안하는 이유는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결혼상대가 없어서'가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는 주로 24세 이하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결혼적령기 여성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와 '결혼상대가 없어서'로 압축된다.

## 5. 아기를 원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

미혼여성 중 결혼 후 아기를 원하는 여성이 116명(86.6%), 원하지 않는 여성이 18명(13.4%)이었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가 11명(61.1%)으로 많고 25세~29세가 4명(22.2%), 30~34가 3명(16.7%)이며 35세 이상은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를 원하지 않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아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아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직업과 자기발전에 방해가 되므로'(7명)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와 '아기를 싫어하므로'가 각 3명,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와 '부모노릇 할 자신이 없어서'가 각 1명으로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은 아기보다 자신의 '직업과 자기발전'을 더 우선하였다.

기혼여성이 자녀가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 응답자 15명중 '나이가 많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가 4명(28.6%)으로 가장 많고, '부부 중 한사람이 불임으로' 2명(14.3%),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을 할 수 없음', '부부간의 불화로 떨어져 있어 임신할 수 없음',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음' 이 각 1명(7.1%)이었으며 기타가 5명(35.7%)이었다. 기타에는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 '부부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천천히', '앞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나이 많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불임', '이유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를 합하면 전체의 50%가 불임이나 불임가능성으로 임신·출산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 중 둘째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는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가 3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돌봐줄 사람이나 맡길 곳이 없어서’(15명),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12명)였다. 그 외 ‘건강상의 이유’가 5명이며,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가 4명, 기타가 4명이었다. 기타에는 둘째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보다는 낳을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하늘에 맡김’, ‘아이가 생기지 않음’, ‘나이가 많아서’, ‘불임’ 등의 이유로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 중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44명(5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편 18명(21.4%), 본인 17명(20.2%)으로 비슷하며 시부모(2명, 2.4%), 친정부모(1명, 1.2%), 친척/친구(1명, 1.2%)는 소수였다. 이러한 결과로 출산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출산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기혼여성에게 ‘자녀출산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2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임신 출산의 어려움’ 17명, ‘자녀교육/사교육비 부담’ 17명, ‘경제적 능력’ 15명, ‘자녀양육 능력’ 11명, ‘탁아시설 지원 없음’ 9명이었으며, 그 외 ‘사회적/국가적 지원 없음’(5명), ‘건강’(4명), ‘남편이 도와주지 않음’(3명)을 들고 있다.

## 6. 여성의 임신 출산시기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대상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늦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미혼여성은 115명이 응답하였는데, 중복응답을 고려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게 나쁠 것 같다’, ‘건강문제’, ‘아기가 위험 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응답한 경우가 55명이며, ‘다운증후군 위험’, ‘기형아 출산’, ‘임신 합병증’, ‘수술 위험’ 등 구체적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42명이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노후문제, 부모와의 세대차이 등 가족적인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이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6명이 있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74명이 응답하였는데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후가 힘들다’, ‘체력이 달릴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교육문제', '뒷바라지가 힘들고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 등 가족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응답한 경우가 3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산모의 임신중 합병증이나 유산, 조산, 난산, 아기의 기형문제를 언급한 경우는 15명에 불과했으며 별문제 없다는 응답도 4명이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상여성들은 출산이 늦어지면 막연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나이와 임신율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중 임신과 출산에 따른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24명(29.3%)이며 '없었다'는 응답자가 58명(70.7%)이었다. 건강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자에게 어떤 건강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유산이 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에 심한 입덧 6명, 난산과 제왕절개 분만이 4명, 조기진통이 4명, 산후회복이 늦음이 3명 이었다. 그 외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인공수정 등이 각 2명이며, 산후 출혈, 조산, 저체중아 분만, 신생아상태 나쁨이 각 1명, 기타가 5명 이었다.

## 7.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지원

### 1) 출산장려지원금

국가나 사회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안다'는 응답자가 173명(79.7%), '모른다'는 응답자가 44명(20.3%)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중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6명(42.3%)로 많으며, '도움이 안 된다'가 31명(36.5%),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18명(21.2%)에 불과하였다.

### 2) 결혼을 위한 직장의 지원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60명)와 '산전 산후 유급휴가지원'(52명)이 비교적 많고, '출산 육아 휴가 이후 복귀지원'(30명), '남편의 출산·육아관련 휴가'(10명), '근로형태의 유연

화’(10명), ‘가족친화적 직장문화’(2명)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원 없음’이 87명으로 가장 많아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결혼을 못하는 미혼여성의 결혼을 돕기 위해 직장/사회/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84명이 응답(중복응답 허용)하였는데, ‘사내 결혼 장려/사내결혼 불이익 없앰’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내부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7명), ‘미혼 남녀의 만남의 기회 마련’(40명), ‘사내 결혼 컨설턴트 제도마련’(19명)이며 결혼을 위한 ‘외국남성 이민정책’도 2명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에 응답한 40명 중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한 27명의 의견을 들어보면 13명이 ‘직장 내 탁아 및 보육시설확대’, 6명이 ‘결혼 후 직장내 차별 없애기’, ‘사내결혼 뿐만 아니라 기타 결혼 불이익 없앰’ 등을 원했으며, 7명이 ‘경제적 지원’, 2명이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2명이 ‘결혼 후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지원해 줄 것을 원하였다. 기타의 의견까지 합하면 ‘사내결혼 불이익 없애기’가 83명으로 여성이 결혼을 함으로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출산을 위한 국가지원

출산을 돕기 위해 직장/사회/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89명(미혼 117명, 기혼 72명)의 대상자가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자필로 응답한 내용을 유목화하여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경제적 지원’으로 84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에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하여 탁아 및 보육비지원, 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원, 세금면세 등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명의 자녀라도 지원해 줄 것과, 일용직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보육 및 탁아시설 지원’으로 73명이 응답하였다. 특히 직장 내 탁아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양육환경을 가진 보육시설, 밤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24시간 탁아소 운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는 ‘유급 출산 및 육아휴가 지원’을 52명이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넷째 ‘출산 후 직장복귀지원’으로 15명이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휴직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이나 눈치 안 주기, 출산 육아휴가 후 복직보장, 복직후 교육 등 출산후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섯째 ‘육아에 대한 남편과의 공동부담’, ‘가족이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4명이었다. 그 외 의료비 지원, 출산여성 취업지원, 양육도우미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 8.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결혼상대자 및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음

미혼여성이 결혼이 늦는 주된 이유는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상대자가 없어서’ 이다. 이중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는 대학졸업을 하지 않은 24세 이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2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결혼상대자가 없어서’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주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결혼하고 싶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여성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내결혼장려/사내결혼 불이익 없앰, 사내부부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미혼남녀의 만남의 기회 마련, 사내 결혼 컨설턴트 제도 마련이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방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 2) 연령으로 인한 불임 및 불임 가능성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연령과 그에 따른 불임 및 불임 가능성이다. 연령은 불임의 주요 요인이다(Orshan, 2008). 미혼여성의 86.4%가 결혼후 아기를 갖기 원하고, 35세 이상의 미혼여성도 전원이 아기를 원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율은 20대가 가장 높고 그 후 점차 감소한다(Orshan, 2008). 이것은 기혼여성중 28.6%가 나이가 많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여성을 합하면 50%가 연령으로 인한 불임이나 불임의 가능성

을 갖고 있다. 이것은 기혼여성이 둘째 아기를 원하나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연령과 임신률에 대한 교육,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생식생리와 임신을 방해 하는 요인에 대한 교육, 여성의 일생을 통해 학업-일-결혼-임신/출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 및 실천을 제안한다.

### 3) 직업과 자기발전 방해

미혼여성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18명(13.6%)으로 소수였지만, 아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기가 ‘직업과 자기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가장 많다. 특히 24세 이하에서 많고(5명), 30~32세에 2명, 35세 이후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24세 이하의 미혼여성은 나이가 적으므로 결혼보다는 직업생활과 자기발전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과 자기발전이 출산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업과 자기발전에 방해’ 요인은 30세 이전의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 출산을 원할 때는 결혼과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여성들은 출산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연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산연령을 고려하여 학업, 직업, 결혼과 임신 등 인생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임신을 이 높을 때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 4)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에게 출산을 돕기 위해 직장/사회/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육아에 대한 남편의 공동부담’을 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기혼여성에게 있어 가사와 육아는 완전히 여성의 부담이다. 비록 남편이나 가족이 도와준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 모든 책임은 여성(어머니)에게 있다(이경혜, 2005). 그러므로 기혼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편의 출산 및 육아 휴가제도와 남편의 가사일 분담을 제안한다.

## 5) 아기 맡길 곳이 없음

여성이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은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탁아소나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기혼여성이 둘째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중요한 이유가 아기를 돌볼 사람이나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상여성들은 직장/사회/국가에 대해 ‘보육 및 탁아시설 지원’, ‘출산 및 육아휴가기간의 연장’과 ‘휴가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내 탁아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국가에서 시설과 양육 및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탁아 및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탁아시간의 연장 혹은 24시간 탁아시설 운영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직장과 국가는 탁아시설의 유무와 수를 늘리는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제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탁아소 및 보육시설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6) 경제적 부담

기혼여성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자녀양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경제적 능력, 자녀양육능력을 들고 있다. 미혼여성도 아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와 ‘부모노릇 할 자신이 없어서’를 들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출산에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출산을 돕기 위한 직장/사회/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84명)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의 확대지원(한명의 출산이라도), 탁아 및 보육비 지원, 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원, 일용직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것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대상자가 중산층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산층에 대한 국가 사회의 지원을 강력히 제안한다. 또한 현재 3명 이상의 출산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한 명의 출산아에게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 7) 출산여성에 불리한 직장 문화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하나 아직도 가부장사회의 직장 문화



를 갖고 있다(이자형, 2005). 직장의 내규나 근로조건에는 남녀차별이나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도 결혼, 출산은 곧 퇴직이라는 불문율이 있어 대상여성들은 출산 후 직장에서의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 사회,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눈치안주기,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직장 복귀 후 재교육, 출산여성의 취업지원 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한 직장문화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 사회 국가는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를 없애고, 출산여성의 직장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할 것과 출산여성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인센티브의 일부를 담당하고 직장에 대한 강제성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IV. 논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의 주체자인 여성들에게 “왜 여성들은 아기를 낳지 않는가? 혹은 못 낳는가?”에 대한 질문과 국가의 정책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았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를 노동 생산성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노령인구 부양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므로 저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복지부(2008)의 보도자료에서도 ‘여성의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원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미혼여성의 86.6%가 결혼후 아기를 갖기 원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3.43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이었다. 이것은 여성신문사에서 조사한 “2030 여성 54% 아이낳고 싶다(www.career.co.kr)” 보다 높으며, 복지부의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48.6%(2008, 보도참고)”보다 높다. 특히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가 가장 높고 ‘자녀는 나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보아 자녀를 갖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아이자체가 중요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기쁘고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적은 수(18명)이기는 하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직업과 자기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24세 이하의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고(61.1%),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 때는 직업과 자기발전을 중요시 하나 나이가 들면 아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KAIST 대학 2학년 학생은 학업-일-직장생활과의 관계에서 “차라리 출산을 포기하겠다”라고 한다(조선일보, 2009.06.11). 그러나 35세가 넘는 여성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부른 여자가 가장 부럽다”라고 한다(김춘숙, 2008).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직업과 자기발전은 젊은 연령의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어느 정도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20대 연령에서는 직업과 자기발전으로 결혼과 임신을 원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결혼과 임신을 원하나 이때는 결혼상대가 없고 결혼을 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임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연령이 임신/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 막연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뿐 임신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자의 질(quality)이 떨어지며 35세부터는 수정률이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유산, 조산, 임신중독증 등의 임신합병증과 난산으로 인한 제왕절개술, 출혈, 감염 등 출산합병증을 증가시킨다.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저출생 체중아, 다운증후군, 각종 발달 장애아를 분만할 가능성이 높다(이경혜, 이영숙, 2004). 뿐만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술, 담배, 약물 등 임신과 출산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불임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연령은 불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Orshan, 2008).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된 7가지 요인과 그에 따른 대책은 정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시한 것과 거의 같다. 이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프랑스의 모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실재 조사대상 여성들은 이러한 정책을 모르고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여성은 많았으나(79.7%)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49.32%,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 30.32%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홍보용으로 그칠 뿐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출현의 저출산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책만 있을 뿐 시행은 미미하다. 시행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을 뿐 중산층까지는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을 통한 지원도 공무원이나 일정한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뿐 일일 근로자, 비정규직, 판매직, 개인사업가 등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맞벌이일 경우도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직장의 지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일 경우 지원을 권장할 뿐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현안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다(유해미,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대책을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라도 전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과 일정액의 양육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첫아이부터 지급하는 것, 여성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의무적으로 24시간 탁아소를 운영하는 것 등이다. 예산 상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 65세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래의 국민인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의 지출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출산하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 이상이다. 기업도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둘째, 중산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중산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로서 곧바로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워킹푸어 300만명시대’, 조선일보 2009.7.25).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이가 오히려 짐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다행한 것은 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 ‘애 안 낳는 중산층’이란 기사(중앙일보, 2009.11.16)에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시행결과를 기대해 본다.

셋째, 출산여성에 불리한 직장분위기를 없애고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영업 이익을 올리는 그 이상이다. 당장 기혼여성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기혼 혹은 출산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 당장의 어려움을 참고 기혼 출산여성을 격려해 주는 직장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결혼과 직장 내 탁아시설

을 한 후 생산성과 영업실적이 더 올랐다는 보도가 있다. 기혼 출산여성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직장맘, 업무시간 줄이고 사내커플 같은 지역근무’, 중앙일보, 2009.06.19).

넷째,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가져 임신과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피하도록 예방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장여성이 직장일로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없을 때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여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만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없고, 자녀를 갖고 싶으나 경제적 부담과 아기 맡길 곳이 없어 출산을 망설이게 되며, 늦은 결혼 연령은 불임과 불임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하였으며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 홍보에 그치고 있어 전시행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며, 실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시행에 따른 평가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 중 하나라도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우선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모든 출산여성에게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 스스로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학업-일-결혼-임신/출산에 관한 인생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원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 제언

첫 번째는 여성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김춘숙(2008).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과.
- 유해미(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vol 39, 국회입법조사처.
- 이경혜, 여옥남(2003). 출산장려정책과 조산사의 역할. 부모자녀건강학회지, 6(1), pp.59-69.
- 이경혜, 이영숙(2004). 여성건강간호학 I. II. 서울: 도서출판 현문사.
- 이자형, 이경혜, 엄재정, 노부꼬 히라다, 유꼬 히라노(2005). 한국과 일본 기혼간호사의 성역할 스트레스. 질적연구, 6(2), pp.1-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e-나라지표, 출생 사망 추이,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Karen Benzies, Suzanne Tough, Keren Toffemire, Corine Frick, Alexandra Faber, and Christine Newburn-Cook(2006). Factors Influencing Women's Decisions about Timing of Motherhood, *JOGNN*, 35(5), pp.625-633.
- Orshan, Susan A. Maternity(2008). *Newborn and Women's Health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최은영·박영실(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 1. 서론

실제의 출생이수에 기초한 현실적인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 출산력(fertility)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subpopulation group)별로 다르며, 지역별로도 다르다. 인구학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차별 출산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출산력 감소의 현황과 인과구조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적실한 자료에 기반하여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과 지역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출산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출산력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이 어떻게, 어떠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 출산력을 통해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원인을 살펴 보았다. 정책은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행위로, 정책 대상이 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 인구 집단의 출산력 변화를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큰 차이가 나므로, 이를 고려한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혼인·출산을 선택했는지 혹은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의해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 유배우율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기혼 유자녀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있어 다른 선택을 한 집단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 간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미혼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결혼관계대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비혼 집단의 증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미혼 여성·기혼무자녀 여성·기혼유자녀 여성·기혼무자녀 남성·기혼유자녀 남성으로 구분하여 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았다. 유사한 사회적 계급과 직업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출산율을 보이기 때문에 출산율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Boyle, 2003).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별 차별 출산력은 지역유형별 혹은 시도별이었으며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인 기초자치단체별 출산력 연구가 부재하였다. 지역별 차별 출산력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력 감소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을 설정 가능하게 해주는 등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과 2000~2007년 인구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구동향조사의 경우, 당해 연도에 출생이 이루어진 가구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출산력의 변화 추세와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특성상 지난 시기 동안의 출생에 관한 누층적인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장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와 모의 정보 등 부가적인 변수가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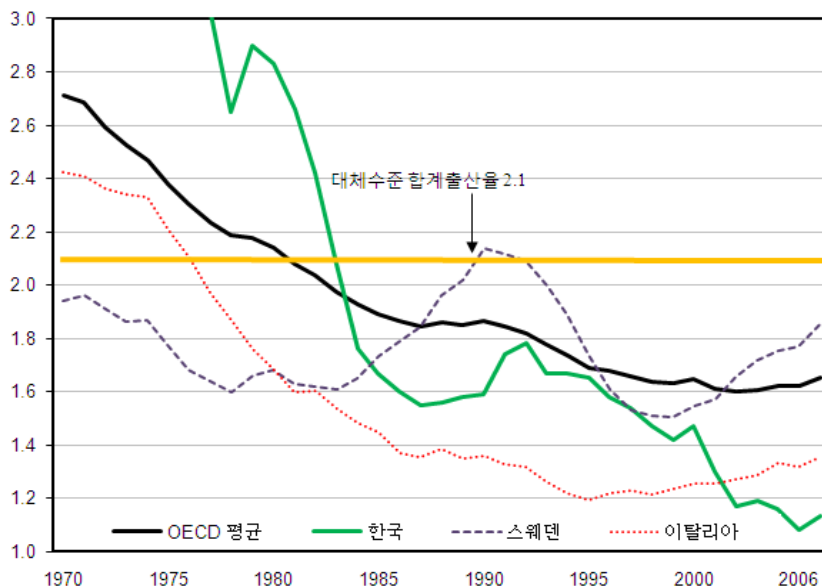


## II. 출산력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출산력 변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990년대 이후 북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현재 거의 2명에 가깝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다(Chesnais, 1996; MacDonald, 2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며, 또한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한국·일본·이탈리아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2-1 참조).

[그림 6-2-1]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6)



## 2. 출산율의 변화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2-1 참조).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에 2.94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2.13명, 2005년에는 1.74명으로 하락하였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더라도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평균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2-1〉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1980~2005년)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2000년	2005년
전체	3.59	3.26	2.97	2.54	2.43
15~49세	2.94	2.52	2.13	1.81	1.74

출처: 권태환(2008).

주: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출생아수를 조사하지 않았음.

모의 연령대별로 출생아수와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다자녀 비율은 증가하였다(표 6-2-2 참조). 한자녀 비율이 20~29세까지는 60% 이상이었으나, 30~34세는 34.3%, 35~39세는 1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5~59세에는 9.5%였다. 다자녀 비율은 35~39세 13.7%, 45~49세 19.3%, 55~59세 53.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20~30대는 아직 출산이 진행 중인 연령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한자녀 비율이 감소하고, 두자녀와 다자녀 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4세 여성과 45~49세 여성의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한자녀 비율은 15.5%로 일정한 반면 40~44세 여성에서 다자녀 비율이 감소한 만큼 두자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50대 여성에서는 이러한 두자녀 비율과 다자녀 비율의 상쇄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표 6-2-2〉 모의 연령대별 출생아수와 비율

구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20~24세	3,164	77.4	870	21.3	55	1.3
25~29세	24,698	61.7	14,113	35.2	1,232	3.1
30~34세	43,989	34.3	74,654	58.2	9,717	7.6
35~39세	28,425	17.4	112,898	69.0	22,355	13.7
40~44세	27,425	15.5	122,310	69.2	26,944	15.3
45~49세	26,711	15.5	112,548	65.2	33,394	19.3
50~54세	12,748	10.9	62,581	53.3	41,979	35.8
55~59세	5,050	9.5	19,580	36.7	28,675	53.8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 III.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배우자의 차별 출산력 변화

#### 1.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 출산력

연령 변수의 고려없이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자료를 연령대별로 분해해 보면 25~29세에서 45~49세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산이 완결되었다고 보여지는 40~44세 집단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다(표 6-2-3 참조).

〈표 6-2-3〉 성 및 연령 및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자	초졸 이하	1.28	1.73	2.00	2.10	2.31	2.67	2.99
	중졸	1.33	1.72	1.98	2.00	2.08	2.32	2.56
	고졸	1.03	1.63	1.92	1.95	1.95	2.11	2.31
	대졸	0.63	1.34	1.80	1.91	1.88	2.00	2.17
	대학원졸 이상	0.48	1.07	1.65	1.83	1.85	1.97	2.09
남자	초졸 이하	1.04	1.42	1.74	1.95	2.09	2.38	2.82
	중졸	1.09	1.47	1.81	1.95	2.05	2.22	2.57
	고졸	0.76	1.34	1.80	1.97	1.98	2.08	2.36
	대졸	0.48	1.06	1.69	1.93	1.96	2.00	2.20
	대학원졸 이상	0.41	0.98	1.66	1.93	1.99	2.06	2.24

이 연령대 여성의 경우, 초졸의 평균 출생아수는 2.10명, 대학원졸은 1.8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남성의 경우 초졸이하의 평균 출생아수는 1.95명, 대학원졸은 1.93명으로 차이가 미미한 편이다.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시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해 보면, 장기 동향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6-2-4 참조). 2000~2007년 사이에 초졸과 대졸이상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여성은 0.59명에서 0.19명으로, 남성은 0.42명에서 0.2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출생아수의 감소폭이 대졸이상보다 초졸에서 컸기 때문이다. 2000~2007년 사이 고졸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소 증가하고 대졸이상의 감소 정도가 미미한 반면 초졸이나 중졸과 같은 저학력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6-2-4〉 성 및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0~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여자	무학	1.97	2.00	2.00	1.73
	초졸	2.12	2.00	1.92	1.70
	중졸	1.97	1.89	1.79	1.65
	고졸	1.69	1.70	1.71	1.70
	대졸 이상	1.53	1.51	1.50	1.51
남자	무학	2.01	2.00	1.94	1.92
	초졸	2.01	1.98	1.96	1.76
	중졸	1.85	1.80	1.79	1.74
	고졸	1.67	1.67	1.68	1.67
	대졸 이상	1.59	1.56	1.54	1.53

주: 교육수준이 미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 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출산력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실업자에 비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6-2-5 참조). 하지만 취업자와 비경활인구의 평균출생아수는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취업자가 비경활

인구보다, 남성은 비경활인구가 취업자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많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현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여성의 경우 주 출산 연령층인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비경활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많았으나, 4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미취업 여성의 출생아수가 취업 여성의 출생아수보다 많다는 기존 연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6-2-5〉 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여자		남자	
	인구수	평균 출생아수	인구수	평균 출생아수
취업자	411,368	1.93	712,851	1.88
실업자	11,905	1.61	16,015	1.83
비경활인구	495,944	1.88	57,931	1.99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표 6-2-6〉 성 및 연령 및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자	취업	0.62	1.42	1.88	1.98	2.07	2.42	2.86
	실업	0.30	0.91	1.57	1.69	1.81	2.04	2.30
	비경활	1.10	1.62	1.91	1.95	1.98	2.23	2.53
남자	취업	0.68	1.23	1.76	1.96	2.00	2.15	2.51
	실업	0.67	1.17	1.61	1.85	1.89	2.02	2.30
	비경활	0.55	1.09	1.61	1.83	1.87	2.05	2.39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 3. 직업에 따른 차별 출산력

직업별 차별 출산력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농림어업직군이었으며, 가장 적은 직업군은 여성 관리·전문직군, 남성 사무직군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단, 완결 출산력을 보

여주는 40~44세, 45~49세 집단의 경우 농림어업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 사이의 차이는 미미한 편이었다(표 6-2-7 참조).

〈표 6-2-7〉 성 및 연령 및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자	관리·전문직	0.49	1.22	1.77	1.89	1.89	2.03
	사무직	0.55	1.33	1.82	1.93	1.96	2.13
	서비스·판매직	0.84	1.57	1.89	1.96	2.01	2.25
	농림어업직	1.58	2.08	2.30	2.33	2.53	2.99
	기능·노무직	0.87	1.67	1.93	1.97	2.03	2.32
	학생·가사·무직	1.09	1.61	1.90	1.94	1.98	2.23
남자	관리·전문직	0.52	1.10	1.71	1.95	1.98	2.05
	사무직	0.58	1.15	1.71	1.94	1.98	2.06
	서비스·판매직	0.69	1.26	1.77	1.96	1.98	2.09
	농림어업직	1.09	1.64	1.98	2.18	2.29	2.58
	기능·노무직	0.82	1.38	1.81	1.95	1.97	2.09
	학생·가사·무직	0.58	1.11	1.61	1.83	1.88	2.04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농림어업직군에서 높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인구동향조사 자료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비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기는 하나, 2000~2007년 사이에 이 직업군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폭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6-2-8 참조).

〈표 6-2-8〉 성 및 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0, 2003, 2005, 2007년)

(단위: 명)

구분	여자				남자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관리·전문직	1.50	1.44	1.42	1.42	1.63	1.58	1.57	1.55
사무직	1.42	1.40	1.39	1.39	1.60	1.57	1.55	1.54
서비스·판매직	1.69	1.56	1.54	1.51	1.69	1.66	1.66	1.64
농림어업직	2.22	2.19	2.08	1.95	1.98	1.93	1.94	1.84
기능·노무직	1.48	1.46	1.43	1.38	1.69	1.68	1.67	1.65
학생·가사·무직	1.66	1.65	1.64	1.63	1.53	1.52	1.55	1.56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 IV.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의 선택과 유배우율의 감소

### 1. 교육수준의 차별성

미혼 여성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미혼 여성, 기혼무자녀 여성, 기혼유자녀 여성 순으로 대졸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이 높아 질수록 기혼무자녀 여성의 대졸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미혼 여성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미혼 여성의 대졸·대학원졸의 고학력 인구 비율은 기혼무자녀 남성이나 기혼유자녀 남성과 유사하거나 더 높다(표 6-2-9 참조).

〈표 6-2-9〉 연령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교육수준(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자						남자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29세	초졸	62	0.3	30	0.4	183	0.5	5	0.2	51	0.4
	중졸	186	0.9	82	1.2	664	1.7	28	1.0	251	1.9
	고졸	10,968	55.9	4,394	65.5	30,391	75.9	1,884	67.4	9,800	73.3
	대졸	7,823	39.9	2,039	30.4	8,324	20.8	821	29.4	3,052	22.8
	대학원	578	2.9	163	2.4	481	1.2	59	2.1	211	1.6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34세	초졸	75	0.6	81	0.8	593	0.5	25	0.3	195	0.3
	중졸	199	1.7	203	2.1	2,368	1.8	102	1.1	936	1.2
	고졸	6,990	60.5	5,658	58.9	91,168	71.0	4,605	50.6	46,790	61.0
	대졸	3,771	32.7	3,243	33.7	31,810	24.8	3,782	41.6	25,534	33.3
	대학원	510	4.4	429	4.5	2,421	1.9	578	6.4	3,309	4.3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39세	초졸	86	1.3	170	2.9	2,262	1.4	71	1.2	649	0.5
	중졸	263	4.0	416	7.1	8,205	5.0	210	3.4	2,776	2.2
	고졸	3,932	60.5	3,747	64.2	113,310	69.2	3,342	54.3	72,733	56.4
	대졸	1,932	29.7	1,327	22.7	37,188	22.7	2,194	35.7	47,167	36.6
	대학원	289	4.4	173	3.0	2,713	1.7	333	5.4	5,543	4.3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44세	초졸	163	4.2	445	8.9	9,640	5.5	266	6.2	3,257	2.2
	중졸	348	9.1	886	17.7	24,945	14.1	503	11.7	9,128	6.1
	고졸	2,041	53.1	2,930	58.4	110,004	62.3	2,420	56.1	83,040	55.1
	대졸	1,089	28.4	671	13.4	29,799	16.9	973	22.6	49,139	32.6
	대학원	200	5.2	84	1.7	2,291	1.3	148	3.4	6,211	4.1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49세	초졸	245	8.8	809	17.4	25,290	14.6	497	13.6	9,414	6.3
	중졸	376	13.4	1,126	24.2	41,981	24.3	656	17.9	19,783	13.2
	고졸	1,430	51.1	2,184	47.0	86,894	50.3	1,870	51.1	80,125	53.3
	대졸	580	20.7	462	9.9	16,934	9.8	555	15.2	35,341	23.5
	대학원	167	6.0	68	1.5	1,554	0.9	85	2.3	5,593	3.7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주: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 2년 이상의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 2. 경제활동상태의 차별성

연령대별로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여성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6-2-10 참조). 미혼 여성과 기혼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각각 25~29세 78.3%, 25.7%, 30~34세 76.7%, 33.8%, 35~39세 71.4%, 44.3%로,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2-10〉 연령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29세	취업	15,358	78.3	3,549	52.9	10,294	25.7	2,559	91.5	12,594	94.2
	실업	826	4.2	192	2.9	142	0.4	63	2.3	238	1.8
	비경활	3,433	17.5	2,967	44.2	29,607	73.9	175	6.3	533	4.0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34세	취업	8,859	76.7	5,032	52.3	43,369	33.8	8,427	92.7	73,432	95.7
	실업	577	5.0	334	3.5	656	0.5	188	2.1	1,154	1.5
	비경활	2,109	18.3	4,248	44.2	84,335	65.7	477	5.2	2,178	2.8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39세	취업	4,644	71.4	2,932	50.3	72,523	44.3	5,586	90.8	123,097	95.5
	실업	404	6.2	261	4.5	1,733	1.1	158	2.6	1,882	1.5
	비경활	1,454	22.4	2,640	45.3	89,422	54.6	406	6.6	3,889	3.0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44세	취업	2,623	68.3	2,456	49.0	90,046	51.0	3,747	86.9	141,833	94.1
	실업	222	5.8	192	3.8	2,291	1.3	136	3.2	2,681	1.8
	비경활	996	25.9	2,368	47.2	84,342	47.7	427	9.9	6,261	4.2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49세	취업	1,726	61.7	2,159	46.4	86,059	49.8	3,028	82.7	137,361	91.4
	실업	154	5.5	151	3.2	2,571	1.5	131	3.6	3,185	2.1
	비경활	918	32.8	2,339	50.3	84,023	48.7	504	13.8	9,710	6.5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주: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 2년 이상의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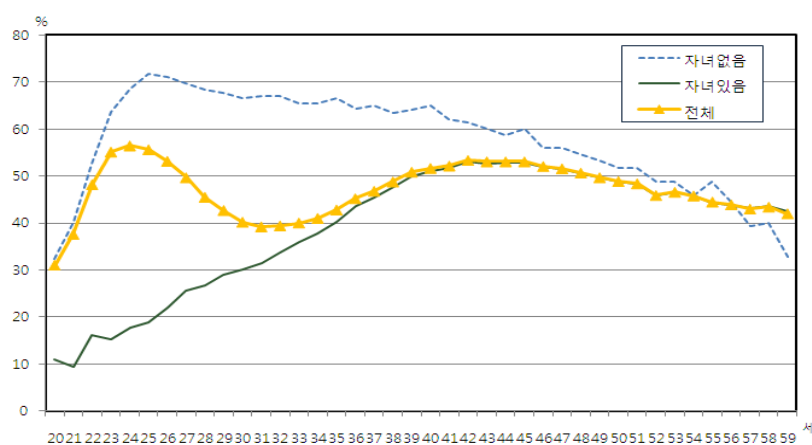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출산·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 세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2-2 참조). 전체적으로는 M자형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



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25세부터 50세 이전까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되는데 반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20대 이후 4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에서 그 차이가 크다. 주 출산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형재, 2008).

[그림 6-2-2]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각 세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 3. 직업의 차별성

연령대별로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을 살펴보면, 직업 미혼 여성, 기혼무자녀 여성, 기혼유자녀 여성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은 차별적이었다(표 6-2-11 참조).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학생, 가사, 무직군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미혼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혼유자녀 여성과 그 차이가 큰데, 30~34세 여성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미혼 여성의 경우 각각 27.4%, 21.7%인데 비해 기혼유자녀 여성은 9.7%, 9.4%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2-11〉 연령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29세	관리전문직	6,365	32.4	1,254	18.7	3,202	8.0	625	22.3	2,429	18.2
	사무직	4,572	23.3	1,296	19.3	3,445	8.6	526	18.8	2,237	16.7
	서비스판매직	3,452	17.6	665	9.9	2,284	5.7	436	15.6	1,872	14.0
	농림어업직	9	0.0	23	0.3	304	0.8	12	0.4	183	1.4
	기능노무직	907	4.6	297	4.4	1,007	2.5	874	31.2	5,247	39.3
	학생가사무직	4,304	21.9	3,169	47.2	29,775	74.4	247	8.8	789	5.9
	미상	8	0.0	4	0.1	26	0.1	77	2.8	608	4.5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34세	관리전문직	3,162	27.4	1,865	19.4	12,500	9.7	2,826	31.1	20,060	26.1
	사무직	2,503	21.7	1,513	15.7	12,021	9.4	2,067	22.7	16,194	21.1
	서비스판매직	2,524	21.9	1,141	11.9	11,864	9.2	1,249	13.7	10,921	14.2
	농림어업직	9	0.1	72	0.7	1,401	1.1	69	0.8	1,009	1.3
	기능노무직	627	5.4	419	4.4	5,473	4.3	2,072	22.8	23,590	30.7
	학생가사무직	2,716	23.5	4,601	47.9	85,074	66.3	704	7.7	3,434	4.5
	미상	4	0.0	3	0.0	27	0.0	105	1.2	1,556	2.0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39세	관리전문직	1,574	24.2	751	12.9	16,503	10.1	1,630	26.5	34,741	27.0
	사무직	1,048	16.1	570	9.8	13,669	8.4	1,101	17.9	26,075	20.2
	서비스판매직	1,527	23.5	980	16.8	24,832	15.2	852	13.9	18,869	14.6
	농림어업직	9	0.1	131	2.2	3,645	2.2	168	2.7	2,807	2.2
	기능노무직	465	7.2	491	8.4	13,684	8.4	1,796	29.2	39,281	30.5
	학생가사무직	1,876	28.9	2,910	49.9	91,327	55.8	579	9.4	5,976	4.6
	미상	3	0.0		0.0	18	0.0	24	0.4	1,119	0.9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44세	관리전문직	874	22.8	406	8.1	14,676	8.3	790	18.3	38,446	25.5
	사무직	449	11.7	307	6.1	11,186	6.3	487	11.3	24,846	16.5
	서비스판매직	966	25.1	992	19.8	35,390	20.0	564	13.1	21,160	14.0
	농림어업직	26	0.7	206	4.1	7,819	4.4	253	5.9	6,433	4.3
	기능노무직	296	7.7	534	10.6	20,761	11.8	1,627	37.7	49,582	32.9
	학생가사 무직	1,229	32.0	2,570	51.2	86,833	49.1	580	13.5	9,240	6.1
	미상	1	0.0	1	0.0	14	0.0	9	0.2	1,068	0.7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49세	관리전문직	571	20.4	263	5.7	8,961	5.2	576	15.7	34,038	22.7
	사무직	250	8.9	176	3.8	7,515	4.4	284	7.8	18,961	12.6
	서비스판매직	630	22.5	929	20.0	35,241	20.4	466	12.7	20,686	13.8
	농림어업직	32	1.1	231	5.0	12,873	7.5	312	8.5	11,495	7.7
	기능노무직	230	8.2	550	11.8	21,266	12.3	1,367	37.3	51,125	34.0
	학생가사무직	1,082	38.7	2,499	53.8	86,785	50.3	645	17.6	13,221	8.8
	미상	3	0.1	1	0.0	12	0.0	13	0.4	730	0.5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주: 1)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인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2)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미상에는 군인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분석 결과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서 남녀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결혼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집단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문직 비율 등에서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뚜렷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순간 어렵게 성취해 온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sup>27)</sup> 여성이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자발적인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1980년 25~29세의 기혼 여성 비율은 85.9%이었으나, 2000년에는 60.3%로, 2005년에는 절반 정도인 40.9%가 되었다(표 6-2-12 참조).

〈표 6-2-12〉 기혼 여성 비율의 변화(1980~2005년)

(단위: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15~49세	63.5	63.7	63.6	65.3	66.0	63.1
15~19세	1.8	0.9	0.5	0.8	0.8	0.4
20~24세	33.9	27.9	19.5	16.7	11.3	6.3
25~29세	85.9	81.6	77.9	70.4	60.3	40.9
30~34세	97.3	95.7	94.7	93.3	89.5	81.0
35~39세	99.0	98.4	97.6	96.7	95.9	92.4
40~44세	99.5	99.3	98.9	98.1	97.6	96.4
45~49세	99.7	99.6	99.4	98.9	98.4	97.6
50~54세	99.8	99.7	99.6	99.4	99.0	98.3
55~59세	99.8	99.8	99.7	99.6	99.4	98.9
60~64세	99.9	99.8	99.8	99.7	99.6	99.2
65~69세	99.9	99.9	99.8	99.8	99.7	99.4
70~74세	99.9	99.9	99.8	99.8	99.8	99.5
75세이상	99.9	99.7	99.8	99.8	99.9	99.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해당년도.

27) 김보경·김한곤(2005)의 대구지역 4개 대학의 재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8) 특히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는데, 35~39세의 미혼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10% 이상의 미혼율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21.0%)와 대구 중구(20.8%)에서는 미혼율이 20% 이상이였다.

다시 말하면, 2000년 25~29세 여성 중 40%가 미혼이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2005년에는 60%가 미혼이었다. 2000~2005년 동안 30~34세의 미혼율은 10.5%에서 19.0%로, 35~39세의 미혼율은 4.1%에서 7.6%로 5년만에 해당 연령대의 미혼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혼(universal marriage) 규범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혼인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V.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

### 1.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먼저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기혼 여성의 평균출생아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인 대도시의 평균 출생아수는 1.83명, 시단위의 중소도시는 1.89명, 군 지역은 2.35명이었고, 시도별로 보면 광주(2.03명)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의 평균 출생아수가 2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1.75명), 경기(1.77명), 인천(1.81명)의 평균 출생아수가 적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다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는데 상위 지역은 대부분 전라남·북도에 위치하고 있고, 하위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하위 3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구이다.

〈표 6-2-13〉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 상·하위 30개 지역(2005년)

(단위: 명)

순위	상위		하위	
1	전남 신안군	2.91	서울 마포구	1.69
2	전북 진안군	2.79	서울 용산구	1.69
3	전남 장흥군	2.79	경기 군포시	1.71
4	전남 진도군	2.78	서울 영등포구	1.72
5	전북 순창군	2.76	서울 성동구	1.73
6	전북 장수군	2.75	서울 서대문구	1.74
7	전북 고창군	2.75	서울 관악구	1.74
8	전북 임실군	2.72	경기 오산시	1.74
9	전남 함평군	2.72	경기 고양시	1.74
10	전라 구례군	2.71	서울 서초구	1.74
11	전남 보성군	2.70	경기 시흥시	1.74
12	전남 담양군	2.70	서울 강남구	1.75
13	전남 강진군	2.68	서울 광진구	1.75
14	전남 고흥군	2.66	경기 성남시	1.75
15	전남 완도군	2.63	경기 안산시	1.76
16	전남 영광군	2.62	경기 용인시	1.76
17	전남 곡성군	2.60	서울 강서구	1.77
18	전남 무안군	2.59	서울 송파구	1.77
19	경남 산청군	2.56	경기 광명시	1.77
20	전남 장성군	2.56	서울 동작구	1.77
21	전남 나주시	2.55	인천 중구	1.77
22	전북 부안군	2.55	서울 성북구	1.77
23	경북 영양군	2.54	경기 안양시	1.77
24	전남 해남군	2.53	서울 노원구	1.78
25	경남 하동군	2.53	경기 의정부시	1.78
26	경북 봉화군	2.51	서울 금천구	1.78
27	경북 예천군	2.49	경기 파천시	1.78
28	전남 화순군	2.49	경기 수원시	1.78
29	경남 합천군	2.48	서울 구로구	1.78
30	전북 김제시	2.48	서울 은평구	1.78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 2. 합계출산율의 변화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7명,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 2007년 1.2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출산력의 차이가 크다. 특정 지

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 이상인 경우도 있는 반면, 2003년 이후 모든 하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계출산율 상·하위 지역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9)</sup> 둘째, 전반적으로 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종로구, 부산 동구는 2000~2007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이는 저출산 지역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합계출산율 상·하위 30개 지역의 변화를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순위 변동 폭이 상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하위 지역은 작다(표 6-2-14, 표 6-2-15 참조).<sup>30)</sup>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 하위 30위권에 포함되었던 지역 중 2003년에는 26개, 2005년에는 26개, 2007년에는 2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 지역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중구 등인데, 특히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의 경우 2005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000, 2003, 2005, 2007년에 출산이 이루어진 가구 중에서 자녀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상인 다자녀 비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를 최소값·최대값·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2-16 참조). 2000년 이후 다자녀 비율은 대체로 일정한 가운데, 2000, 2003, 2005, 2007년 각각 한자녀 비율은 45.3%, 46.6%, 49.0%, 5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두자녀 비율은 41.6%, 40.4%, 38.0%,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9) 2000년에는 강원 양구군(2.21명), 전남 영암군(2.18명), 인천 용진군(2.12명)에서, 2007년에는 전남 보성군(2.33명)·강진군(2.26명)·영암군(2.11명)에서 대체출산율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30) 군지역의 순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2000년에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에 포함되었던 경북 군위군과 같이 변동폭이 큰 경우는 예외적이다. 군위군의 합계출산율과 하위 순위는 2000년 1.21명(24위), 2003년 0.98명(24위), 2005년 1.47명(222위), 2007년 1.62명(201위)인데, 이는 한 해의 출생아수가 100~200명으로 적어, 합계출산율을 구성하는 분모나 분자의 절대수가 조금만 변화해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14〉 합계출산율 상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 2003, 2005, 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강원 양구군	2.21( 1)	1.83( 3)	1.58( 4)	1.69(21)
전남 영암군	2.18( 2)	1.90( 1)	1.59( 3)	2.11( 3)
인천 옹진군	2.12( 3)	1.84( 2)	- (82)	- (37)
강원 인제군	2.08( 4)	1.61(10)	1.60( 2)	2.07( 4)
충남 계룡시	2.07( 5)	- (44)	- (66)	- (41)
경남 거제시	2.06( 6)	1.61( 9)	1.51( 9)	1.84( 8)
전남 광양시	2.04( 7)	- (37)	1.48(12)	1.76(12)
강원 화천군	1.99( 8)	1.78( 4)	1.71( 1)	2.00( 5)
강원 철원군	1.98( 9)	1.51(21)	1.41(22)	- (33)
광주 광산구	1.97(10)	1.63( 7)	1.44(15)	- (35)
경기 이천시	1.93(11)	1.47(28)	- (47)	- (51)
전남 화순군	1.93(12)	1.67( 5)	1.39(26)	1.66(24)
울산 북구	1.92(12)	1.50(23)	1.53( 6)	1.82( 9)
전남 완도군	1.91(14)	- (32)	- (53)	- (45)
경기 시흥시	1.89(15)	1.54(14)	1.38(30)	- (56)
충북 음성군	1.88(16)	- (32)	- (42)	- (47)
충남 서산시	1.87(17)	- (43)	- (42)	1.74(14)
전남 진도군	1.86(18)	1.58(11)	- (72)	1.79(11)
충남 당진군	1.85(19)	- (46)	- (56)	- (36)
전남 영광군	1.85(19)	1.50(24)	- (35)	1.75(13)
경북 구미시	1.84(21)	- (36)	- (55)	- (86)
제주 북제주군	1.84(22)	- (75)	- (50)	-
전남 무안군	1.83(23)	1.50(22)	1.38(29)	1.65(26)
전남 장흥군	1.83(24)	- (65)	1.38(28)	- (60)
전남 해남군	1.83(25)	- (45)	1.42(19)	1.63(30)
경기 연천군	1.82(26)	- (51)	- (39)	- (99)
경남 창원시	1.82(27)	- (56)	- (85)	- (90)
전북 진안군	1.82(28)	- (150)	- (173)	1.87( 6)
전남 나주시	1.81(29)	- (49)	- (71)	- (63)
울산 울주군	1.81(30)	1.48(26)	- (46)	- (56)

주 1: 2000년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년도의 순위임.

주 2: 북제주군은 2007년에는 제주시로 통합되어 순위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표 6-2-15〉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 2003, 2005, 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대구 중구	0.93( 1)	0.82( 3)	0.72( 3)	0.97(14)
부산 동구	1.05( 2)	0.89(10)	0.73( 6)	0.88( 7)
서울 강북구	1.07( 3)	0.99(27)	0.85(18)	1.02(23)
부산 영도구	1.08( 4)	0.91(11)	0.73( 5)	0.87( 6)
서울 종로구	1.08( 4)	0.89( 9)	0.76( 7)	0.86( 4)
부산 서구	1.09( 6)	0.91(12)	0.79(10)	0.86( 3)
부산 수영구	1.10( 7)	0.81( 1)	0.85(17)	0.95(12)
서울 강남구	1.11( 8)	0.82( 2)	0.71( 2)	0.85( 2)
서울 서초구	1.12( 9)	0.87( 5)	0.82( 3)	0.95(11)
서울 중구	1.12( 9)	0.92(16)	0.88( 2)	- (31)
서울 동대문구	1.14(11)	0.92(15)	0.87( 9)	1.00(20)
대구 남구	1.14(12)	0.93(17)	0.80(12)	0.91( 9)
부산 중구	1.14(13)	0.88( 8)	0.70( 1)	0.84( 1)
인천 동구	1.14(14)	- (40)	- (46)	- (46)
부산 동래구	1.16(15)	0.91(13)	0.78( 8)	0.96(13)
부산 연제구	1.18(16)	0.99(26)	0.84(15)	0.99(18)
부산 남구	1.19(17)	1.00(29)	0.88(22)	1.00(21)
서울 서대문구	1.20(18)	- (32)	0.89(24)	1.00(22)
서울 성북구	1.20(18)	0.98(22)	- (33)	- (41)
광주 동구	1.20(18)	0.88( 7)	0.72( 4)	0.87( 5)
부산 금정구	1.20(18)	0.95(19)	0.79( 9)	0.94(10)
서울 용산구	1.20(18)	0.94(18)	0.88(21)	1.06(29)
부산 부산진구	1.20(18)	- (34)	0.91(30)	1.06(30)
경북 군위군	1.21(24)	0.98(24)	- (222)	- (201)
서울 마포구	1.22(25)	0.91(14)	0.89(25)	- (36)
서울 중랑구	1.22(26)	0.95(20)	0.91(28)	1.04(25)
대구 서구	1.23(27)	1.00(30)	0.79(10)	0.89 (8)
경북 청도군	1.24(28)	0.88( 6)	0.85(16)	- (66)
서울 관악구	1.24(28)	0.98(21)	0.90(27)	1.00(19)
서울 양천구	1.25(30)	- (43)	- (40)	- (43)

주: 2000년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년도의 순위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표 6-2-16〉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최소값	35.9	32.7	5.9	35.2	29.9	6.6	38.0	26.4	4.7	34.8	27.2	4.8
최대값	59.1	49.6	27.5	59.0	46.4	27.0	62.5	44.2	26.5	64.1	48.2	27.6
평균	45.3	41.6	13.2	46.6	40.4	12.9	49.0	38.0	13.0	51.2	36.5	12.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 VI. 결론

우리나라도 다른 산업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경제활동참여가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과거의 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9세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 직업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동안 낳는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경우 연령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동향에 의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과 농림어업직군에서 급속하게 출산력이 감소하여 출산율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찰된다.

혼인·출산의 선택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서 남녀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결혼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 여성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문직 비율 등에서 다른 집단과, 특히 다른 여성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뚜렷한 상황은 자발적인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한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다. 2000년 25~29세 여성 중 40%가 미혼이던 것이 2005년에

는 60%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미혼율이 30~34세는 10.5%에서 19.0%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40세 이후의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20~30대, 특히 30대 미혼율의 급증은 출산율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그 증가 속도로 볼 때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만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배우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배우 출산율보다는 여성의 자발적인 미혼·비혼에 영향을 줌으로써 유배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을 살펴본 결과,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중구 등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저출산 문제와 출산 정책의 공간 불일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력이 높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최근 동향에 의하면 시군구별 다자녀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두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저출산 문제가 다자녀 비율의 감소보다는 두자녀 비율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참고 문헌

- 권태환(2008). 출산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인구주택, 통계개발원, pp.190-216.
- 김보경·김한곤(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6(2), pp.45-7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Boyle, P.(2003). Population geography: does geography matter in fertility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5), pp.615-626.
- Chesnais, J. C.(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pp.729-739.
- MacDonald, P.(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pp.1-26.

#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sup>31)</sup>

우남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김영심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우려를 넘어 대재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6월 신생아 수는 3만 4,2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00명(2.3%)이 줄었다. 그동안 출생아 수가 결혼 특수년이었던 쌍춘년인 2006년 2월에 4.8%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인 뒤, 2007년 황금돼지해를 거치면서 2008년 2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3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후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다(서울신문, 2009. 8. 20).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970년에 4.53명이던 것이 1974년에 3.81명, 1983년에 2.08명으로 하락해오다 2004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15명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다가 2006년에는 1.12명, 2007년에 1.25명으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다시 1.19명으로 감소했다(서울경제, 2009. 8. 13).

대부분의 선진국이 산업화와 함께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사회발전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 센터가 1975년부터 2005년도까지 37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최고치는 1.0)<sup>32)</sup>와 여성의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31) 본 논문은 2009년 미래유아교육학회지(16권, 3호) 논문 중 일부임.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나 보육시설이 향상되어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인간개발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9. 8. 6).

그렇다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실제로 저출산을 야기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결혼과 더불어 자녀를 낳았을 경우 양육의 문제는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조부모가 자녀양육의 대안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아이를 미루다 결국은 무자녀 가족을 이루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 및 교육비도 부모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다.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자녀를 더 잘 키우려는 부모의 노력은 과다한 양육비의 지출을 야기한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또 다시 교육비(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손승영(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 사는 만 25~44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응답(28.1%)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등 경제적 요인이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김경철, 2008).

‘새로마지플랜 2010’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이 모든 가

32)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이 매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평균수명, 문맹퇴치율, 취학률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지수로 각국의 삶의 질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구에서 영유아보육비와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이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교육비 부담(28.1%), 자녀 양육비 부담(17.2%)이라는 응답이 45.3%를 차지하였다(조선일보, 2008, 10. 28).

1980년대 이후 소득의 증가와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 양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기형적인 교육열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졌다. ‘적기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모들은 무조건 빨리만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글, 영어 등 각종 조기교육에 노출시킴으로 조기교육 과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90% 이상이 영어, 예체능, 각종 인지 발달프로그램 등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더구나 70% 이상은 방과 후가 아닌 정규 일과 중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어 특별활동은 유아교육기관의 정규일과가 되어가고 있고 학업위주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명조, 정선아, 이정화, 2003).

조기교육과 아동발달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서유현, 2006; 신의진, 2002; 우남희, 2002; 황혜정, 2006; Elkind, 1983; Kessler, 1997)은 조기교육이 아동의 인지발달, 창의성 발달,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이러한 연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경쟁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자극하는 상업적인 광고나 선전에 이끌리어 자녀교육을 내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조기교육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교육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7).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조 9천억원으로 2007년도 20조 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09. 2. 27). 이러한 시장규모의 증가는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어린 자녀를 둔 가정마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물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꺼려할 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일은 저출산 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현재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자녀양육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자신들의 기대나 인식의 변화 없는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 자녀에게 맞는 육아와 교육을 실시할 때 사교육으로 낭비되고 있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육아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맞벌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신념과 기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양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1.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1-2. 자녀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2-1.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실태는 어떠한가?

2-2.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및 사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0세부터 만 11세 자녀를 둔 부모 931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2곳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19곳, 초등학교 3곳을 임의 선정한 후, 기관장과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 2. 연구방법

### 1) 부모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실태조사 설문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용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이 설문지는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초기 특기/과외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박수진(2001), 이기숙 외(2001),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 등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들을 종합하여 다시 제작하였다.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치고 아동발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설문지를 최종 수정보완 하였다.

우선,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내용은 자녀 양육 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 타인 양육 시 드는 비용,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녀 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교육의 종류,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 교육 방법, 사교육에 대한 찬·반 여부, 유아 및 아동에게 적절한 사교육 가짓수,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될 수 있는 적절한 사교육비용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 III. 연구 결과

###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인식

####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자녀 양육 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대상 부모들 중 40.1%가 ‘유아기’를 가장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출생에서 첫돌까지’(27.3%), ‘아동기’(19.8%)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이 생각하는 필요시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6)=171.380, p<.001$ ). 즉,



신생아기와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출생에서 첫돌까지’를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기’를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길 경우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비용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월평균 43.91만원( $SD=28.57$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 연령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893)=5.279, p<.001$ ). Duncan 사후검정 결과, 저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타인 양육비용이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양육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 및 안전’(53.3%)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성’(44.9%)이었고, ‘지식’이나 ‘특기개발’, ‘학벌’에 대해 생각하는 어머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복수응답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표 6-3-1 참조). 그 결과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유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부담’(49.9%), ‘아이 맡길 곳 없음’(34.3%)의 순이었다. 이러한 저출산의 이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2$ 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28)=65.744, p<.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생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이유 중 ‘양육비 부담’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이유를 ‘양육비 부담’(63.3%), ‘사교육비 부담’(55.0%), ‘아이 맡길 곳 없음’(25.0%)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이유를 ‘양육비 부담’(54.4%), ‘아이 맡길 곳 없음’(51.5%), ‘사교육비 부담’(47.1%) 순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를 포함하여 그보다 높은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양육비 부담’은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6-3-1〉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N = 929)

(단위: 명, %)

이유 \ 자녀연령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전체
어머니의 자아실현	6 (10.0)	28 (20.6)	49 (20.5)	57 (23.1)	34 (13.8)	174 (18.7)
양육비 부담	38 (63.3)	74 (54.4)	128 (53.6)	107 (43.3)	117 (47.4)	464 (49.9)
사교육비 부담	33 (55.0)	64 (47.1)	145 (60.7)	162 (65.6)	149 (60.3)	553 (59.5)
몸이 힘들	0 ( 0.0)	17 (12.5)	27 (11.3)	32 (13.0)	24 ( 9.7)	100 (10.8)
자녀 중요치 않음	3 ( 5.0)	5 ( 3.7)	9 ( 3.8)	10 ( 4.0)	13 ( 5.3)	40 ( 4.3)
아이 맡길 곳 없음	15 (25.0)	70 (51.5)	95 (39.7)	85 (34.4)	54 (21.9)	319 (34.3)
부부만의 시간 추구	7 (11.7)	10 ( 7.4)	11 ( 4.6)	31 (12.6)	21 ( 8.5)	80 ( 8.6)
육아 시간 부족	3 ( 5.0)	26 (19.1)	36 (15.1)	37 (15.0)	20 ( 8.1)	122 (13.1)

##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

먼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교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기본생활습관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7.0%),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38.4%)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본생활 습관 및 인성교육에 대해 연구 대상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77.3%)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22.1%나 차지하고 있었다.

사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인 영·유아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반응 결과,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중 77.3%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유아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들의 이러한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4)=2.577, p>.05$ ).

영·유아기에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평균 약 두

가지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7가지의 사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있었다. 영·유아들에게 시키는 적정 조기 사교육의 가짓수에 대한 어머니들이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사교육의 적정 가짓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675)=2.499, p<.005$ ). Duncan 사후검정결과는 영아기의 어머니들이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어머니들의 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영아기의 어머니들이 다른 시기의 어머니들보다 조기사교육을 조금 덜 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모든 연령에서 평균 2가지의 조기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적정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질문에는 한 달에 평균 약 18만원 정도의 지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도 2명이나 있어 이러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4, 675)=2.499, p<.001$ ). 영아기와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월 지출 약 13~15만원이 자녀 일인당 사교육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신생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어머니들은 약 20~22만원이 일인당 월 사교육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실태

###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실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어머니들에게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아직 실제적인 양육 경험이 부족한 신생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예상을 반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을 분석하면, 연구대상 부모들은 현재 자녀들의 주 양육자를 ‘어머니’(81.5%)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8.1%), ‘양육기

관(7.0%)의 순이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 것이라 예상되는 시기 혹은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출생~첫돌까지’(3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말하고 걷기 시작하는 시기’(24.3%), ‘유아기’(2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양육 시 힘들었던 시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2)=160.111$ ,  $p<.001$ ). 즉,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장 힘들 것이라 예상되거나 혹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출생~첫돌까지’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말하고 걷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은 ‘아동기’가 키우기 힘든 시기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특히 고학년 부모들 중에서는 35.0%가 ‘아동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힘든 점 혹은 힘들 것이라 예상되는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양육 및 사교육비용’(55.8%)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엄마를 대신할 양육자 선정’(15.9%), ‘적절한 양육 방법 모름’(14.5%)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20)=113.951$ ,  $p<.001$ ). 신생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모두 ‘양육 및 사교육비용’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양육자 선정’의 문제였고(30.5%), 그 다음이 ‘양육 및 사교육비용’이었다(27.3%). 이 외에도 ‘적절한 양육방법 모름’에 대한 응답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23.4%)(표 6-3-2 참조).

〈표 6-3-2〉 자녀 양육 시 힘들었던 점(N=919)

(단위: 명, %)

자녀연령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전체
힘든 점						
양육 및 사교육비	34(57.6)	35(27.3)	120(50.8)	168(67.5)	156(63.2)	513(55.8)
양육자 선정	12(20.3)	39(30.5)	47(19.9)	25(10.0)	23( 9.3)	146(15.9)
부부간 양육관 차이	0( 0.0)	7( 5.5)	15( 6.4)	9( 3.6)	15( 6.1)	46( 5.0)
양육방법 모름	12(20.3)	30(23.4)	24(10.2)	34(13.7)	33(13.4)	133(14.5)
양육기관 선정	1( 1.7)	13(10.2)	24(10.2)	3( 1.2)	6( 2.4)	47( 5.1)
기타	0( 0.0)	4( 3.1)	6( 2.5)	10( 4.0)	14( 5.7)	34( 3.7)
전체	59(100.0)	128(100.0)	236(100.0)	249(100.0)	247(100.0)	919(100.0)

##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및 사교육 실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및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어머니들에게 자녀에게 제일 먼저 시킨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 인성교육의 비중,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 현재 자녀들의 사교육 실시여부, 현재 자녀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 가짓수, 사교육비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하여 질문을 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시킬 계획이거나 시켰던 교육의 종류는 <표 6-3-3>과 같다. 앞에서,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시켜야할 교육에 ‘기본생활습관교육’을 꼽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교육 실태에서도 어머니들은 ‘기본생활습관교육’(62.4%)을 가장 먼저 시킬 계획이거나 시켰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성교육’(21.1%)이었으며, 학습과 관련된 나머지 항목들은 10% 이하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6-3-3〉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교육(N=912)

(단위: 명, %)

종류 \ 자녀연령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전체
한글	8(13.6)	5( 3.9)	12( 5.2)	21( 8.5)	35(14.3)	81( 8.9)
예능	1( 1.7)	3( 2.3)	7( 3.0)	8( 3.2)	12( 4.9)	31( 3.4)
체육	0( 0.0)	1( 0.8)	10( 4.3)	7( 2.8)	3( 1.2)	21( 2.3)
외국어	10(16.9)	0( 0.0)	0( 0.0)	6( 2.4)	2( 0.8)	18( 2.0)
기본생활습관	29(49.2)	95(73.6)	148(63.5)	153(61.9)	144(61.6)	569(62.4)
인성교육	11(18.6)	25(19.4)	56(24.0)	52(21.1)	48(19.7)	192(21.1)
전체	59(100.0)	129(100.0)	233(100.0)	247(100.0)	244(100.0)	912(100.0)

그러나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기본생활습관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가장 먼저 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혹은 할애할 예정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머니들은 ‘일반사교육보다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에 불과하였고, ‘아니다’라는 응답이 27.5%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7.2%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어머니들이 기본생활습관을 위한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우선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연령에 따라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 할애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6)=113.960, p<.001$ ). 신생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다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보다 가장 많이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을 위해 사교육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응답하였다(57.7%). 이에 비해 저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에서는 16.2%만이 사교육보다 인성교육이나 기본생활습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분석해보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로자 설문지를 통하여 신생아들의 어머니들에게는 영·유아기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또한,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현재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에서는 56명(93.3%)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어머니들에게는 실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6-3-4>와 같다. 즉, 영아기 이상의 자녀를 둔 연구대상 어머니들 중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는 719명(8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여부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308.923, p<.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정도가 34.6%에 지나지 않았지만, 유아기 자녀에게는 77%, 저학년기와 고학년기에 속하는 자녀에게는 98.4% 정도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자녀들의 사교육 여부(N = 871)

(단위: 사례수, %)

적절성 \ 자녀연령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예	47( 34.6)	184( 77.0)	245( 98.4)	243( 98.4)	719( 83.2)
아니오	89( 65.4)	55( 23.0)	4( 1.6)	4( 1.6)	152( 16.8)
전체	136(100.0)	239(100.0)	249(100.0)	247(100.0)	871(100.0)

현재 자녀들에게 몇 가지를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우리나라 영유아기 자녀들이 몇 가지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약 2.5개(SD=0.83)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 전·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은 자녀 한 명에게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까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평균 약 3.01(SD=1.58)개의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짓수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현재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713)=61.220$ ,  $p<.001$ ).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아기의 자녀들이 평균 1.53개(SD=0.91)로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의 자녀들이 평균 2.28개(SD=1.36)로 두 번째로 적게 받고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은 저학년기로, 현재 저학년기의 자녀들은 평균 3.85개(SD=1.59)의 사교육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5 참조).

〈표 6-3-5〉 현재 자녀 한명에게 시키는 사교육 가짓수

자녀연령	N	M	SD	F	p
영아	47	1.53a	0.91	61.220***	.000
유아	184	2.28b	1.36		
저학년	244	3.85d	1.59		
고학년	243	3.13c	1.45		

주: 1) \*\*\* $p < .001$ .

현재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평균 7.27개(SD=5.38)의 사교육을 시켰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가짓수는 <표 6-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3-6>에 따르면, 영아기의 자녀들에게 평균 1.29개(SD=1.79), 유아기의 자녀들에게 평균 4.81개(SD=4.01)의 사교육을 출생부터 현재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지금까지 최대 22개의 사교육을 시켰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있었다. 저학년기와 고학년기 자녀에게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종류는 평균 9~11개로 나타났으며, 최소 1개에서 최대 29개의 사교육을 아동기의 자녀들에게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자녀 한명에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가짓수

자녀연령	N	최소값	최대값	M	SD
영아	47	0	9	1.29	1.79
유아	184	0	22	4.81	4.01
저학년	244	2	29	9.88	4.58
고학년	243	1	23	10.30	4.72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최초로 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 이 어머니들은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사교육의 종류로, ‘한글’(30.0%)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영어’(18.3%), ‘종합학습지’(5.0%), ‘신체놀이’(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제,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녀에게 최초로 시킨 사교육의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바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6-3-7>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최초로 시킨 사교육의 종류를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한글’(30.5%), ‘영어’(12.3%), ‘종합학습지’(11.8%), ‘신체놀이’(9.8%) 순이었다.



〈표 6-3-7〉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의 종류 (N = 731)

(단위: 명, %)

자녀연령 종류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한글	18( 28.6)	65( 33.2)	72( 29.9)	68( 29.4)	223( 30.5)
영어	1( 1.6)	14( 7.1)	37( 15.4)	38( 16.5)	90( 12.3)
종합학습지	11( 17.5)	24( 12.2)	22( 9.1)	29( 12.6)	86( 11.8)
신체놀이	9( 14.3)	27( 13.8)	24( 10.0)	12( 5.2)	72( 9.8)
피아노	1( 1.6)	5( 2.6)	18( 7.5)	32( 13.9)	56( 7.7)
미술	2( 3.2)	14( 7.1)	19( 7.9)	17( 7.4)	52( 7.1)
가베, 은물, 오르다	3( 4.8)	13( 6.6)	15( 6.2)	7( 3.0)	38( 5.2)
태권도	0( 0.0)	1( 0.5)	10( 4.1)	7( 3.0)	18( 2.5)
음악교육	2( 3.2)	7( 3.6)	3( 1.2)	2( 0.9)	14( 1.9)
수영	0( 0.0)	1( 0.5)	6( 2.5)	6( 2.6)	13( 1.8)
무용	0( 0.0)	5( 2.6)	4( 1.7)	2( 0.9)	11( 1.5)
몬테소리	3( 4.8)	4( 2.0)	3( 1.2)	0( 0.0)	10( 1.4)
창의성	0( 0.0)	8( 4.1)	0( 0.0)	1( 0.4)	9( 1.2)
영재교육	2( 3.2)	0( 0.0)	1( 0.4)	1( 0.4)	4( 0.5)
기타	11( 17.5)	8( 4.1)	7( 2.9)	9( 3.9)	35( 4.8)
전체	63(100.0)	196(100.0)	241(100.0)	231(100.0)	731(100.0)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32.68개월( $SD=14.22$ )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현황을 살펴본다면, 영아기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평균 23.11개월( $SD=14.34$ )에 처음으로 사교육을 시켰으며, 유아기의 어머니들은 37.19개월( $SD=15.20$ ), 저학년기의 어머니들은 50.17개월( $SD=22.12$ ), 고학년기의 어머니들은 55.25개월( $SD=21.74$ )에 처음으로 사교육을 시켰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내려 갈수록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6-3-8>은 자녀의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과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단,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이 아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유아기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를 예상한 값으로, 신생아기 어머니들은 평균 33.41만원( $SD=41.76$ )을 월 사교육비로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을 적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평균 16.32만원을 지출하는 데 반해, 아동기에는 거의 100만원에 근접하는 돈을 매달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 483명 중 월평균 사교육비로 300~500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22명(4.6%)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아질 뿐 아니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8〉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평균(SD)

구분	최소값	최대값	월 사교육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율
신생아기 (n=49)	7만원	300만원	33.41만원 (41.76)	13.33% (15.78)
영아기 (n=68)	0원	150만원	16.32만원 (23.69)	4.08% ( 5.47)
유아기 (n=201)	0원	350만원	39.05만원 (48.92)	8.22% ( 8.63)
저학년 (n=244)	4만원	500만원	90.86만원 (72.04)	16.68% (14.95)
고학년 (n=239)	0원	400만원	97.31만원 (75.33)	20.70% (27.12)
전체 (n=801)	0원	500만원	69.94만원 (70.27)	14.44% (18.84)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의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와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한 내용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직까지 ‘어머니’ 위주의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어머니’를 자녀의 주 양육자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 81.5%였다는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리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생아기와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출생에서 첫돌까지’를 가장 필요한 시기로 보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기에 어머니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로 보았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양육 및 사교육비’의 부담이었다. 이는 취업모가 늘어나면서 타인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거나 개인탁아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양육비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또한 나날이 과열되는 교육열에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녀양육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들(김영주, 2005; 손승영, 2005; 차경옥, 2004)과 함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한 대리 양육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양육방법을 몰라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30% 이상의 어머니들이 어머니를 대신할 양육자 선정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하였다. 대리 양육자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기 위하여 대리 양육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도 해석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이루어져서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날 때 어머니들의 출산율도 증가하고 취업률도 늘어나리라 본다. 또한 현재 취업모에게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기회를 없으므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양육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리라 본다.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인성교육(95.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교육보다 인성교육 등을 더 많이 시킨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25.3%에 불과하였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본생활습관이 나 인성교육보다는 일반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다양한 학원을 전전하며 다니는 유아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본 연구에서 영아기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83.2%가 실제로 사교육을 시

키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98.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자녀 한명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도 평균 3가지로 최소 한 가지에서 최대 일곱 가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생활 패턴 속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렸다.

사교육비용으로는 13~21만원이 적절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교육비용으로는 월평균 약 7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가정까지 포함하여 평균을 낸 것이므로 실제로 사교육을 시키는 아동만 분석한다면 일인당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사교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가정도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용이 늘어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비용으로 한달에 평균 97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08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3만 3천원(연합뉴스, 2009. 2. 27)이라는 것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어머니들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사교육 비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가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 결국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본다.

폴 휴잇은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 140만명으로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동아일보, 2009, 2. 14). 현재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 부담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여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휴가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현재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으나 실제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생각만으로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사교육의 병폐를 줄일 수는 없다. 현재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매스컴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과대 상업적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며,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정신병리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특히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있는 사교육기관, 특히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우는 영어학원의 기하학적인 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감독과 유아대상 영어 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도 시급하다. 특히 영어교육을 위한 지출이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어 사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과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경철(2008). 저출산사회의 교육정책 방안.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주(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149-157.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유현(2006). 아동발달과 뇌발달의 이해.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건강한 아동, 건강한 뇌*, pp.3-12.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 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pp.285-316.
-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pp.27-42.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pp.5-24.
-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연구. *유아교육연구*, 13, pp.49-64.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 이명조, 정선아, 이정화(2003).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 집문당.
- 차경옥(2004). 출산계획과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137-148.
- 황혜정(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pp.193-216.
- Elkind, D.(1983). *The Hurried Child*, Perseus Books Group.
- Kessler, R. C.(1997).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Annul Review of Psychology*, 48, pp.191-214.

## 저출산과 아동보육 문제

이 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1. 보육에 대한 정부개입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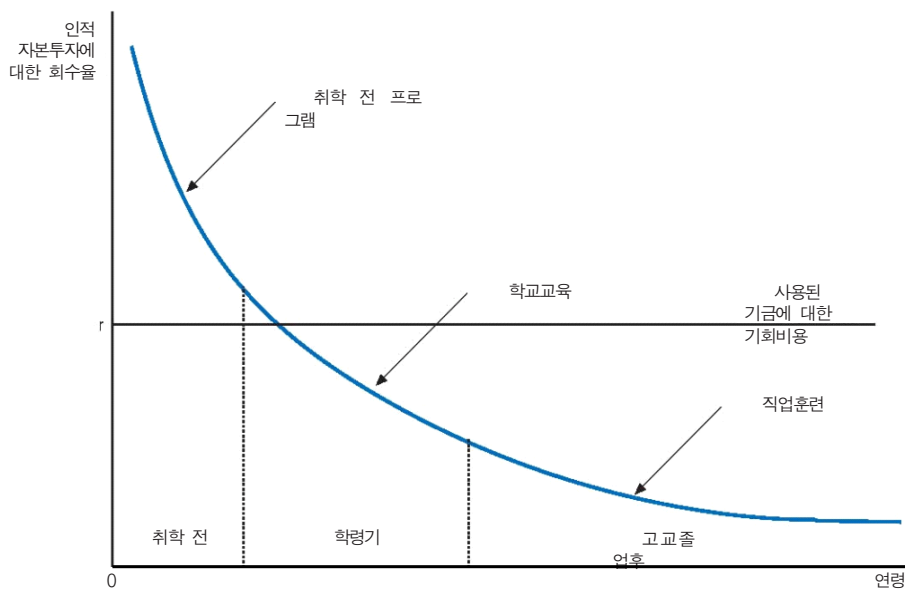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특히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국가에서는 육아에 대한 국가(정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여성 취업의 증가와 출산력 저하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1991년에 이르러서야 보육이 제도화됨으로써 정부가 육아에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에 1.19이며,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1.22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과 가족가치관의 변화,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직업 안정성의 약화,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의 증가, 그밖에 주택가격의 상승 등 경제 상황도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불황과 취업난도 당분간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거나 자녀 양육 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유예, 또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육아에 개입한다는 것은, 일과 양육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분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생애초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일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여 여성노동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생애 초기 사회적 투자를 통한 빈곤아동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육아

책임 분담과 육아지원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의 대표적 시스템인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처음에는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리보호의 형태로 시작된 것이지만,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결과는 재정투자 회수율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Cunha et al., 2006). [그림 6-4-1]에 제시했듯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한 정부개입의 효과는 생애 어느 시기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비해 효과적이다.

[그림 6-4-1] 전 생애동안 투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적자본 투자대비 회수율



자료: Cunha et al.(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저출산으로 인한 여성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보육 인프라 확충이 취업 여성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취업모의 노동이 생애노동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여성 연령별 취업률이 M자형의 곡선을 나타내는 정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여성의 직장생활 지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보육시설 확대 정책이다. 취업여성 5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김선희, 2007 재인용)를 보면, 여성취업 지속을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그중에서도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4-1 참조).



〈표 6-4-1〉 여성의 직장생활 보장을 위해 우선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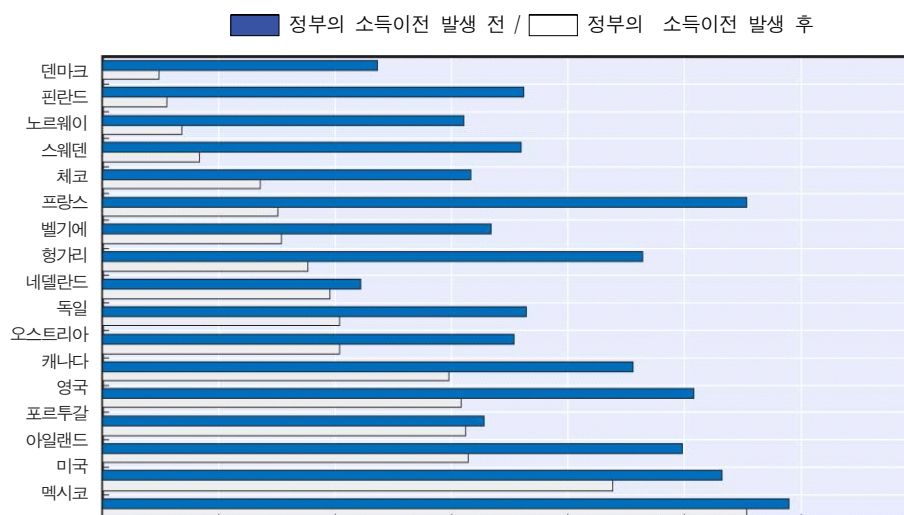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여자	남자
직장보육시설 확대	422( 70.7)	227( 72.3)	195( 68.9)
가족들의 가사노동 분담	77( 12.9)	38( 12.1)	39( 13.8)
기업의 적극적 여성고용	38( 6.4)	21( 6.7)	17( 6.0)
여성 스스로 능력개발	26( 4.4)	8( 2.5)	18( 6.4)
기타	6( 1.0)	4( 1.3)	2( 0.7)
무응답	28( 4.7)	16( 5.1)	12( 4.2)
계	597(100.0)	314(100.0)	283(100.0)

자료: 김선희(2007).

또한, 정부의 보육에 대한 지원은 빈곤아동의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국의 소득이전 정책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그림 6-4-2 참조)를 보면,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실시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등에서 정책의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2006)는 가족의 빈곤이 보육 서비스의 부재와 관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이용가격이 비싸거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을 때, 한 부모 가족과 저소득 가정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한다(OECD, 2006).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이 빈곤아동 문제 완화 정책으로서도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6-4-2〕 사회적 이전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영향



자료: OECD(2006).

## II. 저출산 위기와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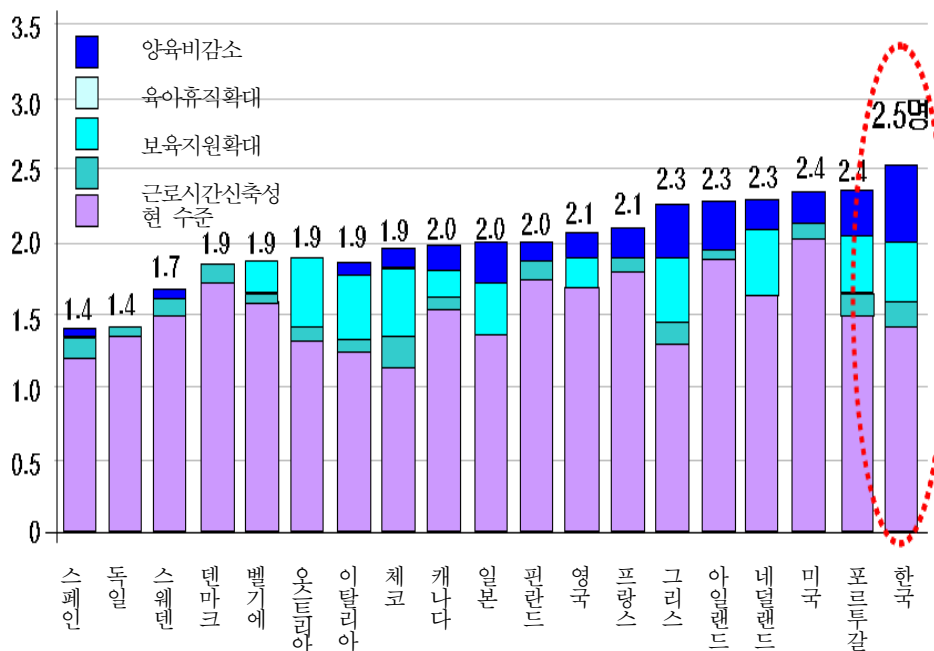
여성취업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육지원 정책이 없이 출산률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UN의 한 보고서는 각국의 출산율 개선율이 보육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가족정책 재정지출(가족당장,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자녀교육지원 포함) 규모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홍헌호, 2009, 재인용). 이는 보육지원을 포함한 육아지원 재정 투자가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율 제고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다. 출산율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보육지원 정책이 적극적인 나라들이며,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육지원 제도를 수립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 1.98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OECD 대표부의 d'Addio(2005) 역시 저출산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증자료 분석을 근거로 하여, 아동보육 인프라와 탄력근무제, 양육비 지원 관련 정책적 노력이 한국의 출산율을 크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적정비용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출산율 증가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OECD 자료는 보육서비스 1% 증가 시 출산력 0.01 명 증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육아 지원 프로그램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6-4-3]과 같이 추정된다(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재인용).

그 밖에도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최근 독일의 가족정책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전통적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0~3세 아동의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 개입을 공식화하였다(정재훈, 2008). 여성취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육시설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출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통적 복지제도인 각종 수당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출산장려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고학력 여성들에게는 출산기피 현상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각종 수당제도보다는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중산층 고학력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병행에 효과적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되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4-3] 육아지원이 출산을 제고에 미치는 효과



### III.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OECD)

각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보육정책 연구들(Cancian, Kurz, London, Reviere & Tuominen, 2002; d'Addio & d'Ercole, 2005; Jensen, 2002; OECD, 2006)은 소위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보육을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보육정책이 보육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보육정책과 비교해 볼 때, 출산율 지표 등에서 긍정적이다.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OECD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검토단의 2차보고서(OECD, 2006)는 20개국의 1, 2차에 걸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평가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보육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 1) 빈곤감소와 인생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영유아서비스를 이용 권리를 보장할 것: 여성이 직장와 육아의 책임을 병행하도록 지원할 것
- 2) 아동의 복리와 생애초기의 발달과 학습을 ECEC의 중심에 둘 것  
(발달과정을 고려한 학습전략,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풍부한 학습 환경, 훈련된 교육자 등)
- 3) 보육의 책무성과 질적 수준 보장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중앙정부 차원의 ECEC 전문 정책부서, 적극적 교사훈련, 교육과정,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관, 자문단, 통계부서 설립, 운영 등)
- 4) 보육지침서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 5) 질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 합리적 재정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  
(서비스시설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부모직접 지원 방식은, 우수교원 채용, 기반시설 및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경향이 있음.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는 경우, 전문서비스의 감소와 저소득층의 서비스접근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 6) 보호와 양육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육 개념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  
(소외 아동 등, 서비스 대상을 구분, 차별하지 않는 정책 )
- 7) 영유아보육서비스에도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할 것
- 8)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과 전문 교육정책 수립할 것 (무자격 인력 해소 필요)
- 9) 개별적 아동발달 서비스와 초등교육 이전 1년간의 무상 보육교육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
- 10)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것  
(무차별의 보편적 아동교육권 보장, 경쟁학습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배제, 아동 학습공동체 지향)

OECD가 권고하는 보육정책은 1) ‘영유아 보호와 발달적 학습의 공공성과 보편성 확대’, 2)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시설지원방식의 채택’, 3) ‘아동과 부모의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 지향’, 4) ‘정부의 서비스 감독권 강화’, 그리고 5)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배제’ 정책으로 축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도 결국은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귀결된다.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유희정 외, 2006)은 부분하지만, OECD의 관련 정책 검토의 결과로서, “보육비용의 지원이 공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 공공보육시설이 확충되는 정도,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화되는 정도, 보육시설에서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활동이 국가수준에서 표준적으로 안내되고, 이들이 보편적으로 아동들에게 제공, 경험되는 정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행정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정도”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정책시행 측면에서 본다면, 1)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시켜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 2)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 평가 관련 정책, 3) 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적정화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정책의 수행 정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

한국의 보육정책 현황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정책적 차이와 성과,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1991년 ~ 2002년의 보육정책

한국의 보육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화되었으나, 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적용 이전에는 선별적인 보육료 지원만이 이루어졌을 뿐, 정책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다만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3년간은 OECD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유도한 보육정책이 있었을 뿐이다. 이 정책의 결과는 과도한 민간보육시설 점유율과 민간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의 비형평성 문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미흡한 질적 수준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1997~2002년의 국민의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인가규정을 보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영세하고 부실한 민간시설의 양산을 가중시켰다. 이 시기에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문제, 보육료 부담 등의 문제가 정책적 해결 과제로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 2. 2003년 ~ 2007년의 보육정책

2003년에 들어와 보육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닌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권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5년간 연평균 35%의 보육재정 확대, 평가인증시스템 등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행정전달 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여성가족부,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a; 2007b; 2007c)은 보육료 경감과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정책 사업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보육 관련 공식 문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여성가족부, 2006b; 유희정 외,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a)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진보적 보육정책 추진의 의지가 자주 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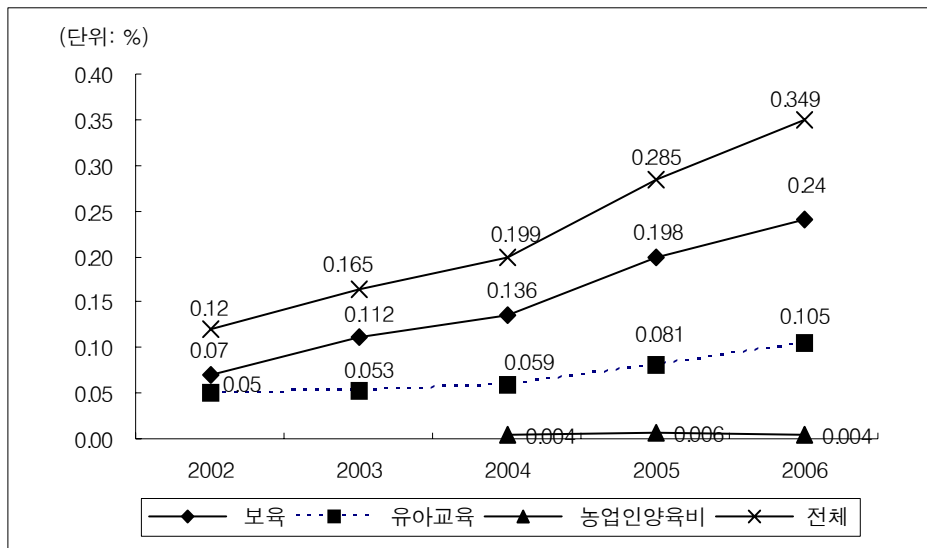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이 시기의 중요한 보육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한 정책 데이터의 수집과 육아정책 추진목표 지표를 설정한 작업이다. 보육정책 추진이 주요 정책지표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시기에 설정된 구체적 정책목표였던 1)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2) 서비스 이용비용 경감, 3)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목표 별 정책 성과 지표는 다음 <표 6-4-2>와 같다.

〈표 6-4-2〉 2003-2007년의 보육정책 주요 지표

정책목표	정책 지표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공급: 5년간 8700개소 증가</li> <li>·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과 점유율: 5년간 418개 국공립시설 설치 2002년 국공립보육시설 점유율 6.0%에서 2006년에는 5.6%로 감소,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수는 5년간 14,000명 증가</li> <li>·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5년간 29만명 증가</li> </ul>
보육비용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지원예산: 국비와 지방비 포함, 2003년 약 4,790억에서 2008년 2조9623억으로 연평균 35% 증가, 5년간 5배 증액</li> <li>· GDP 대비 육아지원예산 비율: 2002년대비 2006년 4배 증가</li> <li>· 소득별 차등보육료지원: 2002년 저소득층 106,000명에서 2007년, 563,000명으로 5배 증가</li> <li>· 영아보육기본보조금지원; 2005년부터 추진 민간보육 이용 영아 전체 대상</li> </ul>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관리감독 강화: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07년 12월 50% 이상 보육시설 참여</li> <li>· 시설 안전 강화: 육아시설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지원 예산 5년간 20배 증액, 관계법령 강화로 물리적 환경 개선 유도</li> <li>·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li> </ul>

이 시기 보육 재정 확충과 보육아동 수의 증가,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 표준보육과정의 보급, 보육종사자자격 국가자격관리 제도도입, 보육 행정력 강화, 부모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보육정책 참여제도도입, 정책 데이터 수집과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OECD의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제안들과 부합하는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보육 아동 수는 29만 명이 증가하여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의 증가는 한국에서도 보육시설이 점차 보편적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닌 보육과 교육활동을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GDP 대비 영유아보육교육 재정은 2002년 0.12%에서 2006년에 0.35%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재정 규모가 충분하지는 못하였으나 연차별 보육 예산의 상승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였다(그림 6-4-4 참조).

[그림 6-4-4] 보육예산을 포함한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보육재정 확충과 서비스 질 관리 정책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보육정책 지표들은 아주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주력하였다고는 하나, 정책성공을 내기에는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겠다.

### 3. 현 정부(2008년 이후)의 보육정책 기조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이전과는 다른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가 발표한 보육정책에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결정 신고방식으로의 변경”과 “보육료 자율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정책은 “수요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 기능 활성화와 보육료 자율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부모체감도 제고를 위한 바우처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보육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시장의 기능 활성화’에 의하여 제고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표 6-4-3 참조).



〈표 6-4-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개편 관련 내용

구분	내용
과제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문제: 정부지원예산증가불구 부모체감도 낮음</li> <li>• 정책패러다임전환: 시설중심지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저소득층 무상보육, 포괄적서비스/중산층이상 부모선택권 존중</li> </ul>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통합 일원화지원체계 구축</li> <li>• 보육시설 이용시간 이원화: 기본형과 연장형 구분 지원단가 산정</li> <li>• 모취업여부 등에 따라 이용단가 차별화</li> <li>• 부모직접지원 전자바우처 도입</li> <li>• 서비스 질적수준 유지: 평가인증제도 수정보완</li> <li>• 보육료자율화: 보육시설 자율 결정후 신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li> <li>• 서비스 다양화: 국공립보육시설 중심 시간제 보육기회 확대, 가정내 파견사업 확대</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양육부담경감으로 출산율제고, 취업부모 지원확대로 여성경제활동 증가</li> <li>• 바우처 형식의 부모직접지원으로 부모 체감도, 소비자 선택권 증가</li> <li>• 시장 기능 활성화로 민간시설 서비스 질 향상</li> </ul>

아울러,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백서에는 “소득계층에 따라”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 선택권이 달리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소득층 자녀는 국공립시설에, 중산층 이상의 부모에게는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 방향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책은 보육을 보편성을 지닌 공공서비스로 보려는 이전의 정책기조와 다르다.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 2008 실천계획’ 중 보육관련 추가 설명자료(보건복지가족부, 2008, 3.25)에 의하면,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의 최우선 사업은 전자바우처 지원제도이다. 이 자료는, 전자바우처 지급 방식이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제고와 보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강화 효과, 수요자 욕구 반영, 소비자 선택권 확대,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시장구조 형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검토보고서는 보육재정 지원은 부모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시설(서비스)지원 방식이 전문교사의 채용, 관리감독권의 확보 등,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정책임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서의 보육료 지원 방식의 변경은 200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2009년의 시행령 개정으로 현실화되었다(표 6-4-4 참조).

〈표 6-4-4〉 2008년 12월 양육수당 및 바우처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내용	개정 이유 및 기대효과
양육수당 (34조의 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li> <li>· 보육시설과 유치원 미이용아동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ul>
보육서비스 이용권 (34조의 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지원은 부모의 보육료 수혜체감도가 낮고, 보육료신청, 지급, 정산업무 복잡하여 개선 필요</li> <li>· 보육시설 행정처리 부담 경감, 지자체 행정 및 민원부담 감소기대</li> </ul>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신설 조항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보육정책 대상을 시설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아동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양육수당)의 근거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논리로 도입되었으나,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공표하였다. 추진내용은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지원,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지원체계 수립’으로 설명되어 있어 다소 추상적이다. 다만 아이사랑플랜 추진 소요예산 자료를 보면, 4년간 11조 8천억 정도를 투입하여 2.4배의 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는 가정 내 양육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1조 6천억 규모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그에 비해 보육의 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 현 정부 보육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초기 10여년은 극히 제한된 지원 정책을 견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5년간은 이전 보다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증대하고, 성과는 불충분하지만 공공 보육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가격규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개입을 증가시키고, 시설 지원을 유지하면서 아동별 지원을 유예하는 등, 일정 부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보육정책 관련 공식 발표 자료와 관련 예산, 주요 추진사업 계획 등을 고찰해보면,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제고 시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 선택과 보육시장 친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의 근거와 주요 내용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첫째,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간주하려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제17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바우처로 특정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선택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게 된다. 자율적 선택을 한 부모는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국공립시설에 수요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지 의문이다.

둘째, 현 정부 보육정책은 부분적으로,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OECD는 보육이 영유아에게 보편적인 학습과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간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에게 질적 교육경험 기회를 박탈하고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양육수당으로 인해 인생초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이 제도는 아동 초기 교육경험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과 배치된다. 양육수당은 다수의 국가에서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용과 관계없이 별도의 아동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양육수당제도가 필요하다면 육아시설 이용여부와는 별도로 저소득 계층에게 부가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육을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아닌 잔여적 서비스와 민간시장 서비스로 개념화하는 정책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정부가 공식적 문건에서 ‘공보육 기반조성’(여성가족부, 2006)을 목표로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했다면, 현 정부는 일부에게는 잔여적 복지서비스로, 그 외에는 민간보육 확대 정책에 의한 선택권 강화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문건 어디에서도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그야말로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개념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 등 특수 계층에 대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일반 부모들은 민간보육시장을 활용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보육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내용이 부모의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되고, 공공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시혜적 서비스 시설로 그 성격이 변화될 것이다. OECD 영유아보육교육 검토단이 영유아 대상별 서비스 차별화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한 것과 배치되는 정책기조이다.

넷째, 재정지원 방식이 서비스시설 지원에서 부모직접 지원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은 민간보육시장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현 정부 보육정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 체감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OECD도 지적하였듯이, 그 때문에 부모직접 지원방식은 정치인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 수준 요소인 교사수준 향상과 관리감독 강화는 재정지원이 시설에 제공되지 않으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정부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로 시설을 선택하는 구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OECD, 2006).

다섯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추진실적,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사업 등은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포기한 보육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신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2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내놓으면서,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된 기능을 국공립보육시설이 수행하도록 특화시켜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계자료(육아정책개발센터, 2008)에 의하면 2008년 12월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1,769개소로서, 2007년의 1,748개소에서 21개소 증가에 그쳤다. 이전 정부는 연간 40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증설을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국공립보육시설 418개소 증설에 그친 바 있다. 이대로라면 향후 민간 보육시설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이전 정부가 강조했던 보육의 보편성, 공공성 개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정책이다.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수요자 감소 유도과 소득계층별 이용시설 차별화, 수요자 직접 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보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은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제고가 아니라 잔여적 복지사업이거나 보육의 시장화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 V. 맺는 말

출산을 제고와, 아동발달,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보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 영역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보육의 시장화를 지양하고, 공공 영역으로서의 보육 개념을 기본으로 한 보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속도가 다소 지체되더라도 보육이 영유아에게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보육시장 기능의 활성화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서비스 질과 이용료 문제 등이 보육의 시장화로 해결된 사례가 없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란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이용부담의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요자의 정부지원 체감도만을 의식하여 바우처 제도에 몰입하기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평가인증 등 서비스 관리제도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육아재정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는 것이다.

셋째,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정책효과가 크다. OECD(2006)의 영유아보육·교육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정책이지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건비 지원에 의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효과가 있는 수요자 지원 보다는 장기적으로 질적 보육에 성과가 있는 시설지원(인건비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없이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이는 보육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견이 많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의 존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보육정책일 수 있다. 대다수 부모들이 이용을 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국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75%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회계규정은 물론, 표준적 프로그램 운영과 규정 준수 등,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량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 외의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제고는 반드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자체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보육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 그 실효성을 평가하여 지속적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적 데이터와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정책 사업들의 목표와 사업을 재점검하여 공공재로서의 보육 개념에 충실한 정책 사업들을 선택, 확대해야 한다. 이에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유형화해 나갈 것인가. 보육 대상 아동을 어떻게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 비용지원을 계획할 것인가.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의 관리와 수급은 어떻게 예상되며,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시설의 질 관리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분담과 보육비용 지원 방식은 중장기에 걸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보육정책 사업들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끝으로, 보육을 포함한 육아지원은 부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정책효과가 거의 없다. 프랑스는 GDP의 4% 이상을 육아관련 재정에 할애하면서 포괄적, 전면적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유럽 최저 수준의 출산력에서 벗어나 최고의 출산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 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이며 ‘전면적’인 보호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육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60차 국정과제회의 제2차 육아정책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육아분야작업반 (2008).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사회복지육아.
- 김선희(2007). 여성노동현장에 나타난 저출산 현상. 한국-노르웨이 국제세미나 자료집, -일과 가정의 양립, pp.105-121.
- 보건복지가족부(2008).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a).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정부문헌.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b).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통계.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c).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학위논문/학술대회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재훈(2008). 최근 독일 가족정책 변화의 시사점. 젠더리뷰, 2008, 봄, pp.70-74.
-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
- 홍헌호(2009). 2010년 정부예산안 평가과 재정건전화 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자료집.
- Brennan, D.(2002). Australia: Child care and state-centered feminism in a liberal welfare regime. In S. Michel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New York·London.

- Cancian, F. Kurz, D. London, A. Reviere R. & Tuominen, M.(2002). *Child Care and Inequality*. Taylor & Francis Books, Inc. Routledge. London.
- Cunha, F. Heckman, J. Lochner L., & Masterov, D.(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Cycle Skill Formation,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157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Bonn, Germany.
- d'Addio, A. and d'Ercole, M.(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role of policy. A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ensen, J.(2002). Against the current: Child care and family policy in Quebec. In S. Michel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New York·London.
- OECD(2006b).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저출산대책포럼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저출산 현상을 인구학적 비율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저출산은 고령화의 원인이나 그 대처방식 접근방법은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음.
-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수준에 대해 문제발생 원인이 됨. 사회적 수준에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데 개인들간 혹은 부부간의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발표논문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들의 리뷰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음. 연구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물 도출에서 활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면,
- 첫번째 논문의 경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감하나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음. 우선 표본 수의 문제임. 표본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표본구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음. 저출산 문제에 노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출산이 완료된 집단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음. 제가 알기로는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많다.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만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혹은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면 심층면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출산에 대한 문제를 여성의 선택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전혀 다른 연구전개가 가능함. 특히 이 문제에서 남성에 대한 연구고려가 중요하다고 봄. 여성들의 도구화문제, 아동들의 도구화 문제에 대한 담론에 대해 매우 공감함.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담론을 답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임. 즉, 이러한 출산을 저출산 문제로 해석할 경우 도구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결과부분에 있어서는, 주장과 연구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받았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는, 여성관리능력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함.

- 두번째 논문의 경우, 사회적·지역별 출산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매우 공감함. 첫번째 서술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차별출산력에 대한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논문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지 않은 느낌임. 다음으로 분석방식에선, 기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원인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듦. 원인에 대한 설명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 출산력의 작업에 대한 설명이 논문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각 변수들의 차이, 통제변수들이 모두 모호하여 연구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임. 연령, 시기 등 어느 변수를 정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지가 모호함. 정확히 보고자 하는 변수,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정확성이 떨어짐. 연구결과도 연계성이 부족함. 원인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매우 제한적임. 시기변화에 따른 사회정세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임. 전반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임. 아울러, 지역변수 예컨대 지역의 보육시설 수 등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결과가 모호함. 이는 지표상의 문제에서 발생함. 이러한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저출산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의 문제임. 도시보다 농촌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출산과 건강 불일치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왜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는가? 저출산 문제와 가족생활변화 모습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 두자녀 가구 비율인데, 개념을 오해하고 있음. 원인과 결과를 오도해서 처리하신 것 같음.

#### ○ 이해경(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 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음. 여성과 출산율의 관계는 다음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음. 낙태수술 문제에 대한 여성 문제, 재혼여성의 경우 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음. 20세 이전 여성은 미혼 모라는 개념이고, 시험관 아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임.

#### ○ 최은영(통계개발원 사무관)

-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함. 논리적 비약이 약했던 것 같음. 한국인 차별 출산력이라 한 것은 사회적, 지역별 차별 출산력이라고 지적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보육시설의 문제도 있겠으나,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 등 한국 특수적인 변수들을 파악

하고 싶었기 때문임. 범위가 넓어져 체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함.

○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문제가 부각됨. 저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장려정책이 나오고 있음. 여기에서 여성의 도구문제가 나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임.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의 저항이 적었던 것 같음. 여성정책연구원은 저출산과 국가전략회의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초기 방향설정에 많이 고민한 바임. 결국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함. 지켜보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동의 보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출산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합계출산율이 60년대 6명에서 지금은 1명으로 급락함. 전통적 사회에서는 여성은 더욱 수단적 도구적으로 인식됨.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여성에게 부탁해도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도구적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해도 부당한 것은 아님. 미국의 경우 이민정책으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있음. 이민제도 여부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대응방식이 보이는 것이 사실임. 여성 당사자들에 있어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거시적 측면에서 모든 부분을 반영할 수는 없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아이를 낳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봄. 일·가정 양립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고 봄. 일하기 적합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우남희교수 논문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을 유도했다는 것이었는데, 사교육비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함. 조사대상을 보면, 자료수집에 설명이 부족하고 대표성이 충분한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수집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봄. <표 6-3-1>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표현이 공격적이지 않나 싶음. 표현상의 문제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음. 이미 출산경험이 있는 모친에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묻는 것은 강도가 너무 썸. 논의 중 <취업>부분에서 이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본 논문이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사교비에 대한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옥교수의 논문은 정책적 측면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음 <그림 6-4-1>의 내용을 보면, 학

계에서 인정이 되는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인가. 그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국가간 설명, 맥락에 대한 설명이 차이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람. 양육비 효과에 대한 설명이 보다 보완되기 바람. 바우처 방식에 비판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 바우처가 보육시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음. 질적 부분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단지 바우처가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봄. 마지막으로 여쭙볼 것은, 기존에는 보육시설의 양적 측면을 중시하였다면, 지금은 그에 대한 질적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해 별도 조사연구가 필요함. 민간보육시설이 팽창한 상태에서 양적 보육시설을 담보 여부에 대해 듣고 싶음.

#### ○ 안계춘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저출산과 관련된 논문을 듣고 많은 공부가 됨. 우선, 참고문헌임. 형식적인 부분인데, 신문이나 저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즉, 신문이나 가지는 개인적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오리지널 출처를 찾아 적어주시면 좋겠음. 참고문헌에 신문을 열거하지 않기 바람. 오늘 전반적인 느낌은, 조직 구성 시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성 역차별적>인 느낌을 받음. 발표내용, 발표자도 여성 중심임. 남성을 넣어서 형평성 있게 진행하면 안되겠는가. 내용, 발표자가 과도하게 여성 중심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 바람. 출산주체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은 모두 여성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님. 따라서 당연히 남성을 배려한 시각과 연구가 필요함. 예컨대, 여성의 결혼대상자가 청년실업자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남성 실업자문제, 청년실업문제 등이 저출산, 결혼 문제와 연계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음. 남녀 양성평등적인 연구물이 필요하지 않는가.

#### ○ 김두섭 교수(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조직 시 의도한 것은 아님. 최영은 사무관의 차별출산력 논문이 매우 인상깊었음. 최근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임. 실제 차별출산력의 편차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즉,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차별출산력에 대한 논의

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임. 최근, 차별출산력에 대한 연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임. 즉, 연구축적물이 적다는 것임. 따라서 차별출산력에 대한 연구의 정밀성이 떨어지고 있음. 사회계층적인 편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의미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연령을 강조한 것도 중요하나, 혼인시기도 매우 중요함. 혼인이전과 이후에 따라 연구결과는 큰 편차를 보임. 따라서 혼인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봄. 지역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다른 변수를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임. 연령이 낮은 외국 이민자의 출산율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최근 합계출산율, 인구추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배제되어 있음. 그것은 시기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지금 20대가 지금 30대와 동일한 행동패턴을 보인다는 보장은 없지 않는가. 현재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임. 프랑스의 경우 예산을 보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즉, 복지예산인지 저출산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따라서 국가별로 예산책정 범위도 개념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 이옥(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생애초기의 재정투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제 연구가 정부 정책에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은 상시 고민하고 있음. 제 발표는 논문이라기보다는 포럼이라는 성격에 맞추어 정책적 제안을 담는 원고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람. [그림 6-4-2]에서 배제된 빈곤율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일단 보육지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저출산 대응정책도 실효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임. [그림 6-4-1]의 인적자본 투자대비 회수율은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는 자료임. 우리나라 상황이 보육이나 육아지원이 많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가 싶음.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통제(quality control)에 대해, 소비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하셨으나, 보육 문제는 시장주의 원칙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즉,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 모니터링에 의한 질적 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가 이미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패한 대표적 국가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소비자에 의한 질적 통제는 성공한 국가가 없

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음. 그렇다면 질적 통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중요함.

○ 우남희(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는 원고 수준에 그치는 것임.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발표한 것임. 최빈곤 지역을 배제하고 발표한 자료임. 따라서 개념도 막연하고 모호했던 것 같음. 따라서 전국적인 대표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임. 아까 표현의 적합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의 이유를 물은 것에 불과함. 제가 발표하고 싶었던 것은, 포럼에 여러 번 참석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주제를 설정함.

○ 최은영(통계개발원 사무관)

- 차별출산력이 미혼여성에게 주는 영향력이 큼.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혼여성, 저출산 문제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하향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유배우 여성에 대한 혼인 시기에 대해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여성에게 있어 혼인시기는 달라져도 인구센서스 결과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 여성의 경우, 2명에서 1명으로 저하된 부분이 있음. 다음으로 국제결혼 비율임. 이는 특정 계층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국가적으로 보면 국제결혼이 출산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해경 교수(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 제 발표도 오늘 포럼을 위해 급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출산시기 결정에 대한 논문이 있었으나,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발표하고 싶어서 원고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음. 출산결정 주체를 보면, 부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출산 도구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오늘날 출산은 여성의 선택이고 권리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연구가 많지 않았나. 여성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최근의 일임. 그래서 안교수님의 지적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음.